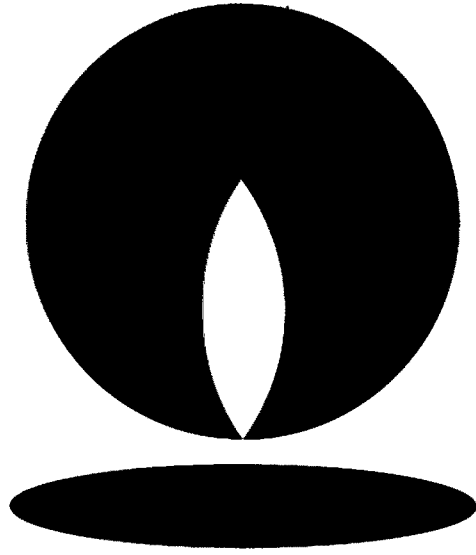


農業基盤公社設立 白書 (附錄Ⅱ)





농업기반공사

農業基盤公社

**Korea Agricultural & Rural
Infrastructure Corporation**

K A R I C O

일 리 두 기

이번에 발행하는 농업기반공사 설립 백서는 여러 차례의 산고를 겪은 끝에 발간하게 되었다. 엄청난 자료와 문건을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백서발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련의 과정을 가감 없이,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서술함으로써 문헌적인 가치와 역사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기반공사 설립백서 부록 I, II권은 백서 발간에 따른 문헌적,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를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책으로 묶은 것이다. 본서에 수록하기에는 분량이나 편집과정에 있어 아무래도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3개 기관 통합이라는 힘든 개혁과정을 사실그대로 기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각종 자료와 기록을 있는 그대로 게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부록 I권은 농업기반공사 설립위원회의 각종 회의에서의 의결내용과 보고사항 등을 있는 그대로 엮었다. 1차에서부터 9차 회의까지의 자료 그 자체만으로도 농업기반공사 설립에 있어 논의되었던 내용과 통합작업의 진척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훌륭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부록 II권은 통합과정에 있어 갈등과 반목, 통합 찬반 논란을 둘러싼 각 기관의 입장과 주장을 있는 그대로 엮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상호간의 고발장까지도 수정 없이 게재했다. 농업기반공사 설립추진과정에 있어서의 노동조합이 중심이 된 상호비난성 성명과 이에 대한 농림부와 설립사무국의 해명 및 대응성명, 통합을 보는 농업인단체의 성명,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기사도 첨부했다.

특히 부록 II권에는 어려운 과정을 겪은 후에 출범한 농업기반공사 출범과 관련한 언론의 보도내용을 별도의 장으로 엮음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음을 밝혀둔다.

사 가

작사 박호준
작곡 박호준

물 줄 기다 등 고 옥 토 를 일 구 어 푸 른
지 혜 와 맘 모 아 한 마 음 한 길 로 발 전

꿈 밝 인 내 - 일 가 꾸 어 나 가 세
화 는 밝 인 야 - 업 세 계 로 나 가 세

넓 이 들 황 금 이 결 출 령 일 때 예
기 광 과 정 상 이 된 다 음 고 매 만 저

풍 요 한 농 촌 의 내 일 이 펼 처 지 리
희 망 찬 터 전 음 후 세 에 전 - 하 리

라 - (후렴) 아 아 야 업 인 의

기쁨 은 우 리 의 보 람 야 업 인 의 영 원 한 동 반

자 능 업 기 반 공 사



▲ 농업기반공사 창립 기념식(2000. 1. 5)



▲ 농업기반공사 현판식(2000. 1. 5)



▲ 기념사를 하는 문동신 사장



▲ 축사를 하는 김성훈 장관



▲ 격려사를 하는 김영진 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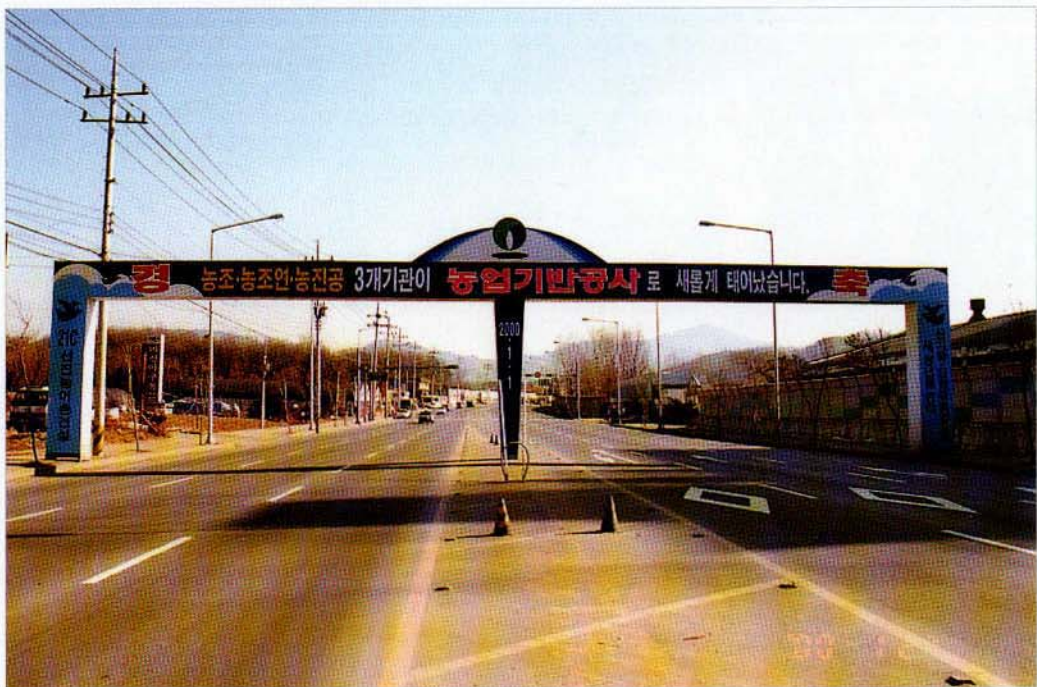
▲ 사기를 전수하는 김성훈 장관



▲ 창립 기념식에서 우리의 다짐을 발표하는 직원들



▲ 농업기반공사 초대 사장 취임식(2000. 1. 3)



▲ 농업기반공사 출범을 알리는 도로용 홍보아치



▲ 농업기반공사설립사무국 현판식(1999. 2. 8)



▲ 농업기반공사설립준비단 현판식(1999. 11. 1)



▲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3개 기관통합 설명회(1998.7.16)



▲ 농어촌진흥공사 교육원에서 열린 설명회(1998. 10. 9)



▲ 전국농민회총연맹 주최의 3개 기관 통합관련 심포지엄(1998. 7. 9)



▲ 농진공, 농조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물관리교육(1999. 4. 24)



◆ 한농연의 3개 기관 통합과 수세폐지 요구 집회(1998. 11. 7)





▲ 전농은 98농민대회에서 3개 기관통합을 요구했다.(1998. 9. 15)



▲ 농조연합회 앞에서 열린 전농 충남연맹 소속 농민집회(1998. 9. 15)



▲ 농진공노조는 노동조합 창립10주년 기념행사에서 3개 기관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1998. 10. 26)





▲ 100만농민조합원회와 농조노조위원장의 농민조직사수기자회견(1998. 9.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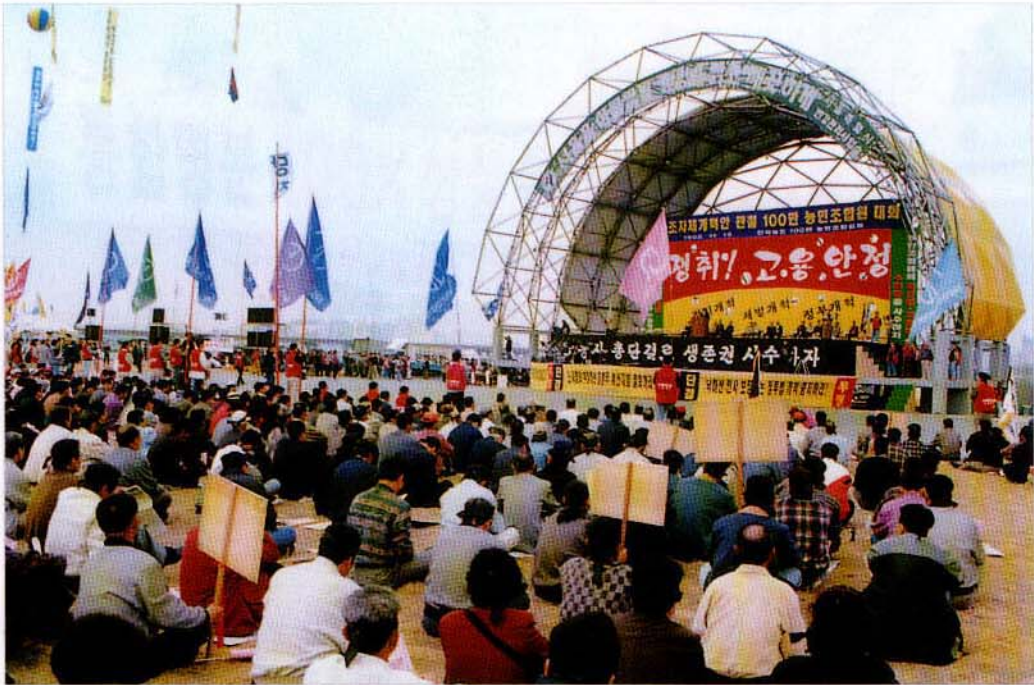
▲ 농조, 농연 노조위원장 공동기자회견(1998. 8. 6)



▲ 100만농민조합원회 주최로 농진공 정문에서 열린 통합반대집회(1999. 9. 15)



▲ 농조노조주최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농조자체개혁안 수용촉구집회(1998. 9. 30)



▲ 농조노조주최로 서울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열린 통합반대집회(1998. 11. 15)



▲ 100만 농민조합원회 주최로 전주 다가공원에서 열린 3개 기관 통합반대 집회(1999. 10. 2)

목 차

I. 농조·농조연·농진공 통합관련 자료 1

II. 농업기반공사 설립추진과 관련한 설립사무국 입장자료 217

III. 농업기반공사 출범 보도기사 261

1. 농조 · 농조연 · 농진공
통합 관련 자료

여 백

차 례

1. 3개 기관 통합에 대한 통합추진위원회의 입장	5
2. 시민·환경·사회단체 및 농업인단체 성명서	19
3. 주요 신문사설·칼럼	39
4. 농조·농조연·농진공 통합관련 신문기사 모음	47
5. 기타 참고자료	101

여 백

1. 3개 기관 통합에 대한 통합추진위원회의 입장

여 백

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어촌진흥공사
3기관통합에 대한 통합추진위원회의 입장

- '98.9.21. 11:00 통합추진위원회 개최 결과 -

< 발 표 배 경 >

- 정부수립이후 역대정부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혁을 시도했으나 이익집단의 조직적인 반발로 성공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고질적인 병폐와 비능률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농업기반 및 수리분야 개혁을 국민의 정부에서는 농업분야 최대개혁과제의 하나로 개혁작업을 추진중에 있음

- 이를 위해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 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는 '98. 7.20 발족이래 농업기반 정비관련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3개기관의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통합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음

- 특히, 원만하고 공정한 통합추진을 위하여 모든 통추위 위원들은 지나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농조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그러한 내용을 담은 3개기관 통합추진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 그러나 최근 일부 농조의 조합장, 대의원, 노조를 중심으로한 통합반대세력들은 선량한 농민의 입장을 동의없이 사용하여,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출처불명의 자금을 모금해서 신문광고등을 통하여 통추위의 3개기관 통합추진방안을 왜곡하는가 하면, 당면한 경제난 극복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개혁의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통합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통추위 위원들에 대하여 편협하고 과격한 학자 운운하면서 상식이하의 부도덕한 표현으로 매도하면서 일부 통추위 위원들에 대해서는 헐박까지 일삼고 있는 실정임.

- 뿐만 아니라 소위 100만 조합원을 대표한다면서 실체를 알 수 없는 조직을 결성하여 집단행동까지 계획하고 있는 상황임.

< 비방광고 사례 >

- 동아일보('98.7.8, 8.27일자, 한국일보(9.18일자) 등

- 더구나 열화와 같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농민단체를 농어촌 진흥공사에 매수당한 것처럼 비방함은 물론 제2건국의 정신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국민화합과 작은정부 실현을 위한 각종 제도를 개혁하고 우리 농업과 농촌의 발전, 농민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농림부장관과 관계 공무원들에 대하여 통합반대의사 표시의 한계를 넘어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용어로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 범농민단체의 분노를 사고있는 실정임

- 이는 정당한 공무수행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정부기관과 양식있는 학자·통추위원들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 행위로서 선량한 국민들의 건전한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할 만한 사안임.

- 이에 통추위는 통합을 지지하는 대다수 농업인·조합원과 국민, 그리고 봉급과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속에서 처우개선을 희망하는 농조직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농업투자의 효율성제고, 농민부담경감, 정부비용 절약을 위해 추진하는 3개기관 통합에 대한 통추위 위원들의 견해를 밝히고자 함.

< 발 표 내 용 >

농업생산기반정비관련 조직의 효율성과 농민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3개조직은 통합, 공사화하여야 함

- 역대정권에서 지난 50년 동안 쌓여온 고질적인 병폐를 제거하기 위해 여러차례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반발에 부딪쳐 좌절한 농조 등 개혁조치는 이번 국민의 정부에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특히 IMF 경제위기를 맞아 사회전분야에 걸쳐 경쟁력강화를 위한 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며 농업분야에서도 비용절감과 조직의 효율제고를 위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농조는 지난 10년간 총 9,000억원의 정부보조와 조합비(수세) 2,600억원 뿐만아니라 최근에는 연간 1조원 이상의 사업비 등 막대한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현행상태로는 구조적인 운영부실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며 농진공도 공기업 경영혁신차원에서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함.
- 농조·농조연·농진공등 농업생산기반정비관련 기관의 경우도 기능중복과 조직운영의 비효율제거를 통한 예산절감, 대농업인 서비스제고 등을 위해 3기관의 통합이 불가피한 실정임

- 통합의 기본방향은 3개기관을 대등한 조건으로 해체·통합하여 『농업기반공사』(가칭)를 신설, 농업생산기반정비·농업용수관리 및 농촌구조개선 전담기관으로 육성하는 것임
- 신설기관을 공사조직체제로 해야하는 이유는 농업기반시설이 주곡의 안정적 생산, 국가지원의 효율적 관리, 재해방지 등 공익적 기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 현재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농조의 경우 조합체제로서는 자립조합과 영세조합간의 재원이동이 불가능하여 조합간 재정의 불균형, 절대다수 조합의 운영부실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임.

통추위에서는 3개기관이 대등한 조건으로 해체·통합하고 인력과 경비를 절감하여 대농업인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원칙하에 세부적인 통합방안을 제시함

- 신설공사에서는 현재 농조가 담당하고 있는 물관리의 전문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80여개의 지역사무소를 두고, 지역사무소장에게 인사·예산권 등을 대폭 위임함으로써 현장중심의 조직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 인력등 구조조정은 통합전에 각 기관별로 1차적인 자체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통합이후에는 중복기구정비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초과인력에 대한 감축을 해 나가되
 - 3개기관의 직원의 직급, 정년 등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 보수체계 및 보직비율에 있어 기관간 형평성을 최대한 유지해 나가기로 한바 있음
- 현재 농업인이 부담하고 있는 조합비는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농업용수공급비용의 일부를 징수하고
 - 물관리는 현행 농조의 물관리체계를 유지하여 농업인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지원함

농조의 자체구조조정안은 일부 조합장과 노조, 대의원들의 기득권보호를 위하여 집단이기주의차원에서 나온 비현실적인 방안임

- 현행 105개 조합을 37개로 축소한다고 하고 있으나 과거에도 농조의 개혁방안이 제시될 때 마다 조합장들이 합병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득권상실에 따른 반발등으로 이후에는 실천에 옮기지 않는 등의 전례에 비추어 신뢰성을 잃고 있음
 - 현행 농조법에서도 '97.6월까지 40여개의 설립기준미달 조합을 자율합병토록 하였으나 실제 합병한 실적은 1개소에 불과하였으며, 설령 105개 조합을 37개로 통합한다고 하더라도 소멸조합은 지소형태로 하부조직을 구성하게 되므로 조직축소의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37개 조합으로의 축소는 그 실현가능성이나 효과가 불투명하며, 이는 정부의 구조조정 시책을 일단 피해보려는 방편으로 제시된 것이 분명함
- 조합장을 무보수 명예직화 한다고 하였으나 선거직 조합장의 특성상 조합장 신분유지를 위한 과다경비가 지출되는등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 이는 결국 어떻게든 조합체제를 유지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방안이라고 판단됨

농조의 자체구조조정안에서 자립육성금고를 1조원 조성하여 재정자립을 이룩하고 조합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조합현실을 무시하고 나온 실현이 불가능한 방안임

□ 농조 자체구조조정안에 따르면

- ① 현재의 자립육성금고 보유적립금 2,800억원
 - ② 보상비 3,000억원(600억×5년)
 - ③ 고정불용재산매각 2,000억원(400억×5년)
 - ④ 예산절감, 적립금, 보조지원등 1,500억원 및 기타 연합회 예산절감등 700억원등
- 총 1조원의 농조자립육성금고를 2003년까지 조성하여 재정자립을 이룬다고 하고 있으나

□ 이를 내역별로 분석해 보면

- ① 현보유적립금 2,800억원은 특별회계를 제외하면 2,500억원이며 이중 농조의 구조조정안대로 800여명을 퇴직시킬 경우 퇴직급여로 700억원이상 지출되어 실제로 적립가능한 재원은 1,700억원임
- ② 보상비를 매년 600억원씩 5년간 3,000억원을 적립한다고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매년 발생하는 보상비는 각조합의 운영경비로도 부족하여 현재 경영위기를 맞고있는 실정이므로 향후에도 보상비에 의한 적립은 불가능함
- ③ 고정불용자산 매각대금으로 매년 400억원씩 5년간 총 2,000억원을 조성하는 방안중 대지 건물등 400억원은 일부 조합이 통합되더라도 지소로 사용되기 때문에 매각할 재산이 별로 없으며 나머지 불용자산 1,600억원도 ②번 보상비에 포함되어 중복계산되어 있어 별도 조성재원이 될 수 없음

④ 기타 예산절감, 금고운용수익금, 출연금, 보조지원등 2,200억원의 경우에도 현재의 조합 재정상태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전혀 현실성이 없음

□ 게다가 현재도 농조의 불용재산 매각분과 1,000억원수준의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고도 많은 조합이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퇴직금적립액이 1억원미만인 조합이 80여개에 달하는등 금고자금마련의 여력이 전혀없고

□ 특히, 실제로 현행 농조법하에서도 자립육성금고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96. 6. 관련법 개정후 지금까지 금고에 출연한 자산은 전무한 실정이며, 일부 자금여유가 있는 자립조합의 경우도 조합원의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워 출연을 못하고 있는 상황
이므로

○ 농조 자체구조조정안으로 제시된 재정자립방안은 현행 조합체제하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이와 같이 현행 조합체제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조합비를 폐지한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 농조가 단체의 성격을 조합으로 규정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받는대신 조합의 운영을 전적으로 국고보조에 의존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조합으로서의 존재가치마저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임

통합반대를 주장하는 일부농조 세력들은 통추위의 통합추진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없는 주장임

- 농조측에서는 신설공사에서 조합비대신 농업용수료를 징수하여 농민부담이 증가한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 통합되는 신설공사에서는 조합비를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리시설의 유지관리상 발생하는 불가피한 경우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의 일부만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농민부담은 현재보다 대폭 감소될 수 밖에 없음.

- 농조측에서는 신설공사에서 말단수로관리를 농업인에게 부담시킨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 지거등 말단수로관리는 현재 농조와 마찬가지로 신설공사에서 관리하되 농진공의 기술과 현행 농조의 지역성과 자율성을 계속 존중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농조의 Know-How 및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물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갈 것임

- 신설공사로 통합할 경우에 농업인의 재산을 국유화하여 사유재산권침해의 위험소지가 있다고 하고 있으나
 - 농조의 재산은 거의 대부분이 국고지원으로 조성되었고

- 조합원의 농조재산에 관한 권리는 점유권이나 처분권이 아닌 그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 즉 수리서비스를 받을 권리이며
 - 현행 농조법에서도 조합재산은 법인인 조합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토록 하고 있으며 해산시에도 개인별 분배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조합재산이 공사소유로 이전된다 해도 공사에서 영농목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물 공급서비스를 계속하고, 농업인도 농업기반시설을 사용·수익하는 권리는 그대로 존속하므로 농업인의 재산권침해는 없음
- 신설조직을 공사화 하는 경우 농업인의 참여가 제한된다고 하고 있으나
- 수리시설의 유지관리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으로서 선거를 통한 대표성보다는 과학성과 전문성에 의한 관리가 요구되는 영역임
 - 다만, 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장 선거의 방식을 통하지 않더라도 신설공사의 지역사무소별로 농업인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 인력관리, 물관리체계 개선등 모든 분야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공사운영에 농업인의 참여를 활성화할 것임

3개기관의 통합을 대부분의 농업인이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식적인 통합반대움직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함

- 현재 20여개의 농조 조합은 직원 봉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부실한 상황임에도 직원의 보수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인의 조합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3개기관의 통합
방안을 반대하는 것은
 - 조합체제로 이득을 보고 있는 일부 세력의 기득권유지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밖에 볼수 없으며, 다수의
선량한 조합원과 조합직원들을 무시한 행위임

- 통합을 반대하는 일부 농조세력들의 신문광고 등을 통한
주무부 장관과 통합추진위원들에 대한 인신공격행위는
여론을 호도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목적으로 밖에
볼수 없음.
 - 따라서 통추위는 이들의 돌출행동에 따라 앞으로 발생
할지 모르는 모든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추궁하고 조치해 나갈 것을 정부측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 통추위차원에서도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 등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

2. 시민·환경·사회단체 및 농업인단체 성명서

여 백

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

정부의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지개량조합 세 기관의 해체·통합 방침과 가칭 농업기반개발공사 발족 계획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지개량조합의 세 기관을 해체한 후 통합하여 가칭 농업기반개발공사가 발족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정부의 발표와 계획을 적극 환영한다.

이는 그간 정부가 강조하고 발표하여 온 비 공기업부분에의 경쟁력도 도입과 획기적 경영효율을 위한 공기업의 경영혁신과 민영화 방안, 정부부서기관 출연기관 보조기관 등 유사중복기능을 갖는 기관의 통합을 추진과도 일치되는 것이다.

또한 이는 국가적으로는 공공사업체계의 입원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로 건설시장개방과 통일대비 생산기반조성 준비의 이익을 가져올 것이며, 국민에게는 합리적 구조조정을 통한 정부예산의 절감과 이윤 분배 부담경감을 결과적으로 가져올 것이다.

더욱이 농민들에게는 생산기반 체계의 입원화를 통한 서비스 증대와 함께 부실 미달기준 농지개량조합의 통합을 통한 조합비 경감을 가져올 것이다. 사실 모든 농민들에게는 조합비만 표현보다 수세만 표현이 일반화 되어있다. 많은 운영경비 절감과 생산기반정비 예산의 절감은 예상컨대 전체조합비를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이므로 농민들에게는 수십여년간 원망과 한으로 쌓여온 수세를 없애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다시한번 정부의 농진공, 농조연, 농조 세 기관의 해체·통합과 가칭 농업기반개발공사의 발족 계획을 적극 환영, 격려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지개량조합은 사체 구조조정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이와함께 부실조합 설립기준 미달 농지개량조합은 즉각 통합되어야 한다.
2. 한편 농지개량조합연합회와 농지개량조합은 통합을 반대 입장과 활동을 중단하고 통합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권고한다.
(조합원들이 농민이므로 일반 농민들이 조합의 통합에 반대할 것이라는 주장은 농조, 농조연인의 회망 사항인 것을 누구보다도 농조, 농조연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만약 평소 농조의 가까웠던 극히 일부의 농민들이나 합업은 농조의 일선 직원들을 계속 통합 반대운동에 앞장서게 한다면 감당못할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고보조가 끊기고 수세거부가 전국적으로 발생되어 부실 퇴출된다면 일선 직원들의 고용은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게 되며 그동안 농조가 시설관리에 기여한 몫마저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적극적 통합은 많은 일선 직원들의 고용효과를 유지시킬 것이며 전농은 해체·통합시 발생하는 일선 직원들의 고용효과를 가능한 보장하도록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3. 정부는 자신감을 갖고 해체·통합 후 가칭 농업기반개발공사의 발족까지 힘있게 추진하여 생산기반의 강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정부의 농진공, 농조연, 농조 3개 기관 해체 통합 이후의 발전적 기관으로의 발족을 전농은 전국의 농민들과 함께 적극 지지해 나갈 것이다.
4. 98년산 수세(소위 조합비)와 함께 향후 수세를 폐지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업경쟁력 발전에 농민들이 참여케 하여야 한다. 치수사업은 국가 사업이며 수리시설은 사회간접자본임을 전농은 누누히 주장해 왔다. 전농은 향후 수세인하, 수세폐지가 될 것을 진정으로 기대한다.

1998년 7월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수금(李水鎭)

홍 · 민 · 통

홍시단 민족통일운동본부(홍민통)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고 문 : 감우일, 강원용, 김재중, 박형규, 서영훈, 송필주, 안병욱, 조정근, 최근억
공 등 대 표 : 김중문, 김학준, 이문구, 이호철, 장충식, 홍일식, 김종립(상임)
지역대표위원 : 고장권, 김세일, 노성만, 박찬석, 백낙환, 이중훈, 조장환, 하서헌, 한기영

- 수 신 : 농림부 농촌개발국 이상영 과장(02-504-9402, 02-507-3964(F))
- 발 신 : 단국대 농대 학장 張原碩 (농업경제학)
- 제 목 : 「농업관련기관, 통폐합 해야」원고 발송의 건
- 원고분량 : 원고지 10매 분량 (내용의 가감은 편집자 임의로 하셔도 됨)

농업관련기관, 통폐합 해야!

단국대 교수 張原碩 (농업경제학)

역대 정권이 출현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해온 과제 중의 하나가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농지개발조합연합회를 통폐합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새정부에 들어서도 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3개 기관의 유사기능을 통폐합하고 구조조정과 함께 전문화시키면, 대략 계산해보아도 약 20%~30%의 인건비와 운영비 감축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비용절약분만 해도 약 677억원 내지 1천억원으로 추산된다.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및 기술력을 집중하면 시설물 관리의 효율이 높아지고, 농업용수 관리의 체계화와 수질개선효과가 있으며, 규모화사업도 현재처럼 농진공 군지부 식원이 하는 것보다 농조식원이 담당하면 현장사정에 밝아 효율적이다.

농업인의 입장에서 마을단위로 있는 흥농계를 활성화시켜 말단수로 자주관리를 강화하면 농촌마을에 활력이 생기고, 수로감시원으로 활동할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농업인이 보람과 긍지를 더욱 갖게 된다.

이처럼 국가적 차원과 농업·농촌·농업인의 입장에서 일석사조의 효과가 있는 통폐합이 역대 정권에서 왜 말잔치로만 끝났는가. 그것은 원론과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각론과 실행단계에서는 대부분 집단이 기주의가 개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한편, 그동안 개혁이라는 이름의 정책이 일부 부도덕한 정치권의 개입에 의해서 퇴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정부에서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는, 그야말로 자기개혁부터 먼저하고, 매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러나 추진은 과감해야한다.

새정부 출범후 100일 동안의 평가를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지지부진한 측면이 적지 않다. 농정분야만 보아도, 개혁은 대통령과 장관을 비롯한 몇사람만 하는 것처럼 보이고, 수많은 공직자와 농업관련기관들의 임직원들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한다.

앞서 말한 3개 기관만 해도 그렇다. 도대체 개혁의 결과가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농업생산기반정비 기능을 3개 기관이 나누어 수행, 비효율성을 여전히 노정하고 있다. 기술용역업무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농조연, 농진공에 업무를 배분 시행하고 있고, 생산기반정비 사업과 수리시설 유지 관리업무는 농조와 농진공이 분담하고 있다.

지방단위엔 유사한 기관도 너무 많다. 농민 9명이 농관련종사자 1명을 먹여살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실제로도 단위에는 농진공 지사(9)와 농조연 지회(8), 시·군 단위에는 농진공 군지부(83)와 농조(105)가 별도로 조직되어 있다. 최근의 IMF 사태를 계기로 농업관련 기관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당 위성은 이론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리관리체계의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수질관리체계의 개선도 요원하다. 수리시설 설치사업은 농진공, 유지관리는 농조가 분담함으로써, 시공자와 관리자간 이원화로 분쟁발생 소지가 있고, 동일수계내의 인근 농조간에 분쟁 가능성까지 상존한다. 그동안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수리시설 개발에만 치중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종합적인 수질관리개선노력은 미흡한 편이다.

농지개량조합의 운영부실 문제도 여전히 답보상태이다.

운영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조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다수 조합이 파산 등 경영위기에 처해있다. 조합비 보전차원의 국고보조는 매년 1,000억원 수준이나 실제 조합운영 경비에 미달하여 농조운영이 부실화되고 있다. 전국 105개 농조중 자립농조는 10개에 불과하며, 95개 농조가 국고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운영경비 부족으로 예산편성조차 어려운 조합이 20개(19%), 직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조차 줄 수 없는 조합이 31개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소규모 조합 통폐합 등 자구노력을 유도하였으나 성과가 미흡하고, 획기적 운영개선 추진에 근본적 한계를 보인다. '97년 6월까지 자율적인 통폐합 시한을 부여하였으나 현재까지 농조간 통폐합 실적은 1개소에 불과하다.

요약컨대, 농조의 운영은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하고, 여타기관도 책임을 짚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그 이후 3기관이 통합되어 각자의 기능이 중복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1998. 7. 16.

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약칭 홍민통)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고 문 이은용 (서울대 명예교수)

위 원 장 김동희 (새 농수산물유통연구소 이사장)

부위원장 서기원 (순천향대 경상대 학장)

간 사 장원석 (단국대 농과대 학장)(0417·550·3600)

연구위원 손용석 (고려대 자연자원대 교수) 외 83인 울팀

□ 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 □

농조해체·수세폐지!

농업기반사업의 국가부담은 오백만 농민의 오랜 숙원이요, 한결같은 요구이다.

농지개발조합(농조)은

이름 외면하고 호도하려는 주장을 중단하고 과거에 대한 참회와 더불어

농업희생·식량자급·농민생존권 보장을 위한 농업대개혁의 길에 동참하여야 한다.

**농지개발조합 노동조합은 동아일보에 게재한 광고의 철회와 공개 사과를 통해
노동조합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라!**

1. 농조는 과거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부터 해야 한다.

- 1) 농조는 농민을 수탈하기 위해 일제가 만든 수리조합이 자신의 태생인 것에 대해 우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 2) 농조는 식량자급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온 국민이 쌀개방에 맞서 UR반대투쟁을 벌일 때에 농조는 무엇을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식량자급을 운운하는가? 김영삼 정권의 눈치만 보며 숨죽이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농조가 아니었던가?

2. 농조가 조합원인 농민을 위한다고?

수해나 냉해피해로 울상을 짓고 있는 농민들에게 벼이삭에 한톨의 나락이라도 달려있으면(이삭을 향해 대나무 막대기를 휘둘러 낱알 부딪치는 소리가 조금이라도 들리면) 수세는 반드시 내야 한다며 농민들의 역장을 무너뜨린 장본인이 바로 농조 아니었던가? 농조가 조합원인 농민을 위한다면 자신들이 책임질 수도 없는 수세폐지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재해지역의 수세당감부터 약속해야 한다.

**3. 농지개발조합,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의 통합을 통한 농업기반공사의
설립을 농림부장관과 일부학자, 농민단체가 농어촌진흥공사와 영합하여 추진하는 것
이라니?**

- 1) 자신들의 주장을 농민, 농민단체, 농림부 등 누구하나 손들어주지 않는다 해서 막가파식으로 이 사람, 저 단체를 마구 매도해도 되는가?
- 2) 김성훈 농림부 장관은 이 나라의 식량안보를 지키내기 위해 UR반대투쟁으로 멀쳐일어났던 농민들과 함께 투쟁해오면서 농업·농민에 대한 애정을 가진 소신있고 양심적인 학자로 인정받아 왔으며 지금도 농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게다가 농림부 장관 인선이 당리당략에 흔들

리면서 반개혁적 인사가 농림부 장관에 내정되던 위기적 상황에서 농민단체들이 부정으로 세워낸 장관이기도 하다. 농업·농민에 대한 애정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원히 알고 있는 사실을 자신들의 반개혁적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도하려 들다니...

- 3) 군사정권의 폭압속에서도 이 나라의 농업을 지키고자 치절히 부정해왔던 500만 농민의 대표조직을 근거없이 매도한데 대하여 어제는 사과를 해놓고서 오늘은 또다시 일방적인 광고를 통해 이를 뇌졸이하는 자신들의 주장이 싹둑박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가?

4. 농지개량조합 노동조합은 이름만 노동조합 아닌가?

- 1) 우리 농민들은 노동조합이란 자기 직장난위 노동자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대변하고 사회적 정의를 세워나가는 노동자들의 조직체라고 믿고 있다. 반농민적인 정권과 불합리한 제도로부터 농민들이 신음하고 고통받을 때 농민들을 위로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기는 커녕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정권의 집달리 노릇에 충실했던 자신들의 과거는 반성치 않으면서 어찌 감히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도용하여 개혁을 방해하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려 하는가?
- 2) 농지개량조합 노동조합의 자금의 행동은 농지개량조합 노동자들의 권익과도 배치되고 있다. 우리는 농조가 과거에 어찌했든 농조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다. 또한 IMF에 따른 실업사태로 노동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 또한 잘 알고 있으며 농가부채로 파산 직전에 처한 우리 농민들이지만 노동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농조의 노동조합이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고민을 함께 할 자세가 되어 있으며 농업기반공사의 설립이후에도 물관리는 전문성을 갖춘 현재의 농조직원들이 담당해야 한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의 농조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입장을 벗어나 지역유지 행세하기에 바쁜 농조 조합장이나 상층 관리들의 입장만을 대변하기에 여념이 없다.

농지개량조합 노동조합은 더이상 전체 노동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 말고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반납해야 할 것이다. 더이상 이런 행태가 반복된다면 노동자나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시선이 혼란스러워질까 걱정이다.

5. 농업생산기반과 관련하여 물관리는 핵심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또한 부분적인 사업일 뿐이며 농업생산기반을 조성·운영·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부담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 1) 농업생산기반사업에서 불관리 사업은 수도자 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한 물관리사업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농업생산기반사업은 국가의 책임아래 종합적으로 기획·조정·관리되어야 한다. 대형시설공사와 경지정리·물관리의 주체가 각각 나뉘어져 운영해오던 현재의 폐해는 국가의 책임을 모호하게 흐려놓으면서 고스란히 농민들의 부담으로 전가시켜 왔다.
- 2) 농업생산기반사업이 국가의 책임아래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지 않고서는 '담복농업교류나 통일 이후 최대의 과제로 등장하게 될 한반도의 식량자급 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황폐화된 북한의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하고 통일된 농업생산체계를 갖추는 일은 민간단체나 부분별 사업의 짜집기 형태로는 가능하지 않다.

6. 김영삼 정권의 신농정을 등에 업고 정확한 타산없이 사업영역만 부풀려왔던 농어촌진흥공사의 철저한 구조조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간척지 조성사업이나 대규모 경지정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이나 서구형 유리는 실사업 등은 당장 폐기되거나 전면 수정되어야 할 대표적인 사업이다. 농조의 횡포나 반개혁적인 행위 때문에 농민들의 눈이 온통 농조에게 쏠리고 있는 틈을 타서 개혁을 늦추거나 건너뛴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오히려 기대조직에 더 많은 비리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농민들은 그간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으며 또한 잊지 않고 있다.

7. 정부는 수세폐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비록 초보적인 논의물 위해 실무단위에서 작성한 법률안이라고 하더라도 수세(사용료)를 존치토록 한 내용은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며 이에 대한 태명과 수세폐지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 또한 실무작업단의 문건이 외부로 흘러나가면서 수세와 관련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데 대하여 당사자들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우리 농민들은 농업포기, 농민희생 정책으로 일관했던 과거정부의 농정으로 인해 끝없는 몰락과 고통속에 내몰렸지만 외연하게 이 나라의 농업과 농촌을 지켜왔으며 인간적인 대접을 제대로 받아본 적도 땀흘린 댓가를 옮겨 받아본 적도 없지만 인간적인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면서 묵묵히 농사를 지어왔다. 앞친네 던친격으로 IMF 사태를 맞아 농자재값은 치솟는데 반해 농산물가격은 폭락하면서 농가부채로 파산의 위기를 맞고 있지만 새로운 정부의 농정개혁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인간됨을 다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더이상 개혁을 거스르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할 만한 인내가 남아있지 않다. 농업희생·식량자급·농민생존권 보장을 위해 우리는 그 어떤 희생이라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다.

1998년 8월 28일

전국농민희생연맹 의 장 이수금(李水金)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32-1 경원빌딩 3층 전화)02-529-6347, 전송)529-6348

□ 한농연 발표 성명서 □(9월 21일)

농조연, 농조의 반개혁적인 통합반대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농조와 농조연은 통합반대운동을 즉각 중단하라

한농연은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농진공과 농조, 농조연 3개기관의 업무가 중복되어 있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비효율과 그로 인한 농업인의 부담증가를 철폐하기 위해 3개기관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다. 이런 5백만 농업인의 주장이 정책에 반영되어 3개기관의 통합이 추진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농지개량조합과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최근 농진공-농조-농조연 3개 기관 통합일정이 법안상정계획 등과 함께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하자, 통합반대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1일 개최된 기자회견을 통해 농조와 농조연은 통합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자체 개혁안에 따른 개혁추진방향을 강변하고 나왔다.

이같은 농조연과 농조의 통합반대 활동은 어떤 미사여구로 장식하더라도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500만 농업인의 요구사항인 '농진공-농조-농조연 통합'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왜곡하는 것에 불과하다.

특히 농조와 농조연은 자신들의 반농민성을 숨기기 위해 UR반대투쟁을 정점으로 하는 각종 농업인권의보호활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해온 한농연을 비롯한 농업인단체들의 농민대표성에 시비를 걸 뿐만 아니라 '농진공의 하수인'이라는 당발까지도 함부로 일삼고 있다.

더구나 얼마전에는 불법적인 허위 통합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하여 현장의 농업인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온갖 꾀변으로 숨기려는 처사를 계속하고 있다.

5백만 농업인의 자조조직이라 운운하며 농조직원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개혁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농조와 농조연에 대해 한농연은 5백만 농업인을 대표하여 엄중하게 규탄하며 강력하게 경고한다.

반개혁적인 3개기관 통합반대활동을 즉각 중단하라. 또한 자체개혁안에 따른 구조조정이라는 공염불을 즉각 중단하고, 통합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통합이후에 농업인에게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라.

만약 이 두가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여전히 기득권 수호차원의 반개혁적 통합반대운동을 계속할 경우, 5백만 농업인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한농연은 이런 현장의 농업인을 대표하여 강력한 움직임을 가할 것임을 천명한다.

농림부도 이런 농조와 농조연의 통합반대활동에 대해 관련당국으로서의 책임성을 통감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 농정개혁이 기득권의 이기주의에 의해 훼손당하고 있는데도 이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현재의 농림부도 5백만 농업인의 외면을 당할 수 밖에 없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농업생산기반정비관련 조직 통폐합 추진에 따른 우 리 의 입 장

“농업관련 3개기관 통폐합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농업지원조직인 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어촌진흥공사는 반드시 통폐합되어야 하고, 이러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효율성 향상과 경제난 극복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며, 사회간접자본인 농업기반시설은 국가의 책임으로 관리되어야만 한다.

이를 역행하는 행위는 반농민적 처사로 간주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본분을 망각하고 시대적 소명과 역사적 과제를 외면하는 어떠한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것은 IMF 관리체계의 국란 극복과 21세기를 대비한 식량안보 수행을 위해서는, 또한 농업과 농어촌개발의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는 현실속에서,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업관련 3개기관을 통폐합하여 농정수행을 위한 새로운 통합 공기업화하는 것은 필연적인 시대적 흐름이다.

이를 통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농업관련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에서 수세를 폐지하여야 할 것이며, 농업인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 3개기관 통폐합은 11만 전업농의 일치된 요구다.

3개기관의 통폐합은 5백만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의 강력한 요구이며, 특히 21세기 우리 농업의 간성으로 정부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 11만여 전업농(쌀 전업농 63,373명)들은 이를 적극 찬동한다.

□ **통폐합을 저해하는 일부 농조, 농조연 간부 및 노동조합의 반농민적 처사는 단호하게 저지되어야 한다.**

물론 개혁을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고통과 자기희생이 따르지만 3개기관 통폐합이 대의를 위한 현실적, 필연적 상황임은 물론, 직접 이해 당사자인 농업인이 찬성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개인·집단이기주의에 편승하여 시대에 역행하는 모든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이를 반대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국가적 명제인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때, 자신만의 기득권 보장과 권익보호만을 위하여 지역 농업인간에 분란을 조장하고 반목을 유도하는 처사에 대해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농업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왔던 농업관련기관은 시대적 명제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시하고 추진하는 정부시책에 대해, 그야말로 자기생존권적 이기주의나 부정적이고 편협된 사고에서 벗어나, 애국적이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우리농업과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저해하는 반농민적 처사에 찬동하거나 방조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의 저지를 위해 11만 전업농은 어떠한 실행행사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

□ **「농지개량조합원회」는 대규모집회를 즉각 중단하라.**

9월 30일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농지개량조합원회」는 집회를 즉각 중단하고 3개기관 통폐합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1998년 9월 28일

전업농중앙연합회
회 장 한 수 응

기자 회견문

IMF 시대를 맞아 농업인들도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농가 부채가 누증되고 농축산물 가격은 폭락하고 생산비는 대폭 인상되는 지경이다. 농업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 지자체, 농업관련단체, 농민이 모두 힘을 합쳐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당국의 과감한 농업지원책이 아쉽고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농 관련 기관이 있어 농업희생을 위한 제도정비 작업을 늦추고 있다. 농업 관계기관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촉진해 농민에게 무한봉사를 함으로써 농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농어촌 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지개량조합의 세기관은 조직이기주의를 버리고 통폐합하여 농민을 위한 새로운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특히 농조와 농조 연합회의 통합 반대 활동은 농민을 우롱하고 허위사실을 유포 하는가 하면 농민단체의 활동을 반 이성적으로 규정하는등 도저히 납득 할수 없는 것으로 대다수 농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통합반대 서명시 무더기 인장도용, 농민의 동의가 없는 유명 단체 결성, 3개 기관 통폐합에 대한 왜곡된 논리 주장, 허위 광고등 농조와 농조 연합회의 활동은 상식적으로 용납 할수 없는 지경이다. 이에 우리 전북지역 농민단체들은 농업희생과 성공적인 농업 개혁을 위해 3개 기관의 통합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이과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함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 한다.

하나: 농진공, 농조, 농조연은 자체구조 조정을 강도 높게 먼저 실시하고 3개기관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폐합 해야 한다.

하나: 농조와 농조연은 통폐합 반대 입장과 활동을 중단하고 통폐합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농조와 농조 연합회는 9월30일로 예정된 서울 집회를 즉각 철회하고 3개 기관 통폐합에 동참하라.

하나: 정부는 자신감을 갖고 3개 기관 통폐합 후 가칭 농업기반개발공사의 발족까지 힘있게 추진하여 생산 기반의 강화를 이끌

어 내야 한다. 정부의 농진공, 농조연, 농조 3개 기관 해체 통폐합 이후의 발전적 기관으로의 발족을 전북 지역 농민단체는 전국의 농민들과 함께 적극 지지해 나갈 것이다.

하나: 98년산 수세(소위 조합비와)와 함께 향후 수세를 폐지 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업 경쟁력 발전에 농민들이 참여케 하여야 한다. 치수 사업은 국가 사업이며 수리 시설은 사회 간접 자본임을 전북 지역 농민단체는 누누히 주장하여 왔다. 우리 농민 단체는 향후 수세 폐지가 될 것을 진정으로 기대 한다.

하나: 김영삼 정권의 신농정을 등에 업고 정확한 타산없이 사업영역만 부풀려 왔던 농어촌 진흥공사의 철저한 구조조정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하나: 농업 생산 기반과 관련하여 물관리는 핵심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또한 부분적인 사업이므로 농업생산 기반을 조정, 운영, 관리 하는 것은 국가의 부담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하나: 농지 개량조합 노동조합의 작금의 행동은 농지개량조합 노동자들의 권익과도 배치되고 있다. 우리는 농조가 과거에 어찌 했던 농조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다. 따라서 농조의 노동조합이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고민을 함께할 자세가 되어 있으며 농업 기반 공사의 설립이 후에도 물관리는 전문성을 갖춘 현재의 농조 직원들이 담당해야 한다고 우리는 판단 하고 있다. 그러므로 농지개량 노동 조합은 더 이상 전체 노동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 말고 개혁에 적극 동참 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

우리 전북지역 농민 단체들은 위와 같은 요구가 조속히 시행될 것을 촉구하며 바람직한 3개 기관 통폐합이 이뤄 지도록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밝힌다.

1998년 9월 28일 전북 지역 농관련 단체 일동

농진공·농조·농조연의 즉각통합을 촉구하는 시민-농민단체의 입장

- 농진공·농조·농조연의 통합반대활동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3개·기관 즉각통합을 강력히 촉구한다 -

한국사회 전반에는 벌써부터 IMF위기 초래의 교훈을 잊어가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IMF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중한 결혼반지까지 아낌없이 빼어 금모으기운동을 벌였던 국민대통합의 정신은 사라지고 IMF 국가위기 극복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각종 개혁작업에 대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극단적인 집단이기주의마저 끊이지 않고 있다.

IMF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음에도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헌신해온 농민들이 지난 십수년간 간절히 바라고 추진해온, 수세폐지를 위한 '농진공·농조·농조연의 통합'과제도 마찬가지로 기득권세력의 반발로 지체되고 있지만 정치권과 정부 어느 누구 하나 책임있는 대응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 대선시기, 농민단체와 시민단체는 '농진공·농조연·농조의 통합'을 비롯한 농정개혁과제를 공동으로 합의하여 각후보 진영에게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한 바 있었다.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농업용수 등 농업생산시설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바 업무중복에 따른 예산낭비의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으며, 특히 농조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따른 과도한 수세징수는 수십년간 농민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 왔다. 방만한 조합운영과 조합장선거와 사업수주를 둘러싼 각종 비리가 쉬지않고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은 농업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해묵은 폐습이다.

또한 식량자급의 기초가 되는 농업용수의 개발과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어 농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한두가지가 아니며,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농민에게 조합비란 명목의 수세를 징수해온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은 지난 수십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농지개량조합의 부실경영을 방지할 경우 농지개량조합의 도산은 불을 보듯 명확하고, 그 결과 식량생산기반이 파괴됨으로써 IMF 위기극복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식량자급이 불가능해지는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농업의 위기가 남의 문제일 수가 없는 우리 시민단체는 농민단체와 함께 지혜를 모아 농진공·농조·농조연의 통합만이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다행히 '국민의 정부'에 들어 이같은 시민단체와 농민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어 농정개혁차원의 3개 기관의 통합이 결정되어 추진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같은 5백만 농민의 절절한 소망과 식량안보를 걱정하는 시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농조를 중심으로 하는 기득권세력은 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3개 기관 통합이라는 개혁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왔다.

농조와 농조연은 농민의 이름을 빙자하여 농림부 뿐만 아니라 농민단체를 '하수인'이라고 매도하며 3개 기관 통합의 개혁작업을 저지시키려 하고 있다. 운영부실로 인해 연간 1,000억원의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봉급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조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요 일간지의 전면광고를 포함하여 통합반대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다.

또한 농조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일부 농조대의원을 이용, 일반 농민의 이름을 도용하여 허위 서명운동을 벌이다가 해당지역농민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하였다. 더구나 9월 30일에는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의 반대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며, 3개 기관 통합을 반대하는 50만명 서명운동과 지역구 국회의원 압력행사를 계획하는 등 최근 농조의 반개혁활동은 극에 달하고 있다.

우리농업을 걱정하는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농단협, 전농, 한농연 등 농민단체는 이런 반개혁적 농진공·농조·농조연 통합 반대운동이 자칫 정부의 농정개혁을 저지시키고, 나아가 국민의 안정적 식량공급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다. 또한 통합반대세력이 시민들의 눈을 가리려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여 게재하고 있는 통합반대의견을 담은 신문광고를 접하고 '3개 기관' 통합을 둘러싼 논란이 농업계 내부의 밥그릇싸움으로만 인식하는 것을 우려하여 시민단체와 농민단체가 힘을 모아 긴급히 기자회견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려 한다.

'3개기관의 통합을 통한 수세 폐지 및 농업생산기반의 구축을 통한 식량자급 확보'는 5백만 농민의 지속적인 바램이었으며, 시민단체들과 농민단체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또한 농조 등의 자체구조개혁안의 비현실성과 최근의 집단이기주의적인 통합반대 행동을 볼 때 3개기관의 통합은 우리농업을 살리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3개 기관의 통합'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농정개혁과제임을 다시 한 번은 국민 앞에 천명하며, 농조와 농조연 등 기득권세력은 통합반대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농업의 백년대계를 위한 과감하고 철저한 자기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향후 통합반대세력의 활동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만약 우리의 이러한 간절한 바램과 촉구에도 불구하고 농조와 농조연이 통합반대활동을 계

속한다면 우리농업을 걱정하는 국민들과 농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책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이 IMF로 위기에 빠진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정개혁 조치를 조속히 단행한다는 취지에서라도 농조를 비롯한 통합반대세력을 엄단하고 3개 기관의 통합을 조속한 시일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 만약 3개기관통합이라는 농정개혁과제가 무산될 경우 정부와 정치권의 국정개혁에 대한 불신은 물론, 영농의욕 상실과 생산기반 붕괴로 인해 조만간 닥쳐올 전세계적인 식량위기 속에서 국가식량안보가 무너지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있음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우리농업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단체와 농민단체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농진공, 농조, 농조연 등 3개 기관을 즉각 통합하고, 이를 위해 통합반대세력에 대해 정부가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1998년 9월 29일

시민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농민단체 :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 □

농지개량조합의 반개혁적 집단행동을 규탄한다.

태풍으로 비가 계속오고 벼가 쓰러지는데 벼베기에 대비한 물관리는 팽개쳐 놓은 채, 농조 직원들이 농민들까지 현혹하여 통합에 반대하는 집회를 강행한데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 이 사건 자체가 이미 농조가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채 개혁에 저항하는 집단이기주의의 극단적 발호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농조가 이대로 갈 경우 퇴직금조차 줄 수 없는 상태의 대다수 농지개량조합은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실화되어 물관리 체계가 무너짐은 물론 대다수 직원의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정부의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게 되어 있다.

반면 3개기관이 통합되면 중복사업이 정비되고 시설설치와 유지관리가 일원화되어 농업 생산기반 정비에 도움이 됨은 물론 다수 직원의 고용도 안정되고 정부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수세를 없앨 수 있다.

2004년까지 1조원을 조성하여 정부지원도 안 받고 수세도 폐지하겠다는 농조 자체 개혁안은 이미 농림부 농진공·농조·농조연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전혀 실효성 없는 안으로서 자리와 기구를 지키겠다는 미봉책임이 판명이 났다.

농진공·농조·농조연 3개기관 통합과 수세폐지는 농민단체·시민단체는 물론 5백만 농민이 절실히 요구하는 농정개혁과제로서 정부와 정치권은 추호도 흔들림 없이 이를 실현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농조는 즉각 반개혁적인 움직임을 중단하고 농민과 농업희생 차원에서 3개기관 통합과 수세폐지의 대의에 맞서지 말 것을 경고한다.

1998년 9월 3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수금(李水金)

서초구 양재동 332-1 경원빌딩 3층 전화)529-6347 전송)529-6348

사. 농조의 허위·비방광고 규탄(전농)

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

농조의 허위·비방 광고와 반개혁적인 집단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농조의 집단이기주의를 내세운 반개혁적인 행태가 극에 달하고 있으며, 이미 500만 농민이 인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고 있다. 농업회생과 식량자급을 위해 농조, 농조연, 농진공의 통폐합을 지지하는 농민들의 희망과 범농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수차례에 걸쳐 막대한 자금을 동원한 허위·비방광고와 반개혁적 집단행동을 일삼던 농조가 이제 500만 농민과 농업계는 차치하고 농조 내부에서조차 설득력이나 정당성을 결여한 채 극단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11월 11일자 중앙일보 7면의 전면광고는 농조가 얼마나 이성을 상실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호도하는 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농조는 신문광고를 통해 한 농조직원의 자살과 관련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제때 수문을 조절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농민들을 해당 농조 조차 부인하는 폭행사실을 날조하여 폭력배인양 몰아부치고 있다.

지난 9월 30일, 태풍 예니가 북상하면서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와중에서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상경집회를 강행함으로써 많은 지역에서 배수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농민들에게 백배 사죄하기는커녕 보상을 요구하는 농민들을 폭력배인양 몰아부치고 농조직원의 자살이 태풍피해 관련 경찰의 수사·타도 아니요, 농민들의 항의때문도 아니라는 사실을 진산농조에서 증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농림부의 탄압이나 경찰의 강압수사, 농민들의 폭력행위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에 다름아니다.

농조는 직원의 죽음을 호도하고 이를 이용하여 농조직원들의 감정을 자극함으로써 또다시 반개혁적인 집단행동을 결행코자 하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자숙해야 한다. 또한 농조는 자신들의 직무유기로 말미암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농민들을 신문광고를 통해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하여 도의적 책임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 또한 져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농조의 허위·비방광고와 반개혁적인 집단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반농민적이고 반농업적인 파렴치한 행동을 자행하고 있는 농조의 작태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1998년 11월 1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수금(李水金)

*서초구 양재동 332-1 경원빌딩 3층 전화)529-6347 전송)529-6348

한국노총은 11월 15일 대회의 '노동자-농민대회' 명칭을 변경하라

5백만 농민과 반대되는 의견을 주장하는 집회가 농민대회일 수는 없다

한국노총의 11월 15일 노동자대회에 대다수 농업인이 찬성하는 '농조-농조연-농진 3개 기관 통합'을 반대하기 위해 급조된 '전국농지개량조합 100만농민조합원회'라는 유명단체가 참여하여 '노동자대회'가 아닌 '노동자-농민대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는 우려와 경악을 금치못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농조와 농조연, 농진공을 통합, 농업용수개발 및 관리를 효율화하고 그에 따른 비용절감을 통해 수세를 폐지하는 것은 농업인 절대다수의 수십년간의 열망이며, 그동안 많은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의 부단한 요구사항이었다. 하지만 3개기관 통합으로 인해 그동안의 기득권을 상실하리라는 일부 농조조합장과 농조 간부직원들의 '통합반대'운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개되면서 다수 농업인과 농정개혁을 원하는 시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당시 급조된 '전국농지개량조합 100만 농민조합원회'는 대다수 지역농민에게 유명단체로 인식되고 있다.

당초 농조는 11월 11일 집회를 계획하였으나 인원동원이 어렵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벌이는 집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때 발생될 사회적 비난을 두려워하여 한국노총의 노동자대회에 같이 참여하는 편법을 취하였다. 이때 일부 농조조합장과 농조의 강력한 요구로 인해 100만 농민조합원회를 개최단체로 포함시키면서 '노동자-농민대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우리 농민단체들은 전체 농업인과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3개기관 통합과 반대되는 내용의 집회를 하면서 '농민'대회라고 명칭을 붙이는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농민대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농업계에서 신망과 공신력이 있는 단체와 연대하여 집회를 개최할 때에만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농업계 전체에서 비난받고 있는 급조된 유명단체를 대회에 참여시켜 농민대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천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한국노총이 취할 도리가 아니며, 장기적으로 볼 때 노동자와 농민의 연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따라서 우리 농민단체들은 15일 대회에서 한국노총이 '농민대회'라는 명칭을 삭제하고 순수 '노동자대회'라는 명칭으로 집회를 가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만일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노동자-농민대회'라는 부적절한 명칭을 계속 고수할 때에는 우리 농민단체 일동은 이에 대한 유감과 항의의 입장을 표할 수 밖에 없다. IMF위기의 고통을 전담하고 있는 노동자와 농민간의 연대는 향후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한국노총 지도부의 파단성 있는 '농민대회' 명칭 철회를 촉구한다.

1998년 11월 13일

전국농민단체협의회(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기독교농민회,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생활개선중앙회, 한국포도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여 백

3. 주요 신문사설 · 칼럼

여 백

농정조직개편 후퇴없어야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 등 공공부문 개혁작업이 해당기관의 반발로 원칙이 흔들리거나 후퇴하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다. 공공부문의야말로 사회전반의 개혁요구를 앞장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업 금융개혁 등 민간부문에 대한 강도높은 개혁요구는 설득력을 잃게 된다. 그런데도 일부 공공기관은 경영진과 노조가 한통속이 되어 정부의 개혁작업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지극히 유감스런 일이다.

기획예산위원회가 최근 18개 정부부처 산하 출연 위탁기관 1백33개소에 대해 경영혁신 세부추진계획을 제출토록 했으나 한국마사회 등 8개기관이 인력감축 사업구조개편 경비절감 등 정부 개혁지침을 따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기관들도 인력감축 등의 개혁노력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농어촌 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농지개발조합 등의 통폐합을 통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과 농협 축협 임협 등 농업인 자조조직의 통합을 둘러싼 집단반발이다. 조직의 합리화와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당연히 합쳐져야 할 기관들인데도 조직이기주의에 편승해 조직적인 저항을 하고 있다. 겉으로는 자체구조개혁안을 내놓을 테니 정부가 이를 수용하라는 것이나 실제로는 기득권 보호차원에서 정부의 통합

방안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다.

농진공 농조연 농조 등의 통합 당위성은 새삼스레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농정지원 기관 중에서도 기능중복과 조직비대화가 가장 두드러진 부문이 농업생산기반 조직이다. 이들 기관은 비슷한 업무를 중복 수행하는 낭비와 비효율의 대명사처럼 되어 왔다. 그동안 농업부문에 대한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농촌과 농민들에게 직접 돌아가지 못한 것은 농업지원조직의 방만한 예산 운용과 조직인력구조에도 원인이 있었다.

농업 관련 협동조합의 통합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농민들의 자조조직이면서도 협동조합 본래 목적인 경제 지도 사업은 뒷전인 채 신용사업에만 열중해 왔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한정된 지역, 한정된 농업인을 상대로 불필요한 경쟁을 하면서 방만한 조직운용과 예산 낭비로 농민들의 지탄을 받아왔다.

마침내 농민단체들이 이들 조직의 통폐합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단체들은 15일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농정조직과 협동조합의 통폐합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개혁의지다. 농정지원조직을 단일조직으로 정비해 농업부문 투자의 효율화를 꾀하고 농민의 이익을 극대화하지는 개혁노력이 또다시 주춤거리서는 안된다.



사 설

농정조직 개혁해야

농정조직 개혁이 관련 기관과 조합의 반대로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농림부는 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어촌진흥공사 등 3대 조직을 통합하고 농협·축협·임협·삼협 등 4대 협동조합을 합병하는 등 농정 관련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농림부가 농지개량조합과 연합회 및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합하여 공사화하려는 것은 기능과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낭비를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농지개량조합은 지난 10년간 9,000여억원의 정부보조와 조합비 2,600억원 뿐 아니라 최근에는 연간 1조원 이상의 사업비 등 정부의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경영부실로 인해 많은 조합이 파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국민세금으로 조합직원 4,000여명이 봉급을 받고 있는데도 조합이 부실화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농협·축협·임협·삼협 등 4개 협동조합도 마찬가지다. 이들 조합의 경우 업무 중복성과 조직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온지 오래다. 이들 조합을 통합한다면 막대한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유통시스템이 단일화되어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도 농협을 제외하고 다른 조합이 갖가지

핑계를 내세워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농업관련 조직이 농민보다는 단체의 집단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한심스런 작태가 빚어지고 있다. 조직의 폐해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각종사업관련 비리가 잇따라 일어나는가 하면 조합장 선거를 놓고 금품과 향응이 오가는 등 갖가지 부조리와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95년부터 96년까지 농지개량조합이 발주한 236건(공사비 7,009억원) 공사가운데 65.4%가 제한입찰과 수의계약으로 처리됐다는 것은 비리가 많을 수밖에 없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농지개량조합의 평균 낙찰률이 94%로 농어촌개발공사의 89%보다 무려 5% 포인트나 높은 것은 막대한 정부예산이 낭비된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농민들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경기가 침체되면서 은행 부채를 갚지 못해 파산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농업관련 단체는 경영합리화를 위한 개혁을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것인가. IMF사태 이후 정부는 물론 모든 분야여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데 농업관련 조직이 집단이익을 고집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농림부는 이들 조직이 자율적으로 개혁을 하지 않을 경우 정부보조금 감축 또는 중단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 논 단

임재현

충남대 교수·농업경제학



정부 산하조직 개편과정에서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발조합-농지개발조합연합회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농정개혁과 농정조직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농진공 등 정부부자기관의 구조조정을 통해 조직의 효율화와 경영 합리화를 꾀하자는 것이다.

농진공과 농조-농조련 통합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70년 농촌근대화촉진법 제정에 따라 토지개발조합연합회를 농진공과 농조-농조련 이원화 체제로 한 이후 끊임없이 재통합론이

농진공은 인원을 19% 감축하고 조직을 축소개편하며, 기본조사에 민간을 참여시키고, 유사한 농업생산기반 정비기능을 가진 농조-농조련도 농진공 수준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선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사기능 및 조직을 통합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애초의 개혁방향에서 벗어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농진공과 농조-농조련 통합은 제도·기술·관리형성·재정 측면은

농정조직 통폐합해야

거론돼왔다. 그 당위성은 두 기관이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설계·공시감독·토양조사 및 자질시험 등의 기능에서 기술적인 동질성을 갖고 있고, 정부의 재정투융자 자금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며, 두 기관을 감독하는 기관이 농림부 농지국으로 같다는 점에 있다. 역대정권들은 통합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여러 이유로 지금까지 존치시켜왔던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최악의 경제난국은 국가기관과 기업들이 비효율성·비합리성을 개선하지 못하고 방치해온 데서 비롯됐다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정부는 합리적인 조직관리와 재정투융자 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수많은 산하기관을 기능별로 통폐합하고 인원을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시행 중이다.

그런데 농림부가 최근 펴낸 '농정추진평가와 과제'를 살펴보면

물론, 농지관리의 효율성 면에서도 마땅히 이뤄져야 할 일이다. 70년대 이전의 토지개발조합연합회 시절과 같이 농진공 안에 조합유지관리처를, 지사에 조합유지관리부들을 두고, 군지부에는 유지관리과를 설치하여 농지를 관리한다면 비용절감은 물론 합리적인 시설물 유지관리가 가능하다. 또 시장개방 체제에 맞는 농지이용 증진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농조는 조합장을 민선으로 뽑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정부가 대고 농업기반 조성 사업비도 정부가 100% 부담하고 있는 현실 아래서는 조합장 직선이 별 의미가 없다. 농진공과 농조-농조련 통합 문제가 몇몇 고위층의 자리싸움이 되어서는 안된다. 가장 최소한 자원인 농지의 개발보전, 농촌 및 농업 발전, 농민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라고 본다.

농정조직 통폐합 가시화 농진공 주체돼야 효과적



朴正根

〈전북대 교수·농업경제학〉

부실은행이 퇴출되고
공기업의 민영화가 이뤄
지면서 이제 농정조직의
구조조정도 가시화되고
있다. 농어촌진흥공사, 농
지개발조합, 농지개발조
합연합회 등 농업부문 유
사기관의 통폐합문제가
눈앞에 닥친 것이다.

농정조직의 개편문제는
왜, 무엇을 위해, 누가 주
체가 돼서 이기관들을 통

폐합해야 하는가를 이론적으로 명쾌하게 밝혀야 비로소
농정 구조조정의 방향이 분명해진다.

먼저 세기관의 통폐합 논의가 단순히 기능의 중복성
에서 오는 예산낭비, 조직의 비효율성 또는 농민수가 줄
어들기 때문에 농업관련 지원종사자수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해서는 안된다.

오늘날 농업은 자원위주에서 기술위주로 전환돼 농업
생산이 농촌 노동력과 농지 등 투입물보다 생산력 증대
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농업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기
술개발과 보급 등 농업관련 지원부문의 확대는 필연적
이다. 따라서 농정조직 개편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논리적 근거를 찾아야 한다.

기술개발은 반드시 제도변화를 가져온다. 그 사회가
새로운 기술변화를 수용하는 제도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때 경제적 자원낭비만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가져오
게 된다. 농민측면에서도 농지가 어느 구역에 포함돼 있
느냐에 따라 수리비 부담에 차별이 나타나는 모순도 발
생했다. 또 수리시설 관리와 경지정리사업 등에 필요한
인력수요에는 계절적 진폭이 크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공
사, 농지개발조합, 행정기관 간의 기능중복 및 예산과
인력의 낭비가 큰 것이 사실이다.

농지개발조합은 과거와 달리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과 함께 그 기능에 공익성이 커지고 있다. 농업에 대한
물수요 패턴도 다양하게 변화해 농업의 용수의 수요도
급증한다.

농업이 상업적 영농으로 전환됨에 따라 물관리도 지
역에 따른 체계화보다 수계나 물의 사용효율에 따라 체
계화해야 한다. 앞으로는 물관리도 계측장치, 원격조작,
자동제어, 수질오염 방지 등의 관리시설과 전산처리에
의한 농어촌시스템의 자동화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증대
시키고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농업과 농어촌개발의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는 현실
에서 새로운 제도변화의 당위성은 농어촌진흥공사로의
통합을 촉구하고 있다.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이를 수
용해 사회적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관은 농진공이
제격이기 때문이다.

농업 지원조직 재정비할때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농업과 농어촌문제를 효율성이란 잣대로 재단하는 것을 금기시해왔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 이후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온정주의적' 재정지원이 확대되면서 농업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 지출과 농정 지원기관 근무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농가 16가구당 1명꼴에 해당하는 8만8천명이 농업지원 조직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이들 조직의 구조조정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42조원, 농특세사업에 15조원 등 막대한 재정지원이 이뤄졌으나 그 혜택이 농촌현장과 농민들에게 직접 돌아가지 못한 배경에는 방만한 예산 운용과 경직된 인력구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농정 지원기관 중에서도 기능 중복과 조직 비대화가 두드러진 부문이 바로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발조합 및 그 연합회다. 이들 기관은 7천명이 넘는 인력이 비슷한 업무를 2중 3중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농지개발조합의 경우 파산가능성이 높은 조합이 50%를 넘을 정도로 부실 정도가 심하다.

따라서 농지개발조합과 그 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의 3개 기관을 단일 조직으로 정비해 농업부문 투자 효율화를 기

하는 것이 농업 발전과 농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대승적 방안이다. UR협상이후 자생력을 기르지 못한 상태에서 IMF 위기까지 맞은 농업과 농어촌지역이 정부의 재정지원 감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업관련 조직의 쇄신과 지원부문의 거품제거가 우선되어야 한다.



곽 채 기
(전남대학교수·행정학)

기고



金正夫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기반공사' 기능 효율화 절실

국민의 정부는 농업부문 국정 개혁과제의 하나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농지개발조합(농조), 농지개발조합연합회(농조연), 농어촌진흥공사(농진공) 등 3개 기관을 농업기반공사(가칭)로 통합해 조직과 기능을 효율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개 기관의 통합에 대해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찬반 논쟁이 팽팽해 여러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들 기관의 통합 그 자체는 장단점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는 힘들다. 이들 기관의 통합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소모적 찬반논쟁에서 탈피하기 위해 몇가지 측면에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조직의 지속적 존립 가능

첫째, 대(對) 농민 서비스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농조, 농조연, 농진공의 운영은 통합돼야 효율화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농조와 농진공의 경영은 자체 수입이 아니라 정부의 보조로 운영돼 왔으나 그나마 경영상태가 불안정하다.

농조는 지난 88년부터 국고보조금에 크게 의존해 왔으며, 물관리에 대한 투자가 소홀해지면서 농민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다.

농진공 역시 주요 기능과 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요 업무영역인 간척사업 등은 축소가 불가피하고 농산물 지하저장시설의 설치운영사업 등은 더이상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처럼 자립기반을 갖추기 어려운 여건하에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지속적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 관련조직의 통합이 선택되었다.

열악한 경영상태 개선

둘째, 3개 기관 통합은 통치권

차원에서 결정된 농정개혁 정책의 하나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책 수립과정에서 결점없는 완벽한 정책은 없으며 정책결정은 결정권자의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서 중복기능 해소, 대 농민 서비스 개선 등 경영혁신이 절실히므로 3개 기관을 현행 체제로 각기 존속시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3개 기관 통합 결정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뤄진 정책결정권자의 고뇌에 찬 선택이었음을 직시해야 한다.

농업·농민서비스질 향상

셋째, 3개 기관의 통합은 농업생산기반의 정비와 확충, 농지규모 확대, 농촌생활환경 개선 등과 관련된 기구를 효율화하는 것이 이들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특히, 주곡 자급 차원에서 물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기능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

3개 기관이 통합되면 농업과 농민에 대한 서비스는 더 향상될 수 있다.

국민의 정부가 3개 기관 통합을 농정개혁 과제로 선택한 것은 이들 기관의 기능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 통합에 대한 국력 소모적인 찬반논쟁은 중단돼야 한다.

농조, 농조연, 농진공 3개 기관은 농업과 농민을 위한 조직이다. 기관의 조직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지금은 이들 3개 기관의 통합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농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 협력해야 할 때다.

4. 농조·농조연·농진공 통합관련 신문기사 모음

여 백

농진공·농지조합 통폐합

업무중복 예산집행 효율성 떨어져

농어촌 생산기반정비사업체인 농어촌진흥공사와 전국의 1백3개 농지개발조합이 통폐합된다.

26일 농림부 및 기획예산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의 농지개발조합 시·군지부를 농어촌진흥공사의 75개 시·군지부에 통합시키기로 확정했다. 또 농지개발조합의 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해온 농지개발조합연합회의 시·도지사는 농어촌진흥공사 지사 및 사업단에 통합, 농업생산통합기술단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들 기관의 통폐합에 나선 것은 업무상 기능이 중복되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농진공은 경지정리와 농업용수개발 업무를, 농지조합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발 및 관리를 맡고있다. 특히 농지조합은 전국 1백5개 농지개발조합의 대다수가 재정구조가 극히 취약, 정부가 지난해에도 운영경비로

만 1천1백17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도 9백17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농업예산이 낭비되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돼왔다. 농지조합은 농민이 수세로 내는 조합비에 의존하고 있으나 농업생산 및 경작지감소로 자체수익이 매년 줄고있다. 현재와 같은 운영체계를 유지할 경우 수년내 파산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돼왔다.

김정아 기자 jackie@

농진공·農組聯·농조 1개 기구로 통·폐합

‘농업기반개발공사’ 2000년 발족

농어촌진흥공사(농진공), 농지개발조합연합회(농조연), 농지개발조합(농조)이 통폐합돼 「농업기반개발공사」(가칭)로 발족된다.

농림부는 8일 농정개혁위원회를 열어 농진공·농조연·농조 등 3개 기관을 통폐합해 2000년 1월부터 가칭 「농업기반개발공사」를 발족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내년 10월까지 1단계로 농진공과 농조연의 인원을 20% 감축하고 농조는 소규모 농조의 합병, 인력감축 등 기관별 자체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2단계로 이들 기관 및 단체를 해체한 후 2000년 1월부터 「농업기반개발공사」를 발족시킬 계획이다.

**내년부터 합병·인원감축
기능중복등 비효율 해소
예산절감·농민부담 줄듯**

農組 ‘통합반대’ 마찰예상

농림부는 이를 위해 이 달중 통합 관련단체를 비롯해 학계, 농업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산하에 실무기획단을 두어 내달말까지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 및 단체는 ▲기능의 중복 및 비효율 ▲농업인구에 비해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의 과다 ▲수리관리 체계의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과 수질관리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농림부는 통폐합이 실현되면 상당 수준의 운영경비와 생산기반 정비사업 예산의 절감으로 농민들의 조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농조는 이날 통폐합에 반대, 조합원 1백만명 서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혀 통폐합 과정에 마찰이 예상된다.

용인표기자

□ 한겨레신문 ('98. 7. 9, 7면)

농지개량조합 90여년만에 '퇴출'

1906년 수리조합이란 이름으로 출발해 지금까지 존속해 온 농지개량조합이 90여년만에 완전히 사라진다. 농림부는 8월 2000년 1월까지 농어촌진흥공사(농진공) 농지개량조합(농조) 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조연)를 완전 통폐합해 '농업기반개발공사' (기창)를 발족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 조직의 효율화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농진공과 통폐합 농업기반개발공사로 농조 조직적 반발...농민단체선 "환영"



이 방안은 통폐합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우선 99년 1월까지 농진공과 농조연의 인원을 20% 감축하고, 농조는 소규모 농조의 합병 등 자체 구조 조정을 유도해 3개기관 완전해체→통폐합→새 공사 설립의 방법으로 통폐합작업을 마무리짓도록 했다.

농림부는 이달 안에 학계 농업단체 시민단체가 참여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8월말까지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정비도 모두 끝내기로 했다. 이 방안은 사실상 농진공이 나머지 두 기관을 흡수하는 방식이어서 민간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농조와 농조연은 기능만 남고 완전히 사라진다.

◇ 배경=농진공 지사 및 시·군 지부(92개) 농조연 지회(8개) 농조(105개) 등 비슷한 기능을 가진

업 관련 기관이 지나치게 많아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판여론이 강했다.

특히 전국의 수리시설을 관리하면서 농민들로부터 조합비(수세)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농조는 매년 1000억원 정도의 운영비를 국고에서 지원받고 있으나 전국 105개 조합중 95개 조합이 국고보조금만으로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경영상태가 부실하다.

또 많은 지역에서 조합장 선거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고 95~96년 발주공사 263건중 65.5%가 제한입찰과 수의계약으로 처리되는 등 조합장이 각종 공사의 이권에 개입한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 농조의 농민단체 움직임=농조는 정부의 통폐합 발표가 나오자 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하는 등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일방적으로 수세를 인상하는 등 각종 혐포를 일삼고 있는 농조의 폐지는 당연한 조처"라며 통폐합 조처를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이수금 의장은 "정부가 부실기관을 계속 방치할 땐 결국 선량한 농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된다"며 "정부는 어떤 압력에도 밀리지 말고 강력하게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망=농림부의 통폐합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농림부 김동태 차관은 "더이상 정부가 약하다는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며 부실기관 정리차원에서 통폐합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등 각종 개혁정책과 맞물려 3개기관 통폐합의 성패 여부는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는 또 하나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합석진 기자

水稅 80년만에 없어진다

빠르면 내년에 농조·농진공·농개조 통합 추진

전체 농민들의 숙원인 수세(水稅)제도 폐지가 빠르면 내년 중에, 늦어도 2000년에는 이뤄진다.

1917년 일제가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지 80여년만이다. 과거 대표적인 농민 수탈책 중 하나로 그동안 꾸준히 폐지 주장이 제기됐었다. 조선시대에는 공식적인 제도는 없었지만 탐관오리들이 마을의 저수지 등 수리시설을 이용한다는 빌미로 물값을 물렸다.

정부의 고위소식통은 19일 '105년 전 동학농민혁명의 촉발제가 되는 등 수세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이 끊이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이어

져 내려오고 있다'며 '과거 정권이 하지 못했던 수세 폐지를 국민의 정부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리사업을 담당하며 수세를 받고 있는 농지개발조합이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발조합 연합회와 통합하면 연간 600억~900억원의 비용이 줄어든다"며 "그럴 경우 (농지개발조합이) 농민들로부터 해마다 거둬들이는 360억여원의 수세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또 '기획예산위 등에서 세기관의 통합을 2000년 1월로 잡고 있지만 내년 중으로 앞당기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 140만 농가 중 93만여 가구가 농지개발조합에 가입돼 있다. 이들이 내는 수세(조합비)는 가구당 평균 4만원씩 연간 360억여원에 이른다.

하지만 일부 농가들은 저수지 등 수리시설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데도 강제로 '공리(公利·혜택을 입는다는 뜻)구역'에 편입돼 수세를 강제로 납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아왔다. 또 치수(治水)사업은 국가사업이며, 수리시설은 사회간접자본으로 국가가 투자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과 함께 전국농민회총

연맹 등 농민단체들을 중심으로 87~89년 전국적으로 강력한 수세폐지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었다.

수세의 변천사 일제가 군량미 조달 등 산미중식계획의 일환으로 1906년 제정한 '수리조합조례'에서 비롯됐

다.

이후 1917년 수리조합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10a(300평)당 벼 26kg을 세금으로 징수. 농민들의 허리를 휘게 했다. 이는 87년까지 계속돼 왔으나 농민들의 집단 반발에 부딪쳐 88년 10kg, 89년 5kg 등으로 줄어들었다.

96년 농지개발조합법이 제정되면서 현물대신 10a당 현금 6,000원을 거두는 것으로 바뀌었다. 지금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지역 별로 일정 액수를 가감할 수 있도록 돼있다.

(朴恩燁기자 unopark@seoul.co.kr)

● 東亞日報 <98. 8.12>

농진공-농조통합 꼭 성사되어야
조봉희(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 정책부회장)

11일자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발조합 통합을 재고해야 한다는 장재우 전북대학교수의 '발언대'는 현실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농진공이 대규모 간척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수리시설개보수 등도 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또 농림부는 통합을 위해 현행 7천1백74명을 5천5백명선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그러면 1천6백74명의 인원이 줄고 매년 5백37억여원이

절감된다. 그런데도 7천명이상의 거대 국영 기업이 탄생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현재 3분의1에 달하는 31개 농조가 정부의 막대한 보조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부실위기에 있다. 그러면서도 단 1개소만 경영개선을 위해 통합되는 등 자구노력이 미미한 것을 볼 때 농진공과 농조의 통합은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

농지조합등 3개기관 1천300여명 줄인다

농업기반공사 2000년 설립

농림부는 28일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 등 3개 산하기관을 통합, 내년말까지 1천3백여명의 인력을 줄이기로 했다.

또 이들 3개기관을 합쳐 자본금 5조원 규모의 농업기반공사(가칭)를 오는 2000년 설립, 운영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날 농업생산 기반조작을 정비하기 위한 제1차 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구조조정및 농업기반공사 설립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심의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농업기반공사법을 내달말까지 확정,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농조 농조연

농진공의 슬림화를 위해 3개기관 임직원 7천1백74명중 15~20%정도를 감원키로 했다.

기관별 감원비율은 농조와 농조연이 20%이며 농진공은 15%가 적용된다.

이에따라 농조는 8백20여명, 농조연은 1백30여명, 농진공은 4백여명씩의 감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농림부는 또 전국 1백5개 농지개량조합중 조합법 61조상 설립요건에 미달하는 조합 39개를 합병명령을 통해 강제 통합키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신설될 농업기반공사는 수리시설의 유지관리와 농업생산기반조성 농촌지역종합개발 등 농업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기원 기자 dadad@

□ 연합통신 ('98. 8. 29, 7면)

소규모 합병 전국농조 80여개로 조정

(서울=연합) 金素烈기자= 농림부는 28일 농어촌진흥공사(농진공)와 농지개량조합(농조), 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조연)를 통합하기 위한 전단계로 소규모 농조 간의 합병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합병대상 농조는 설립기준(수혜면적 3천ha미만)에 미달되는 농조 39개로 이 가운데 30여개 농조는 흡수통합 과정을 거치게 돼 전국의 농조는 현재의 1백5개에서 80여개로 줄어든다.

기준미달로 다른 조합에 합병될 농조는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이 7개, 강원 6개, 전남 5개, 충남, 북과 경남 각각 3개, 경북과 대구지역 2개 등이다.

농림부는 이날 과천 청사 대회의실에서 농업생산기반 관련조직의 정비를 위한 제 1차 통합추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끝)

“농정조직도 개혁필요”

공감 확산

『농촌에는 농부보다 농업관련 단체 종사자가 더 많다』

국직인 농업관련단체만해도 농협 축협 임협 농진공 농조 농조연 등이 있다.

농민수는 계속 줄어드는데 왜 농업 관련 조직원은 오히려 늘고 있는지의문이 아닐수 없다.

이같은 의문에대한 해답으로 정부가 농정개혁차원에서 우선 농지개량 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 등 3개기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구한말 녹두장군 전봉준이 수세페지를 요구하며 동학혁명을 일으킨 이래 농조개혁문제는 농정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손을 대려고 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맞이 농민들이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농조, 농조연, 농진공의 통합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즉 농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적으로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통합이 불가피하는 대세론의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특히 이 작업은 현정부 개혁의 시금석이기도 한다.

농업관련 조직 통폐합 어떻게

농조-농진공-농조연 기능중복 심각

“파행운영등 국고만 탕진” 여론높아

“민간기구 공기업화 시대역행” 반발도

농조와 농진공은 농정지원기관중에서 기능중복과 조직비대화가 가장 두드러진 부문이다. 이들 기관은 비슷한 업무를 중복 수행하는 낭비와 비효율의 대명사처럼 돼 왔다. 그동안 농업부문에 대한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농촌과 농민들에게 직접 돌아가지 못한 것은 농업지원조직의 방만한 예산 운용과 인력구조에도 원인이 있다.

농림부의 개혁안은 3개기관을 통폐합해서 농업기반공사를 설립토록 하고 있다. 현재 7,174명인 직원수를 1,200여명 줄인후 통합후 2001년까지 5,500명수준으로 감축해나간다는 것이다. 조직은 본부-도시사무소-지역사무소의 3단계 공사조직으로 하고 지역사무소는 현행 188개에서 80개

로 감축한다.

3개기관 통합추진위원회 공동대표인 조성우(趙成禹)전농 부의장은 3개기관 통폐합은 시대적 요청이고 정부의 농정개혁의지를 시험하는 과업이다. 통합에 따른 예산절약분은 모두 농민에게 돌아갈 몫·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개편안에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농조과 농조연은 3개기관 통폐합이 아니고 사실상 농진공에 흡수통합되는 것이다.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마당에 민간조직체를 공기업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물관리체제를 보면 저수지 용수·배수로 등 수리시설의 조사·설계는 농진공, 이들의 유지관리는 농조와 농조연 담당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현재제는 똑같은 일을 농법기에는 농조가, 농한기에는 농진공이 나눠맡고 있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농조운영의 문제점은 3개기관의 기능중복에 따른 비효율과 운영부실, 조합간부의 비리 등을 들 수 있다. 농조는 조합비 보전차원에서 국고에서 매년 1,000억원씩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경영으로 인해 다소조합이 파산 등 경영위기에 직면해있다.

전국 105개 농조중 자립농조는 10개에 불과하고 95개 농조가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운영경비 부족으로 예산편성조차 어려운 조합이 20개, 직원퇴직금도 줄수 없는 조합이 31개에 이르고 있다.

둘째, 농업생산기반정비 기능을 3개기관이 나눠 수행, 비효율성이 엄청나다. 기본조사, 설계, 감리 등의 업무는 농조연과 농진공이 경쟁관계에 있으며 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는 사업규모에 따라 농조와 농진공이 분담하고 있다.

세째, 88년 조합장선출제가 도입된



경실련·한농연·전농 등 시민, 농민단체 소속회원들이 29일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조·농조연·농진공 등 3개 기관의 즉각적인 통합을 촉구했다.

이후 조합장 선거를 둘러싸고 대의원매수 등 부정선거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선출직 조합장이 발주공사의 입찰에 공공연히 개입하고 있다. 97년 실시한 조합장선거에서 금품제공·대의원매수 등 선거부정으로 사법처리된 경우가 전국적으로 수십건에 달한다.

3개기관 통합에 따라 농민들에게 돌아오는 반사이익은 상당하다.

물관리에 있어 광역단위 종합관리 운영체제가 구축됨으로써 농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

또 농번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농조와 농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농진공의 통합으로 인력이 20~30%가 줄어

들어 조직·인력의 군살이 빠진다. 경비절감액수만큼 농조조합비 감면을 추진해 농민들에게 혜택이 직접 돌아 가게 된다.

농진공의 전문인력과 농조의 현장기술력 결합으로 현지여건에 부합되는 양질의 시설물 설치, 유지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최근 심각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농촌환경오염에 대해 농업용수의 과학적 관리와 수질개선을 통해 수질오염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3개 기관의 통합이 시대적요청이라는 사실에 대해 대부분 농민들은 공감하고 있으며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이 요구되고 있다.

[연성주 기자]

“年경비 1,000억 절감 농민에 양질서비스”

찬성

權光植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3개기관의 통합도 조직적

인 반대에 부딪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합을 반대하는 쪽은 일부 농지개발조합장, 대의원, 노조대표 등이다. 이들은 농조부실운영에 책임을 통감하고 개혁에 협조해야 함에도 기득권유지를 위해 조직적으로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개혁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이 개혁이 일부 기득권세력의 반대에 부딪혀 성공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농정개혁은 물론 국가 전체적인 개혁프로그램에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IMF체제라는 국가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강도높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련의 개혁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우리의 장래가 달려 있다.

농업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각계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평가분석을 거쳐 농업생산기반정비분야의 유사중복조직에 대한 통폐합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3개기관 통합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상당히 크다. 우선 방만한 유사중복기능과 조직을 정비함으로써 인력이 20~30% 감축된다. 이로 인해 절감되는 700억~1,000억원으로 농민과 국고부담 경

감이 가능하다.

현재 분산된 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진공과 농조의 전문인력과 현장관리 경험의 결합해 현지 여건에 부합되는 양질의 수리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의 과학화와 체계화를 촉진하는 시너지효과로 농민은 지금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통합기관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발전시킴으로써 해외시장개척과 통일농정에 대비하고 농업생산기반정비분야와 연계된 종합적인 지역개발기능을 가짐으로써 농촌의

□ 한국농어민신문 ('98. 10. 1, 12면)

“농조 - 농조연, 조직 통폐합 적극 동참을”

전북도내 농민단체 대표자들은 정부의 농진공·농조·농조연 등 3개기관의 농업기반개발공사(가칭)

통폐합 추진에 농조와 농조연이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북도농업경영인연합회를 비롯 전농전북도연맹, 4·H연맹전북도지부, 전북농촌지도자연합회, 가톨릭농민회 등 도내 농민단체 대표

전북 농민단체 대표 촉구 자들은 지난달 28일 전북도연합

회 사무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조, 농진공, 농조연 등 3개기관의 통폐합이야말로 생산기반의 강화와 함께 확고하게 이끌어 나가야 할 과제”라며 “농조와 농조연은 통폐합 반대 입장과 활동을 중단하고 통폐합에 적극 나설 것”을 주장했다.

“農組등 집회참석은 농민우롱 처사”

農振公, 상경집회 반박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발조합, 농지개발조합연합회를 3개기관 통합과 관련, 농조와 농조연 노조 및 농민조합원들이 30일 과천시정부청사앞 집회를 가진 데 대해 농어촌진흥공사도지사는 “농조와 농조연의 과천집회는 대다수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농진공도지사는 30일, 농민기여다 태풍 복상으로 추수할 작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내 농조 직원들이 업무를 전폐한채 과천 집회에 참석한 것이 진실로 농민을 위한 것인지 의아하다며 “이같은 집단이기주의가, 일부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는 아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완근)

농조등 농정조직 통합 반대 집회

「장의투쟁」벼랑끝 선택

정부 「반개혁세력」 몰아치기 갈등심화 예상

30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앞 광장과 서울 여의도 등지에서 농지개발조합(농조)과 농지개발조합연합회(농조연) 노동조합 주도로 열린 통합반대 집회는 이른바 '농정조직 통합 반대파'들의 움직임이 새로운 단계로 비화됐음을 말해준다.

그동안 이들은 농림부가 추진중인 농어촌진흥공사(농진공)-농조-농조연 통합방안에 대해 '통합반대 서명운동'과 '통합반대 신문광고' 등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집중 홍보해 왔다. 특히 농조 등의 노조는 자체 개혁방안을 발표하는 등 이른바 '반개혁세력'으로 인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성명전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와 3개기관 통합추진위 등의 대응수위가 오히려 높아져 농조 노조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조치 등이 취해졌다. 29일에는 시민단체와 농민단체들이 농정조직의 즉각적인 통합과 통합 반대파들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정부

에 촉구하고 나서는 등 주변 상황이 점점 불리하게 전개돼 왔다.

이런 과정으로 미루어 이날 집회는 본격적인 장의투쟁을 통해 자신들의 의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딱한 불가피한 처방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농림부 당국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당초 통합 반대파들이 장담한 성과는 달성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참가인원이 예상에 크게 못미쳐(과천 집회 3만명 이상 참여 예상에 1만5천여명 참가) 통합 반대파들이 '전국 1백만 농민조합원회'를 내세우는 등 '다수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판속물들은 이에 대해 이날 나쁜 기상여건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농림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요 요인으로 거론하고 있다. 농림부는 며칠전부터 이날 집회의 호응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경찰 및 각 시도 관계자들과 함께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또 29일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을 고비로 수세폐지와 농정조직 통합이라는 개혁과제를 지지하는 여론이 더욱 고조됐다고 판단, 앞으로 통합 반대 움직임에 대해 더욱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일부 농조 경영의 실태와 비리 의혹을 집중

부각시켜 통합 반대파들을 '밥그릇'에 집착하는 '반개혁, 세력으로' 인식시킨 뒤 예정된 수순에 따라 3개 기관 통합 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농림부와 이에 맞서는 농조와 농조연내 일부 통합반대 세력간 갈등은 앞으로도 더욱 첨예화될 것이라는 것이 농업계의 관측이다.

“배수문 관리 잘못 농경지 7만여평 침수”

창녕 남지주민 시설하우스등 피해 호소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50여가
구 주민들은 용지개량조움이 배
수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 일대 7만여평의 농경지가 침
수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1일 이지역 농민들에 따르면
남지읍 남지리 117일대 5만여평
의 벼논과 2만여평의 비닐하우스
가 침수된 것은 계성천으로 배출
하는 수문을 남지·영산농조출장
소가 서로 관리를 미루는 등 제

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발생했다
는 것.

이 때문에 수확을 앞둔 벼논에
는 1m이상의 빗물이 고인데다
전반이상의 벼가 넘어지고 이렇
하순께 부터 출하된 2만여평의
오이들 비롯한 고추 토마토 등의
하우스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
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주민들은 『이 일대의
농경지는 50mm의 비만 와도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인데 농조

와 행정당국이 서로 책임을 미뤄
이같은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다
며 체계적인 배수관리 등이 시급
하다고 지적했다.

농지조합 폭우 태풍 밀려오는 데 상경

저수지·배수문 관리 허점

경남 15개 조합 통폐합 반발 대거 서울로 진주 영천강·덕천강 범람 농경지 피해가중

태풍 「해니카」 남부지방에 큰 피해를 내고 있는 가운데 농지개량조합직원들과 대의원들이 정부가 추진중인 농업관련단체 통합에 반발, 「농지개량조합지체개혁방안 수용 촉구 및 투쟁결의대회」 참가차 과천으로 대거 상경, 저수지와 배수문 관리가 안돼 말병이 되고 있다.

진주시 진산농지개량조합과 도내 농민들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남부지방이 태풍영향권에 접어들어 농작물 침수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진산농조 직원

과 대의원 17명 등 경남도내 15개 농지개량조합 소속 직원 1천5백여 명이 관광버스를 이용, 30일 오후 1시부터 과천중앙청사 잔디구장에서 열린 「농지개량조합 지체개혁방안 수용 촉구 및 투쟁결의대회」에 참가차 떠났다.

이 때문에 저수지와 배수문 관리 인원이 없어 저수지와 하천의 제방을 밀어놓지 않는 바람에 민수위를 넘은 각 저수지가 빗물유량 분산역할을 못해내 농경지 침수피해가 중시됐다.

직원 50여명중 30여명이 대회를 위해 떠난 진산농지개량조합 관내의 경우 저수지 38개, 양배수장 32개, 보 3개를 관리하고 있으나 진주시 문산읍 판내·영천강변의 배수문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이곳에서만 500ha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곳곳에 큰 피해를 내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 지리산·산청·진양호로 이어지는 덕천강도 한꺼번에 빗물이 쏟아져 범람위기를 맞고 있다.

한편 이날 대회는 정부가 농업관련단체의 구조조정과 일환으로 농어촌 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를 통합해 농업기반개발공사를 신설키로 하자 이를 저지키 위해 개최됐다. / 김민수기자

농정조직 통합 갈등 확산

農組·農組聯노조 정부청사앞서 반대시위

경실련등 시민·농민단체선 즉각 개혁 촉구

농정조직 통합을 둘러싼 농업관련 기관들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통합대상인 농지개발조합(농조)과 농지개발조합연합회(농조연)가 통합에 반대하며 대대적인 광고전과 집단시위를 통해 실력행사에 나섰고, 이에 시민·농민단체들은 이들을 강력 비난하며 농정조직의 즉각 통합을 촉구했다.

농조 및 농조연 노동조합, '전국

.100만 농민조합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 광장에서 대규모 집단시위를 갖고 정부의 통합방침을 맹렬히 비난했다.

전국의 조합원과 농민 등 1만여 명이 참여한 이날 집회에서 농조연 측은 "정부의 농정조직 통합안은 농업인의 자치권과 수리권을 박탈하고 농민 자조조직의 권익을 무시한 시대착오적 개악"이라며 "조합

원의 수리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혁신적인 농조 자체의 개혁방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실력행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통합방안은 대세로 굳어가는 양상이다. 최대 농민조직인 전국농민단체연합회(전농)가 이들의 주장을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규정지며 통합을 촉구하고 나선 데 이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대표적인 시민단체들도 이에 가세하는 양상이다.

농림부는 그러나 통합반대 세력들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자칫 통합안이 국회 처리과정에서 변질되지 않을까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陳璣鎭기자 kyoungho@seoul.co.kr〉

□ 연합통신 ('98. 10. 2)

충남농조 농정조직 통합 반발 확산

"특정공기업 농진공 살리기위한 의도"

(충남종합=연합) 任俊宰.李殷坡기자 = 정부의 농어촌진흥공사 등 3개 농정조직 통폐합 결정에 대한 충남도내 농지개량조합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보령농지개량조합은 1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농지개량조합과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 등 3개 기관을 통폐합하려는 것은 농정조직의 효율성을 꾀하기보다는 특정 공기업인 농진공을 살리기 위한 의도가 짙다"고 주장했다.

서산농조도 이날 농림부에 보낸 건의문에서 "농조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농조연은 회원조합의 지도 및 지원사업, 농진공은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등을 수행하는 등 각각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어 정부의 '기능중복'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조합원들의 동의없는 통폐합 결정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예산농조는 성명에서 "농민들의 자체 조직인 농조를 공기업인 농어촌진흥공사와 통폐합하는 것은 민주화, 자율화, 전문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식량자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조직을 통폐합하기보다는 각 조직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태안농조 역시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이번 결정은 각 조직에 대한 현지 실사나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즉흥적인 발상"이라며 "성격이 다른 조직을 인위적으로 한데 묶는 것은 우리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농림부는 9월 18일 정부 과학청사에서 제 4차 농조, 농조연, 농진공 통합추진 위원회를 열어 이들 3개 기관을 통합, '농업기반공사'를 신설키로 확정했다.

(끝)

□ 연합통신 ('98. 10. 2)

태풍에 벼 25만2천ha 쓰러지거나 침수

농림부 집계... 전남이 11만780ha로 最多

(서울=연합)金泰원 기자= 농림부는 제9호 태풍 '애니'의 영향으로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벼가 쓰러지거나 침수된 면적이 25만2천ha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시.도의 행정조사를 통해 집계된 이같은 피해면적은 올해 벼재배면적 1백5만3천ha의 23.9%에 해당하는 것으로 완전쓰러짐 11만5천7백ha, 반쓰러짐 12만3백ha, 쓰러진 벼 침관수 1만6천ha로 구분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1만7천8백ha(완전쓰러짐 5만3천1백, 반쓰러짐 5만4천8백, 침수 9천8백ha)로 가장 많고 경남 5만2천5백ha, 전북 2만6천1백ha, 충남 2만3천7백ha 등으로 밝혀졌다.

농림부는 쓰러진 벼 일으켜 세우기에 공공근로사업 인력과 공익요원, 민방위대원, 작전에 지장이 없는 군인, 농협과 축협,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 직원과 추석을 맞아 귀향하는 인력까지 동원할 예정이다.

지난달 20, 21일에도 농림부는 모두 32만6천7백여명을 동원해 비로 쓰러진 23만6천여ha 가운데 6천7백여ha의 벼를 일으켜 세웠으나 이번에는 비가 다 자라 낱알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벼를 다시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림부는 침수된 지역의 배수구를 정비하고 논둑을 군데군데 터 놓아 최대한 물을 빨리 빼고 수확기에 있는 벼를 서둘러 수확한후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기를 이용해 건조하도록 당부했다. (끝)

□ 국제신문 ('98. 10. 2, 18면)

“배수문 관리안돼 큰 피해” 농민들 항의농성

농지조합 상경 파문 확산

속보=농지개발조합 직원들이 정부의 농업관련단체 구조조정에 반발해 대거 상경하는 바람에 배수문 관리가 안돼 태풍 애니의 피해를 크게 입었다며 경남지역 농민들이

항의농성을 벌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1일 진주시와 농민들에 따르면 농지개발조합 직원들이 정부가 추진중인 농업관련단체 통합에 반발해 이날 과원에 대거 상경, 배수장브 관리가 안돼 큰 태풍 피해를 입

었다는 것. 농민들은 진주시 문산을 영천강 일대와 수곡면 덕천강 일대 1천여ha의 농경지가 침수된데 이어 집현면 지내천 일대 벼는 20ha와 시설하우스 20여동(5ha)이 침수되고, 금산면 남성 배수장의 배수지연으로 벼는 등 10ha가 침수되는 등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김인수기자

배수관 관리 잘못 농경지 침수

김해 진영 주호리 일대 1만여명 피해

김해시 진영읍 주호리 박정현씨(48) 등 주민들은 김해농지개량조합이 배수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 일대 1만여명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2일 농민들에 따르면 태풍 「애니」가 진영읍 주호리 용성마을 안개꽃, 토마토, 배추, 무, 버섯 등 1만여평의 비닐하우스 및 벼논이 침수된 것은 낙동강 소하천인 주천강 수문을 한림울장소가 제때에 닫지 않는 등 관리 잘못으로 물이 역류해 발생했다는 것.

이 때문에 수확을 앞둔 안개꽃, 토마토, 벼논에 1m20cm 정도의 빗물이 고인데다 이달달게 출하할 배추, 무 밭이 침수로 6천만여원의 손실을 보게됐다고 주장했다.

피해주민들은 「이 일대는 비가 아무리 많이오도 배수관리만 제대로 하면 침수되지 않는 지역」이라며 「농작물 피해보상은 물론, 체계적인 배수관리 대책을 세워라」고 촉구했다.

/진영=김형섭기자/

“수문관리 안돼 벼논침수”

진주 5개면 농개조직원 집단상경 마산진동 하천 구조물 철거 능력

진주 진산농지개량조합 직원들과 대의원들이 정부가 추진중인 농업 관련단체 통합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과친으! 대거 상경, 이번 대풍 「애니」의 집중호우로 저수지와 배수문 관리가 안돼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봤다며 농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진산농지개량조합과 농민들에 따르면 지난 29일부터 남부지역에 대풍, 양향권에 접어드는 등 집중호우로 도내 농경지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농조직원과 대의원 1백 71명 등 도내 15개 농지개량조합 소속 직원 1천5백여명이 관공버스

를 이용, 30일 오후 1시부터 과친 종합청사 진디구참서 열린 「농지개량조합 자체 개혁방안 수용촉구 및 투쟁결의대회」에 참가자 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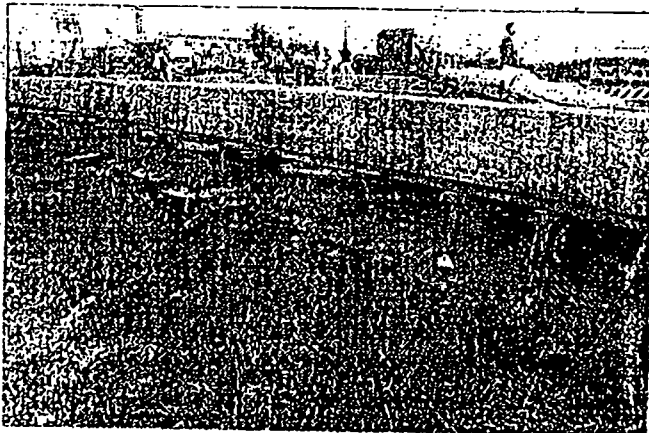
직원 50여명중 30여명이 대회를 위해 상경한 진산농지개량조합 관내의 경우 저수지 38개, 양배수장 32개, 보 3개 등 관리하고 있으나 진주시 문산읍 영천강변의 배수문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이곳에서만 5백ha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를 내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편 이번 폭우때 침수피해를 입은 진주시 수곡면, 금산면, 지수면 주민 1백여명과 진주농민회 등은 2일 오전 진산농개조를 방문,

농개조의 관리부실로 피해가 커졌으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가지는 등 농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진주=김진태기자/

마산 진동 주민들이 공무원의 능력 대체로 하천 물이 넘쳐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대풍 예니로 인한 집중 호우로 침수가 예상돼 진동면 시가지와 광암 배수목적용을 잇는 향군교 다리 공사현장 아래에 있는 철골 구조물들을 철거해 「대풍천」의 물길을 터 줄 것을 경남도의 시공자인 (주)대이건설측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양측으로부터 모두 거부당했다.



마산 진동에 시공중인 향군교 다리의 철골구조물에 각종 쓰레기와 흙들이 걸려 쌓여 있다. 지난 폭우때 이 구조물이 철거되지 않아 물이 넘치는 바람에 가옥침수등 피해를 냈다. /이준희기자/

결국 이날 오후 3시까지 하천 물이 급속도로 끓어나 뚝을 넘어, 인근 제재소와 가옥들을 침수시켜 상당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 도의 대이건설측은 침수 30여분이 지나서야 다급히 구조물 일부를 철거하는 소

동을 벌였다고 한다.

도 관계자는 「10여일전 콘크리트 작업으로 한달간의 양생기간이 되지 않아 지지 불철대인 철골 구조물을 철거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영만기자/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하여

북한에 대한 투쟁과 평화의 길

북한에 대한 투쟁은 자유와 평화의 길이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투쟁을 통하여 자유와 평화를 얻고자 한다. 북한에 대한 투쟁은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투쟁을 통하여 자유와 평화를 얻고자 한다. 북한에 대한 투쟁은 우리의 의무이다.

북한에 대한 투쟁은 자유와 평화의 길이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투쟁을 통하여 자유와 평화를 얻고자 한다. 북한에 대한 투쟁은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투쟁을 통하여 자유와 평화를 얻고자 한다. 북한에 대한 투쟁은 우리의 의무이다.

북한에 대한 투쟁은 자유와 평화의 길이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투쟁을 통하여 자유와 평화를 얻고자 한다. 북한에 대한 투쟁은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투쟁을 통하여 자유와 평화를 얻고자 한다. 북한에 대한 투쟁은 우리의 의무이다.

북한에 대한 투쟁은 자유와 평화의 길이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투쟁을 통하여 자유와 평화를 얻고자 한다. 북한에 대한 투쟁은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투쟁을 통하여 자유와 평화를 얻고자 한다. 북한에 대한 투쟁은 우리의 의무이다.

대잠저수지 붕괴 “농조 책임”

수위조절 보수관리 소홀 “설득력”

포항시 남구 대잠동 대잠저수지 붕괴 책임이 이들 관리하고 있는 포항농지개발조합에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포항농조는 태풍 예니가 방향을 틀어 포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상대 예보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저수지 수량을 조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풍 발생 이전까지의 대잠저수지 저수율은 70%를 넘어선 30여만.

농조측이 태풍 진입에 대비해 지난달 29일 수위를 낮췄더라면 제방 붕괴는 모면할 수 있었다는 것이 토목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농조측은 그러나 태풍의 직접 영향으로 포항지역에 시간 당 50mm의

폭우가 쏟아질때까지도 수위조절은 커녕 현장 점검도 하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이동지구에 아파트를 건설 중인 모 업체가 대잠저수지 제방 위에 대형 입간판을 세울 수 있도록 농조가 허락해준 것도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농조는 이밖에 대잠지구 구획정리 사업으로 포항시와 매각 절차를 밟으면서 이곳 저수지에 대한 보수 및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붕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차제에 동리민 숫자도 얼마 안되는 대잠저수지를 메워버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조중의기자]

농조·농조연 노조 대규모 통합반대 장외집회 농민단체 “집단 이기주의” 비난

농진공·농조·농조연 등 3개 기관의 통합에 대해 농조와 농조연 노조가 지난달 30일 대규모 통합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장외로 나선 가운데 농민단체들이 이들의 움직임에 대해 '집단이기주의'라며 강력 비난하고 있다.

농조노조와 농조연노조는 지난달 30일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노조원 등 1만여명이 참가, '농민조직 사수 전국 1백만 조합원 및 노동자총력투쟁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대해 통합을 철회하고 농

조자체개혁안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황창주)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태풍 애니가 북상해 재해방지를 위한 물관리에 전념하는 것이 농조의 기본인 무임에도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만을 위해 장외집회를 강행한 농조직원들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이어 정부에 대해 "농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혈

세를 가지고 개혁에 항거하는 신문광고와 집회 등 온갖 집단이기주의적 행위를 일삼은 농조와 농조연의 자금실태를 전면조사하고 비리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엄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이수금)도 30일 성명을 발표, "태풍으로 비가 계속 오고 벼가 쓰러지는데 벼베기에 대비한 물관리는 팽개쳐 놓은채, 농조직원들이 농민들까지 현혹해 통합에 반대하



농조·농조연 노조가 지난달 30일 과천 정부청사앞에서 '농민조직 사수 전국 1백만 조합원 및 노동자총력투쟁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는 집회를 강행한데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이 사건 자체가 농조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채 개혁에 저항하는 집단 이기주의의 극단적 발호"라고 비난했다. (이상길 기자)

사 설

오늘 우리는 추석을 맞는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좀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올해 우리 농민들은 한여름의 폭염과 물난리의 고난을 딛고 황금들녘을 이루어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9·15작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쌀 예상수확량을 생산목표량 3천3백94만석보다 1백70만석, 5%가 많은 3천5백64만석에 이르러 3년연속 풍작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하필이면 바로 다음날 태풍 '애니'가 곡창지대인 영호남을 강타했다. 전국적으로 벼도복 29만9천8백ha, 침관수 5만4백ha의 피해를 입어

쌀생산량이 예상보다 크게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농민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농가부채대책도 좀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정부와 농민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농가부채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최종회의

의 경영난을 감안하면 금리인하가 불가능하다는 농·축협측의 입장이 좀처럼 좀혀지지 않고 있다. 13일 8차회의를 가질 예정이지만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또 파행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농민들이 크게 기대했던 농정개혁은 기득

98년 한가위, 농심 그리고

를 가졌으나 상호금융 금리인하는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협동조합이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정부의 입장과 정부시책으로 상호금융 상환연기와 금리인하를 다뤄야 하며, 금리를 5%선까지 낮춰야 한다는 농민단체의 입장, 조합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고 단위조합

권 세력의 반발과 조직 이기주의, 그리고 정부의 어정정한 태도로 좀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개혁은 독자적인 개혁안이 마련됐으나 중앙회 통합문제와 이종조합간 합병 등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농·축·임·삼협 중앙회 각자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10월중순까지 공동개혁안 제출시한을 연기하는 등 당초의 원칙을 허물어뜨리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입장이 불명확, 이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뿐만 아니다. 농정조직 개편과 관련, 정부가 내세우는 수세제지와 연

농정개혁

관련 농진공·농조·농조연의 통폐합문제도 농조측의 강력한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농조측은 자체 개혁안이 정부안보다 더 합리적이라면서 2000년 1월 농업기반공사를 설립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결사 항전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이같은 농업관련 기관·단체

개혁과 관련, 지역에서는 조직간의 갈등에서 파생된 분열과 대립의 분위기가 지역공동체로까지 번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추석을 맞은 오늘 농심은 어렵게 이루어냈던 풍년현상이 '시름의 바다'로 변한 들녘을 바라보면서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러한 농심을 어루만져주기 위해서는 태풍 '애니'로 인한 피해복구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무엇보다 획기적 농가부채대책 마련과 함께 특히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개혁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 물론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농사가 때가 있는 것처럼 개혁도 시기를 잃어버리면 불켜풀이 되고 만다. 특히 국민의 정부 농정개혁의 실종위기를 걱정하는 농심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매일신문 ('98. 10. 7)

폐쇄배수장 방치 침수 농민들 피해보상 요구

폐쇄시킨 배수장을 통해 낙동강물이 역류,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등 팔짱을 낀고 있다.

구미 농지개발조합은 낙동강변 지역인 구미시 양호동에 지난해

새 펌프장을 설치한후 증전에 운영하던 펌프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바람에 지난 1일 새벽 배수로를 통해 낙동강물이 역류, 양호동과 치산들만이 침수됐다.

이날 사고로 양호동 주민들은 '농조합에서 옛배수장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않고 방치하는 바람

에 수십만평의 목작물과 벼가 침수피해를 당했다. 며 1일과 2일 두차례 구미농조합 물려가 옛 배수장의 배수로를 파손시킨 이유와 농경지 침수피해보상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구미농조합은 '이번사고는 폐쇄시킨 배수로를 통해 세굴(조그마한 구멍이 생기면서 구미천의 물이 압력을 견디지못해 역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농경지 침수는 人災”

農組 수문조작 잘못 피해 확산 보상 요구

【고령】 농지개량조합이 용수로 수문을 제 때 닫지 않아 벼논이 침수되는 바람에 큰 피해를 입었다며 농민들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고령군 우곡면 아정리 아정들 농지경작 주민들은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4백30여ha의 비가 내렸는데도 용수로 시설 관리들 말고 있는 고흥농지개량조합이 용수로 수문을 때 맞춰 닫지 않아 이 일대 벼는 60여ha 가 물에 잠겼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74년 경지정리들 한 후 지난해 까지 자체조직인 수리계가 아정들의 수리시설을 관리하였으며 그동안 비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었다며 '지난 6월 농지개량조합이 시설을관리를 인수한 후 큰 피해가 발생한 관

침, 농조가 이에대한 피해보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주민 박태인씨(66)는 '폭우로 회천이 범람, 널천 물이 양수로들 통해 아정들로 흘러드는데도 수문을 닫지 않아 벼가 넘어진 채 물에 잠겼다'며 '이 때문에 벼에서 싹이 나고 일부는 싹이 수확량이 30~40% 줄었을 뿐만 아니라 미질도 떨어져 손해가 더 크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농지개량조합 관계자는 '용수로 수문을 작동하는데 문제가 좀 있었지만 농경지 침수의 더 큰 원인은 천재지변'이라고 설명하고 '농조는 피해를 보상할 규정도 제해도 없다'고 말했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sam.com.kr〉

“농조직원 집회가느라 물관리 능력 침수키웠다” ‘성난 농심’ 태풍피해 보상 목소리

태풍 '애니' 상륙 때 농지개량조합과 지방국토관리청이 하천 및 수문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범침수 등 농작물 피해를 가중시켰다며 각 지방 농민회가 잇따라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 부안군 계화 농민들은 농지개량조합 임직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열린 '농조 통폐합 반대집회'에 참석하느라 태풍피해가 나기 시작한 뒤에야 이 지역 농수로 수문을 열어 모두 1600ha의 논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정읍시 고부면 농민들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자신들의 여러 차례에 걸친 요구에도 불구하고 배수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신용교 가설공사를 위한 물막이 공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다고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농민들은 "태풍 피해 초기 농조 직원들이 통폐합 반대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두 자리를 뒀다"며 "특히 고부천의 고장난 수문 4개를 그대로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고발도 불사하

겠다는 자세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주농민회(회장 최은현)도 농지개량조합 임직원들이 통폐합 반대집회에 참석하느라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수확기에 접어든 벼와 수박 배추 우영을 비롯한 고추 등 비닐하우스 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지역은 남강변 진산농조가 관리하는 진주시 집현면 신당마을 등 3곳, 대곡면 한실마을, 지수면 압현마을, 금산면 남성마을 등 2곳, 수곡면 등으로 농조 임직원 172명이 통폐합 반대집회에 참석하느라 수문관리인도 남기지 않은 채 거의 모두 자리를 비워 불어난 남강이 역류해 침수피해가 컸다는 것이다.

농민회는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데도 자신들의 살길을 위해 물관리를 포기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라며 "감독부서인 농림부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농조는 수리시설 보수와 정비계획을 밝히고 통폐합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진주전주/김현태 임석규기자

□ 연합통신 ('98. 10. 8)

농민들 농조에 태풍피해 보상 요구

통폐합 반대집회 上京 水門 안달아

(진주=연합) 池性昊기자 = 경남지역 농민들이 지난달 30일 개최된 농지개발조합 통폐합반대 서울집회로 태풍피해가 늘어났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남도연맹과 진주농민회는 7일 성명을 내고 태풍 '애니'의 내습으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시점에 농지개발조합 통폐합반대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농조직원뿐 아니라 일선 수리관리인, 기술자들이 모두 상경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농민회는 "태풍이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농조에서 수문을 닫지 않아 수확기에 접어든 수박과 배추, 우엉, 고추 등이 침수돼 수익원 어치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폭우가 쏟아져 농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농민피해 전액보상 ▲직무유기, 관리부실에 대한 공개사과 ▲통폐합에 찬성할 것 ▲수리시설에 대한 보수계획 수립등 4개항의 요구문을 채택했다.

특히 경남도내 각 지역 농민회는 전국농민회에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송했으며 전국의 농민들과 연대해 법적투쟁도 계획하고 있어 농조의 서울집회와 맞물린 태풍 피해가 법적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끝)

진산농개조 20명 소환

자검경, 관리부실 수사

속보= 지난달 30일 제9호 태풍 예니 북상과 진주시 일원에서 발생한 농경지 침수피해가 진산농지개량조합원들의 상경부정으로 인한 관리부실이란 농민들의 주장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본지 2일자 22면 보도)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농지개량조합의 공사발주서 등 관련서류를 점검 검토하고 있으며 경남지방경찰청과 진주경찰서도 농민들과 진산

농조 관련자 20여명을 소환, 관리부실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에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남도연맹은 7일 성명을 내고 태풍 예니의 내습으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시점에 농개조 직원들을 비롯한 일선 수리관리인, 기술자들이 동폐할 반대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모두 상경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농민피해 전역보상과 공개사과, 수리시설에 대한 보수계획 수립 등 4개항의 요구문을 채택했다.

/진주=김진태기자/

“농개조 집회참석 몽땅 상경 수문 못닫아 피해 더 컸다”

경남지역 농민들이 지난달 30일 개최된 농지개량조합 통제압반대 서울집회로 태풍피해가 늘어났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남도연맹과 진주농민회는 7일 성명을 내고 태풍 '애니'의 내습으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시점에 농지개량조합 통제압반대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농조직원 뿐아니라 일선 수리관리인, 기술자들이 모두 상경

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농민회는 '태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농조에서 수문을 닫지 않아 수확기에 접어든 수박과 배추, 우엉, 고추 등이 침수돼 수억원어치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폭우가 쏟아져 농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며 △농민피해 전액보

상 △직무유기, 관리부실에 대한 공개사과 △통제압에 찬성할 것 △수리시설에 대한 보수 계획 수립 등 4개항의 요구문을 채택했다.

특히 경남도내 각 지역 농민회는 전국농민회에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송했으며 전국의 농민들과 연대해 법적투쟁도 계획하고 있어 농조의 서울집회와 맞물린 태풍 피해가 법적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진주=이병희기자

“태풍, 농작물 망치든 말든”

진산농지개량조합직원 구조조정 반대 집회 참가

배수문 관리 안돼 농경지 침수 피해...보상 요구

진주=최현식 기자

지난달 30일 제9호 태풍 애니의 영향으로 농경지 침수 등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산농지개량조합(조합장 우승표) 직원들이 정부의 농업관련단체 구조조정에 반발, 상경하는 바람에 배수문 등 관리가 되지 않아 진주 지역일대 농민들이 더욱 큰 피해를 봤다며 항의농성을 벌이며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진주시와 농민들에 따르면 농지개량조합 직원들이 정부가 추진중인 농업관련단체 통합에 반발하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대거 상경, 배수장 보판 등 관리가 안돼 제때에

문을 폐지 못해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를 봤다는 것.

농민들은 진주시 문산읍 영천강 입대와 수곡면 덕천강입대 1,000여ha의 농경지가 침수되면서 도복 피해를 보았고 김현면 지내천입대 벼는 20여ha 시설하우스 20여동(5

ha)이 침수되고 금산면 남성배수장의 배수지연으로 벼는 등 10여ha가 침수되는 등 수십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농조측은 “직원 47명 중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30명만 집회에 참가하고 17명은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투입해 안전을 기했다”고 해명했다.

집회참석 진산 農改組

직무유기협의 수사

[진주] 속보=진주경찰서는 태풍 때 진산농지개량조합 전 직원이 농조통합 반대를 위한 서울집회에 참석, 관리부실로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한 혐의(직무유기 등)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8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진산농조(農組) 우모 조합장(55·진주시 삼평동)과 정모건무(55) 등 조합관계자 9명을 소환해 태풍이 발생한 시점인데도 전 직원이 서울 집회에 참석한 과정 등에 대해 집중조사했다. <관련기사 17면>

진주 농지 침수 피해 농조 과실 수사 착수

농민회 보상요구 주장

속보=지난달 30일 제9호 태풍복우 당시 농지개량조합 직원들의 농조통·폐합 반대결의대회 참가로 저수지와 배수관리가 안돼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했다는 농민들의 주장(본보 3일자 17면 보도)에 따라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남지방경찰청은 8일 진산농지개량조합의 공사발주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정밀 검토회를 벌이고 있으며 진주경찰서도 피해농민들과 농조관계자 등 20여명을 소환, 관리부실에 따른 침수피해 발생여부를 조사중이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남도연맹은 7일 성명을 내고 "태풍 예년의 내습으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

는 시점에 농조직원뿐 아니라 일선 수리관리인, 기술자들이 모두 농지개량조합 등폐합반대 집회에 참여키 위해 상경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히고 그에 따른 보상을 추구하고 있다.

농민회는, "태풍이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농조에서 수문을 닫지 않아 수확기에 접어든 수박과 배추 무영 고추 등 농작물들이 침수돼 수익원 어치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농민회는 이에따라 △농민피해 전액보상 △직무유기, 관리부실에 대한 공개사과 △등폐합에 찬성할 것 △수리시설에 대한 보수계획 수립 등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진주=최희수·김정관기자

hieu460㉸

“農組서 수문안달아 태풍피해 늘었다”

직원을 집회위해 상경
수리시설 방치해 침수
진주농민회 등 보상요구

경남 일부지역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들이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개최된 '농지개량조합 동폐합 반대 집회'로 인해 태풍 피해가 늘었다면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진주 농민회(회장 최운현)는 7일 “태풍 예지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농지개량조합 직원은 물론 일선 수리 관리인, 기술자 등 상당수가 농지개량조합 동폐합 반대 집회에 참가한다며 상경한 것은 직무 유

기”라고 밝혔다.

농민회는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농조에서 수문을 닫지 않거나 설비를 돌보지 않아 진주시 대곡면 등지의 수확기에 접어든 수박과 배추밭 등이 침수돼 엄청난 피해가 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액 보상△직무유기 와 권리부실에 대한 공개 사과△수리시설의 보수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

진주 뿐 아니라 경남도내 각 지역 농민회는 농민회 본부에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보내고 연대투쟁도 계획하고 있어 농조의 서울 집회와 맞물린 태풍 피해가 법적 문제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진주=김정윤기자>

mahman@donga.com

□ 연합통신 ('98. 10. 8)

진주 진산 농조 직무유기혐의 수사(속보)

(진주=연합) 池旼昊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태풍때 진산농지개량조합 전 직원들이 농조통폐합 반대를 위한 서울집회에 참석, 관리부실로 농경지 침수 등 피해를 입힌 혐의(직무유기등)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8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진산농조(農組) 禹모 조합장(55.진주시 상평동)과 鄭모전무(55) 등 조합 관계자 9명을 소환해 태풍이 발령된 시점인데도 전 직원이 서울 집회에 참석한 과정 등에 대해 집중조사했다.

이에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이틀동안 千모씨(43.진주시 금산면) 등 태풍 내습 때 농경지 침수피해를 당한 농민 10명을 소환, 피해액과 피해를 입게 된 원인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8일에도 농조 관계자와 농민들을 상대로 배수펌프 고장으로 배수가 되지 않은 점과 수로관리원들의 배수장 관리부실 등 정확한 침수원인을 조사, 혐의사실이 드러나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은 7일 진산농조로부터 최근 발주한 공사관련 서류를 넘겨 받아 입찰당시 금품수수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끝)

독자압협

집단이기주의를 버리자

추석명절을 앞두고 닥친 태풍 「에니」로 인해 수확기 벼가 얼치고 덮쳐 농민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농민들이 진심으로 반겼던 농업관련조직 총폐합에 대해 농조는 지난달 과천에서 반대시위집회를 벌였다.

조합에는 조합장과 전회당반이 가세한 남기고 미리 대결한 버스에 미지못해 끌려가는 듯한 농조 젊은 직원들의 뒷모습을 볼 때 농조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대통령이 직접 공포한 1백대 개혁실천 과제중의 하나인 농조·농조연·농진공의 통합을 반대하는 농조의 집단 시위집회로 얻은것이 과연 무엇인지 안타까운 심정이다.

다 자란 고추와 사과·배 등 껍부터 여름 내내 피땀 흘려가꾼 채소와 과일들이 수확기에 이르러 한 두차례 내리는 비와 뒤늦은 폭풍으로 인해 1년 농사들 말치는 예가 허다하

다. 아같은 정황에서 과천시위집회에 참석한 농조직원들은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은 아랑곳 하지 않고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상식이하의 행위를 저질렀다.

정부에서 농업관련기관 조직을 축소하여 농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고자 하는 올바른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인가.

더욱이 농촌일손이 크게 부족한 현 상황을 직시하고 있을 농조가 정부시책을 외면하고 농업인을 선봉하여 상경한 것은 과연 농민을 위한 농조인가, 농조를 위한 농조인가 분별이 뒤질 뿐이다.

우리 전업농 연합회는 3개기관 통합을 강력히 지지한다. 농조는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집단이기주의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통합공사로 거듭 태어나 미래 농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강력히 주장한다.

장동철 <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 연합통신 ('98. 10. 10)

"2004년개부터 쌀자급 유지 힘들 듯"

농림부 농정개혁 대토론회서 밝혀

(서울=연합) 李宇卓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 李水金)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3당 관계자와 농업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정개혁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金正鎬 농림부 농정국장은 주제발표에서 "쌀 자급기반인 논 면적은 지난 93년부터 97년까지 연평균 3만4천ha씩 감소했으며,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04년 쌀 자급유지를 위한 적장면적 1백10만ha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불안한 세계 식량사정과 통일에 대비, 쌀 자급기반을 확고히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金국장은 특히 남북 농업협력문제에 언급, "국토통일 촉진이라는 대명제 아래 북한의 근본적인 농업생산력 증대에 중점을 두겠다"고 전제, "남북한간 상호보완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연해주를 포함한 중국의 토지, 남한의 자본,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해외농업 공동개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曹國鉉 전농 정책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농업관련 협동조합 개혁문제에 대해 "개별조합의 생존여부나 소속직원들의 이해관계를 떠나 협동조합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농.축협 통합 ▲협동조합 중앙회의 신용.경제.지도 사업 분리 운영 등을 주장했다.

曹위원장은 또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농조), 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조연) 등 3개 기관의 통합문제에 대해 "농업기반관련 조직의 통폐합과 수세폐지는 농업희생과 식량자급을 위해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말한 뒤 "최근 농조와 농조연의 반발은 집단이기주의의 발호"라고 규정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제발표에 이어 협동조합 개혁, 농가부채, 유통 등 농장 현안을 놓고 관련 전문가들과 각 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별 토론회를 벌였다.

(끝)

광주타임스

제 129 호 (종합일간지) 전화안내 (062) 670-1004 1998년 10월 10일 토요일 (음력 8월 20일 庚寅)

기자수첩

조철상 기자

"해도해도 너무해요 농민들
 이야 밭밭에 죽어 버리고 천이
 넘어 1년 농사들 망치든 말든
 모르쇠 하더니 이제야 왜 그랬
 는지 알 것소 농조 등폐합 반
 대 데모하라 관공버스까지 빈
 러 서운 가버렸다 안허요"
 농민 김모씨(52·영광군 군
 남면)는 이번 태풍이 들어 처음
 수해를 당했을 때 천재지변이
 라며 참 탄탄이라도 더 건지기

러 가
 버 러
 어떻게
 밭 을
 갈아야
 한 지
 모르겠
 다 며
 애를 먹고 노트를 몇번에 말리
 면서 막막한 심정을 어디에 하
 소연하느냐고 묻고 있다.



수문방치로 늘어난 수해피해

위해 뛰어들었다.
 그러나 남창천 수문이 연리
 지 않아 20ha의 논과 집이 물에
 잠겼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농
 조가 말하는 농민과 함께 살아
 간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들 이익을 쟁기는 행동을 서슴
 지 않는다면서 울분을 삼키지
 못하고 있다.
 또 상인 김모씨(52)는 무석장
 사간 하려고 돈을 빌려 구입했
 는 농구평기게 무분별 다 때내

영광농조는 수문을 연지 안
 야 생긴 피해를 어떻게 해결하
 는지 두고갈 일이다.
 조합장이 찾아와 미안하다는
 말만해서는 안된다. 시대가 단
 라지면 농무원은 비롯해 모든
 사람들의 자세가 달라져야 한
 다.
 어려운 때일수록 좀더 헌신
 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집행자세
 가 요구되는 것은 이같은 행태
 에서 더욱 절실히 느껴진다.

특기투고

IMF경제한파로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 여름에는 집중폭우가 쏟아져 농민들이 시름에 젖어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김대중대통령께서 정부구조조정 100대 개혁 실천과제를 천명했다.

김대통령께서 발표한 개혁의 지내용에서 농지개량조합과 농조연 농어촌진흥공사의 3개 유사기관을 통합한다는 내용이였다.

농민들은 그동안 다윈해 돼 있던 농업구조조정이 단일화된다는 기대감으로 김대통령의 개혁의지에 대해 상수를 풀어 환영하면서 기대에 부풀어 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지는 생명산업이다.

우리가 먹는 주식, 농산물은 반드시 우리의 땅에서 생산된 곡식으로 자급자족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의 구조조정은 흡수통합이 아니고 모든 기관이 외국농산물과의 가격과 품질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농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단 시위를 벌이는 처사는 농민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시위를 주관하는 기관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기관으로 존재해왔다면 두려울 것이 없지

농민을 기만하는 집단 이기주의

그발표가 있던날 파천 종합청사에 몰려가 시위를 벌였다.

일년 내내 피땀 흘려 지은 농사가 폭우로 태풍에 휩쓸려 농작물이 논바닥에서 썩어가고 있는 마당에 꼭 오늘 시위집회를 가져야만 하는지 의문스럽기 짝이 없다.

시위대들은 관판버스까지 동원, 농민들을 선동하는 등 집단 이기주의로 감동을 조장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 없다.

정말 이행사가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이라면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 조금이나마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난극복을 위해 함께 걱정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답답하고 안타깝다.

농지개량조합은 왜 이렇게까지 농민을 선동해 집단 시위를 벌여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농업은 그 누가 뭐라해도 귀중한 우리 국민의 식생활을 책임

않는가.

힘없는 농민을 선동하거나 집단이기주의를 조장하는 농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전업농연합회는 이기회를 빌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개 기관의 통합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래야만 우리도 당장의 불편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가오는 21세기 세계 농업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잡힐 수 있는 복지농촌을 실현, 후손에게 복된 농촌을 물려주는 부끄러움 없는 조상으로 남지 않겠는가.

정부가 추진중인 농업기관 통합이 기관의 이기주의를 떠나 국난을 극복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명분으로 바로설 수 있도록 농민들의 힘을 한데 모아 줄 것을 당부한다.

박희규 <전업농 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

□ 연합통신 ('98. 10. 12)

농지개량조합, 태풍 침수피해 보상키로

(진주=연합) 池性熨기자 = 경남 진주의 진산농지개량조합이 지난번 태풍 '애니' 내습 당시 농민들이 입은 농경지 침수피해 책임이 조합측의 관리부실에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보상결정을 내려 주목된다.

진산농지개량조합(조합장 禹종표)은 12일 '애니' 내습때 진주시 집현면과 대곡면 지역 농경지와 비닐하우스가 침수된 것은 당시 농조통폐합반대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직원이 상경, 저수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데도 책임이 있다며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역 농민들은 대곡면 한실마을의 경우 저수지 수문관리인이 서울집회에 참석해 수문을 단지 않는 바람에 남강물이 역류, 수박과 고추, 우엉, 마 등이 침수되는 등 3개 지역에서 모두 7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으로 운영되는 진산조합이 한푼의 보상비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제 보상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또 이번 결정은 전국 농지개량조합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앞으로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경지 침수피해 등이 발생하면 농조의 책임여부에 따라 보상문제가 재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진산농조 관계자는 "조합 이사회에서 보상결정을 내렸지만 보상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남도나 시 등 관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라며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끝)



지난달 30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농지 개량조합 노조와 농조1백만농민조합원회의 농업 생산기반 관련 3개 기관 통폐합 반대 집회의 여파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남과 충남 일부지역 농민들이 농조직원들의 물관리업무 태만으로 피해가 커졌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항의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태풍 예년의 복상으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농조가 물관리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농림부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공범이냐.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와 농조의 책임논란을 보면서 세 가지를 느꼈다. 첫째, 물관리의 중요성이다. 농사는 물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특히 벼농사는 더욱 그렇다. 최근 빈발한 기상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도 궁극적으로 물 때문이다. 앞으로 기상이변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물관리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태풍 「예니」와 농정조직 개혁

시집에 농조가 통폐합 반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직원뿐만 아니라 일선 수리관리인, 기술자들이 모두 상경함으로써 수문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농작물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주장이다.

정확한 진상이 밝혀져야 알 수 있겠지만 농민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이번 태풍피해가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라 하더라도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을 지켰어야 할 농조직원들이 현장에 없었다는 점은 비난의 여지를 제 공했음을 인정해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정부의 3개 기관 통폐합방침에 대해 농조측은 농진공은 공기업이고, 농조는 농민의 자조조직이란 점을 들고 있다. 그만큼 농조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농민들을 위해 일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물관리 업무만큼은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사로의 통폐합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무리한 집회수산 노력과 과민반응이 이같은 화를 불렀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집회 참석자를 처벌하고 해당농조를 사정하겠다는 엄포에 개별적 처벌을 피하려는 농조직원들이 조합별로 전직원이 참석했다.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자」, 「설마 전직원을 사정하고 처벌하겠느냐」는 묘한 심리가 작용해 조합을 소개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농림부가 농조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는 것도 넌센스다.



안 병만
(농업부장)

둘째는 농업관련 기관의 무한 책임성이다. 비록 전체 농조는 아니고 일부 지역 농조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물관리업무 소홀을 둘러싼 책임논쟁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로써 농민으로부터 존립목적 부여받은 농업관련 기관의 책임성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알 수 있다. 농업관련 기관은 법적·도덕적 책임을 포함한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한다.

셋째, 그러므로 농업생산기반 관련 3개 기관의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 물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으며, 농민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며 무한책임을 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개 기관 통합조직의 형태가 공사 또는 조합이어야 하는가 보다는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면서 농민에게 무한책임을 질 수 있는 조직으로의 탈바꿈이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번 태풍피해가 더 컸던 것은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관리의 최일선에 있는 농조는 물론 농림부도 지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했음을 인정하고 서로의 주장을 한 걸음씩 양보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농정조직의 개혁방향은 농민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영농편의를 향상시키는 대원칙에 충실할 때만이 제대로 된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경제신문 ('98. 10. 13, 24면)

수문관리탓 침수 농조 첫 보상

진주 진산농조 “직원 집회 관리부실” 인정

속보=경남 진주의 진산농지개량조합이 지난번 태풍 '애니' 상륙 때 수문관리 잘못으로 농민들이 입은 농경지 침수피해에 대해(《한겨레》 10월8일치 25면) 일부 보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결정은 농지개량조합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로, 앞으로 이와 비슷한 형태의 피해보상 시비가 전국에서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진산농지개량조합(조합장 우종표)은 12일 “당시, 농조 통·폐합 반대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직원 대부분이 자리를 비워 배수장 관리가 부실해 짐에 따라 피해가 커졌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어 “피해 농민들과 협의를 거쳐 피해보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진주시 집현면 수곡면 등 10여곳에서 농경지와 비닐하우스 침수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지난달 30일 농개조가 배수지 수문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남강물이 역류하는 바람에, 수확기의 벼는 물론, 수박과 고추 우엉 마 등이 침수되는 등 모두 1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으로 운영되는 진산조합이 별도의 보상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제 보상이 이뤄질 지는 불투명하다.

우 조합장은 “농민과 피해액이 협의되지 않을 경우 한국감정원의 감정을 받기로 했다”며 “책임부분에 대한 피해액 산정이 쉽지 않아 합의에 이르는 시일이 많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농민들은 만족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보상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김현태 기자

예산위-예산청 통합
관광산업 투자 稅혜택

당·정 논란

농진공+농조+농조연 통합법은 회기내 처리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지난달 초부터 정부 각 부처와 잇따라 당정 회의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소득세법 등의 38개 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심의하기로 했다. 정부 발의 법안 일부는 그러나 당정간 견해차로 내용이 수정되거나 처리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정간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들을 간추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건설교통부와외의 당정협에서 당측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 처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회의 박광태(朴光泰)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현재 전국의 16개 공항은 공항관리공단이 통합 관리하고 있는데 인천 국제공항만 별도 법인이

관리하게 될 경우 공항간 연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소속 의원들은 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설립되면 다른 공항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당측은 기획예산위원회와의 당정협에서 "정부출연 연구소에 대해 자체감사와 감독기관의 감사 이외에 감사원 감사까지 받도록 하고 있어 중복감사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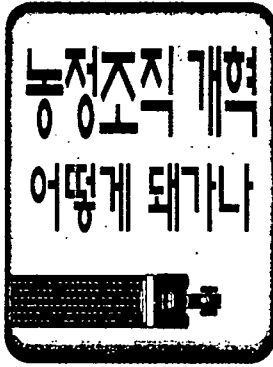
◆농업기반공사법=농림부와외의 당정협에서 당측은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의 이 법안에 대해 당은 원칙적으로는 찬

성했다. 하지만 직원들이 고용문제에서 가급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안을 보완해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외국인 투자촉진법=재정경제부와 당측이 개정안 내용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당측은 관광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각종 세제혜택을 줄 예정이지만 재경부가 세수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외자유치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만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조직법=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하고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당정간 마찰이 일고 있다. 국민회의 정책관계자는 "아직 정부측 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획예산위원회에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되는는 안된다"며 "인사위원회의 독립적 위상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남국 기자 nkkim@



실태와 문제점

농지개량조합은 1906년 수리조합 조례가 제정되면서 구성된 92년의 역사를 지닌 농정조직이다. 그만큼 우리 농정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다.

현재는 전국 105개 조합 93만명의 조합원을 거느리고 있다.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유지·관리와 농지시설 재해복구 등이 농조의 주된 역할이다.

농정조직 통합을 둘러싸고 정부와 관련조직간의 갈등이 깊어가고 있다. 농정조직의 해묵은 병폐를 청산하기 위한 정부의 개혁작업이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저항에 부딪혀 있다. 정부는 농촌의 물관리를 맡고 있는 농지개량조합(농조)과 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조연), 농어촌진흥공사(농진공) 등 3대 조직을 2000년 농업기반공사로 통합한다는 방침이나, 농조 측은 이를 개악(改惡)이라며 반대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농정조직의 실태와 문제점, 정부의 개혁방안과 반대논리를 살펴본다.

역원으로 삭감됐다. 농조연은 농조가 위탁한 사업을 추진해 자체 수익금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이다. 672명의 임직원에 본회와 8개 지회로 구성돼 있다.

◇농조의 운영부실=운영비를 국고에서 상당부분 지원하고 있지만 많은 조합이 경영부실로 파산 위기에 놓였다. 전국 105개 농조 가운데

있다. 지난해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제공이나 대의원 매수 등 혐의로 사법처리된 예가 수십건에 이르는 지적이다.

95~96년 농조가 발주한 공사 263건(총예산 7,009억원) 가운데 65.4%가 제한입찰과 수의계약으로 처리됐다. 평균 낙찰률도 94%로 농진공의 89%보다 높아 많은 예산이

105곳중 95개 국고보조로 연명 조합장·공사비리등 잇단 잡음 '거대 비만조직' 대수술 시급

농조가 관할하는 농지면적은 54만7,000ha로 우리나라 전체 농지의 절반을 차지한다. 임직원 4,024명, 대의원 6,527명으로 구성돼 있다.

농조는 시설관리를 위해 조합원, 즉 농민들로부터 이른바 수세(水稅)를 받는다. 87년까지는 10a당 벼 26kg어치의 조합비를 받았다. 이후 국고보조금 지급과 조합별 자율화 조치에 따라, 지금은 10a당 평균 6,300원이다.

국고보조금은 95년 1,020억원, 96년 1,065억원, 97년 1,119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다 올해엔 917

95개가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된다. 이 가운데 퇴직급여충당금이 1억원 미만인 조합이 79개나 된다.

농조는 조합비 인하폭에 비해 정부 보조금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수리시설 현대화로 유지관리비가 줄어든데다 농조의 자체 경비절감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농조의 주장은 설득력이 적다는 판단이다.

◇조합장 선거부정과 발주공사 비리=88년부터 조합장을 대의원들이 뽑기 시작하면서부터 대의원 매수 등 부정선거 시비가 계속되고

남비던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유기기관의 기능중복=농조와 농조연, 농진공의 업무가 상당부분 중복돼 있는 상황이다. 농업생산기반의 기본조사나 설계 감리 등의 업무는 농조연과 농진공이 맡고 있다. 또 그 시행이나 유지관리 업무는 사업규모에 따라 농조와 농진공이 분담하고 있다.

특히 수리관리체계가 분산돼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같은 수계에서 인근 조합간에 분쟁이 발생할 때도 이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의 청사진

농지개발조합과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합, 2000년 1월에 농업기반공사를 출범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농정조직 개혁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3개 기관 대표가 참여하는 '신설공사설립위원회'를 구성, 각 기관이 대등한 조건으로 해체, 통합토록 할 방침이다.

농업기반공사의 조직은 본부 밑에 9개 도 사무소, 80여개의 지역 사무소로 구성할 방침이다. 지역 사무소 수는 수계관리와 지역적 여건, 현행 농조구역을 감안해 잠정 결정됐다. 지역사무소장은 지역특성과 톨관리의 전문성을 감안, 과반수를 현행 농조 인력 중에서 계약직 등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통합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

3곳 통합 2000년 농업기반공사 출범

구조혁신 통해 年 600억~1,000억 예산 절감

부는 통합전에 3개 기관별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99년 말까지 농진공은 400명을 감원, 2,078명으로 줄이고 농조는 4,024명에서 692명, 농조연은 672명에서 112명을 각각 감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농업용수개발과 경지정리, 배수개선,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농업용수의 종합적 관리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농촌지역종합개발 ▲해외농업 개발 및 통일대비 농업생산기반 정비기술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수세를 전면 폐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농업용수 공급비용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농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는 지역사무소에 지역별 농업인 대표자 등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단국대 張原碩 교수는 "이같은 농정 개혁으로 600억~1,000억원의 재정부담이 줄고 사업추진 체계가 일원화됨에 따라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합 논의 일지

▲88년=명민당, 농조의 시·군·이관 주장. 조합비 인하, 장기채 국고지원, 조합장 직선제 도입.

▲93년='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 3개 기관 통합 추진, 현행 체제 유지하되 소규모 농조 합병 결정.

▲94년='농어촌발전위원회', 기술 용역사업 통합 등 거론. 민자당 '우투과이라운드 대책소위', 농조의 지방공기업화 검토.

▲95년=농림부, 농업용수 관리체계 개편 추진. 농조의 도단위 대규모 조합화, 3개 기관 통합후 국영기업화 등.

▲98년 7월3일=기획예산위, 3개 기관 통합 방침 확정.

▲7월20일=농림부,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8월19일=3개 기관 통합을 위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마련.

부실 운영·기능 중복...

農組 파산위기

농민들 시각

"배수시설이 엉망이라 물 빼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보수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저 예산타령뿐입니다."

전북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의 농민 全澤均씨. 태풍 애니의 강습으로 다 익은 벼가 물에 잠긴 채 새싹 틔우는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탄식을 쏟아냈다. "농촌이 이 지경인데 농조 직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통합반대 집회에나 참석하고..."

대의원 몇사람이 모든 걸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농조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은 부실한 물 관리와 독선적이고 불투명한 운영방식, 수세 징수 등에 모아진다. 특히 지난 1일 태풍 애니가 전국을 강타했을 때 농조측은 전국의 임직원들과 농민조합원 등을 이끌고 상경,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집단시위를 벌임으로써 태풍피해 예방을 소홀히 한 데 대한 원성이 높다.

농조와 농조연, 농진공을 농업기반공사로 통합하는 데 대해서는 전

“조합운영 대의원 몇사람이 좌우” 불만 全農등도 “즉각 통합해야” 목소리 높아

하늘에 대한 숲씨의 원망은 금세 농지개량조합(농조)으로 향했다. 농조 직원들이 농정조직 통합반대 집회에 참석하느라 태풍 애니의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얘기가.

전북 익산시 함라면 다망리의 崔춘봉씨. "농수로 정비작업은 농한기에 해야 하는데 영농기에 해 농작물과 영농에 지장을 준다"며 농조를 비난했다. "물관리 인력은 많지만 대부분 일용직들이라 책임감이 없다"는 원망도 곁들였다.

영 마을인 황등면 신기리의 韓현목씨의 비난은 보다 신랄했다. "수세(水稅)를 걷을 때 맡고는 불필요한 인력들이 많고, 조합을 운영할 때도 조합원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국농민회총연맹(전농, 회장 李水金)을 비롯해 농민 대다수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전농은 지난달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5개 농민·시민단체들과 함께 공동성명을 내고 3개 기관의 즉각적인 통합을 촉구했다.

전농은 잇따른 심명을 통해 '농조의 비효율적인 운영과 과도한 수세 징수는 수십년간 농민들에게 무거운 짐이 돼 왔다'면서 '조합장 선거와 사업 수주를 둘러싼 각종 비리 등 해묵은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이들 3개 기관을 즉각 통합하는 농정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중앙일보 ('98. 12. 25, 1면)

농진공·농지조합·농지조합聯 세 단체 2000년 통합

국회 小委 통과... 농업기반공사 설립 기능 흡수

오는 2000년부터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발조합·농지개발조합연합회 등 3개 농어촌 단체가 하나로 통합된다.

자본금 5조원의 초대형 정부투자기관인 '농업기반공사'가 설립되며, 기존 3개 단체가 수행해온 모든 기능과 재산은 신설 공사가 흡수하게 된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통과시켰다.

농림부가 농정개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온 이 법은 폐지 위기에 몰린 전국 1백5개 농지개발조합들과 농지개발조합연합회의 강력 반발로 법제정 여부가 불투명했으

나 소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28일 농해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부진을 거듭해온 농·수·축협 등 3개 협동조합 통합도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소위는 특히 논란을 빚어온 3조 3천 2백71억원의 농조 자산을 모두 신설공사로 넘기고, 기존 농조 조합장 등 임원의 경우 일단 풀러 나가게 하고, 공사가 종전과 비슷한 직무를 맡도록 했다. 기존 농조 조직은 재산 이관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반대청원을 내는 등 반발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서승욱 기자

<sswook@joongang.co.kr>

□ 대한매일 ('98. 12. 26, 2면)

農振公 등 3개 단체 통합 2000년 '농업기반공사'로

관련법 회기내 처리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등 3개 농어촌단체가 오는 2000년부터 자본금 5조원 규모의 정부투자기관인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된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 養東亭 yunbin@daehanmaeil.com

□ 매일경제신문 ('98. 12. 26, 4면)

농어촌공사등 3개 농어민단체

2천년 농업기반공사 통합

최경선 기자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등 3개 농어민단체가 2000년부터 자본금 5조원 규모의 초대형 정부투자기관인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된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2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심의해 일부 내용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8일 전체회의에 회부되는데 농지개발조합과 농지개발조

합연합회의 강력한 반발로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있어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소위는 그 동안 논란의 핵심이던 3조3271억원의 농지개발조합 자산을 신설되는 공사로 넘기되 농업기반시설유지 목적에만 사용토록했으며, 조합장 등 농조의 기존 임원들에게 종전과 비슷한 예우를 보장토록했다.

또 농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종전 근무자를 감안해 배치키로 했으며 공사설립위원회 구성도 당초 정부원안인 10명에서 5명 늘어난 15명으로 정했다.

□ 서울경제신문 ('98. 12. 26, 22면)

농어민 3개단체 2000년 통합

농수위, 임시국회서 처리키로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발조합,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등 3개 농어민단체가 오는 2000년부터 자본금 5조원 규모의 초대형 정부투자기관인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된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2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논란 끝에 수정,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한때 105개 농지개발조합 및 농지개발조합연합회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될 뻔했던 이 법안은 28일 전체회의를 거쳐 이번 회기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정록 기자]

□ 경향신문 ('98. 12. 26, 2면)

3개 농어민단체 통합

농어촌진흥공사등 2000년부터

농림위 법안소위 통과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발조합·농지개발조합연합회 등 3개 농어민단체가 오는 2000년부터 자본금 5조원 규모의 초대형 정부투자기관인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2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논란 끝에 수정,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05개 농지개발조합 및 농지개발조합연합회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될 뻔했던 이 법안은 28일 전체회의를 거쳐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소위는 그동안 논란의 핵심이었던 3조3천2백71억원의 농지개발조합 자산을 모두 신설공사로 넘기되 농업기반시설유지 목적에만 사용토록 했으며, 조합장 등 농조의 기존 임원들에게 종전과 비슷한 예우를 보장토록 했다. 소위는 또 농조 직원들에 대해서도 종전 근무지를 감안해 배치하기로 했으며 공사설립위원회 구성 역사 당초 정부원안인 10명에서 5명 늘어난 15명으로 정했다. 김봉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98. 12. 26, 5면)

농진공·농조·농조연합 2000년부터 통합확정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발조합, 농지개발조합연합회를 오는 2000년부터 '농업기반공사'로 통합하는 내용의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확정, 28일 열리는 농해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소위는 3조3천2백71억원의 농지개발조합 자산을 모두 신설공사로 넘기되 농업기반시설 유지 목적에만 사용토록 했다.

한은구 기자 tohan@

□ 문화일보 ('98. 12. 25, 2면)

농진공등 3개 단체 '농업기반공사' 통합

2000년 자본금 5兆규모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발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3개 농어민단체가 오는 2000년부터 자본금 5조원 규모의 초대형 정부투자기관인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된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2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논란 끝에 수정,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한때 1백5개 농지개발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될 뻔했던 이 법안은 28일 전체회의를 거쳐 이번 회기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소위는 그동안 논란의 핵심이었던 3조3천2백71억원의 농지개발조합 자산을 모두 신설공사로 넘기되 농업기반시설유지 목적에만 사용토록 했으며, 조합장 등 농조의 기존 임원들에게 종전과 비슷한 예우를 보장토록 했다. 또 농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종전 근무지를 감안해 배치기로 했으며, 공사설립위원회 구성도 당초 정부원안인 10명에서 5명 늘어난 15명으로 정했다.

<金鍾泰기자>

□ 내외경제신문 ('98. 12. 25, 2면)

농진공·농지 개량조합·농지조합聯 2천년 '농업기반공사'로 통합

농림수산위 法수정 통과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발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3개 농어민단체가 오는 2000년부터 자본금 5조원 규모의 초대형 정부투자기관인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된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2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논란 끝에 수정,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한때 1백5개 농지개발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될 뻔했던 이 법안은 28일 전체회의를 거쳐 이번 회기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 백

5. 기타 참고자료

여 백

차 례

1. 농조의 통합반대 신문광고(8회)	105
2. 농조노조의 통합반대집회 유인물(3종)	115
3. 농조의 농지개량조합법 개정 청원서	135
4. 농진공 노조의 통합찬성 신문광고(3회)	143
5. 농업인단체(전농의 15개 단체) 3개 기관 통합지지 신문광고(2회)	149
6.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리후렛(5종)	153
7. 장관 및 국장친서(3회)	173
8. 농조노조에 대한 직무유기 및 명예훼손 고발(4회)	181
9. 여·야 3당 및 농업인단체 통합지지 입장발표 자료	201

여 백

1.농조의 통합반대 신문광고(8회)

여 백

성명서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 통·폐합을 결사 반대한다!

작금 국정 전반의 개혁 차원에서 정부산하기관·단체의 구조조정이 논의 되는 틈을 타 정부 또는 일부단체 일각에서 업무가 유사하다하여 3개기관(농조, 농연, 농진)을 통폐합 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며, 우리 전국 일백만 농민조합원들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히며 이의 추진을 즉각 중지할 것을 천명한다.

농어촌진흥공사는 과감히 민영화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던졌고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않는 시화호의 충격과 새만금간척사업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예산만을 낭비하고 사업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했던 농지 유동화 사업에서 보듯이 그동안 농어촌진흥공사는 국가 공기능을 다하지 못한 한낱 용역 기관임이 여실히 드러났고, 또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시·군지부 설치등 새물리기에 급급했으며, 특히 건설부문 용역비 보다 감절이나 높은 요율 특혜를 특허처럼 누리왔으며, 이미 일반화된 농업토목 기술임에도 최고의 권위를 고집하는 자기 모순에 빠져 이제 우리 농민과는 절대 동질화될 수 없는 공룡조직으로 변모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조직과 농조가 통폐합하여 과연 조합 본래의 기능인 수리시설의 설치 및 선량한 유지관리와 농업용수 공급을 통한 국민주식인 "쌀" 생산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겠는가? 결과는 쌀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쌀자급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 사회적 공기능이 현저히 약화된 농어촌진흥공사는 퇴출하거나 민영화하는 것이 국가개혁차원에서 마땅할 것이다.

농지개량조합은 농민 조합원 자조 조직이다.

농지개량조합은 반드시 농민 조합원 자조 조직으로 존립되어야 한다. 농지개량조합은 우리 농민의 대표기구인 대의원회를 통해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어 운영되는 순수농민조직으로써 이를 파괴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소외되고 상대적 빈곤에 시달리는 농업과 농민을 부정하는 처사로 간주되어 범 농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우리의 당위성임을 밝혀둔다.

농지개량조합의 구조조정은 이렇게 해야 한다.

농지개량조합도 국가구조조정 차원에서 자체 조직을 더욱 정비하고 체질을 개선하여 현재의 농조조직을 수계별로 적정규모로 통합하여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중복기능 인력을 과감히 감축하여 운영경비를 절감하면서 우리 농민에게 매우 적절한 수리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올바른 농지개량조합의 구조조정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전국 농지개량조합 일백만 조합원 一同

김성훈 농림부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 농조·농연·농진공 3개기관 강제 통합만이 개혁인가? —

국민의 정부 출범과 더불어 농정의 최고 책임자로 임직한 김성훈 농림부장관을 우리 농업인들은 큰 기대와 희망을 갖고 환영하였다. 학식과 덕망으로 신뢰받는 농정을 펼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관 취임 후 5개월여 농정수행을 지켜보며, 일생애 농업현장에서 정부 정책을 온몸으로 수행해야 할 중시직으로서 직분의 절대 우월을 앞세워 「반동적 세력」 철지한 사정, 온갖 발언을 서슴지 않은 평위에 우리 5천여 범 농조인은 참았던 분노를 삼키며 공개질의서를 하는 바이다.

[질의 1] 농업인 자치조직을 국영기업에 흡수합병하는 것이 김 장관이 내세우는 「농업인이 주인이 되는 농정」의 실현인가?

농조는 수혜자 농민조합원의 자조조직이며, 수리시설관리와 농업용수 공급을 전담하는 비영리 자율자치 단체로서 농민 의사가 직접 반영되는 민주농정의 산실이다.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고치고 보완해야지 민주농정의 산물자로 알려진 김 장관이 농조를 해체하여 국영기업에 통합하겠다는 함은 커다란 모순이 아닌가? 외국의 예를 보아도 민주농정의 기본에 충실한 일본의 경우는 성공했지만, 국영화 하려던 대만의 경우는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공사는 공익을 중시한다는 면에서는 사기업과 차이가 있으나 투자 가치 증진을 목표로 하는 영리단체이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물관리 업무를 영리추구 조직에 맡기면 결과는 국민 절대 주적인 쌀 생산력 저하로 귀착 될 것이 자명하다.

과연 장관은 어떤 형태의 조직이 이 나라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인이 주인이 되는 농정을 실현 할 수 있다고 보는가?

[질의 2] 3개 기관을 통합하여 경비를 절감하고 농업인이 부담하는 조합비(수세)를 인 받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겠는가?

※농조에 보조하는 국고는 국민절대 주식인 쌀생산의 직접경비임을 장관은 아십니까?

3개 기관을 통합하여 공기업에 흡수시키면 인건비 등 1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농업인이 부담하는 조합비(수세)를 인 받을 수 있다고 선언하였고, 선량한 일부 농업인들은 이를

믿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농림부가 만든 가장 농업기반공사법(안)에는 「조합비, 라는 명칭을 「농업용 수료」라는 명칭으로 대체하였을 뿐이며, 따라서 조합비 폐지라는 구호는 선량한 농업인을 현혹시켜 농조를 공기업에 흡수시키려는 의도임이 분명 알린다

실제로 3개 기관을 통합할 경우, 조합비 폐지·비조합구역 편입·지원보수 공사수준인차·홍농제인센티브비용 등에 오히려 1천억원이상이 추가로 소요되며, 특히 농어촌진흥공사가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현재 2조7천억원의 부실채권을 떠안고 있어서 기칭 「농업기반공사」는 총체적 부실에 빠지고 결국 수혜자인 농민과 국고 부담을 가중시킬 것은 불을 보듯 지명하다.

장관은 과연 이러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면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따라 밝혀 주시기 바란다.

[질의 3] 농민조합원의 부담으로 조성된 재산을 국유화 하겠다고 하였는데, 장권을 법치국가의 기본질서를 어떻게 보고 있고, 또한 자녀의 병역기피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농조는 90여년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이 있으며, 그동안 조합원의 부담으로 조성한 수리시설 등 수십조(兆)원의 재산이 있다. 장관은 이를 일괄 국유화하여 국영기업에 출자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을 하는데 이는 엄연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국시로하는 대한민국에서 국가이 넘겨지도 부정하는 것이 개혁인지 묻고 싶으며 또한 장관의 사상적 기초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가 항간에 회자되고 어느 누구도 예외할 수 없는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도외시한 처사에 대하여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준법성을 의문시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적 정서상 장관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또한 책임있는 당국자로서 더 이상 국민의 정부 선포성에 오점을 남기지 말고 자진 용퇴할 의향은 없는 지?

[질의 4] 그동안 묵묵히 정부정책을 수행한 제도권 내 농업증시자들을 「반동적」세력으로 매도했는데 장관은 과연 누구와 이 나라 농정을 이끌 것인가?

장관은 일전에 농업인을 위한 개혁을 해달라고 호소하는 5천여 농조인을 「반동적」이라고

발언하였다. 기존 정부정책을 충실히 수행해온 최일선 증시자들 괴롭치한 세력으로 매도하는 것이 개혁인지 그 저의가 의문스러우며 청원서를 떠돌려 일부 농민단체로 하여금 확인차 하고 수사의뢰 운운하는 처사에 분노하며, 공기업이 농조를 흡수 통합하는데 앞장서 온 일부 학자와 단체의 핵심세력은 그들 개인 스스로의 영달을 위해 개혁이라는 말을 쓰고 그들 스스로 이 나라 농정실체 주체로 지목 비관했던 농어촌진흥공사와 커넥션을 이루어 자제는 그 조직의 하수인이 되어 있는 현실을 보며, 어느 농업인이 대표로 인정했는지 정체성을 묻고 싶다. 진정코 농조개혁에 뜻이 있다면, 그동안의 정부 책임과 조합 실상을 살펴보고 사임하고 허심탄회한 조언이 있기 바란다.

이윤러 동지적 민형 격인 김 장관이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요구한다.

농업인이 주인되는 진정한 개혁안을 제시한다.

우리 농업의 백년대계를 진정으로 걱정하며, 농정과 농업 발전을 평생의 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는 김성훈 농림부장관에게 상기의 질의에 대한 공개 답변을 구하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때를, 쫓는 범 5천여 농조인의 단결화된 자체 구조조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며, 적극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 첫째 전국의 1백5개 농지개량조합을 40개로 합병하여 광역화한다.
- 둘째 민선조합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 셋째 농지개량조합과 농지개량조합연합회를 통합하고 중앙기구를 만든다.
- 넷째 80년 이후 24.5%의 인원을 감축하였지만 또 다시 20% 인원을 감축한다.
- 다섯째 절감된 예산으로 조합비(수세)를 폐지한다.
- 여섯째 2008년 말까지 완전히 자립한다.

※ 농조자체 구조조정(안)은 전국 조합장과 노조의 합의(안)임.

전국농지개량조합 노동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노동조합

* 이 광고는 노동조합원들의 성금으로 게재합니다.

「전국 농지개량조합 100만 농민조합원회」 결성에 즈음하여

-농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기관통합작업은 결단코 저지할 것이다!-

일년농사를 수해로 쓸려보내고 우리 농민들은 통한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피해 보상은 언제나 이루어질 것인가?
 개값이 된 소값안정은 어떻게 되고, 농산물 제값받기는 어찌되는 것이며, 그렇게도 떠벌리던 농기부채 해결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농림부장관은 거리의 약사처럼 이곳저곳 이동하며 나팔만 불어대는데 되는 것이 무엇이고, 해놓은 것이 무엇인가?
 작금에 농조·농조연·농진공등 3개기관 통합 작업도 일부학자와 극소수 자칭 농민 운동가들이란 자의 과격하고 편협된 의견만 듣고, 거대기업인 농진공의 힘에 눌려 우리조합원들의 의견은 처음부터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 수세를 폐지한다더니 그것도 거짓말이고, 불적정없이 농사짓게 한다더니 그것도 거짓말이 아닌가?
 이제 더 이상 우리 농민조합원이 무시되고, 희생되는 상황을 꺾지할 수 없어 우리는 이렇게 분연히 일어섰다. 오늘 우리는 「전국농지개량조합 100만 농민조합원회」결성을 대내·외에 선포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을 밝히고자 한다.

**농림부 장관은 신랄한 농민을 기만하는 졸속의 기관통합작업을 중지
중단하고 다수의 일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당초 농림부 장관은 3개기관을 통합하면 수세도 없애고, 국고보조금도 없애며, 물판리는 더욱 잘해내어 우리 농민들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 발표한 농림부의 「농업기반공사법안」을 보면, 조합비를 '농업용수료'로 명칭만 바꾸어 다시 받겠다는 것이고, 국고보조금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며, 일단 물꼬판리는 우리 농민들이 용능계별로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군다

나, 우리가 조상 대대로 조합비다 장기채다 하여 조성해온 막대한 재산을 우리의 뜻은 전혀 무시한 채 국유화하여 국영기업에 넘겨 그들을 먹여 살리는데 쓰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개선되는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혁이고, 누구를 살리자는 기관통합인가 말이다.
 늙은이들만 남아있는 농촌에서, 이제는 밤낮으로 부역까지나기 물꼬트고·도랑치고·수조제거 작업을 해야한다면서, 수도요금·전기요금 내듯 '농업용수료'란 물세를 꼬박 꼬박 내야 한다면,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농림부 장관은 우리 농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책상에 앉아 읊어대는 시조기락으로 이나라 농민을 또다시 울리려 하고 있다. 농림부 장관은 뒷자리에 잘보이려하는 한건주의 깡패소를 즉시 중단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 농민조합원들의 요구에 즉각 응하라!

**우리 농민조합원들을 수세도 폐지하고 조합수료 더욱이겠다는 농조
조직 개혁안을 적극 지지하며, 그를 일괄적으로 중지를 요구한다.**

우리는 과거 과중한 수세부담 때문에 농조를 목하고 미워도 했지만,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진 않았다. 이나라 법과 정해가 그러했지 힘없는 농조가 그러했겠는가? 최근 농조는 우리 조합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살을 깎는 아픔을 마다하지 않고 자체개혁안을 내놓았다.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이고 105개 조합도 37개로 줄이겠다는 것이며, 조합장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직원 수도 20%를 추가 감축하여 경비를 줄임으로써 스스로 자립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농조연과 통합하여 기능 일원화와 행정체계의 단순화를 실현하겠다는 획기적인 개혁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모든 면에서 농림부의 3개기관 통합계획 보다 앞서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이나라 농업의 주인인 우리 농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는 자치조직 형태를 유지하겠다는 선진화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 100만 조합원들은 농림부가 추진하는 졸속의 기관통합 계획은 결코 받아 들일 수 없으며, 농조자체 개혁안을 수용하겠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바이다.

**100만 농민조합원들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국고보조금과 물
판을 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우리 100만 농민조합원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림부장관의 깡패소적인 기관통합작업을 기필코 저지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농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농진공이라는 국영기업을 살리기 위한 속임수 선전이기 때문이고, 다수의 이해당사자인 농민조합원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편협되고 일방적인 작업이기 때문이며, 우리의 재산권을 지켜야만 하기 때문이다.
 정부·국회·언론계·학계등 모든 계층에서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힘을 실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조합장·노조원들과 연대하여 모든 투쟁을 다할 것이다. 농림부가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 채 농조를 없애겠다는 졸속의 기관통합작업을 계속한다면, 김성훈 농림부장관의 퇴진을 기필코 이루어 낼 것이다. 우리는 거대 공기업의 위세 밑에서 그들을 먹여살리는 농사는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으므로, 쌀 농사를 포기하는 대책도 강구할 것이다.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김성훈 농림부 장관에게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1998년 9월 18일

전국 농지개량조합 100만 농민조합원회 회 장 김 정 권

각도대표 김재성, 김정권, 김혁재, 손진안, 오홍만, 유재철, 이공열(가나다순)

농조 노동조합원의 죽음을 애도하며 농민집회를 개최합니다.

농조·농조연·농진공사 3개기관의 구조조정은 공권력의 탄압으로 개혁의 본말이 전도되고 있습니다.

어느것이 농업과 농업인을 위한 개혁인지 공개논의 되어야 합니다.

농림부의 3개기관 구조조정 방안은 발단과정에서부터 정당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으며, 농업과 농업인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 현재 3개기관에 관한 구조조정 방안은 두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농림부가 추진하는 국영기업(공사)으로 통합한다고, 다른 하나는 전국 농조가 자체 개혁안으로 내놓은 민간조직의 통합안입니다.
○ 여기에서, 농림부안은 당초에 가장 큰 주제인 농조·농조연과 100만 농민조합원의 참여가 배제된 채,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는 몇몇 인사와 농진공사의 주장만을 반영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농조자체 개혁안은 전국 105개 농조와 농조연이 합의하고, 100만 농민조합원의 적극 지지를 받아 만들어진 것입니다.
○ 따라서, 농림부안은 발단과정에서 정당성을 잃은 편중된 방안이었고, 구조조정 내용도 현정부의 공기업 민영화라는 개혁 방향과 시대적 발전 추세에도 배치되는 것이었으며, 특히, 농조적 수혜자인 농업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농림부안과 농지개발조합의 비교 >

구분	농림부안	농지개발조합안
기본구상	○ 농조·농조연 및 농진공 해체후 2000년 1월 '농업기반공사, 설립' ○ 농민자치조직과 정부부처기관을 통합	○ 농조와 농조연을 통합하여 '농지개발 조합'창립, 설립 ○ 105개 농민조직에 통합 (105개 → 37개 조합으로 통합)
조합비(수세)	○ 조합비를 농수산물로 인출을 변경하여 징수권 없애	○ 조합비 집진적경감 → 2004년 완전폐지
국고보조금(운영경비)	○ 운영비 보충은 물론, 시설유지 관리비 국고보조금: 917억원(98기준) ○ 농조직원보수를 농진공 수준으로 상향조정에 따른 추가요소: 154억원	○ 2003년까지 원천지급 -2004년부터 국고보조 종료 ○ 현재의 농조직원 보수수준으로 운영
조합원참여	○ 조합원의 공사운영 참여 및 박	○ 조합원참여(선거권, 피선거권) ○ 이사회, 대의원회를 통한 조합원 참여
민선조합장	○ 공사발족과 함께 전국 105개 민선조합장 임기 일괄중지 - 과잉임명 금지취급 위해	○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
재정자립	○ 농업용수, 용역수수료, 정부출자금 및 보조금 - 시설유지관리분야 재정자립안 없음	○ 발흥재산과 등의 재원으로 공금지출 - 운영(1조원 조성) - 재정자립도 달성
통합에 따른 재산권 침해	○ 농민재산을 국유화할 경우 재산권 침해로 위헌소지 발생	○ 농민재산을 원 상태로 보존

농림부는 발전적 논의를 억압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동원하여 탄압하고 있습니다.

○ 농림부는 당초부터 편중된 방안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에 따른 개혁이고, 다른 의견은 반대개혁이다. 반대개혁이고, 집단이상의 발로라고 애도하며, 수차례의 면담요청 자체도 거절한 채, 강압적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알리고자 신문지상을 통하여 몇차례 광고성명을 낼 수밖에 없었으며, 그에도 불구하고 거지로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농진공이나 농림부는 별별 명목을 대고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 지난 9월 30일 과정에서 개혁한 합법적인 농민 집회에서는 이를 막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의 행정기관과 수사기관까지 동원하여 집회를 원천 봉쇄하려 하였고, 공공공제 행사당일 기습적으로 경찰이 상무하여 남부지방에 농민집회를 방해하는 등, 천재지변인 태풍의 피해가 농조때문이라고 과장 보도되는가 하면, 불법집회라는 명목으로 집단, 불법대표를 중징고고소하는 등, 농조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함으로써 '집회도 시위에관한법률'을 엄연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 물론 우리는 전체국민적인 것이었습니다. 일부농조에서 이에 충적으로 대응하지 못한것은 시인과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해당조합원 진상조도 이를 인정하고 피해보상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진상조도 근무하는 30일의 짧은 직위는 98.11.2 자는 근무하는 배수진에서 자결함으로써, 가족과 동료, 친우들에게 커다란 슬픔과 울분을 남긴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태풍상륙시 3개소의 배수진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부상으로 1개소를 이직 조차못하여 일부지역에 피해가 가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빌미 삼아 과격인사들이 집단으로 사무실 침입과 부수고 폭행하였는가 하면, 수사기관에 소환되는 등, 공포와 과포로 시달리다가 스스로 고귀한 목숨을 버렸습니다.
○ 공권력에 의한 탄압사태의 대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임직 및 농민대표 등에 대한 고소·고발: 15명
△ 9월 30일 농민집회 전후 특별복합정경 및 감시 강행: 163회 272명 투입
△ 경기: 19회 30명 강원: 13회 18명 충북: 16회 31명 충남: 31회 50명
△ 전북: 10회 20명 전남: 27회 54명 경북: 21회 27명 경남: 26회 42명
* 경기감사 및 통합감사(40회 175명 투입)는 제외함.
△ 9월 30일 농민집회까지 농조별 직원 배치: 105개농조에 109명 배치 △도별 교육담당 지정운영: 8개도에 16명 배치
△ 통합관련 부총청장 지시: 98.9.23 △집회참가시 즉각고발, 처벌 및 결과보고서지: 98.9.23
△ 집회 가담자에 대한 문책 및 고발조치지시: 98.10.1 △유연비어 동요방지 지시: 98.10.20

3개기관 구조조정과 관련 난무하는 쟁점들에 대하여는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1. 3개기관을 공사로 통합하면 증폭가능이 해소되고, 조직의 효율을 높여 예산을 절감하고, 대농민 서비스를 향상시킬수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 거시적 안목에서 보면, 3개기관의 사업은 정부예산중 동일부문에 속하지 않고, 사업결과가 유사하다는 점에서는 중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를 기능 중복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3개기관은 엄연히 고유기능과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중간에 일부 기능중복이 있었던 부분은 기술운영부문인데, 이는 전설기술 운영사업의 완전개방으로 이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만일, 그러한 지시적 편향만을 중시한다면, 사립학교 교육과 국·공립학교 교육이 다를 바 없고, 고속도로 건설과 국·지방도 건설, 나가 철도건설까지도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 한편, 민주시민, 정보화 사회에서의 특징점은 다양화, 전문화에 있고, 이는 농업분야라고 예외될 수는 없습니다. 산술적 통합만이 효율적인 방안은 시대상황과 다른 편입니다. 그렇기로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농업 총생산량 하락한 것은 농업의 쇠퇴가 아니라 농업의 생산성 향상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대농민 서비스 증대를 기할 수 있다고 하는 단순한 기대일 뿐입니다. 현실적으로, 시설유지관리 부문을 포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익자 부담에 의한 보전 즉, 조합이나 농업용수이용료에 의한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은 상충하는 영역입니다. 그것이 공사로 하면 해결되고, 조합으로 두면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아닌 것입니까?
○ 농민공사의 향후 수익성은 농진공이나 정부도 보장 못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업이 효율적이다 라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어느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결론을 전제하는 농조의 유지관리비와 수익성 및 효율성을 보장 못하는 공기업인 농진공사를 통합할 때, 정부부담이 줄고, 효율적인 것이라는 기대는 허구이며, 그러한 상황에서 대농민 서비스 증대는 오묘한 구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 이외같은 상황인식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좀더 상회목표 즉 어느것이 장기적 국가발전 전략과 부합하는 것이냐에서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민주적 가치가 좀더 충실히 실현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국민의 대의기능과 국가발전 기여도에 문제가 있다하여 의회제도를 포기할 수 없듯이, 현 농조가 문제가 있다하여, 민주적 정통 자제를 허무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며, 이 실험이 실패할 경우 손실된 기회비용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2. 농조자체 개혁안은 정부의 개혁적업무를 지연시키기 위한 술책이며,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 3개기관의 공사와통합을 추진하는 측에서의 주장은, 현행 농조법에서도 설립기준 미달조합은 통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한 경우는 1개소 밖에 안되기 때문에, 농조자체 개혁안에서 105개 조합을 37개로 통합하겠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허구라는 것입니다.
○ 이러한 주장은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농조법에서는 기준미달 조합이 통합하도록 되어 있기도 하지만, 농림부장관은 통합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한, 당시의 통합안은 농조자체의 합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정부의 일방적 조치에 일부의견을 제시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장관은 법령시한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통합이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에는 정부의 의지가 약했던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방만을 타당한 것은 처사가 아닙니다.
○ 만일 그와 같은 상황이 전개된다면, 현재 농림부가 추진하는 3차 통합안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장관의 통합명령이 아니고서는 3차통합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농조자체 개혁안은 '99.3.31까지는 자율통합을 유도하고, '99.12.31까지는 강제통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림부안과 같이 농조자체 개혁안에서도 정부의 역할은 중요한 것이며, 이는 농조와 정부의 의지가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지난 문헌정부 시절, 민간부문 - 공공부문을 같이 그렇게 무시하던 구조개혁조치는 얼마나 실현되었습니까? 그러한 사회, 경제적 여건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있었겠나? 농조만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IMF라는 국난하에서 누구나 개혁을 부정하지 않고 있고,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농조자체 개혁안도 동일한 시대상황의 반영이며, 그만큼 개혁의 실효성은 상승했습니다. 농조 자체도 스스로의 개혁에 합의한 만큼 그 의지를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정부의 지원과 의지가 있다면, 개혁의 완성은 자명한 것이고, 그 또한 국가적 책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3. 농조를 공사로 통합할 경우 위헌소지가 있는가에 대하여

○ 공사와 통합을 추진하는 측의 주장은, 공사로 하여도 농업인이 동일한 재산으로부터 사용·수익이 보장되므로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 그러나, 신실공사 법안에 따라 농조·농조연을 강제로 해산하고 신실공사로 통합하는 경우, 농업인의 사용·수익권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자유민주적 법치국가 중시하는 최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큰 것입니다.
○ 또한 농조와 농조연의 강제해산에 따라 그의 재산권과 절차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고, 새로운 공사의 설립이 국가 예산의 절감,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 하나, 이는 공공복리를 볼 수 없는 것이고, 기본권 제한이나 이를 위하는 것이어서 위헌의 소지가 큰 것입니다. 한편, 새로운 공사로 설립으로 달성할 수 있는 이익이 기본권 침해보다 우월하는 편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이러한 문제는 현재 법률전문가들에 의하여 문헌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아무리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헌법위반이다 상 위 기밀일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위헌법률을 추진하는 것은 역사와 국민앞에 섰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력과 희생의 대가인 개혁이 불과 수년후에 헌법에 불합치하는 것이었다고 평판된다면 이 시간을 지는 우리는 누구앞에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까?

4. 대다수 농조장과 직원들은 공사와 통합을 찬성하는데, 일부 기득권 유지세력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오도함에 대하여

○ 농림부는 당초부터 지시공문이나 대외발언에서, 현재 대다수의 농조장과 직원들은 공사와 통합을 찬성하고 있고, 농조직원들에게는 결코 불리한 것이 없는데, 국수수 기득권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세력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105개 농조중 국수수 농조는 농조자체 개혁안에는 찬성하나, 세부내용에서 의견차이가 있다하여 세부내용 지침에 서명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농조도 농림부안을 찬성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 이러한 현실인데도 농림부는 억측전술을 하고 있어,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그러면, 배후를 알보려는 국수수가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100% 찬성이 아니라면 사실자체가 농조자체개혁안이 민주주의적 합의를 이고, 타당한 일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 여기에서 역으로 농림부안은 일부 농진공사에서 얼마만큼 지지하지 못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방을 비방하기 위하여 일지도 않은 사실을 거론하는 개혁이란 큰 과업수행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으며, 있을 수 있는 국수수의 영소적 의견이 전무방한 한다면, 그러한 정책결정은 분명히 오류일 것입니다.

5.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누구의 명예가 훼손되었는가에 대하여

○ 3개기관 구조조정이 편중된 상황에서 불거져나와 급박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견개진의 기회조차 차단된 채 일방적으로 몰아부치는 정책일에서, 우리는 물론과 체결한 후에 우리의 주장을 알리는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 이러한 과정에서 농림부장관, 일부학자, 일부농민운동단체, 농진공사 등에 대하여 본인이 누가 되었다면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의가 아니며, 추도도 특정한, 특권기관을 편향하는 없었는다는 사실도 밝히두는 바입니다.
○ 이러한 모든을 아니라 농업과 농업인의 장래를 걱정하는 충성이었고, 그러한 노력과 공적에 대해서는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도 아니라 농업과 농업인을 위한 일부분이고, 우리의 공과도 평등하여야 한다는 점을 여러분도 인정해야 합니다.
○ 도하에 아직도 일제수탈기관 이라든가 독학혁명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묻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아니라 국가 기간·사회제도를 모든 부분은 얼마나 자유로웠습니까? 우리 민족 모두에게 치욕이었던 그 시절에 당시 거론하며 특권기관을 모방하는 이들은 과연 누구런 말입니까? 또한, 독학혁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국가 공무원인원인법령으로의 가입구역을 의지 숙련된 구제도의 타격을 위한 사회개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조합도 없었고, 조합비도 없었습니다. 다만, 모순에 젖은 공무원과 국가 세급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찌하여 현 농조와 연결되는 사안입니까? 역사인과 사안분별이 정해져야 합니다.
○ 이번 구조조정과정에서 일부에서는 명예가 훼손되었음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명예가 고려할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누대에 걸쳐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봉착한 우리의 명예는 반동적 명예이고, 일제강점과 독학혁명에 연결되는 명예란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함에, 우리의 명예는 사회적·역사적으로 영광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르침과 강의를 듣고 자란 우리들인데, 우리의 명예는 누가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농림부장관과 정부·국회·정당 등에 드리는 정책대안은 이렇습니다.

○ 이점주의 국난하에서 난처처럼 엄한 농정의 최고책임자로 임명하여 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풀어야 하는 정성훈 농림부장관의 고의와 시골을 우리도 통합할 수 없습니다. 당초 수월하게 마무리 될것으로 판단하였던 3개기관 통합구상은 의외의 상황으로 빠져들며 농정개혁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 이는 우리가 주장하는 자체개혁안도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농림부안과 농조자체 개혁안이 추구하는 목표는 동일합니다. 개혁의 실현입니다. 다만, 그방법과 절차가 다를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누가 이 실현 되는 장전에서 추구하는 개혁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장전에서 개혁을 주장하시어 이루어진 일이지요 공권력입니다.
○ 이 시점에서 남의 일방을 배척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필요없는 시간과 노력의 소모일뿐입니다. 이제 양측의 방안을 놓고 전문가·이러한사자, 농업인, 정치인들이 참여하여 공개의문을 거쳐 결론을 내리던 상황을 종결됩니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순리적, 민주사회의 의사결정 방법입니다. 수많은 개혁과제가 산적한 현 시점에서 주·중도 잃어버린채 소리치며 막연한 귀에 끌을 내야 하면, 좀더 시급한 일에 전념해야 할 때입니다.
○ 더불어, 이러한 농업생각이란 정본문제는 단순한 기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실용공기제의 보존과 개발이라는 국가사 문제입니다. 정부의 역할이 공시화하면 살아있고 조합형태로 하면 포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농림부는 공시화하면 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였는데, 그러한 투자계획이 사실이라면 그개혁의 국회 일부분이라도 농조자체 개혁안 실행이 무자비한 단행, 정부재정강화와 개혁실행이라는 목표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질곡의 늪을 벗어나, 아니라 농업·농업인을 위하여 모두가 대응정책을 할 때입니다.

※ 이광고는 조합원 성금으로 게재합니다.

국회의원님과 농업인께 드립니다

농지개량조합 "자체개혁안"은 이렇게 실현됩니다

■ 전국 105개 농조와 농조연이 합의하고, 100만 농민조합원이 적극지지하는 「농조자체 개혁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 째, 전국 105개 농조를 37개로 통합하여 경영 규모의 확대
- 둘 째, 조합장 신분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 대 농업인 봉사기능 강화
- 셋 째, 농조와 농조연을 통합, 중앙회를 두어 행정체계의 일원화와 대변기능 강화
- 넷 째, 농조와 농조연의 기구 축소와 인원의 20% 추가 감축

⇒ 이에 의한 경비절감과 경영효율화로 2004년부터 조합비 완전 폐지와 재정자립 실현

⇒ 이러한 개혁안은 현재 대다수 외부관련 기관으로부터 호응을 받고있고 농림부와 농진공사가 추진하는 공사화 통합안보다도 합리적 代案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 왜! 농조자체개혁안을 내놓았나?

농조·농조연·농진공 3개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政府案」은 농업인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민조합원의 財産權·自治權·水利權을 지키면서 동시에 정부 개혁에 동참하기 위해 자체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 그러나 농림부와 농진공사 및 그와 인연이 깊은 일부 인사들은 농조자체 개혁안을 개혁저지를 위한 기득권유지 술책으로 매도하고 있으며, 특히, 37개로의 농조 통합과 조합장 무보수 명예직화에 대하여 갖가지 역선전과 모략을 일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만일 농조자체 개혁안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외부의 눈총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농조의 주인인 100만 농민조합원이 두려운 것이고, 우리의 의지가 허구가 된다면 우리는 100만 농민조합원과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이야 때가 되어 교체되면 그만이지만, 농업현장에서 조합원의 의사와 감시아래 운영되는 농조는 전혀 다른 입장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 그러면, 농조자체개혁안의 「농조통합 일정」은 ?

우리 농조는 자체개혁안이 국회에서 입법화된다면 즉시 구조조정에 착수하여 99년 3월 31일 까지 자율 통합을 유도하고, 그 이후는 강제 통합절차에 들어가 99년 12월 31일까지는 완전 통합을 실현하겠다는 「통합일정」을 이미 자체개혁안에 담고 있음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알립니다.

■ 조합장의 무보수 명예직 전환은 ?

조합장은 현재 상근 임원으로 되어 있으나 99년 4월부터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고, 농조 경영에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전국 농조장들이 합의하고, 100만 농민조합원과의 약속으로서 그 실현은 농조인들의 의무인 동시에 책무이며, 시대적 소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6. 25이후 최대국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 분야별 개혁에 적극지지를 보내며 전국 105개 농조도 설립이래 처음으로, 조합장, 농민조합원, 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농조 자체개혁안을 국민앞에 내놓았기 때문에 이를 관찰시켜 농조가 다시 태어나는 새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며, 우리는 이를 내부 임직원, 조합원, 국민앞에 엄숙하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1998. 12. 1

◆ 전국 농지개량조합장들은 농림부의 일방적인 3개기관 통합추진에 반대하고 농조·농조연이 마련한 자체개혁안 수용을 촉구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1백5명 조합장중 98명이 참여해 96명이 서명하고 2명이 미서명했으며 7명은 참석치 않았습니니다.)

전국농조 구조조정추진위원회

농민에게 무익하고 정부 개혁방침에 역행하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안)' 을 강력히 반대한다

한국노총과 공공서비스노련은 그간 농림부가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애써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해온 농업생산기반정비와 관련한 3개기관(농조, 농조연, 농진공)의 통합이 농업인에게 큰 이익이 없음을 물론 정부의 개혁방침에도 역행하는 사안임을 경고하고 이의 철회를 수차례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입법 예고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되고 이에 대한 법안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우리 한국노총과 공공서비스노련은 소위 '3개기관 통합안'을 골자로 하고 있는 상기 법안은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되며, 만일 법안 통과로 인한 용수관리의 비정상화와 이로 인해 비롯되는 농업인의 피해는 해당 의원들에게 결코 씻을 수 없는 대과가 될 것임을 다시금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농림부는 3개기관이 모두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어 통합을 통해 경비가 절감되며 한일 양국의 이 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통합은 어느 정도 유사한 범위와 길이 합리성과 실효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농진공과 농조의 기능과 성격은 유사하지 않다.

농진공이 밭이나 허구언 건설 등을 담당하는 반면, 농조는 생산된 농업용수의 공급과 수리시설 등을 유지 관리 및 보수하고 있는데 어찌 기능이 같다 할 것인가.

둘째,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오리라는 기대는 농진공 직원수준의 농조직원의 인건비 책정을 통한 단순비교로도 설득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특히 지난 11월 6일 농지개발조합연합회에 대한 농림해양수산위의 국정감사에서 도 3개기관 통합안은 농민중심의 개혁이어야하고 통합논의이전에 3개기관의 관계정립을 위한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도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3개기관 통합'이라는 농정개혁과 구조조정의, 결실을 농민들이 결코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물관리와 시설관리는 기상조건과 시설의 분산으로 현장성이 강하고, 또 지역사정이나 주민들과의 유대가 깊어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러한 업무를 민간단체에 맡기지 않고 국영기업에 맡기는 것은 대농민서비스를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이 없다.

이에 한국노총과 공공서비스노련은 이러한 3개기관 통합안의 부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위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란 농민들의 기대를 오해하지 않는 농정개혁과 구조조정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합법적인 농지개발조합지체개혁(안)에 대한 정월심사소위원회의 적극적인 검토와 승인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998년 12월 3일

한국노총/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신일수

국회 농림해양수산 위원회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농림부의 왜곡보고에 의한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초대형 공기업 "농업기반공사" 설립법안」 심의결과는 再考되어야 합니다.

- ◇ 그동안 많은 의원님들은 농조·농조연·농진공등 3개 기관의 통합을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농림부가 추진하는 "公社形態"의 통합은 모든면에서 문제가 많으니 "農民中心"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결정하라고 누차 지적하여 왔습니다.
- ◇ 이는 '98 농림부의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시고, 長官님도 약속한 사항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 그러나, 우리는 의원님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 先공청회·後통합법 제정추진과 농민조직간의 2개 기관 통합이라는 그간의 주장을 양보하고
- ◇ 3개기관 통합을 수용하되, 農民中心의 민간조직 (조합형태)으로 통합해 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 그런데 지난 12월 24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농림부가 농조장, 노조, 농민대표들과의 회동결과를 왜곡보고한것을 기초로 법안심의를 종결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이에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을것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 3개기관의 공사화통합은 농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험이며, 공기업 민영화 방침과도 배치되고, 고비용 저효율 극복을 위한 구조개선도 아니며, 선진외국도 실패한 시대착오적인 졸속 대안입니다.
- 3개기관은 농민의 권익보호와 기본권 신장을 구현하면서 부담정감을 가져올 수 있도록 농민이 구성원이 되는 조합 형태로 통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공청회를 통한
- 민의수렴절차가 제대로 선행된 후 추진되어야 합니다.
- 이렇게 우리 농민과 전국 조합장, 노동조합은 그간의 우리주장을 모두 양보하고 마지막으로 "農民中心의 민간조직"으로 3개기관을 통합해줄것을 다시한번 호소합니다.
- 만일, 이러한 정당한 우리의 요구가 모두 무시되고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공기업 - 민영
- 화"를 정부개혁 방향에도 역행되며, 국정감사시 지적됐던 공청회 절차도 거치지 않는 정부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 전국농조와 농조연은 대규모 실행행사를 위한 총파업도 불사 할 뿐만 아니라 향후, 헌법소원등 법적투쟁에도 나설 것입니다.

※ 9.30합법적 집회를 방해한 김성훈농림부장관과 황토 특보를 발행하면서 명예를 훼손시킨 농진공 노조위원장을 고소합니다.
1998. 12. 28

전국농조 100만 농민 조합원회 ◇ 전국농조 구조조정추진위원회 ◇ 전국농조·농조연 노동조합

2. 농조노조의 통합반대집회 유인물(3종)

여 백

농지개량조합 자체개혁방안 수용 촉구 및 투쟁 관련 속보

- 전국 농조 100만 농민조합원회
- 전국 농조 구조조정 추진위원회

농민조합원들의 농조개혁
수용촉구

농민조직사수기자회견

'98. 9. 21 1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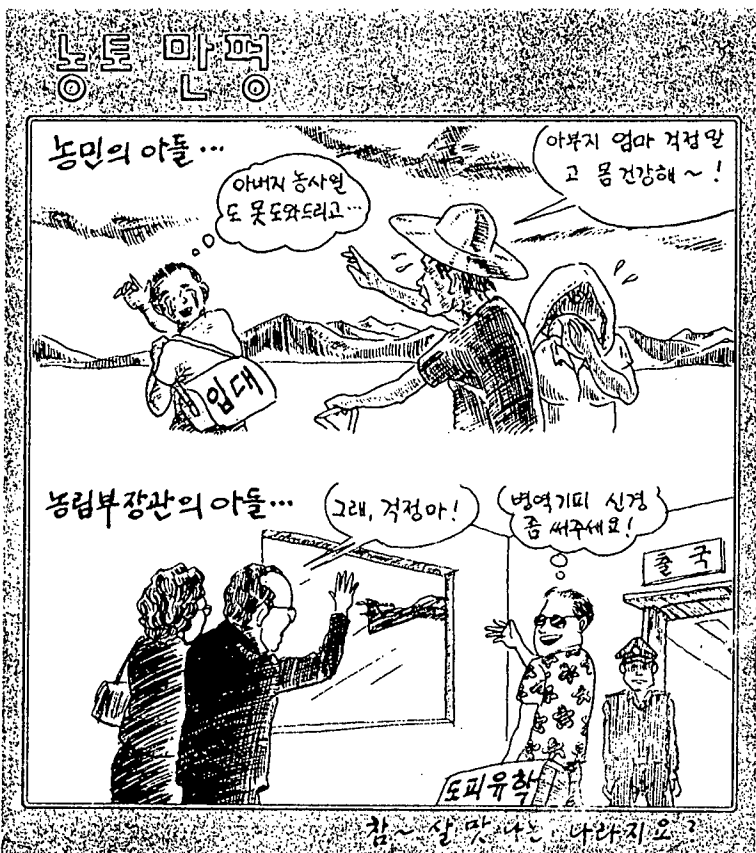


농민조직 사수 기자회견

지난 21일 전국농조 100만 농민조합원회와 전국 농조 구조조정 추진위원회는 공동기자 회견을 갖고, 정부가 내세운 통합공사 추진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조자체구조조 정안을 언론에 공개하는 한편 앞으로의 투 쟁계획을 발표하였다.

농가 부채탕감 및 농정개혁추진 관련 전농집회

지난 15일 전농집회에서 연합회장, 조합장대표, 농조노조의장, 농연노 조의장 등이 대표로 나와 정부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농조자체구조 조정안의 합리성과 당위성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주요내용

- ▶ 농조사수 100만 조합원 및 노동자 총력 투쟁에 임하면서
- ▶ 정부의 공기업 → 민영화 정책기조에 배치되는 농림부장관의 개혁방향과 관련해서
- ▶ 정부 개혁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관련해서
- ▶ 농업 선진국에 물관리관련 공기업 모델이 있는가?
- ▶ 정부안이 민주적 합의 과정을 거쳤는가?
- ▶ 전농 및 한농연과 관련해서
- ▶ 농조 자체개혁안 세부 실천계획 관련
- ▶ 향후 계획
- ▶ 농지개량조합 구조조정방안
- ▶ 농민을 기만하는 정부의 통합공사 추진계획

1 농조사수 100만 조합원 및 노동자 총력투쟁에 임하면서

우리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시대적 당위성을 인정한다. 때문에 우리는 90년 역사의 농지개량조합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革命的인 改革案을 전국 조합장, 농민대표, 노동조합의 合議하에 세부내용까지 포함해서 지난 9.10. 확정하였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농조를 반개혁세력으로 몰았던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내놓은 안 보다 개혁을 더 세차게 하겠다는 농조 자체개혁안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말하면, 대통령의 개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김성훈 농림부장관의 개혁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공기업 → 민영화 정책 기조에 배치되는 농림부 장관의 개혁방향과 관련해서

전국 105개 농지개량조합과 농조연합회는 요즘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公企業이 아니고 그야말로 농민참여에 의해 조직·운영·관리되어지는 農民自治組織이다.

그러나 전국 105개 농조를 마치 공기업 보듯이 보고 있는 현실은 농조 조직 자체에도 문제가 있음은 인정하나 그보다도 정부의 대단위 홍보전이 그 역할을 해냈다고 생각한다.

⇒ 어찌됐든 농민조직을 농진공과 합쳐서 거대 公企業을 만드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방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아직도 정부가 이 주장을 하는 데는 오히려 의구심마저 생긴다

개혁이 추구해야 할 目標와 관련해서

정부 개혁이 추구해야 할 目標은 분명하다.

IMF체제에서 국가재정부담을 줄여야 하고 개혁의 실수요자인 농민편에서 영농서비스 제고를 시켜야 하며 더불어서 농민부담이 경감되어야 한다.

그러나, 김성훈장관이 내놓은 公企業化方案은 개혁의 目標中 그 어느 하나도 충족시켜주는 것이 없다. 바로 이것이 농림부 개혁안에 반대하는 이유이고, 이러한 반대를 통해서 애국하는 길을 찾아 보자는 것이 우리의 總意이다.

농업선진국에 물관리 관련공기업 모델이 있는가?

개혁의 目標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에 미땅한 制度를 택해야 하는데, 우리는 동상 벼농사 지역이면서 온대몬순 기후대이고 동북아 지역이면서 농업 先進國인 일본과 대만의 예를 드는데, 두나라 모두가 우리와 같은 農民自治組織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IBRD에서도 물관리는 농민참여가 보장되는 제도를 권고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대만의 경우, '93년에 국가 기관화 하려다 실패

정부안이 민주적 합의 과정을 거쳤는가?

정부의 3개기관(농조·농조연·농진공) 통합합의 추진과정, 절차, 참여학자, 단체가 일방적이고 극히, 공사에 편중되어 진행되고 있다.

- ▶ 정부가 개혁안을 만들 때 통합의 당사자인 전국 105개 농지개량조합과 농조연합회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한채 3개기관 통합이라는 틀을 짜놓고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이었음
- ▶ 그후 농림부내에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사자를 참여시켰다고 하는데 이 위원회 역할 자체가 통합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사항만 논의하는 제한된 역할을 하게되어 무용론이 나온 상태임.
- ▶ 농정개혁 위원회의 위원이고 전농 심포지엄의 발제자가 주장하는 3자 통합정부안의 통합사유가 극히 왜곡되어졌음.

농림부와 농진공이 통합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3문제는 허위로 판명남.

가능 중복 문제

사업부문은 '98부터 완전개방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따르고 있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수리시설유지관리 부문은 전국농조가 10,783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농진공은 관리자가 지정인원 5개소를 관리하면서 중복을 주장하고 있으니 그 주장 자체가 허구적임.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의하면 농조에 관리 이관해야 할 시설임)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모든 민간 주택사업은 주택공사로, 모든 통신사업은 한국통신으로, 모든 제철사업은 포항제철로 몰아 넣어야 미명하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

농조운영부실 및 방만한 경영문제

정부의 법정 국고보조금 부족지원의 문제이지 운영부실의 문제가 이념. 또한 농조직원의 1인당 관리면적은 시설이 현대화 된 농업선진국보다 높음.

(단위 : ha. %)

	한 국	대 만	일 본
관리면적	135ha	118	126
현대화율	20%	90	100

- '80년 이후 인원을 지속적으로 감축(24.5%)
- 직원의 보수는 공무원의 90%, 공사직원의 70%로 근무여건이 열악함

농민부담 경감문제

정부의 「농업기반공사」법안에 따르면 용수료 및 각종 경비를 농민인 수혜자가 부담케 되어 있다. 그리고 비교적 관리가 쉬운 간선 이상의 시설만 공사에서 관리하고 논배미를 직접 통과하는 지선·지거는 농민이 관리케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농민의 부담 가중은 물론 인력부족으로 관리를 겪는 농민들에게 더욱 큰 짐을 지우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전국농민의 증언명과 한농연과 관련해서

농조 자체 개혁안은 농조의 축을 이루고 있는 조합장과 노동조합이 "조합원인 농민을 위해서" 조합비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동시에 조합장과 노동조합이 제기독권을 버리는등 그간의 주변비판을 경허히 수렴한 개혁안인면서 정부가 지향하는 국가재정부담과 농민영농 편의증진 및 농민부담경감이라는 개혁의 目標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개혁안이기 때문에 재이단체인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저지를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 ▶ 그 이유로서, 정부안은 당초에 조합비(수세)도 폐지하고, 국가재정 부담도 줄일수 있고, 영농 서비스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다고 했으니
- ▶ 현재 정부의 농업기반공사법안을 검토해보면 당초 정부주장과는 달리 조합비도 명칭만 바뀌서 농업용수료로 받고, 국가재정부담 또한 늘어날 뿐만 아니라 농민의 영농편의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따라서 정부의 개혁안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개혁임이 확인되어졌음은 물론, 실제로 농민에게 영농서비스 면이나 부담 경감면에서 전혀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 ▶ 전농과 한농연 측에서는 농민조합원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어느안이 옳은 것인지 또 어느기관을 지원해야 할 것인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함.

그러면, 농지개량조합 자체 개혁 세부내용은?

그간 정부 또는 농민단체 일각에서는 총론적인 농조 개혁안에 대해 원칙은 찬성하면서도 세부안이 나올수 있느냐에 의구심을 가진바 있으나, 지난 9.10 일자 세부 실천안 및 입법안까지 만장일치로 확정하여 대외에 공표 하였고 이제는 정부안과 농조자체 개혁안에 대해 公論을 제대로 거쳐야 할 시점에 왔음을 일리면서

특히, 농조자체 개혁안을 지지하는 전국 농지개량조합 100만 농민 조합원회도 결성되었음을 대외에 천명한다.

<세부 실천안 요약 : 105개 → 37개로>

도 별	농 조 수	개 혁 안	도 별	농 조 수	개 혁 안
서울·경기	15	5	전 북	8	5
강 원	7	3	전 남	18	5
충 북	9	4	경 북	17	5
충 남	14	5	경 남·제주	17	5

2 향후계획

<그간의 경과>

<성명서>

- '98. 7. 8 3지통합 결사반대 성명서(동아일보)
- '98. 8. 3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농수축산)
- '98. 8. 7 3지통합 철회 성명서(동아일보)
- '98. 8.27 대통령께 건의드립니다.(동아일보)

<각 도별 농민조합원회 결성 및 설명회>

- | | |
|--------------------------|------------------------|
| ○ '98. 8.27 충남 공주 550명 | ○ '98. 8.29 충북 청주 440명 |
| ○ '98. 9. 1 전북 익산 1,200명 | ○ '98. 9. 2 경북 대구 500명 |
| ○ '98. 9. 2 경남 창원 850명 | ○ '98. 9. 3 강원 춘천 530명 |
| ○ '98. 9. 4 전남 영암 2,300명 | |

★ 전국 100만 농민 조합원회 결성완료

우리 100만 농민조합원회와 전 임직원은 결코 개혁을 거부하거나, 집단이기에 얽매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번 개혁안도 스스로 줄이고 감축하여 국난 극복에 나서며 그 이익을 농민 조합원에게 되돌려 주기위한 우리의 의지 표명입니다.

농림부 장관은 우리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여론을 오도하며 "반동적"

이란 표현도 서슴없이 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래도 참고 견디며 장관면담 신청 등으로 풀어 불려고 했으나

일체의 면담도 거부하면서 제도권 농민단체의 충고를 듣는 것조차 회피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시간 이후 벌어지는 사안에 대한 모든 책임은 농림부장관에게 있음을 밝히면서 전국 100만 농민조합원회와 연대하여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숙히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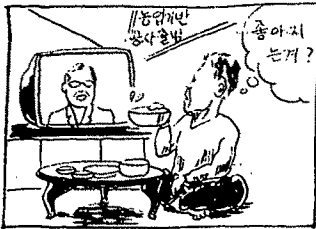
거꾸로 가는 농정개혁 농민들은 분노한다

농민권의 빼앗는 3자
(농조·농조연·농진) 통합 결사반대

農村日記-2000

농업인의 사유재산 국유화가 왜말이나?
민주농정 파괴하는 농림부는 각성하라!

2000년 1월 X일,
농지개량조합이 해체되고 농업기반공사가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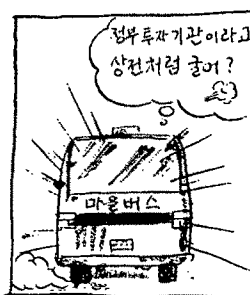
2000년 X월 X일,
새로 생긴 공사의 우리지역 담당이 현상 점검차 왔다.



2000년 X월 X일,
작년에 생긴 용수로 문제를 해결해야 쓰것는다...



농조가 있을 때 그랬제...



2000년 X월 X일,
지난번 용수로 문제를 확연히 하고 전화했더니...



너무 작은 사업이라 시행될 지 알릴지도 모르지만, 설사 되더라도 출장소, 시나, 본사의 결정 단계를 거치하면 사업정진만 하는데도 1년 이상 걸리겠는데로?



이런 제기할!



이런 귀찮음들!
어제 농민을 위함 기관이야, 돈 벌 어머하는 곳이야?



2000년 X월 XX일,
이게 뭐야? '농민용수로' 남부라지



우리도 수천명의 직원이(수천억 원인데다)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세나라까 봐는 소외 시방~!



게다가...
통합된 농어촌진흥공사의 부채 2조 7천억원이 해결되려면 요금이 조율수도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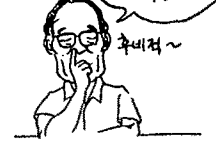
정부에서 하는 일이 그렇지! ... 피르족...
살 죽여라!



2000년 X월 X일,
허~참! 여자가 없어서... 용수로의 수초를 제거해 달랬더니,



이 각자들 말하는 품 좀 보소!
그런 허참은 일들은 개별 농가에서 직접 하소!



에라미 상...
모든게 민영화 될 때, 유독 농민만 살아남을 때 알아줬어야 하는 건데!



“농민 여러분!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농조 자체 구조조정만이 살 길입니다!
농민들의 생존권은 농민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농지개량조합 구조조정방안

☞ 정부 구조조정 문제점

농업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를 통합
"농업기반공사"(정부투자기관)로 개편

- ▶ 수리시설을 정부투자기관인 "공기업"이 관리할 경우 농업인의 애착심과 참여의식 저하로 유지 관리비용 증가
- ▶ 농업인으로부터 농업용수 사용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므로 농업인 부담 증가
- ▶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저하 등 다수민권 발생 예상
- ▶ 농업용수 부족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한 용수분쟁 다발예상
- ▶ 정부의 공기업 → 민영화 하는 개혁방향에 정면배치
- ▶ 농민부담으로 조성한 농민재산을 국유화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위배
- ▶ 3기관 통합으로 많은 인력을 감축, 실업자를 양산하고도 유지관리비용 등 정부부담은 증가될 전망

☞ 농조 자체 구조조정안(대책방안)

농조의 연합회를 통합 계통조직으로 개편
- 순수한 민간자율조직으로 운영 -

- ▶ 조합규모를 수계별·지역별로 광역화 조정 - 전국 106개 농조 → 37개 농조로 감축(65%)
- ▶ 조합정의 신분을 무보수명예직으로 전환 경비절감 - 전무 직제를 활용,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 ▶ 인력의 합리적 조정으로 감축 운영 (20%) - 농조 인력: 4,024명 → 3,256(△768)
- 농조연 인력: 672명 → 536(△136)
- ▶ 농업인 부담 획기적 경감조치 및 서비스 향상 - 조합비 2004년까지 원전폐지(98기준: 315억원)
- 조합비는 폐지후 현행 수혜면적은 지속적으로 관리
- ▶ 지립대책 강구로 조합운영비 국고 의존 탈피 - 지립육성금과 활성화 운영 → 2004년 재정지립 달성

정부안과, 농지개량조합안의 비교

구분	정 부 안	농 지 개 량 조 합 안
기 본 구 상	○ 농조·농조연 및 농진공 해체후 2000년 1월 "농업기반공사" 설립 ○ 농민자치조직과 정부투자기관을 통합	○ 농조와 농조연을 통합하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설립 ○ 같은 농민조직간에 통합(106개 → 37개 조합으로 통합)
조 합 비 (수 세)	○ 시설관리 비용으로 농업용수로 징수: 315억원 (98기준)	○ 조합비 정진적 감경=2004년 원전폐지
수 로 관 리	○ 간선→시설관리·지선·지거 → 농민관리 ※ 1개 출농계당 3,400m 관리	○ 간선, 지선, 지거 → 농조관리 ※ 고령화·부녀화된 농촌실정 반영
국 고 보 조 금 (운 영 경 비)	○ 운영비 보조는 물론, 시설유지관리비 국고보조 준처: 917억원(98기준) ○ 농조직원보수를 농진공 수준으로 상향조정(따른 추가소요: 154억원)	○ 2003년말까지 원전지립 - 2004년부터 국고보조 종료 ○ 현재의 농조직원 보수수준으로 운영
조 합 원 협 여	○ 조합원의 공식운영 참여권 박탈	○ 조합원 선출(선거권, 피선거권) ○ 이사회, 대의원회 등 조합운영 참여
민 선 조 합 장	○ 공식발족과 함께 전국 106개 민선 조합장 임기 일괄중지 - 과잉입법 금지원칙 위배	○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
재 정 지 립	○ 농업용수로 용역수수료, 정부출자금 및 보조금 - 시설유지관리분야 재정지립 방안 없음	○ 불용재산매각 등의 재원으로 국고 설치·운영 (1조원 조성) → 재정지립달성
통 합 에 따 른 재산권 침해여부	○ 농민재산을 국유화할 경우 재산권 침해로 위한 소지 발생	○ 농민재산을 현 상태로 보존

농민을 기만하는 정부의 통합공사 추진계획

농민자율조직인 조합대신 공사가 수리시설 및 물관리를 하게되면 반드시 용수사용료는 징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농업용수 공급비용(현 조합비)을 폐지하겠다고 하고 단서로 불가피한 경우 농업인으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놓아 언제든지 명분을 끌어 사용료를 징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진정으로 정부가 용수사용료를 폐지할 의지가 있다면 새로운 공사법안 제20조에 징수근거 조항을 삭제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용수사용료를 폐지하게 되면 수리안전점검 농지개량계 구역의 편입요구로 새공사의 운영비가 막대하게 증가되어 경영부실을 초래하고 편입을 거부하면 농민저항에 직면하게 되며 지지체와 갈등을 야기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리안전단 899천ha중 농지개량조합이 관리하는 구역(향후 새공사가 관리)의 외의 논은 시·군의 책임하에 농민자율로 경비를 부담하여 농지개량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 공사가 국가차원에서 수리담을 관리할 경우 어느 구역은 물값도 받지 않고 공사가 관리하고 어느 구역은 농민이 관리하라고 방치하게 되는 꼴이 되어 농지개량계 구역의 공사관리 구역의 편입요구가 거세지고 이를 수용할 경우 최소 1000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편입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농민들이 차별을 문제삼을 수밖에 없고 농지개량계를 책임지고 있는 시·군과의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농조가 조합비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농조조합원은 수십년동안 조합의 시설물 설치를 위해 많은 조합비를 부담해왔습니다. 오늘날 그 시설중 용도폐기된 일부토지를 매각할 경우 조합전체가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즉, 조합원들이 부담하여 만든 재산을 활용하여 조합비용 받지 않고도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을 만큼 자립된다면 당연히 조합비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고 조합원들이 그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합구역 밖의 농지개량계는 조합의 재산형성과는 무관하므로 그 혜택을 누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이것은 형평성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조합으로 있을 때와

김성훈장관과 농림부는 아직도 농조개혁방안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실패가 뻔한 통합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거짓과 갖가지 술책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조가 정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혁신적이고, 합리적인 농조자체개혁안을 내놓자 '불가능하다', '개혁을 2~3년 늦추려는 의도다'라는 등의 말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안이 농조자체안보다 우월성에서 현격히 뒤지게 되자 김성훈장관과 농림부는 통합공사로서는 이루지 못할 거짓약속을 남발하여 농민과 여론을 속이는 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100만 농민조합원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개혁을 가로막는 세력'은 결코 우리가 아닌 김성훈장관과 농림부라는 것을 만천하에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합니다.

조합구역 밖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인 것입니다.

농업인 참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 자문기구로 운영하겠다고 했으나 조합원 참여가 아닌 들러리에 불과할 것이 뻔합니다.

현재 농조는 조합원이 직접 조합운영에 참여하여 조합장을 선출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하며, 예·결산을 심의하는 등 실질적인 조합의 주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중앙 단위조직으로서 일선 사무소장은 공사의 직원에 불과하여 사장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 농민의 의견을 받아볼 수 없

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그럴듯하게 "운영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글자 그대로 자문기구로 한정하여 놓고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공사화할 경우 수십년간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내서 마련한 조합재산(실질적인 조합원재산)을 국유화하여 위험소지가 있고 재산권 행사에 조합원이 관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합재산을 국유화하더라도 조합원의 권리침해가 없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종전과 같은 수리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 했는데 이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살고있는 집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든 그 집에서 살아갈 수 있게만 해주면 누구의 소유이든 상관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듯 전국 농조 100만 농민조합원회는 유명단체가 아닙니다.

전국 농조농민조합원회는 1998. 8. 27부터 9. 4 까지 각 도별로 결성대회한 거쳐 공식적으로 출범한 농민의 자주, 자율조직입니다. 만약에 전국 농조농민조합원회가 유명단체라면 이외같은 과정을 거쳐 조직된 여러 다른 농민단체도 같은 성격이 될 것입니다.

농지개량조합 자체개혁방안 수용 촉구 및 투쟁 관련 속보

2

- 전국 농조 100만 농민조합원회
- 전국 농조 구조조정 추진위원회



투쟁결의대회 성공리에 개최

우중(雨中) 속의 통합반대 함성 100만의 횃불로 타올라



헌법질서를 어지럽히고, 농민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농림부의 반개혁적 3자통합 방안을 규탄하고, 자체개혁방안 관철을 위한 농지개량조합자체개혁방안 수용촉구 및 투쟁결의대회가 농민조합원 및 농조·농연 직원 등 2만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 30일 과천청사 앞 잔디광장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이날 집회는 한국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련, 전국연합노련 등 노동계의 각별한 관심속에 진행됐으며, 특히 한국노총 박인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조의 합리적 개혁방안이 실현되는 대화가 되길 바란다"며, "농민자치권 수호를 위한 노동조합과 농민의 투쟁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며 대농림부 투쟁의 새로운 전기를 맞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또한 이날 전국100만농민조합원회 김정권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김성훈 장관이 추진하는 농조말살 정책은 농민조합원의 권리와 재산을 빼앗아 3천여명의 농진공 직원을 먹여 살리자는" 의도라고 규정하고, "100만 조합원회는 이 음모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기필코 막아내고야 말 것"이라며, "이날 위해 100만 조합원회의 의지가 관철될 때까지 10만명 이상의 대규모 집회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농림부와 김성훈 장관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면 대결을 선포하였다. 농조노조 김용 위원장도 농림부와 장관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농민조합원과 연계한 노조원들의 단결투쟁으로 자체구조조정 방안을 관철시키는 것만이 농민조합원과 농업을 위한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노동계와 언론 농림부의 비상한 관심속에 진행된 이날 집회는 참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조합원들의 열의와 울분이 열띤 함성으로 표출되어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으며, 참석자들 모두가 굶은 횃불기 속에서 이타 없이 끝까지 함께 하는 단결력을 과시하여 주변으로부터 대단히 성공적인 집회라는 평을 받기도 했다. 특히 그간 조직의 단결력이 현저히 떨어지던 평을 받던 농조가 이 대규모 집회를 계기로 완벽하게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었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전국 농조 100만 농민조합원과 전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98. 9. 30 과천에서 개최한 「전국 농지개량조합 자체개혁방안 수용촉구 및 투쟁결의대회」는 우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참여속에 농림부의 공권력을 동원한 집회방해도 극복하고 성공리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선, 지면으로나마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상가상으로 제9호태풍 "예니"의 상륙으로 수확기를 맞은 농작물의 피해가 막심하게 되어, 조합원 여러분들의 낙심에 대하여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안타깝습니다. 우리 5천여 전 임직원은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과천에 모여 우리 농민들의 권익을 회복하고자 부르짖었던 여러분의 함성소리는 깨우침의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오리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만들어진 농조자체 개혁방안은 현재 우리나라 각계에서 찬성하고 박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농림부장관만이 이를 매도하며 거꾸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농림부장관은 독단을 버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장관이 주장하는 농조·농조연·농진공 3개기관의 공사화로의 통합은, 현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개혁의 방향과도 어느 곳 하나 일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코 농민을 위한 대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0만 농민조합원회는 농조·농조연 전 임직원과 연대하여 여러분의 뜻을 관철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일, 이번에도 우리의 뜻이 무시된다면 또 다른 투쟁의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조합원과 임직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빌면서, 인사말씀에 대신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투쟁"

1998. 10.

전국 농지개량조합 100만농민조합원회
전국 농조구조조정추진위원회 배상

과천집회 이모저모



○ 이번 집회는 우천 상황과 농림부가 집회인원이 4~5천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하며,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방해와 통제활동을 편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어서 농림부에 대한 당혹감을 인계준 집회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집회 막바지에 도착한 경남지역 인원을 포함시키지 않고도 언론에서는 1만5천명이라고 추산하였고, 현장에서 집계하던 한 경찰은 1만9천은 넘을 것이라는 시견을 제시하기도 하는 등 집회인원은 최소 1만5천 이상이라는 것이 주위의 평이었다. 이날 예상치 못했던 대규모 인원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농림부는 9천여명의 집회로 장관에게 축소 보고하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웃지 못할 촌극을 연출하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 예상을 뛰어 넘은 많은 비로 집회가 30여분 정도 지연되고, 고속도로 사고 등으로 인한 교통정체로 경남, 경북, 호남 등지에서 출발한 차량들이 늦어져 집회장 분위기를 불안케 했으나, 오후 2시가 되자 차량들이 빙속을 뚫고 속속히 도착하여 불안감을 씻어 주었다. 특히 새벽녘에 출발한 경남지역 집회 참가자 차에서 고속도로 교통사고 소식을 전해 와 크게 걱정했으나 참가자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 밝혀졌으며, 교통사정으로 집회가 끝날 무렵에 차량행렬이 집회장에 도착하여 집회자들의 환호를 받기도 하였다.

○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집회장 주위에 도열해 있던 수천명의 전경들을 보고 애처로운 눈길로 보내는 가운데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하는 농민들이 있어 주위의 시선을 끌기도 했다. 그러기하면 한 경찰관은 집회하는 이유가 뭐냐고 집회 참가자에게 물어 그 세세한 대답을 들은 연후에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장관이 그럴수가 있느냐'며,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다'고 용기돋움 북돋아 주기도 하는 등 끝나는 시간까지 집회측과 경찰간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지속되기도 했다.

○ 특히 주최측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집회를 계기로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련 등 노동계에서도 농조측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고, 적극 지원을 약속하여 앞으로의 투쟁은 현재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며, 언론도 이를 계속해서 외면치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농림부가 추진하는 3기관 통합(농업기반공사 발족안)에 찬성하는 것은 농민조합원 여러분의 참여권, 수리권, 재산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통합찬성 서명을 절대하지 맙시다.



농림부장관과 모순(矛盾)

'중복기능이 심각한 3기관을 통합해서 농업기반공사를 만들면 모든 것이 좋다. 농조직원들도 월급이 올라 좋아한다. 무엇보다도 농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된다는 장점이 있다.'

농림부장관이 정책집단이라는 TV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말한 내용이다. 이미 농조·농조연·농진공간의 기능중복 논리는 역지논리로 밝혀졌다. 농조직원의 월급을 올려준다는 얘기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더 문제인 것은 장관이 공사가 민간보다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논리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고, 개혁과 개악을 구분 못하는 자기 모순에 빠진 모습이다. 그래도 농림부의 공무원들은 이를 지적해 주지 못한다. 명예퇴직이다. 희망퇴직이다 하는 불결 속에 강제로 내몰리기 싫기 때문이다.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따금 장관은 농정개혁과 관련하여 동학혁명을 거론하고, 반동을 말한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동학혁명과 반동은 매우 이상한 형태로 굴절되어 있다. 농조·농조연을 농진공으로 흡수통합시키는 것이 동학혁명에 비견되는 것이요, 이에 반대하는 세력은 반동이라는 것이다. 반동이라 하는 것은 역사발전과 진보에 역행하는 폭력적 세력을 규정하는 말이다. 그리고 동학혁명은 권력자의 폭압과 착취에 항거한 농민운동이다.

장관은 이것을 잊고 있다. 자신이 바로 권력자요, 자신이 설계한 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그대로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 그는 이것을 잊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 농림부 장관은 매우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그는 꼭 합리적인 농정개혁을 이룰 것이라고 많은 농업인과 농업관계자들은 적지 않은 기대를 품기도 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장관의 합리성과 추진력을 믿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시간이 갈수록 작아져 지금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한가닥 기대했던 장관의 추진력은 합리성을 잃고, 자기 모순에 빠져 오히려 농업인의 회생을 강요하며 농업인의 자조조직을 무너뜨려 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 농정의 현실이다.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불가능한 만남이 모순(矛盾)이다. '개혁'과 '구조조정'이란 두 단어가 화두가 된 오늘날, 우리나라 농정개혁을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농림부에는 그 모순이 현실 속에 존재하는 듯하다. 장관의 모순된 논리와 행동속에서 우리의 농업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태풍 '예니' 피해 누구의 책임인가?

지난 달 30일 9호 태풍 예니가 남부지방을 강타했다. 누구도 그렇게 위력적인 태풍이 될 것으로 예상치 못했다. 가옥과 시설피해는 물론이고, 농경지 침수로 인해서 지난 여름의 게릴라성 집중호우 피해도 극대화하면서 풍년농사를 눈앞에 둔 농민들에게 또 다시 압당한 시련을 안겨 주었다.

농림부와 몇몇 농민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남부지방의 농경지 침수피해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통합반대집회를 강행'한 농조 때문에 ...'라고 마치 농조를 공격할 호재나 만난 것처럼 들고 일어났다.

물론 농조직원들이 과천집회 참석차 자리를 비운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느정도 피해가 더해 졌다는 개인성도 결코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태풍피해를 모조리 농조에게 덮어씌울 수가 있는가?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여기에는 농림부도 일부 농업단체도 결코 자유스러울 수 없기 때문이다.

농조직원들이 과천에 모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농림부 장관과 일부 추종자들의 독선과 이집 때문이었다. 농조측에서는 3기관통합 문제와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그리고 농림부 방안과 농조자체 개혁방안을 진지하게 공개된 자리에서 검토하고, 논의할 것을 원했다.

그러나 그중에 무엇 하나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농조측의 주장은 모두가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요, 개혁회피의 몸짓일 뿐이라고 매도하고, 농조를 반개혁, 반동세력이라고 몰아갔다. 정부측에 의해 모든 대화창구가 차단돼 버린 농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남아 있지 않았다. 단 하나 유일한 것이 집회와 결사 뿐이었다. 9월 30일의 과천집회는 바로 그 때문이었다. 농림부 장관이 그리고 그 추종자들이 농조 측을 대화와 토론의 상대자로 받아 들였다던 과천집회는 분명 없었을 것이다.

농조는 농림부의 폭압적 처사에 쫓겨난 것이지 결코 농민들의 피해를 담보로 해서 집회를 갖은 것은 결코 아니었다.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농조직원들은 피해 농민들을 위로하며, 피해 복구에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태풍 '예니'가 엄청난 폭우를 몰고 왔는데 농림부장관이 하루전날 이라도 농민대표와의 면담에 응했다더라면 태풍피해에 대한 시시비비는 없었을 것이다.

농림부안과 농조자체개혁안의 조합비 폐지에 관한 비교

조합비 일명 "수세" 관련

- ▶ 농조자체 개혁안은
 - 정부가 농조 개혁안 수용시 년차적으로 경감해서 → 2,004년 폐지하는 인이고
- ▶ 농림부안 "농업기반공사법안"은
 - 조합비를 농업용수료로 명칭 변경하여 받는 인임
 - 공기업의 이윤추구 속성상 받을 수 밖에 없음
- ☞ 조합비 폐지 재원
 - ▶ 농조자체 개혁안은
 - 조합규모 광역화(105개→87개) 관리비 절감 재원
 - 조합장 무보수 명예직 재원
 - 직원 20% 감축 재원 등으로 충당가능
 - ▶ 농림부안은
 - 3자를 통합해서 공사화 하면 약 1,000억원의 경비절감을 가져와 조합비를 폐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 인력 감축을 전제로 하더라도 조합직원 보수의 농진공 수준화에 145억, 시군개량계 구역편입 721억, 조합비 폐지 315억, 재산권 이전에 300억원등 오히려 부족예산이 약 1,500억원에 이르고 있음
 - 또한 신설 농업기반공사에 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현재 농어촌진흥공사는 설립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공사자본금"이 약 1,200억원 밖에 안됨
 - 정부가 5조원의 공사자본금을 출자하는 것은 정부 재정형편과 현재 농진공의 예를 보면 거의 불가능하므로 조합비 즉 "농업용수료"는 폐지가 불가능하고 오히려 용수로 인상이 불가피함.
- ➔ 따라서, 농가부채등 농촌현실의 어려움과 농민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농조자체개혁안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함.

3기관 통합 "정부주장"의 잘못된 점

- 1. 기능중복으로 유사기관 통폐합차원에서 추진
- [사업시행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 업무 : 농조·농진공중복]
- 농조는 근본적으로 사업시행자 이면서 유지관리 조직임

- 농업생산기반정비의 제반사업 시행지는 농조이고, 농진공은 그중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과 간척사업의 시행자 임 (따라서 기능중복이 아님)
 - 농조는 저수지등 수원공을 10,783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농진공은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의거 농조에 이관해야 할 시설 "불과 5개소"를 '90년 이후 미이관 채 관리하고 있음
- [기술용역(기본조사, 설계, 감리)업무 : 농조연, 농진공 중복]
- 건설시장 개방에 따라 경쟁체제로 전환 시장 경제 원리에 따르고 있음
 - 다만, 100ha이상 기본조사의 경우만 농진공·농조연이 중복되어 있는데 개방하면 해결됨.
 - ⇒ 따라서, 농림부는 3기관 기능중복에 대한 검토 결과가 상기와 같이 중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간 기능조정이나 대책이 있음.
2. 농지개량조합은 약 1,000억원의 국고보조를 받으면서도 운영이 부실하다
- 농조는 수리시설과 물관리 업무가 고유기능임
 - 관리업무가 고유기능이므로 자체 수익을 내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음
 - 관리조직인 농조에 정부는 매년 일정규모의 조합비 국고보조금을 보조하도록 법률로 정해놓고 있으나
 - 매년 200~300억원 가량 모자라게 지원하여 그간 '8801후 현재까지 약 2,500억원이 부족 지원된 실정임
 - ⇒ 따라서, 농조가 국고보조를 받으면서도 부실하다는 주장은 '88, '89조합비 인하조치와 관련하여 정부가 정상지원할 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사안이고
 - ⇒ 특히, 지금이라도 그간 부족 지원된 약 2,500억원을 농조에 지원하면 정부가 비판하는 보수 및 퇴직금 적립금 문제는 해결가능한 사안임.
3. 농지개량조합은 운영이 방만하다
- 농조직원의 1인당 업무량은 시설이 현대화 된 농업선진국보다 높음

(단위 : h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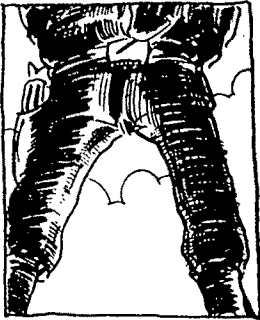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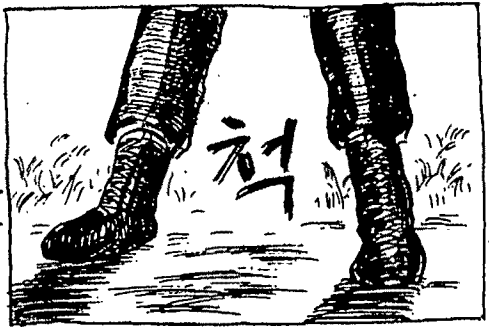
	한 국	대 만	일 본
관 리 면 적	135ha	118	126
현 대 화 율	20%	90	100

- '80년 이후 인원을 지속적으로 감축(24.5%)
- 직원의 보수는 공무원의 90%, 공사직원의 70%로 근무여건이 열악함

선무당 사람잡네!



저벅
* 저벅 저벅 *
* 저벅 저벅 *
* 저벅 저벅 저벅 *
* 저벅 저벅 저벅 *
* 저벅 저벅 저벅 *
* 저벅 저벅 저벅 *



'농조'같은 농민자치단체는 해산하여
수리시설물은 국가의 재산으로
환수한다!



질문 있습니다. 말하시오!



아니, 무슨 전쟁이라도
열어났습니까?



전쟁이라 ~
그렇지! 전쟁
이지. 구조조정
전쟁!



잘들 들으시오. IMF시대를 맞아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몰
려있는 이때, 이 높은 오직 국가의 일념으로 불철주야 고된
해운 바, 귀와 같은 결론에 도달했소! (저 작동하는 눈빛)



우유밥 먹고 원소리
마시고, 아니 지금이
무슨 독재국가로, 공산
주의 국가요? 농민
재산의 국유화라!



국민의 정부를 모독하지 마시오!
농조해체 및 수리시설물의 국
유화는 이시대의 거스를
수없는 대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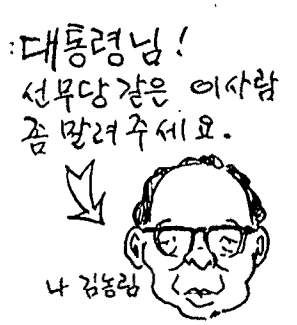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요즘 구조조정, 구조조정 하지만
정치가, 대기업, 고위관료 등은
외심줄처럼 건드리기가
얼마나 어렵소?
그래서 가장 만만한
노동자, 그리고 농민
....



과우간 공약 3강! 첫째, 농조
해체. 조합원 참여권
둘째, 시설물 국유화.
수세는 계속 징수
이삼 000



감장관! 언제 농민의
재산까지 뺏어가면서
구조조정 하겠어?



대통령님!
선무당같은 이 사람
좀 말려주세요.

나 김동관

농지개량조합 자체개혁방안 수용 촉구 및 투쟁 관련 속보

3

전국 농조 100만 농민조합원회
전국 농조 구조조정 추진위원회

- 125 -

한국노총; 농조·농민조합원의 통합반대 투쟁 적극 지원

박인상 위원장, 3기관 통합에 반대해 줄것을 요구

조선 한나라당 명예총재가 3일 한국노총을 전격 방문, 박인상 위원장과 국회 대표 연설에 관한 내용을 논의했다.

한나라당의 요청에 의해 이례적으로 이루어진 이날 면담에서 박인상 위원장은 정부의 개혁정책과 실업대책 등을 강도높게 지적하였다.

박위원장은 특히 "정부가 농어촌진흥공사, 농조, 농조연합회를 무리하게 통합하려는 의도는 재원부족을 노동자나 농민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투자 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가 농민들의 자율조직인 농조연합과 농조를 사실상 흡수통합하려는 것은 공공부문의 민영화에도 맞지않을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을 침해할 위험의 소지가 있다"며 적극 반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농조노조간부·농민조합원 고발사건 법무부와 검찰에 불기소 요청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은 지난 9월 30일에 있었던 과천집회와 관련하여 농림부가 농조 노조간부를 고발한 것은 부당한 것이므로 불기소 처분토록 해달라고 정시경로를 통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앞으로 협조를 요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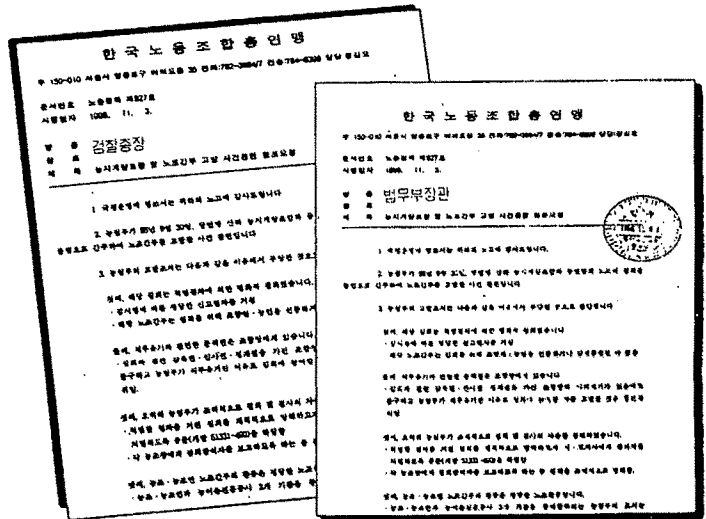
농림부의 고발조치가 부당함을 한국노총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해당 집회는 적법절차에 의한 평화적 집회였습니다.

- 집시법에 따른 정당한 신고절차를 거침
- 해당 노조간부는 집회를 위해 조합원·농민을 선동하거나 강제동원한 바 없음

둘째, 직무유기와 관련한 문책권은 조합장에게 있습니다.

• 집회와 관련 감독권·인사권·징계권을 가진 조합장의 이의제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직무유기란 이유로 집회에 참여한 자를 고발한 것은 월권행위임



셋째, 오히려 농림부가 조직적으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 적법한 절차를 거친 집회를 계획적으로 방해하고자 시·도지사에게 관계자를 처벌하도록 공문(개발 51331-490)을 하달함
 - 각 농조장에게 집회참석자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집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함
- 넷째, 농조·농조연 노조간부의 활동은 정당한 노조활동입니다.
- 농조·농조연과 농어촌진흥공사 3개 기관을 통폐합하려는 농림부의 조치는
 - i)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위배되고,
 - ii) 정부가 농민조직의 사유재산을 임의로 통합하여 국영화하려는 조치는 기본권 침해라는 위험의 소지가 지적되고 있는 바, 해당 농민과 조합원들의 집회나 이의제기는 정당한 것임.

농민과 농업을 위한 총정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다

-진산농조 이근섭동지, 부당한 압력에 시달리다 끝내 목숨 버려-

지난 11월 2일, 태풍 '애니' 피해확산 책임공방과 관련한 일부 농민단체와 공권력의 부당한 압력에 시달려 오던 진산농조 이근섭 동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은 3기관 통폐합과 관련한 논란으로 대립과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발생된 것이어서 성실한 농조직원이 부당한 구조조정 여파에 희생된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진산농조 이근섭동지는 9월 30일 과천집회 당시 태풍에 대비하여 집회참석까지 포기하면서 배수갑문 관리에 임했다고 한다.

그러나 총 강우량 340mm의 엄청난 폭우와 손 부상, 거리상의 어려움으로 그가 담당하던 3곳의 배수갑문중 1곳(대곡 배수갑문)은 도저히 관리할 수 없었음에도 최선을 다하였으나 하천 수위의 급상승으로 배수갑문의 완전한 폐연!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농부신문

**죽은 후에 만송이 꽃이면 뭐합니까?
살아 있을 때 들을 던지지 말았어야 합니다.**

천재지변인 태풍 때문에 생긴 농경지 침수, 그것도 어떻게든 막아 보려고 현장에서 손을 다쳐가며 노력한 한 농조직원에게 무심하고 잔인한 사람들이 들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석류이라는 짧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나라를 말라 먹은 사람, 국민의 형사를 먹여준 사람들이 대명천지에서 명평거리며 사는 이 땅에서 말입니다.

故 이근섭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이근섭 동지 사고의 전말

사고경위

- 상기 사망직업은 진산농조 직원 기계5급 최성영과 '88년 11월 2일 오전 08시부터 10분간 통화하여 진주 본소 직원회의 참석과 관련 대곡지소에 1명이 남는 것으로 하고 이근섭이 남아 있기로 함.
- 공공근로자 17조 조장 김수환이 대곡지소에 88년 11월 2일 오전 08시 40분에 도착하여 보니 대곡지소 정문과 뒷문이 열려있고 창문은 닫혀있어 화장실에 간 것으로 판단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음
- 공공근로자 17조원인 전제은이 동일 오전 08시 55분에 도착하여 둘러보더니 대곡지소 사무실 뒤 덕오 배수장안에 이상한 물건이 있다고 17조 조장 김수환에게 얘기를 하여
- 확인하여 보니 배수장내 2번 전동기에 줄을 매어 크레인에 걸고 1번 전동기 위에서 발 디딤통을 세워 놓고 목을 맨 것을 봄

사유

- 상기 사망직업은 노동조합원이었으나 태풍 "에니"의 갑작스런 상륙으로 '88. 9. 30 농조자체개혁방안 수용촉구 및 투쟁결의대회에 참석을 포기하면서
- 직원 1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배수갑문 3개소중 2개소는 잘 관리하였으나, 관리중 손가락 부상과 시간 거리상으로 혼자서 배수문 3개소를 도저히 관리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곡 배수문을 폐문코자 하였으나
- 총 강우량 340mm의 폭우로 남강 직할천 외수위 급상승으로 원천 폐문이 불가한 실정에서 동 지구에 피해를 입게되자 지역 농민, 농민단체, 관계행정기관, 경찰서등 기관으로부터 배수문 관리자 집회 참석으로 참가가 가중 되었다는 억지주장과 의도적인 압력을 받아 오던중
- 평소 가까운 친구나 직장동료들에게 "본인 소속조합과 동료"에게 많은 걱정과 누를 끼쳐 면목이 없다며 자주 괴로워했고, 죽고 싶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정신적 압박에 못이겨 자살한 것으로 추정됨

3기관 통합합문제 국정감사에서 집중거론

- 농민중심의 개혁 필요성 국회에서 공식제기, 농조 자체 개혁방안 공론화 계기 될것 -

지난 11월 6일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대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진)의 국정감사는 농림부의 3개기관 통합안에 대해 앞으로 예상되는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의원들이 좀 더 많은 내용을 알게되는 계기가 되었다.

3개기관 통합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내용중 지민련 **이완구의원**(청양·홍성)은 지난 10월 23일 농림부 국감때와 마찬가지로 3자통합을 결정하기에 앞서 공론화가 되지 못한 점을 다시 제기하면서 농민중심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한나라당 윤한도의원**(의령·함안)은 연합회장이 업무보고 내용중 현안사항인 '3개기관 통합문제와 관련한 정부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의원님들이 잘 검토하시어 결정해 주시기 바란다'며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자 소신껏 이야기하라는 격려성 질책도 있었다. **김기춘의원**(거제)은 통폐합으로 인한 선출직 조합장의 중도퇴진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물었고, **이상배의원**(상주)은 3개기관 통합에 앞서 농조·농조연의 관계정립 필요성을 위한 대책을 묻는 등 비교적 상세한 문제파악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그밖에도 「농조구조조정위원회」에서 내놓은 자체개혁방안에 대하여

이근섭 동지의 영전앞에
삼가 애도의 뜻을 포함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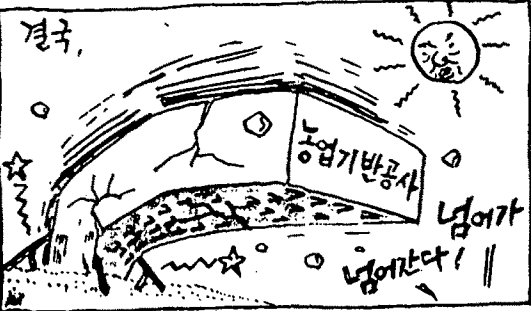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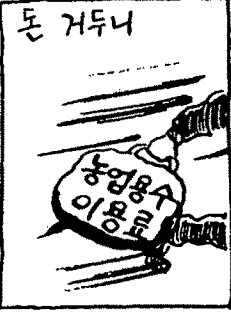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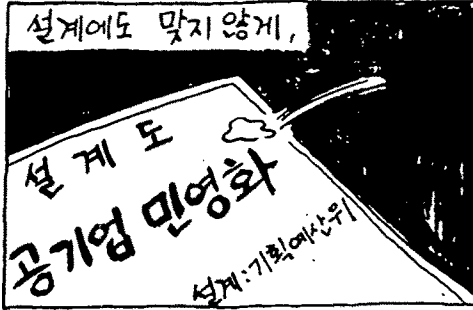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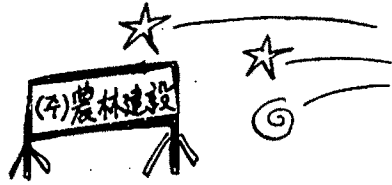
이근섭 동지께 드림

당신은 농업을 꿈으로 받들고
농민을 벗삼아
이 한 세상
참으로 열심히 사셨습니다.
당신의 **한(恨)**과 당신의 **소망(夢)**을
녹슨 철 책상, 배수문의 작은 **쇠조각**
당신이 남기고 간
모든 것들 **이제는 잊으십시오.**
여기 남은 우리들이 **보듬고 기겠습니다.**
멀고 외로운 길일지라도
남은 **한(恨)**은 접어두고 **편안히 쉬시길**
이 다음 생애에는 부디 억압과 침묵없는
해방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당신의 영전 앞에서 기원합니다.

105개 농조를 37개로 광역화하여 축소하는 내용과 재정자립금고 1조원 조성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여러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등 농조와 연합회 현안사항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한편, **유근화 회장**은 3개기관 통합에 대한 농조의 입장에 대한 답변을 통해 3개기관의 통합은 구조조정차원을 떠나서 우리나라 쌀자급달성에 매우 중요한 시안이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는 물론, 관계 전문가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공론화** 되어야 하며, 신설조직의 주 기능은 개발업무보다는 유지관리 업무이므로 3개기관의 통합은 **민간조직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강조하여 **농조중심의 통합**을 주장하였다. 또한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정부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인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되, 정부에서 3개기관 통합을 강행할 경우, **농조·농조연·9십3만2천 조합원의 재산권과 결사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판단**되므로 '94년 이후 국정감사시마다 지적된 농조와 농조연의 계통조직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전국농구조조정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농조개혁방안이 관철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심한 '공사'판 (公社)



농조 · 농조연 · 농진공사 3개 기관을 공사로 통합하는 것은 농업인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은 재산권 · 자율권 · 수리권을 지켜야 합니다.

3개기관을 통합하여 거대공사로 만든다면 우리 직원들은 좋아합니다.

힘도 없고, 권한도 없고, 봉급도 낮은 농조와 농조연을 없애고, 정부자본금 5조원의 거대 국영기업(공사)으로 만든다면, 봉급받는 우리 직원들은 더욱 좋아합니다. 김성훈 장관은 TV에 출연해서 "월급도 오르고 하니까 농조직원들도 다 좋아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공사로 만드는 것을 왜 반대해야 할까요?

첫째, 민주국가 시민인 농업인들의 자율권 · 자치권이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농조는 조합원들이 총회나 대의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장도 뽑고, 예산도 승인하며, 사업도 감시하게 되어있었습니다만, 공사가 되면 이 모든 것이 없어지고 정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외국에서는 조합형태를 육성발전시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농업인들의 금전부담과 노력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조합비(수세)는 명칭이 "농업용수이용료"로 바뀌어 전기료 · 수도료처럼 계속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농조가 관리하고 있는 수로는 농업인들이 흉농계별로 부역동원에 나가 직접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조합원들의 공동재산을 정부가 빼앗아 가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상대대로 비싼 수세를 물어 만들어진 수리시설 같은 막대한 사유재산을 일괄적으로 국유화하여 공사의 실립설비에 쓰겠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허용될수 없는 큰일날 일입니다.

넷째, 통합공사가 되면 국민의 혈세인 정부예산이 더 들어야하기 때문입니다. 공사로 만들면 1,500억원 이상의 경비절감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직원 봉급의 공사수준 인상, 관리구역확대, 재산권 이전 등으로 오히려 현재보다 1천억원 이상이 더 들어야 하고, 농조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는 공사가 되어도 존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정부가 내세우는 개혁방향과도 배치되는 거꾸로 가는 개혁이기 때문입니다.

공기업 민영화 · 고비용 · 저효율 구조타파, 정부업무 민간이양 등의 정부개혁방향과는 다르게 민영화 되어야 할 공기업인 농진공사만은 유독히 민간조직을 흡수시켜 더욱 큰 공기업으로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를 일입니다.

농림부와 농진공사는 왜 3개 기관을 강제로 통합하려 할까요?

정부기업인 농진공사(농어촌진흥공사)는 그동안 정부가 농업에 투자하는 예산중

막대한 부분을 끌어다가, 대규모 간척사업 · 농지규모화사업 · 문화마을조성사업 · 유리온실사업 등등 문어발식 사업확대와 몸집 불리기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적한 대로 부채가 많으며, 많은 사업이 부작용 발생 · 성과부진을 지적 받고 있고, 특히 IMF를 맞아 사업축소 · 예산축소 · 기금고갈 등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활로를 찾기 위해 모든 영향력을 동원하여,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농조를 사실상 흡수 하려하는 것이고, 농진공사 직원들이 사력을 다하여 이 일에 매달리는 것이 그 사실을 입증합니다.

농조 운영이 어려워진 것은 전적으로 정부책임입니다.

수세폐지운동 이후, 정부는 농업인을 대신하여 10a(300평)당 버 21kg의 조합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법까지 고쳤으나, 정부는 이를 지키지 않고 11년 동안 약 2,500여억원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농림부에서 선전하는 것처럼 농조는 내부문제로 어려워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농조는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매년 기구와 인력을 줄여왔습니다.

농업인을 위한 개혁은 농조 자체개혁안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수세는 완전히 폐지됩니다.

우리 농조 · 농조연 전 임직원은 스스로의 고충분담을 전제로 민주적 합의에 따라 자체 개혁안을 만들었고, 100만 농민 조합원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 개혁안은 현재 우리나라 각계에서 호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전국 105개 농조를 37개의 광역조합으로 만들고, 임직원수도 20%추가 감축하며, 농조와 농조연을 통합 중앙기구를 만들어 기능일원화와 행정체계 일원화를 실현합니다.
- 조합장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합니다.
- 이렇게 하여 절감된 경비로 수세는 완전히 폐지합니다.

농림부장관은 공권력을 동원하여 100만 농민조합원회의 농조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장관은 처음부터 우리의 의견은 들으려 하지 않았고, 대표들의 수차례 면담요청도 거절하며, "반동적"이리느니, "사법처리" 운운하며, 농민을 무시하고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98. 9. 30 관천에서 개최한 합법적인 조합원집회를 중앙부처, 시 · 도 군 읍 · 면 사무소, 경찰, 정보기관, 농진공사 등을 총동원하여 갖은 협박과 압력으로 막으려 했고, 일부 농민단체들까지 기세하여 농조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차마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한심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각급 조직 대표들은 무고하게 줄줄이 사법당국에 고소 · 고발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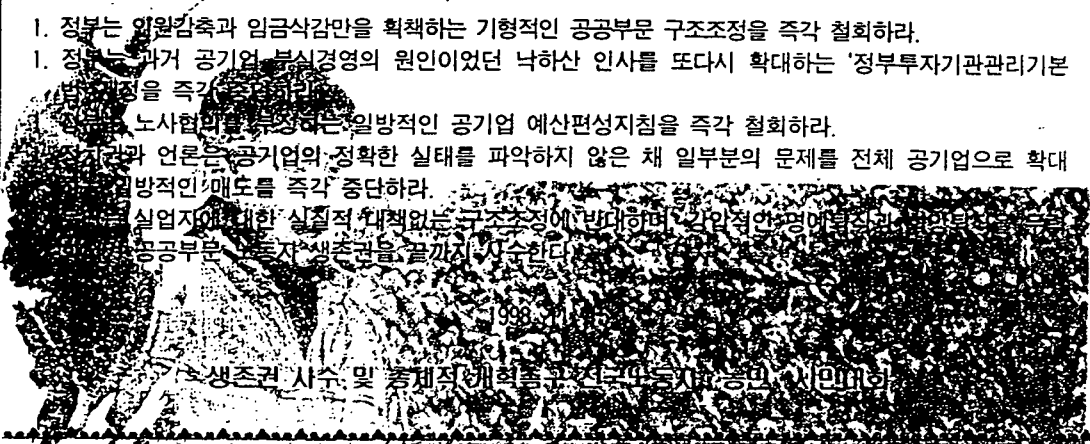
조합원 여러분! 힘있는 우리 농업인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설움에서 살아만 할까?

II 공공부문 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문

IMF 경제위기를 맞아 우리 공공부문노동자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비생산적인 정치권과 전근대적인 재벌에 대한 총체적 개혁을 외면한 채 공공 부문에 대한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만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노사협의 없는 일방적 임금삭감과 명예퇴직제도 개악 그리고 복리후생철폐 등 정부 스스로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자율적 노사관계를 훼손하고 있다.

이에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분쇄하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전 조직 역량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임원감축과 임금삭감을 획책하는 기형적인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즉각 철회하라.
1. 정부는 과거 공기업 부실경영의 원인이었던 낙하산 인사를 또다시 확대하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노사협의를 부정하는 일방적인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1. 정치권과 언론은 공기업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않은 채 일부분의 문제를 전체 공기업으로 확대 일방적인 매도를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실업자에 대한 실질적 대책없는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강압적인 명예퇴직과 사안특성을 구분 없이 공공부문 노동자 생존권을 끝까지 사수한다.



II 농민행랑조합 자체개혁방안 관철을 위한 결의문

우리 전국농민행랑조합 100회 농민조합원과 농민조합원들이 농민행랑조합을 결성하고, 낱알이 친밀해오는 경제위기 시대에 우리 농민행랑조합을 결성하고, 농민행랑조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농민행랑조합을 탄압하고, 농민행랑조합의 활동을 억압하고, 농민행랑조합의 활동을 억압하고 있다. 우리는 농민행랑조합을 결성하고, 농민행랑조합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농민행랑조합을 결성하고, 농민행랑조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농업을 사수하고,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자 · 농민이 연대하여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기관통합을 중단하고, 농민행랑조합의 자체개혁 방안을 즉각 수용하라.
1. 정부는 농업인의 재산권과 자치권 및 수리권을 보호하는 한편 농민 자주조직의 권익보호를 위해 애진하라.
1. 우리는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범국민적인 개혁에 적극 동참하여 자체 구조조정을 강력히 실천하자.
1. 우리는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조합원의 영농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1. 우리는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자율운영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자체개혁방안이 최선의 대안임을 각인하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노동자 · 농민이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한다.

1998. 11. 15

생존권 사수 및 총체적 개혁촉구 전국노동자 · 농민 · 시민대회

II 현업공무원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문

철도·체신·국립의료원에 종사하는 우리 현업공무원들은 노후된 시설과 열악한 근로조건하에서도 국민의 공복으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묵묵히 일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영역부문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현업공무원의 고충전담만을 강요하고 있다. 현업공무원의 정년만을 대폭 감축함으로써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켰으며, 정년단축과 정년연장제도의 폐지로 현업공무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우리 현업공무원 노동자들은 형평성있는 정년제도를 확보하여 생존권을 사수하는 한편 노동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고위직공무원과의 정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업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연장제도를 즉각 철회하라.
1. 정부는 기능직공무원 봉급의 250%에 해당하는 계급단위비 삭감방지를 즉각 철회하라.
1. 정부는 정규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무분별한 인력감축과 임시직노동자의 확충을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장시간노동을 획책하는 공휴일 단축기도와 공무원의 동계근무 연장방지를 즉각 철회하라.
1. 정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등 6급이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1. 우리는 이성과 같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생존권 사수를 위해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전개한다.

1998. 11. 15

생존권 사수 및 총체적 개혁촉구 전국노동자 · 농민 · 시민대회

II 국민건강보험법 저지를 위한 결의문

최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재정불안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 의료보험은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공평성과 효율성을 기해야 하며 가입자의 자율과 참여의 원칙을 구현하여야 한다.

이에 당연맹은 보험료 부과와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자영자의 소득과약과 정부의 재정부담 확대가 전제되지 않은 정부의 건강보험법안이 노동자에게 보험료부담을 전가하고 재정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엄중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IMF시대 이후 소득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증가와 보험료부과의 불공평성을 초래할 형식적 국민건강보험법을 반대한다.
1. 정부는 의료보험의 재정부실과 비효율적 운영을 최절하고 직장의료보험의 재정적립금을 직장가입자를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
1. 정부는 의료보험 관리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서비스 확대를 위한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1. 우리는 의료보험의 재정을 안정시키고 노동자의 의료보험 부담을 가중시키는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재정공동사업 지원을 거부한다.
1. 우리는 공평한 보험료부과를 위하여 지역자 소득피율을 80%까지 높이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20% 이상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보장하지 않는 국민건강보험법을 반대한다.

1998. 11. 15

생존권 사수 및 총체적 개혁촉구 전국노동자 · 농민 · 시민대회

II 정부 후속지침에 따른 택시월급제 즉각실시 및 택시제도 개선을 위한 촉구문

1. 정부는 공익운수사업자의 직분을 망각하고 후속지침을 거부하기 위해 집단행동에 돌입했던 사업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는 후속지침을 무산하기 위해 교섭회피, 노조탄압 등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자처하는 사업자를 즉각 처벌하라!
1. 택시사업자는 법과 정부지침을 거부하는 반국가적·반공익적 행위를 반성하고, 시민의 택시, 친절한 택시를 만들기 위해 후속지침에 의한 월급제를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전액관리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 강화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즉각 개정하라!
1. 정부는 지자체별 택시자문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택시제도 개선의 관건인 택시면허제 개선과 경영평가제를 즉각 도입하라!
1. 정부는 택시월급제 기반 및 택시기사 복지향상을 위해 부가세 경감기한 연장과 LPG 특별소비세 폐지등의 세제지원의 실시를 촉구한다.

1998. 11 15

생존권 사수 및 총체적 개혁촉구 전국노동자 · 농민 · 시민대회

고용안정 정책 수립 · 제정 · 정치개혁 당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애고없는 세상을!

생존권사수 및 총체적 개혁촉구

전국노동자·농민·시민대회



일그러진 세상 바로 잡읍시다!
 노동자·농민·시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노총과 함께...

회순

□ 때: 1998. 11. 15(일) 13:00 □ 곳: 여의도 둔치

식전행사
 • 노동문화

본대회

- 개회선언
- 연대사
- 깃발입장
- 실업자 호소문
- 국민의례
- 결의문 채택
- 경과보고
- 노총가 제창
- 대회사
- 폐회선언

기두영진
 행사장 ▶ 국회의사당 앞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 회 사

생존권 사수와 사회개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인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 정말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전국에서 농민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우리 농민들께 정말로 고맙다는 합천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정부당국에 대해 농민 부채탕감, 충분한 추곡수매가 보장 등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총체적 사회개혁과 생존권 사수를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작년 이때 우리는 21세기 선진국을 꿈꾸며 2002년 월드컵 개최의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졸지에 IMF경제위기는 청천벽력을 맞았습니다.

국민소득 1만달러가 거품이 빠져 이제 7년전 수준으로 후퇴했습니다. 거러에는 이백만 실업자가 배회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잃은 노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가 판을 치고 임금삭감, 부당노동행위가 노동자의 생존권을 구렁텅이로 몰아 넣고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와 시민 대중이 고통전담으로 허리가 구부러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노동형태 및 농민 여러분

왜 이런 경제위기가 왔습니까? 우리는 전업 철야 특근, 명벌에서 뼈가 휘도록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정경유착, 재벌의 빛잔치, 중보과잉투자, 문어발식 기업확장, 이 때문에 우리는 지금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외환보유고가 얼마인지조차도 파악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자들에게 실업이라는 힘든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소득감소와 빈부격차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동지여러분 그리고 농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재벌과 관료, 정치권이 물고온 이 고통을 우리가 전부 뒤집어 쓸 수는 없습니다. 부정부패를 뿌리뽑고 정경유착을 끊어야 합니다. 경제위기 책임을 물어 재벌회장을 경영일선에서 퇴진시켜야 합니다. 엄청난 부채경영과 문어발식 확장을 끝장내야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와 농민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돈안드는 정치, 깨끗한 정치를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우리 정치권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정치권의 개혁이 안되면 총체적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경제청문회에서 경제위기 주범을 찾아내 확실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전국의 노동자 및 농민 동지여러분

지금 우리는 구조조정의 열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구조조정 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자에게 고통전담을 시키는 구조조정은 안됩니다. 그러나 노동자에게도 정부는 공무원의 임금삭감과 감원, 정년단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의 감원과 임금삭감, 명예퇴직금을 일방적으로 개악시켰습니다.

정부는 금융권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노사합의도 짓밟고 평화적 타결을 위한 교섭장에 공권력을 투입했습니다. 우리는 명등을 가득 채운 금융노동자들의 분노를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건전기업조차 퇴출시켰습니다.

정부는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산업현장 도처의 정리해고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도시자영업자 소득파악과 국고보조 등 확실한 대책을 세우지 아니한 채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을 통합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자율적인 농민단체인 농조와 농조연을 농업진흥공사로 통합하려 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노동자와 농민, 서민대중에게 고통을 전담시키고 있으며 오히려 고통의 주범들에게는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반노동자적 부당노동행위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현실을 모르는 위험판결은 도처에서 단체협약위반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위험판결을 이유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노동자들은 일토당토않은 법해석으로 고용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반노동자적 판정으로 노동자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위상강화하겠다고 합의해놓고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전임자임금지급 처벌조항을 삭제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동지여러분 그리고 농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총체적 분노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뚫돌 뭉쳐 싸우지 않는다면 이 고통의 IMF경제위기도 허사로 끝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가 저 정책당국자와 정치권, 보수세력들의 귀가 쫄쩍 울리도록 우리의 요구를 외치고자 합니다.

정부는 재벌과 정치권을 철저히 개혁하라

정부는 노동자와 서민대중의 일방적 고통전담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공무원의 일방적 임금삭감을 중단하고 정년을 탄력운영하라

정부는 정부투자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라

정부는 노동자부담을 가중시키는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 개편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택시노동자의 부가세연장과 월급제를 즉각 실시하라

정부는 아파트 노동자의 고용보장과 생존권을 보장하라

정부는 농조의 자율성을 해치는 통합방안을 즉각 백지화하라

정부는 전임자 임금금지급 처벌조항을 즉각 철폐하라

정부는 주 40시간 노동제를 즉각 보장하라

정부는 단체협약위반을 강력히 처벌하라

노동형태 및 농민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요구는 절박합니다. 사회개혁과 생존권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우리 국가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자는 요구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총단결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해야 합니다. 사회개혁, 노동자와 농민의 생존권을 위해 하나로 뚫돌 뭉쳐 총진군합시다. 감사합니다.

1998년 11월 15일

생존권사수 및 총체적 개혁촉구 전국노동자·농민·시민대회

■ 국제노동단체, 한국노동 투쟁 전폭지지!

국제노동연맹(ILO),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차관위원회(OECD-TUAC), 국제노동연맹 아태지역기구(CFTU-APRO), 노련랜드노동, 캐나다노동, 대만노동, 영국노동, 프랑스노동, 에티오피아노동 등 국제노동단체와 세계 각국 노동에서 한국노동의 투쟁을 지지하는 연대사를 속속 보내오고 있습니다.

연대사

존경하는 노동자·농민여러분 저는 전국에 있는 농지개량조합의 100만 농민조합원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선 김정권입니다. 오늘 한국노총사상 처음으로 노·농연대 투쟁의 길을 열 어주시고 우리나라 노동계를 대표하시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분투하시는 박인상 한국노총 위원장님께 먼저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급 노동자 대표분들과 내빈여러분들께도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투쟁의 주체이신 노동자·농민여러분들께 무한한 감사와 끝없는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사에 새로운 장을 열게된 역사적인 노·농연대투쟁의 순간을 맞아 저는 벅찬 감격과 용솨는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노동자·농민여러분! 오늘날 우리 불쌍한 노동자·농민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IMF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뜨거운 태양아래 몸이 부서지도록 땀을 파은 우리농민들 에게 들어오는 것은 빛이요, 쌓이는 것은 걱정입니다. 밤낮으로 직장을 지키며 일해온 노동자는 생계현장에서 쫓겨나 싸늘한 길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돈없고 권세없는 정치꾼·관료·재벌들은 불어나는 돈더미를 걱정하며 기쁨진 뺨살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나라에서 는 허울좋은 재벌 구조조정에 몇십조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정치꾼들은 오늘도 돈을 쫓아, 권력을 쫓아 헤매고 있습니다.

도대체 IMF가 농민 때문에 왔습니까? 아니면, 노동자 때문 에 왔습니까?

우리는 분쇄해야 합니다! 우리는 투쟁해야 합니다! 한통속 인 그들을 우리는 깨 부수어야 합니다! 여러분! 농지개량조합이 무엇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시골 에서 경지정리하고 저수지 막아 물대주는 곳입니다. 그것은 우리 농민들의 조직입니다. 그곳에는 우리 농민들이 조상대 대로 일궈온 피땀어린 재산이 있습니다. 김성훈 농림부장관 은 우리 농민들을 무시하고 그 재산을 빼앗아 정부기업인 농 어촌진흥공사를 살리는데 쓰겠다고 합니다. 우리 농민은 또다시 짓밟히고 있습니다. 고매한 교수님정권은 우리농민을 압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쇄하고야 말것입니다. 무식한 농민이 얼마나 무 식한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노동자·농민여러분 저는 오늘 결심했습니다. 우리농민들 도 연대조직을 만들어 이 나라 특권층에 본때를 보여주겠다 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노총과 노동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 요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겠조?

저와 농민들은 이 자리를 빌어 정부당국에 우리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전합니다.

첫째, 우리 100만 농민조합원회는 농조·농조연·농진공사 3개기관통합을 결사반대하고 농조자체개혁안을 작 급 수용하겠다는 것을 천명합니다.

둘째, 우리농민도 이제 농산물가격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 겠습니다. 공산품과 같이 생산자가 결정하게 해달라 는 말입니다.

셋째, 우리 농촌도 사람은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투지 도 늘리고, 보혈제도도 개발하고, 교육과 문화환경도 개선해 달라는 것입니다.

넷째, 노동자·농민을 더 이상 울리지 말아야 합니다. 악하 다고 무시하다가는 갈장나는 수가 있음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농림부와 정부당국자들은 이러한 우리의 요구에 성실히 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 노동자·농민이 이 자리에 모이 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노동자·농민여러분 노·농 연대투쟁의 출발을 알리는 오늘, 우리는 모두 동지 입니다. 우리는 오늘 중대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100만 농민회는 불의가 있는곳에 울러갈 것입 니다. 농민의 근성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결같은 후 원을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인상 위원장님과 모든 내빈 들께 오늘의 환대에 깊이 감사드리고 노동자·농민여러분들 의 건투를 빌며 연대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농지개량조합 100만농민조합원회 회장 김 정 권

결 의 문

IMF 경제위기하에서 우리 노동자와 시민대중이 받은 고통과 불안은 역사상 그 어느때보다도 극심하였다. 사랑하는 가족 의 곁을 떠나 길거리를 방황해야만 했고 정든 직장, 정든 동료와의 생이별을 강요당해야 했다.

국민적 고통을 초래한 경제위기의 책임자처벌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며, 재벌개혁, 정치개혁은 제자리 걸음을 한 채 한치의 진전도 없다. 정부의 일방적·획일적 구조조정은 노동자의 고통전담으로 끝났고 역할을 해야 할 노사정위원회는 지루한 논 쟁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제 우리 1천2백만 노동자에게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다. 총체적 사회개혁과 생존권보장을 위해 투쟁의 대오를 다시 갖춰 총력을 다한 각오를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1. 정부는 재벌의 과잉중복투자와 문어발식 경영을 척결하고 재벌개혁을 확실히 추진하라.
1. 정부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방지법을 즉각 제정하라.
1. 정치권은 스스로의 과오를 국민앞에 사죄하고 돈안드는 선거제도 마련을 위해 정치개혁을 즉각 단행하라.
1. 정치권은 경제위기 원인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경제청문회를 즉각 개최하라.
1. 정부는 이백만을 넘는 실업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실업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1. 정부는 11.0조안에 위배되는 전일자 임금지급금지 조항을 즉각 철폐하라.
1.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위상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1. 정부는 주40시간 노동제 입법화로 고용안정을 확실히 보장하라.
1. 정부는 단체협약위반 처벌방안을 즉각 수립하라.
1. 정부는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를 즉각 구속하라.
1. 정부는 경영민주화를 위해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즉각 보장하라.
1. 정부는 노동자 부담 증가시키는 사회보험 개편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 우리는 총체적 사회개혁과 생존권 사수를 위해 총파업투쟁의 깃발을 높이 치켜들고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1998년 11월 15일

생존권사수 및 총체적 개혁촉구 전국노동자·농민·시민대회

노동가

.....

동지

휘몰아 치는 거센 바람에도
부딪쳐 오는 거센여암에도
우리는 반드시 모이었다 마주보았다
살을 에는 밤 고통 받는 밤 차디찬
새벽서리 맞으며 우린 맞섰다
사랑 영원한 사랑 변치 않을 동지여
사랑 영원한 사랑 너는 나의 동지

농민가

삼천만 잠들었을 때 우리는 깨어
배달의 농사형게 울부질던날
손가락 깨물며 맹세하면서
진리를 외치는 형제들 있다.

철의 노동자

민주노조 깃발아래 와서 모여 용치세
빼앗긴 우리 피땀을 투쟁으로 되찾으세
강철같은 해방의지 와서 모여 지키세
투쟁속에 살아있음을 운동으로 느껴보세
단결만이 살 길iero 노동자가 살 길iero
내 하루를 살라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아- 민주노조 우리의 사랑 투쟁으로 어룬 사랑
단결투쟁 우리의 무기
너와 나 너와 나 철의 노동자

단결투쟁가

동트는 새벽 밝아오면 불은태양 솟아온다
피맺힌가슴 분노가 되어 거대한 파도가 되었다
백골단 구사대 몰아쳐도 꺾어버리고 하나되어
나간다 노동자는 노동자 다 살아 움직이며
실천하는 진짜노동자 너희는 조금씩 갈아먹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으리라
아아 우리의 길은 험한 단결투쟁뿐이다.

구호

.....

- 고용불안 조장하는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하라!
- 불법이고 자행하는 사용자를 처벌하라!
- 노조활동 말살하는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 전임자임금 처벌하는 노동약법 철폐하라!
- 정경유착 부정부패 노동자가 몰아내자!
- 국민연금 파산위기 부실운영 책임져라!
- 노동자부담 전가하는 의보통합법안 철폐하라!
- 공무원도 노동자다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 농민조직 말살하는 3자통합 철폐하라!
- 농업인의 사유재산 국유화가 웬말인가!
- 정부지침 거부하는 택시사업자 처벌하라!



“...우리 실업노동자들은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부귀영화나
일확천금을 바라지 않습니다. 주말이면
가족을 데리고 드라이브 가는 여운
아예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저
내 가족 굶겨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습니다.
울 겨울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저세방
아니며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할 줄
아는 국민의 정부를 이길
생각이라면 부디 3백만 실업자의
이 작은 소망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실업자 호소문 중에서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 전국섬유노동조합연맹 ·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 · 전국전력노동조합 · 전국외기노동
조합연맹 · 전국정보통신노동조합연맹 · 전국항공노동조합연맹 ·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 전국금융
노동조합연맹 · 전국법률인사노동조합 ·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전국출판노동
조합연맹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 전국관광노동조합연맹 · 전국채신노동조
합 · 전국통신노동조합연맹 · 전국고무산업노동조합연맹 · 전국도시철도노동조합연맹 · 전국공공서비스
노동조합연맹 · 전국아파트노동조합연맹 · 전국공공건설노동조합연맹 · 정부투자기관노동조합연맹

3.농조의 농지개량조합법개정 청원서

여 백

수 신 : 국회의장

제 목 : 농림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정된 농지개량추진법 개정에 따른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1. 청원소개의전서 3부
- 2. 청 원 서 3부. 끝.

청원자(대표)



주 소: 전라북도 익산시 강림읍 남당리 842-2
(전화: 063-861-0155)

성 명: 전 종 철  익산 767 인(법인)

소개의원(대표):   인


청원 소개 의견서

청원인	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남당리 643-2
	성명 전종철 외 15,967명
건명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정과 농지개량조합법 개정에 따른 청원
소개연월일	1998년 11월 일
소개의견	<p>정부에서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기능이 중복되어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위 3개기관을 통합하여 농업기반공사 설립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제정할 것을 발의 하였던 바,</p> <p>본 청원은 농지개량조합 및 동연합회를 강제 해산하고 정부투자기관인 농업기반공사로 통합할 경우, 동조합·동연합회 및 932천여 농민조합원의 재산권과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폐안하고</p> <p>대신에 현행 105개 조합을 40개로 광역화 통합하고, 조합장 신분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며, 2004년까지 조합비를 완전히 폐지하고, 농지개량조합중앙회를 설립하여 규모의 경영을 실현하는 등 농지개량조합 및 동연합회가 자체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농지개량조합법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p> <p>이에 본의원은 정부에서 발의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내용이 3개기관을 강제 통합함으로써 농지개량조합·동연합회 그리고 농민조합원의 재산권 및 결사의 자유가 침해되고, 민간조직과 정부투자기관과의 통합은 그 성격상 곤란하므로 동법안을 폐안하고</p> <p>농지개량조합 및 동연합회가 강도 높은 자체 구조조정을 효율적 추진할 수 있도록 농지개량조합법을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어 본 청원에 대한 소개의견서를 제출합니다.</p>

소개의원  영 

청원소개 의견서

청원인	주소 : 전북 익산시 관현읍 남당리 843-2 성명 : 전종철 외 1.962 명
건명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정과 농지개량조합법 개정에 따른 청원
소개연월일	1998. 11. 12
소개의견	<p>정부에서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기능이 중복되어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위 3개기관을 통합하여 농업기반공사 설립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제정할 것을 발의 하였는 바,</p> <p>본 청원은 농지개량조합 및 동연합회를 강제 해산하고 정부투자기관인 농업기반공사로 통합할 경우, 동조합·동연합회 및 932천여 농민조합원의 재산권과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폐안하고</p> <p>대신에 현행 105개 조합을 40개로 광역화 통합하고, 조합장 신분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며, 2004년까지 조합비를 완전히 폐지하고, 농지개량조합중앙회를 설립하여 규모의 경영을 실현하는 등 농지개량조합 및 동연합회가 자체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농지개량조합법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p> <p>이에 본의원은 정부에서 발의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내용이 3개기관을 강제 통합함으로써 농지개량조합·동연합회 그리고 농민조합원의 재산권 및 결사의 자유가 침해되고, 민간조직과 정부투자기관과의 통합은 그 성격상 곤란하므로 동법안을 폐안하고</p> <p>농지개량조합 및 동연합회가 강도 높은 자체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농지개량조합법을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어 본 청원에 대한 소개의견서를 제출합니다.</p>

소개의원  許南燕

1. 청원 취지

- 농업을 산업의 대종으로 삼아온 우리나라의 농업은 수리관개시설을 근본으로 성립하였고
- 1908년 전북 옥구서부수리조합을 효시로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은 수리시설을 관리하는 유일한 농민자치조직으로서 수리시설의 설치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와 노후된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로 쌀생산과 농업생산력 증진에 기여해 왔으나
- 농림부에서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과 관련되어 그 기능이 중복되어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3개기관을 통합하여 정부투자기관인 「농업기반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안」을 1998. 9. 8 입법예고하여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그러나 농림부에서 입법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안」은 순수한 농민자율조직인 농지개량조합과 동연합회를 강제해산하여 정부투자기관(농업기반공사)에 통합함으로써 농지개량조합, 동연합회 그리고 932천여 농민조합원의 재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동 법안을 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전국농지개량조합은 1998. 8. 4 총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개혁방향 및 구조조정 방침에 충실하면서도 효율과 비용측면에서 농림부의 3개기관 통합방안보다 더 강한 「농지개량조합개혁방안」을 작성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현행 106개 조합을 40개로 줄이고, 조합비를 폐지(2004년)하여 농업인 부담을 경감하며, 농지개량조합자립육성금고의 활성화로 2004년 이후에는 조합 운영에 따른 경상경비의 국고의존을 탈피하고, 조합장의 신분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는 것등 입니다.
- 따라서 농지개량조합의 자체 개혁방안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농지개량조합법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2. 청원내용 및 이유

가. 청원내용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안」을 폐안하고, 「농지개량조합법」을 별첨과 같이 개정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나. 청원이유

(1)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안의 폐안에 대한 이유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 제정될 경우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강제 해산되어 농업기반공사에 통합되어 동조합 및 동연합회와 932천여 농업인 조합원의 재산권과 결사의 자유가 침해됨 (관련조항 : 부칙 제8조, 제9조, 제14조제2항)
-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임원(1,100여명)의 임기가 2~3년이상씩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강제로 상실하게 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게 됨 (관련조항 : 안부칙 제6조)
- 농지개량조합의 채권자에 대하여 현행 농지개량조합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박탈하면서 채권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동조합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됨 (관련조항 : 안부칙 제8조, 농지개량조합법 제66조)
- 또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안이 부칙에서 농지개량조합의 출원에 의하여 조성되어 특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농지개량조합자립육성금고를 농업기반공사가 승계하도록 하면서 그 사용목적은 특정하여 농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조합원의 기대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관련조항 : 안부칙제9조제1항, 농지개량조합법 제85조)

여 백

4농진공 노조의 통합찬성 신문광고(3회)

여 백

신문명 : 서울신문
일 자 : 98. 8. 29

3 면

국민 여러분과 5백만 농어업인에게 드리는 말씀

지금 우리 사회는 IMF 관리체제로 야기된 경제난국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IMF 경제위기 속에 몰아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는 전국민에게 엄청난 시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로의 희생과 이웃을 돕는 참된 동포애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작업도 경제위기라는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의 농정을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우리 농어촌진흥공사도 5백만 농어업인과 국민의 개혁요구를 과감히 수용, 기구와 조직을 축소하고 많은 직원들을 불가피하게 감축해야 하는 뼈아픈 구조조정을 단행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도 농업관련 기관과 그 종사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농업인과 농민단체의 비판도 겸허하게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혁과 구조조정애 반대하는 농지개발조합 노동조합과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노동조합의 공사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폄하, 허위사실 유포로 우리 공사 임직원들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난 7월 8일과 8월 27일 게재한 광고는 사실을 왜곡하고 개혁을 호도하는 내용으로, 그 실정을 알지 못하는 많은 국민과 농업인들은 우리 공사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진공은 농어업인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입니다.

우리 공사는 지난 '70년 농촌의 근대화 촉진을 위하여 정부가 출자해 설립한 공기업으로서 농업생산기반정비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식량자급기반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후 '89년 UR에 대비하기 위해 농어촌발전종합대책에 따라 영농규모화사업 추진, 농어촌생활환경 개선, 농어가소득기반 확충 등 기능을 추가하여 농업진흥공사에서 농어촌진흥공사로 확대 개편되어 모범 공기업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진공은 정부와 각종 평가기관으로부터 전심한 내실경영의 주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농진공은 지난 '94년에는 감사원으로부터 우수공기업으로 평가받은 것을 비롯해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에서도 5년 연속 우수공기업으로 평가받았으며, 특히 '98년 경영평가에서는 최우수 공기업(1등)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97년과 '98년에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시행하는 생산성대상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 공사를 부실기업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국가 최고의 평가기관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주장하는 농진공의 부실채권이 2조 7천억원이란 비난은 공사의 재무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입니다. '97 결산사상의 위 채권은 사기업의 부채 개념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이는 공사가 농업인에게 영농규모화 자금으로 지원한 20년 분할상환중인 채권이며, 사실상 순수부채는 전혀 없는 건실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사는 지속적인 경영개혁을 추진해온 결과 '97년도에만 27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창출한 경영이 우수한 공기업입니다.

농진공은 앞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농진공 전 임직원은 공인으로서 정부의 경제난국 타개에 적극 참여하고, 농업인과 농업·시민단체들의 요구를 겸허하게 수용해서 공기업 구조조정과 경영개혁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우리 공사를 음해하므로써 공사와 임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임직원 모두는 어떠한 난관 속에서도 「제2의 건국」을 위한 농어촌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과 5백만 농어업인에게 약속드립니다.

1998년 8월 29일

농어촌진흥공사 사장 및 임직원 일동

초차 의견

농진공 · 농조 · 농조연은 농정을 수행하는 책임있는 공기업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농업생산기반 관련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발조합·농지개발조합연합회의 통합은 5백만 농업인과 농민단체의 시대적 요구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3개 기관 통합을 IMF 국난극복과 21세기를 대비한 선진농정 추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가정 「농업기반공사」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러한 농업인과 농민단체, 정부 등 3개 기관의 개혁요구를 받아들여, 농정 대개혁에 적극 동참할 의지가 있음을 먼저 밝혀둔다.

지금까지 농진공은 예산 및 정원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통제와 간섭으로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받아 왔다. 또한 매년 강도높은 정부의 감사를 수차례에 걸쳐 수감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근 5년간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통해 1인 3억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한 결과 우수공기업으로 평가받았으며, 98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그럼에도 일부기관에서 농진공이 마치 파산 직전의 부실기업으로 매도하는 것은 농진노조 2,500여 조합원의 인격과 자존심을 파괴하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또한 정부는 3개 기관 통합에 노동조합을 반드시 참여시켜 그 종사자들의 고용불안이 증폭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노동조합은 통합에 따른 방향과 그에 대한 요구를 분명히 천명하며, 정부는 이를 수용하여 3개 기관 종사자들의 고용불안이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통합방향

1. 3개 기관 통합은 조직 이기주의를 초월하고, 농업발전을 위한 책임과 자생력있는 공기업이 되어야 한다.
2.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수세를 폐지하고 농업인을 위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3. 유사한 기능을 정비하고 사업 추진체제를 일원화하여 5백만 농업인을 위한 농어촌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 3개 기관 통합에 따른 우리의 요구 ◀

3개 기관 통합은 노동조합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는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통합이 아닌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농업인과 국민이 참여한 통합이 추진되어야 하므로 농업부의 통합추진위원회에 3개 기관 노조가 반드시 참여되어야 한다.

열악한 임금과 근로조건은 개선되어야 한다.

공사의 현 임금수준은 13개 투자기관중 12위로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공무원 임금수준의 80%를 밑돌고 있다. 따라서 통합공사는 공익성이 강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임금과 근로조건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통합공사는 직원들의 고용승계가 보장되어야 한다.

통합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며, 3개 기관의 자율적인 구조조정후 통합과정에서 종사자들의 고용승계는 완전 보장되어야 한다.

통합공사는 경영의 자율성과 자본금이 확보되어야 한다.

농업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적립금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자생력있는 농어촌 전문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자본금이 확보되어야 한다.

1998. 9. 3

농어촌진흥공사 노동조합

500만 농민이 원하는 농업관련 3개기관은 반드시 통합되어야 한다

진정한 농업발전과 농민을 위한 정부개혁에 동참을 촉구한다

☐ 전체 농민단체, 여야3당, 시민단체가 찬성하는 3개기관 통합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전체 농민단체, 국민회의, 자민련, 한나라당이 찬성하고 경실련 등 시민단체, 대부분의 농민이 3개기관 통합을 바라고 있음에도 농조·농조연은 실현가능성이 거의없는 『농조개혁방안』을 역사적 결단처럼 홍보하며 3개기관 통합을 반대하면서 마치 농민의견을 대표하는 것처럼 농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 농조의 개혁방안은 한마디로 실현성이 없는 비현실적인 대안

- 105개조합을 37개소로 감축한다 하나
 - 법에 의거 '97.6월까지 자율합병지시했으나, 실적은 1개소에 불과하고.
 - 37개로 감축되어도 소멸조합은 지소조직으로 운영되어 조직통합의 효과가 없으며,
- 조합장 신분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하나
 - 선출직 조합장 특성상 신분유지를 위한 비용은 여전히('97년 100억소요)
 - 농조 스스로의 『통합되는 조합장은 합병조직의 자소장, 고문으로 임용하거나 3,000만원 수준의 보상금 지급』 요구에서 보듯 명예직 전환에 의한 예산절감은 허구이며,
 - 대부분 조합장 임기가 2001년초에 끝나는 현실에서 명예직 운운은 임기연장책이며
- 조합비를 폐지하되 315억은 직원 20% 감축 등으로 대체한다 하나
 - 직원 20% (900명) 감축으로 250억을 절감한다 하나 800명 퇴직금 750억 지급도 불가한 농조재정으로 구제성이 없는 계획이며
- 국고보조 탈퇴를 위한 자립금고 1조원을 조성한다 하나
 - 불경기에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5,000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은 그 실현성이 의문시 되는 등 농조의 개혁방안은 세부적 내용을 분석하면, 할수록 실현가능성이 없으며, 결국 국가의 지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비현실적인 방안임.

☐ 농조의 부실실태('97 국정감사자료 등에서 인용)

- 지난 10년간 총 9,000억원의 국고보조금 지원에도 자립농조 10개뿐이며,
 - 예산편성조차 어려운 조합이 20개 조합(19%)
 - 직원 1명 퇴직금 낼 수 없는 조합이 65개소(61.9%)
 - 2~3년에 파산가능성이 높은 조합이 69개소(65.7%)

- 조합장에 대한 예우(판공비, 차량비, 여비서 등)로 년100억 지출
- 설문조사결과 농조임직원 24.2%가 비리가 있다고 시인 등에서 보듯 농조는 현행대로 갈 경우 대부분의 농조가 2~3년에 파산할 위기에 있음.

☐ 3개기관이 통합되면 농민에게 어떤 이익과 효과가 있는가?

- 3개기관 조직 및 인원의 통합으로 년 800~1,000억 수준의 비용절감을 기하고
- 동 비용절감분으로 농업인부담을 경감시키고(조합비 경감 등)
- 농진공 전문인력과 농조 현장기술력 결합으로 대 농민서비스 질 제고는 물론 영농편의를 제고시키고
- 사업시행체계의 일원화로 공기관축, 공사비 절감은 물론 유지관리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 TC/TM등 기술발전에 의한 시설물의 현대화 및 농촌용수 수질문제 해결, 환경친화적 농업개발 등의 이익과 효과가 있음.

☐ 통합기관이 앞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은?

- 대 농민서비스 전담기관
- 쌀자금 기반구축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확충 및 관리전문기관
- 농촌구조개선 전담기관
- 농업용수 수질개선 등 친환경농업추진기관
- 농업기술정보 개발, 연구, 지원기관
- 해외농업개발 및 통貿대비 기술지원기관

☐ 농조·농조연은 불필요한 소모전을 중단하고 정부개혁에 동참해야

- 농조·농조연은 정부와 농진공을 대도하는 불필요한 반대소모전을 중단하고
- 농업기반시설물의 전문적인 관리와 농민에 대한 고품질서비스를 제공기 위한 고비용, 저효율구조의 개혁이라는 국가적·국민적 과제를 해결하고,
- 조직의 통합을 통하여 농업발전과 농민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농업, 농민적 과제를 해결기 위한 정부개혁에 적극 동참하기를 간곡히 기원한다.

1998년 12월 8일

민주노총·공공연맹
농어촌진흥공사노동조합

*본 광고는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게재합니다.

여 백

**5. 농업인단체(전농외 15개 단체) 3개기관
통합지지 신문광고(2회)**

여 백

문화 일보

1998년 12월 4일 금요일 발행·인쇄·편집인 南時旭 / 논설주간 朴昌來 / 편집국장 姜信龜

The Munhwa Ilbo

☎ 100-723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68번지 대표전화(02) 3701-5114 제 2170 호 7 판 [B7C]

농업생산기반 3기관 통합에 대한 우리 5백만 농민의 참소리는 이렇습니다.

- 여야 3당의 농조·농조연·농진공 3기관 통합지지 결단을 5백만 농민은 진심으로 환영한다 -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조·농조연·농진공 등 3개 기관을 통합하기로 하고,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제정기로 한데 대해 여야 3당이 용단을 내려 당론으로 이를 지지한 것은 오랜기간 5백만 농민의 진정한 바람을 마침내 정치권이 흔쾌히 수용한 결단으로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 않는다.

현재 3개기관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조성·정비·관리와 관련하여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오래전부터 그 비효율성은 물론, 일부 비리마저 노출되어 왔으며 방만한 조직 운영으로 IMF 국가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모든 농민과 국민들로부터 농정개혁과제 제1호로 대대적인 수술을 요구받고 있다.

3개기관을 통합하여 이들 기관의 고질적인 병폐와 비능률을 제거하고, 농업용수관리 및 사업추진체제를 일원화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경영혁신방향과 일치하며,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정부의 예산절감, 수세폐지 등 농민의 부담경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개혁에 반대하는 일부 기득권 세력들은 조직 이기주의 차원에서 허위 비방광고와 집단행동 등 극단적인 행태를 보임으로써 그들의 주장에 대한 정당성이나 설득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노동단체마저 정확한 실상을 모르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농민과 국민, 그리고 농조·농조연 직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3기관 통합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부 통합 반대측에서는 통합이 될 경우 농민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이미 의료보험통합 등의 사례에서 보듯 국가전체의 복리증진을 위해 공공목적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은 오히려 공익기능을 더욱 복돋우는 일이다.

통합이 되더라도 농조에서 담당하던 수리시설관리 업무는 그대로 새로운 체제로 통합될 농진공의 숙련된 기술인력과 농조의 풍부한 현장경험을 토대로 계속 수행함으로써 대농민 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향상되기 때문이다.

농조·농조연이 정부의 통합방안보다 강도높은 개혁방안을 스스로 마련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4년 농발위에서 자체적인 개혁을 약속하고도 차일피일 이를 이행하지 않고 미루어 왔고, 농조노조도 한때는 3기관 통합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역대 정부도 통합을 몇차례나 시도했으나 그때마다 반발에 부딪쳐 좌초되었다.

이것은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마다 실현성이 희박한 자체개혁안 제시로 일단 위기를 모면해 온 구시대의 기회주의적 수법을 재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실망스러운 것은 엄정한 당론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이 기득권 세력에 동조하는 듯한 현상이다.

지금은 앞으로 다가올 세계적인 식량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농업·농촌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3기관 통합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기필코 성공시켜야 할 시대적 소명임을 거듭 강조한다.

따라서 5백만 농민을 대표하는 우리 농민단체들은 농조·농조연·농진공 통합법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 우리 농민의 숙원인 3기관 통합을 비롯한 농정개혁을 조속히 이루어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모든 농민단체 뿐 아니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유력한 시민단체들도 3개기관 통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면서 통합반대를 외치고 있는 일부 기득권 세력들도 이 기회에 우리 5백만 농민들의 진정한 요구가 무엇인지 검히 귀 기울일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1998년 12월 4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기독교농민회,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생활개선중앙회, 한국포도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농진공, 농조, 농조연 3개기관 통합입법을 적극 환영합니다.

- 이제는 통합을 향한 국민적 지혜가 결집돼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개혁의 발목을 잡아서 안 되겠습니다.-

농진공, 농조, 농조연 등 3개기관 통합을 전제로 지난 12월 24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안)”을 통과시킨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의원님들의 결단은 5백만 농업인의 숙원을 수용하고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역사적 결단으로 우리는 이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왜 우리 농민단체들은 통합을 지지하는가?

- 농진공, 농조, 농조연 등 3개기관 통합은 농민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추진체계의 일원화로 업무의 농률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 농업의 고비용저효율구조를 개선하여, 어려움에 처한 우리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역사적 과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 새롭게 발족할 공사는 농업생산성을 증진하고 농업인 서비스를 제고하는 등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촌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 3개기관 통합으로 그간 지적되어오던 개별농조의 경영부실을 해소하고, 농조조직을 물관리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 특히 농진공의 전문인력과 농조의 현장경험을 결합함으로써 물관리의 과학화와 체계화를 이룸으로써 농업인에게는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농조 및 농조연의 통합반대는 누구를 위한 반대인가?

- 이러한 농민들의 숙원을 저버리고 설득력이 없는 비방광고로 아직까지도 개혁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통합반대세력들의 이기적인 행태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3개기관의 공사와 통합은 농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며 공기업 민영화 방침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 전체의 복리증진을 위해 공공목적의 재산으로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은 오히려 공익 기능을 복돋우는 일입니다.
- 또한 통합이 되더라도 농조에서 담당한 수리시설관리업무는 숙련된 기술인력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공사에서 계속 수행되므로 국영기업화하게 되면 더욱 질 높은 대농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 따라서 최근 모일간지에 게재된 농조·농조연 반대성명광고는 농민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수호하고 법제정을 지연해 보자는 의도로, 대규모 실행행사나 총파업 운운하는 것은 국민과 농민을 담보로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겠다는 무모한 행동에 지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농조조직체제는 이미 여러가지 부작용과 비능률로 농업인들에게 부담만을 가중시켰습니다. 이제는 국가차원에서 농업인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정부를 중심으로 한 농업개혁 추진을 역사적 과업으로 생각하며, 5백만 농업인의 숙원인 “농업기반공사” 설립을 적극 지지하고,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통과시킨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구국의 결단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1998년 12월 29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기독교농민회,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생활개선중앙회, 한국포도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6.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라후렛(4종)

여 백

농진공 · 농조연 · 농조 왜 통합해야 하나?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공 · 농조연 · 농조는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경지정리, 배수개선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임무를 3개 기관이 나누어 행함으로써 임무중복, 대농업인서비스 불량, 예산낭비 요인이 많이 발생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금 개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 기관들은 같은 지역에 별도의 산하조직을 유지하며, 수리관리 체계마저 분산되어 국고 낭비는 물론 수질관리 역시 미흡했습니다.

**농진공, 농조연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농조의 운영부실문제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매년 농조는 농업인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수세)를 걷는 외에 1,000여 억원에 이르는 국고를 지원받고 있으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다수 농조가 파산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이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조합농업인의 부담과 농업경영의 지장은 물론, 국고부담도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현재 는 조합직원들의 봉급수준이 비교적 낮을 뿐만아니라 퇴직금 지급마저 어려운 조합도 상당수에 달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시정코자 오래전부터 이들 기관에 대한 통합을 시도한 바 있으나 관련단체간 서로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농진공·농조연·농조 모두를 해체하여, 『농업기반개발공사』(가칭)로 통합 신설합니다.

이는 농진공이 농조와 농조연을 흡수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새기구로 모두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1단계로 농진공, 농조연은 '99년 10월까지 자체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농조는 조합 설립여건에 미달하는 농조들을 규정에 따라 우선 합병하는 한편, 나머지 조합들도 인력 감축 등 자체 구조조정을 먼저 실시합니다.

2단계 로 각 기관을 해체한 다음 2000년 1월까지 『농업기반개발공사』를 신설합니다.

『농업기반개발공사』는 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경지정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사업 등 농업생산기반확충, 관리 및 농촌구조개선 사업을 전담하게 됩니다.

3개 기관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부담이 줄어듭니다.

- ☞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 추진체계의 일원화에 따른 조직운영 합리화로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됩니다.
- ☞ 숙련된 전문인력과 기술력을 제대로 이용하므로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됩니다.
- ☞ 3개 기관 통합으로 매년 1,000여 억원의 경비절감이 가능해 집니다.
- ☞ 절감되는 예산으로 농업인의 조합비(수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농 립 부

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어촌진흥공사
농업생산기반정비 관련기관 통합방안

< 통합추진배경 >

- 농업생산기반정비기능을 나누어 수행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기능 중복 및 비효율문제 지속 제기
 - 기본조사·설계·감리업무는 농조연과 농진공이, 수리시설 유지관리업무는 농조와 농진공이 분담
- 농지개량조합 운영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음에도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수리시설의 보수·관리도 부실
 - 개선책으로 소규모조합 통폐합 등 자구노력을 유도했으나 성과가 미미하고 개선전망도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 직면
- 따라서 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대농민서비스를 높이고 농지개량조합 등 농업생산기반관련 조직을 발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 물관리로 농번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농조와 영농규모화 사업으로 농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농진공 군지부를 80여개 지역사무소로 통합하여 인력을 최대한 활용
 - 3개기관 중복인력을 정비하여 절감되는 예산으로 조합비 부담경감 및 대농업인 서비스 향상 추진

1. 3개기관 통합 추진방안

<통합추진원칙>

- 3개기관이 대등한 조건으로 해체·통합
- 3개기관을 통합하여 가칭 「농업기반공사」 설립

□ 지역·현장중심의 조직으로 운영

- 지역사무소는 수계관리, 지역적여건, 현행 농조구역을 감안하여 80여개 지역사무소로 광역화
- 농조운영의 지역성과 물관리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지역사무소장의 과반수는 지역사무소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계약직 등으로 임용하고 예산·인사등 권한을 대폭 위임

□ 통합전 각 기관별 자체 구조조정 실시

- 농진공은 기획예산위 방침에 따라 감축하고 농조·농조연도 농진공 수준으로 감축하여 균형이 맞도록 구조조정
- 현정원 7,174명 → '99말 5,974명
- 통합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중복인력은 신규채용억제, 업무전환 등을 통하여 조정.(2001년말 5,500명)

□ 농업용수비용(조합비)의 폐지 원칙

- 불가피한 경우에만 농업용수공급비용의 일부 징수
- 물관리는 현행 농조에서 하고 있는 물관리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여 농업인 불편 최소화

2. 3기관 통합방안에 대한 농조측 일부의 잘못된 비판

□ 조합비대신 농업용수로 징수하여 부담증가

- 신설공사에서는 조합비를 폐지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수리시설의 유지관리상 발생하는 불가피한 경우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의 일부만 징수

□ 말단수로관리를 농업인에게 부담시킴

- 지거등 말단수로관리는 현재 농조와 마찬가지로 공사에서 관리하되 농진공의 기술과 현재 농조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물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

□ 농업인의 재산을 국유화하여 사유재산권을 침해

- 조합원의 농조재산에 관한 권리는 점유권이나 처분권이 아닌 수리서비스를 받을 권리이며 현행 농조법에서도 농조해산시 개인별 분배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조합재산이 공사로 포괄승계되더라도 영농목적의 물공급서비스를 계속하므로 농업인의 재산권·침해는 없음

□ 공사화되면 농업인의 의견이 반영안된다는 견해

- 주민참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공사의 지역사무소 별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 인력관리, 물관리체계 개선등 모든 분야에서 농업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

3. 농조 자체구조조정안의 비현실성

□ 현행 105개 조합을 37개 조합으로 축소

- 현행 농조법에서도 '97.6월까지 설립기준미달조합을 자율합병토록 하였으나 실제합병한 실적은 1개소에 불과
- 105개 조합을 37개로 할 경우 수리관리에 불편이 크고 소멸조합을 지소형태로 운영시는 구조조정과 조직축소의 효과 상실

□ 자립육성금고 1조원을 조성하여 재정자립

- 자립육성금고 1조원을 대부분 보상비나 고정불용자산 매각대금으로 조성한다고 하고 있으나, 현재 농조는 불용채산을 매각하고 1,000억원 수준의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고도 직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현행 농조법하에서도 자립육성금고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96. 6. 관련법 개정이후 금고에 출연한 자산은 전무

□ 조합비를 폐지

- 현재 조합체제도 유지하기 힘든 어려운 상태에서 조합비를 폐지한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음
- 조합성격을 고집하면서 조합원 조합비를 폐지하고 조합운영을 국고에 의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

⇒ 3기관 통합방안이 자체구조조정안 보다 조합직원의 안정성과 발전성 측면에서도 유리함

농조 · 농조연 · 농진공 통합추진위원회

3개기관 통합관련 유언비어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어촌진흥공사 등 농업생산기반정비관련 3기관을 발전적으로 통합, 조직의 효율을 높여 예산을 절감하고 대농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기관 통합은 농업인은 물론 모든 농민단체, 경실련 등 뜻있는 시민 단체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일부 통합반대세력은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통합의 의의를 의도적으로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21세기 선진농업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적인 개혁방침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3기관 통합을 바라는 대다수 농민조합원과 조합직원 및 일반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농조직원, 조합원 및 일반국민 여러분께서는 통합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인 유언비어에 현혹됨이 없이 우리 농업발전을 위한 개혁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 립 부

농업인 여러분께

< 유언비어 >

- 농업인의 참여가 원천봉쇄 된다.
- 수세는 계속 징수하고 농업인 부담이 증가한다.
- 3기관이 통합되면 말단수로관리를 농업인에게 부담시키는 등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① 신설공사는 지역사무소 별로 농업인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물관리 업무에 대한 농업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지역사무소장 임용시 미리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임명하는 등 공시운영에 농업인의 참여를 활성화 할 것입니다.
- ① 농업용수 이용료(조합비)는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시설 유지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일부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농업인부담은 현재보다 대폭 감소됩니다.
- ① 말단수로관리는 현재와 같이 신설공사가 관리하며, 3기관 통합으로 농진공의 기술력과 농조의 물관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결합되므로써 서비스의 질이 향상됩니다.

조합직원 여러분께

<유언비어>

- 통합후 농조직원 위주로 대폭적인 인력감축을 실시한다.
- 통합후 순환보직이라는 명분으로 농조직원을 원격지로 전출시켜 자진 퇴직하게 한다.
- 영어시험, 전산능력 검정을 실시하여 성적이 나쁜 직원을 우선 감원대상으로 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❶ 농조 직원은 정년단축으로 통합 이전에 구조조정 대상 인력이 대부분 해소되고, 통합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중복인력도 신규채용억제, 업무전환 등을 통하여 조정되기 때문에 통합후 추가적인 인력감축은 거의 없어집니다.
- ❷ 물관리 특성상 신설공사에서도 지역실정에 밝은 농조직원이 우대받게 되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한 근무지 변경은 없을 것입니다.
- ❸ 통합법안이 통과되면 3기관이 공동참여하는 “공사설립위원회”를 설치하여 직원의 임용, 보직, 승진 등이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제도화 할 것입니다.
- ❹ 따라서 직무의 특성을 무시한 시험을 치르게 하거나 특정직원의 퇴출을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시험도 있을 수 없습니다.

3기관 통합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언비어>

- 통합 계획의 백지화로 10. 15자 농림부의 각도별 농조직원에 대한 특별교육이 취소되었다.
- 제2의 집단시위('98. 11. 11)를 하면 통합을 무산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많은 조합원이 참석하여야 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① 10. 15 예정되었던 농조직원에 대한 특별교육은 영농철을 감안, 직원들로 하여금 수해복구 및 벼베기를 지원토록 하기 위해 교육대신 농촌개발국장 서신으로 대체하였습니다.
- ② 3기관 통합은 국민의 정부가 국가개혁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주요개혁과제로서 농민조합원은 물론 농민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이 통합의 취지와 당위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 ③ 따라서 통합에 대한 농업인 및 일반국민들의 기대를 무시하고 집단행동으로 이를 반대하는 것은 기득권유지를 위한 조직이기주의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21C 선진 농어촌을 건설하기 위하여
농조·농조연·농진공 등 3개 기관이

「농업기반공사」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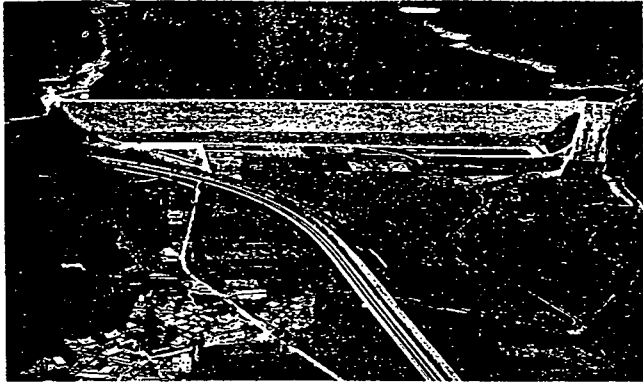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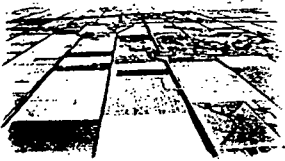
농림부

「농업기반공사」는 농업생산기반의 확충과 농촌생활 환경개선 등 농업·농촌구조개선사업 추진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지역발전에 기여합니다.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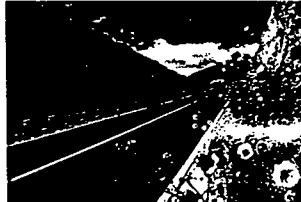
농업생산기반조성·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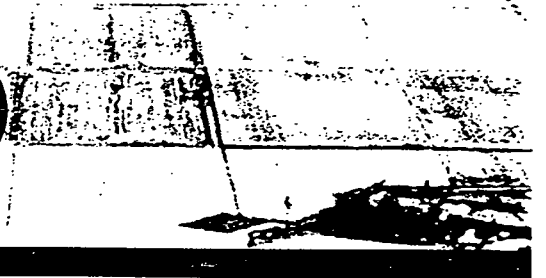
사업시행체계를 일원화하고 단위 사업별 분산투자를 지역단위 종합개발방식(Package)으로 전환 하므로써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여 나갑니다.



농어촌지역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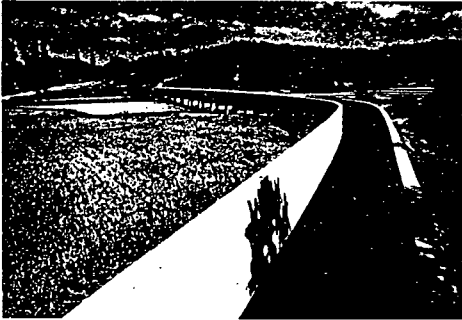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으로 농어촌지역에 살기좋은 생활공간을 조성합니다.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및 소득원개발사업과 연계한 지역종합개발 추진으로 농촌지역의 경제적·사회적발전에 기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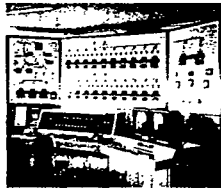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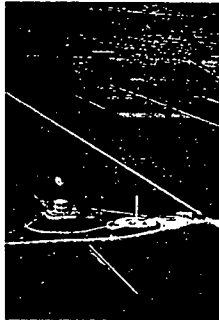
농업기반시설 종합관리

- 수계별 수량 및 수질의 통합관리로 농업용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질을 보전 관리합니다.
- 중앙집중식 물관리시스템(TC/TM) 도입 등 유지관리를 과학화·체계화합니다.
- 농번기 물관리 인력과 농한기 규모화 인력을 상호보완, 활용하여 연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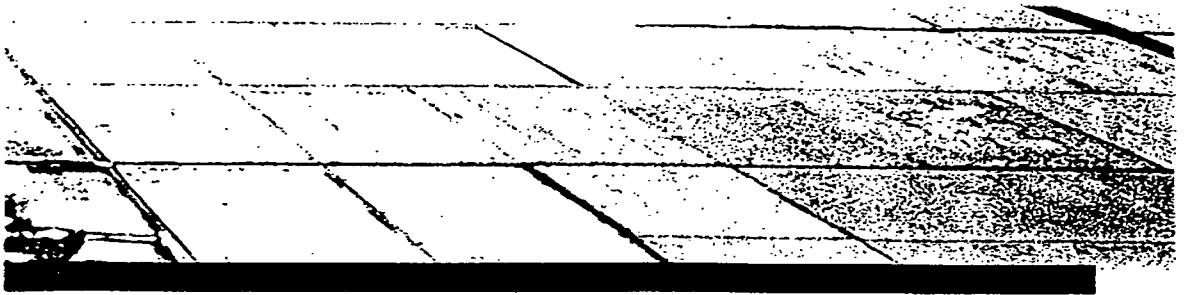


영농규모화사업

- 영농규모화 촉진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을 이끌어갈 전문화·규모화된 쌀농업 경영체를 2004년까지 10만호 육성합니다.
- 고령 농업인으로부터 쌀전업농에게로 경영이양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보조금 지원사업(직접 지불사업)을 추진합니다.



추진실



해외농업개발

-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기술용역 사업을 추진합니다.
-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와 해외농장개발을 추진하여 국내식량 자급율을 제고시킵니다.
- 해외기술지원등 국제기구와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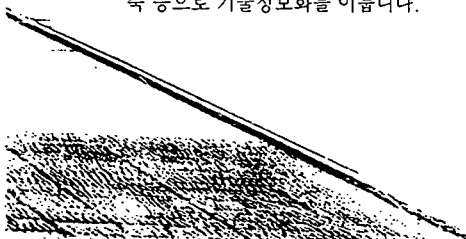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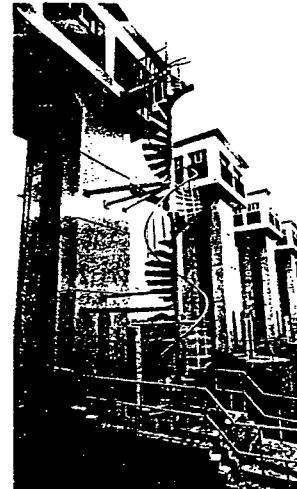
통일대비 기술축적

- 남북농업 특성을 반영한 북한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수립 등 통일을 대비합니다.
- 통일후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전담 추진하게 됩니다.



기술개발 및 정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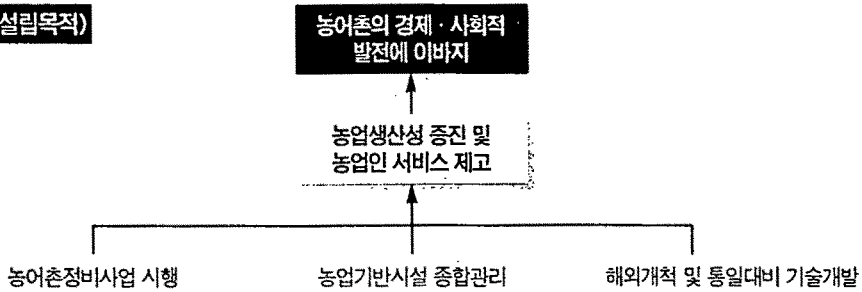
- 세계적 수준의 농업토목기술을 개발하여 해외진출 및 통일에 대비합니다.
- 물관리를 과학화· 전문화하여 농업기반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국의 농지 및 수자원에 대한 D/B 구축 등으로 기술정보화를 이룹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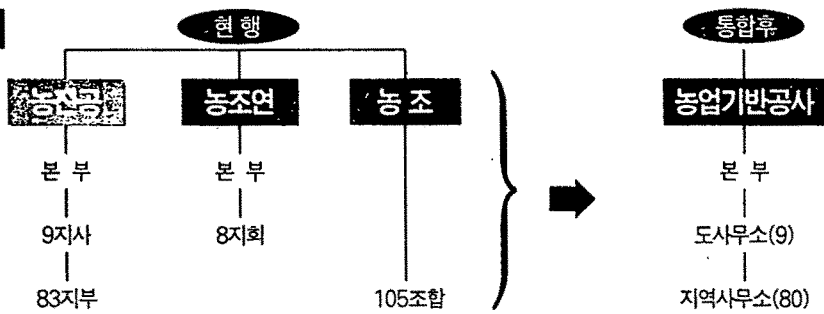
「농업기반공사」는 3개기관을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21C 선진 농어촌건설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새로운 조직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임무

임무(설립목적)



조직



유사, 중복 조직 및 기능 통폐합

- 조직의 슬림화
- 사업의 효율화
- 농업인 부담 경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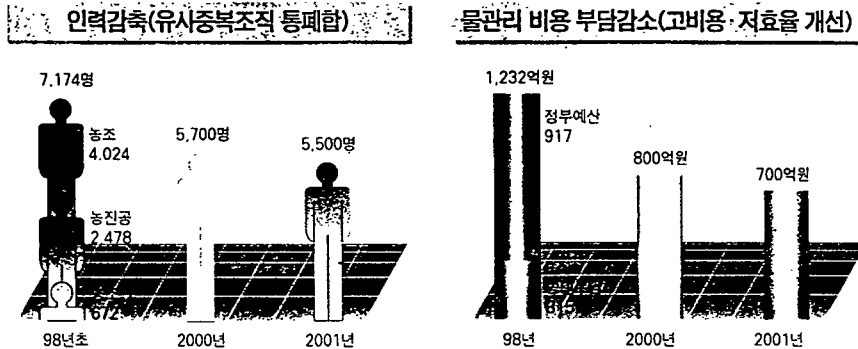


「농업기반공사」의 설립은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해당기관 직원들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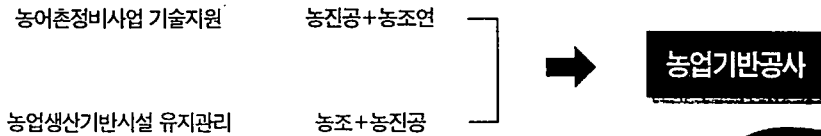
통합의 효과

- 조직통합과 경영개혁으로 고비용 저효율구조를 개선하므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농업인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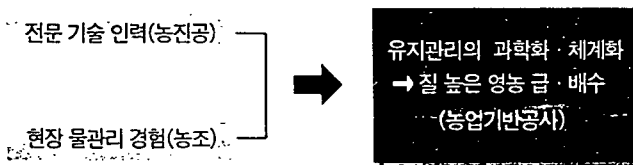
정부예산 및 농민부담경감



- 사업추진체계의 일원화로 업무의 능률화, 투자의 효율화 및 기술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 농진공의 전문인력과 농조의 현장경험이 결합되어 물관리의 과학화와 체계화를 이룸으로써 농업인에게는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별농조의 경영부실을 해소하셔서 현 농조조직은 물관리 업무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농 조

- 105개로 분산관리
 - 경영책임은 개별농조
 - 조합간 격차 심화 (자립농조 10여개에 불과)
- 비효율적 조직

농업기반공사

- 중앙에서 집중관리
 - 경영책임은 본부 임원진
 - 조합간 격차 해소
- 경영효율 증시



- 공사체제하에서도 농업인의 참여가 보장되는 열린농정을 구현합니다.

선거제도 폐지

- 조합장, 이사회, 대의원 제도
 - 비능률 및 각종 부조리 제거 (각종선거로 인한 비용낭비, 선거과정의 비리 등 근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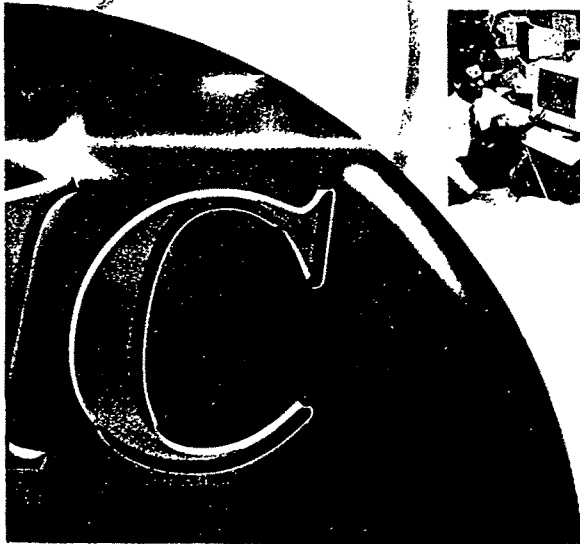
운영위원회

- 농업인 참여 보장
 - 지역 기관장 임명
 - 물관리 업무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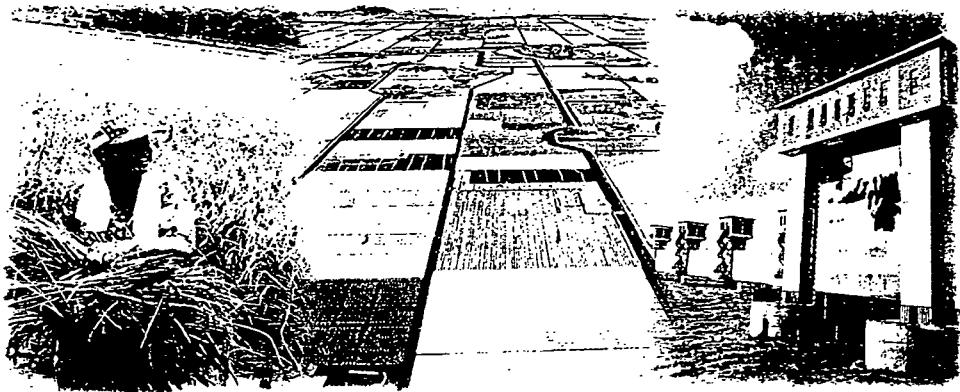
- 직원들의 신분이 보장되고 근무여건이 개선됩니다.

- 통합후 직원은 신분이 보장되고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근무여건이 개선됩니다.



「농업기반공사」는 다가올 21C 통일농정을 준비하고 선진농업·농촌을 구현하는 중추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농업기반공사의 작당목표



선진 농어촌 건설

농업경쟁력 제고

통일농정 대비



7. 장관 및 국장서한(3회)

여 백

존경하는 姜三載 의원님께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항상 우리 농업과 농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고개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기능의 중복과 조직운영의 비효율등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어촌진흥공사등 농업생산기반정비 관련조직의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조등 운영문제는 정부수립이후 역대정부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혁을 시도했었으나 이루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여야 3당 모두 통합에 찬성하는 당론을 모아주셨고, 정부에서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3개기관 통합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법률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방안은 농조·농조연·농진공등 3개기관을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21세기 선진농업을 이끌어갈 새로운 조직(가칭 농업기반공사)으로 탄생시켜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예산절감과 대농민 서비스 향상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의원님께 3개기관 통합의 취지와 내용을 우선 서면으로 설명드리고자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안의 내용과 관련자료를 동봉하였으니 이 법안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8. 11. 28

농림부장관



안녕하십니까!

금년은 이상 기후 영향으로 유달리 가뭄과 홍수가 극심했던 한해였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 전국을 강타했던 게릴라성 집중호우와 때늦은 태풍 “애니”등 연속된 기상재해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전국의 농지개량조합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자기 직분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풍년 농사 달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결과로 우리 농민들은 예년 수준에 달하는 풍작을 기대하면서 금년 최종 농사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그 동안 기능의 중복과 조직운영의 비효율 등으로 문제가 제기되어온 농조, 농조연, 농진공동농업생산기반정비 관련기관의 개혁 방안을 마련, 3개 기관을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조직의 효율을 높여 예산을 절감하고 대농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수립이후 역대 정부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혁을 시도했었으나 이루지 못해온 것을 국민의 정부에서 농업 분야 최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서 농업과 농민을 살리고 농조 직원에게도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임직원들이 정부의 구조조정의 참뜻을 오해 또는 왜곡시킴으로써 적지않은 직원들께서 3기관 통폐합 계획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지 못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신분 보장과 관련하여 통합을 반대하는 일부계층에서는 3기관이 통폐합되면 대부분의 농조 직원들은 퇴출될 것이라는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통합에 반대토록 선동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예를들면, 영어시험이나 학력 비교 등을 통해 농조 출신은 퇴출시킨다거나 근무지를 변경시켜 스스로 퇴출하게 한다는 등의 유언비어로 선량한 직원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기관이 통폐합되면 지역단위로 운영위원회를 두어 조직·인사 운영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특히 그 지역실정에 밝은 직원을 우대하도록 하기 때문에 농조직원이 불리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IMF체제하에서 국가적인 경제난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을 비롯한 일반기업, 금융기관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조의 구조 조정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것으로서 통합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인원 감축은 불가피한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농조의 경우 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정년을 인하여 조정할 경우 상당한 인력이 감축되기 때문에 통합으로 인한 인위적인 인력 감축은 오히려 적을 뿐만아니라, 통합이후 남게되는 직원은 공인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 신분은 보장되고, 보직이나 승진 등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등 근무여건이나 보수수준이 개선되어 직원의 안정성이나 발전성 측면에서 현재보다 유리해지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여 현명하게 대처 해주시길 바라며, 만약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직원을 대상으로 계속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개혁을 반대하는 사례 또는 3기관 통폐합 정책에 반영시킬 건의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알려 주시면 보안을 유지하면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정부가 추진하는 3기관의 통폐합은 그 동안 농업생산기반정비 관련 조직의 기능중복과 비효율을 제거하고 21세기 선진 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새로운 조직 체계를 갖추려는 것으로서, 우리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제고,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복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도 확신을 가지시고 정부의 구조조정 시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8. 10.

농림부 농촌개발국장

손영수

Tel : 504-9400, 9402-3

Fax : 507-3964

남께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기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하시는 일마다 많은 발전과 성취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영농현장의 최일선에서 맡은 바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해주신 농지개량조합과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의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예년에 보기도문 집중호우와 태풍등 기상재해가 겹쳐 농지개량조합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농업용수관리에 많은 고생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계실 줄로 믿습니다만 농조·농조연·농진공등 3기관의 통합 및 새로운 농업기반공사의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급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정부가 3개기관의 통합을 추진한 것은 그동안 기능중복과 조직의 비효율 등으로 문제가 되어온 농업생산기반정비관련 조직을 효율화 하고 21세기 선진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새로운 조직체계를 갖추어 우리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제고, 그리고 통합관련기관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또는 막연한 피해의식 등으로 통합입법 추진과정에서 농지개량조합 등의 임직원 여러분들 사이에 많은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로인해 정부와 통합대상기관간 또는 통합대상 당사자간에 때때로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었던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입법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이상 소모적인 논쟁과 대립·갈등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모두가 지난날의 감정을 씻어버리고 오로지 우리농업의 발전을 생각하고, 더 훌륭한 조직을 만들어 농업인에게 더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몰두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간 개혁추진 과정에서 야기되었던 통합반대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조치를 98.12.31자로 모두 취하 하였으며, 통합논쟁과 관련하여 그동안 발생했던 일련의 불미스러운 활동에 대해서도 향후 일체 문제삼지 않을 것입니다.

3기관 통합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이 우려하던 사항들은 입법과정에서 대부분 보완되었습니다. 재산권 침해에 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부칙조항에 농조 및 농조연으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하였으며, 조합장 등 임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직위에 상응하는 직무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조직원의 인사배치시에는 물관리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토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설립위원회에 농조 등 해당기관 대표를 포함토록 하고, 분사무소에 운영대의원회를 두며, 주사무소에는 운영대의원회 대표로 구성되는 자문기구를 두도록 규정하는 등 공시운영에 농업인의 참여를 보장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설될 기관은 이와같은 제도적 장치하에 특정기관 출신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입니다.

이제 1999년도를 맞이하여 20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세기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농업·농촌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 나갑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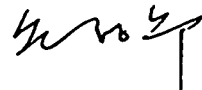
그동안 상호간의 이해의 부족 또는 견해의 차이에서 발생되었던 얼굴 붉힐만한 일들은 모두 떨쳐버리고, 대립과 갈등을 화해와 화합으로 승화시켜 21세기 선진농업·농촌건설을 위해 다함께 매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묘년 새해를 맞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한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9. 1.

농촌개발국장 손정수 배상



여 백

8. 농조노조에 대한 직무유기 및 명예훼손 고발(4회)

여 백

고 발 장

고발인 : 농림부
법무담당관 이창범

피고발인 : 전국농지개량조합100만농민조합원회
회장 김정권의 6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고 발 장

고발인 : 농림부

법무담당관 이창범 (37세)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 피고발인
1. 전국농지개량조합 100만 농민조합원회(서산농지개량조합 대의원)
회장·김정권 (46세)
충남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2. 전국 농지개량조합 100만 농민조합원회(영산강농지개량조합 대의원)
수석 부회장 이공열 (68세)
전남 나주시 공사면 동촌리 716
 3. 전국 농지개량조합 100만 농민조합원회(동진농지개량조합 대의원)
부회장 유재철 (60세)
전북 전주시 감곡면 유정리 학두
 4. 전국 농지개량조합 100만 농민조합원회(포항농지개량조합 대의원)
부회장 손진안 (62세)
경북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158
 5. 전국 농지개량조합 100만 농민조합원회(춘천농지개량조합 대의원)
총무 오홍만 (48세)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산천1리 256-3

6. 음성 농지개량조합
 대의원 김혁재 (51세)
 충북 음성군 금왕면 각회리
7. 하동 농지개량조합
 대의원 김재성 (38세)
 경남 하동군 양보면 통정리 247

피고발인 7인에 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명예훼손의 혐의사실로 고발하오니 조사하시어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분관계

고발인은 농림부에 법무담당관으로 재직중이고, 피고발인 김정권은 전국농지개량조합 100만 농민조합원회 회장(서산 농지개량조합대의원)으로, 동 이종열은 전국농지개량조합 100만 농민조합원회 수석부회장(영산강 농지개량조합 대의원)으로, 동 유재철은 전국농지개량조합 100만 농민조합원회 부회장(동진 농지개량조합 대의원)으로, 동 손진안은 전국농지개량조합 100만 농민조합원회 부회장(포항 농지개량조합 의원)으로, 동 오홍만은 전국농지개량조합 100만 농민조합원회(춘천 농지개량조합 대의원)으로, 동 김혁재는 음성 농지개량조합 대의원으로, 동 김재성은 하동 농지개량조합 대의원으로서 각각 재직하는 자들입니다.

2. 혐의사실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농업기반 및 수리관련 분야의 구조조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등 3개 기관·통합을 반대하기 위해 '98. 9. 18. 한국일보 1면에 “「전국 농지개량조합 100만 농민조합원회」결성에 즈음하여”라는 성명서를 광고하면서 농림부 및 농림부장관을 비방할 목적으로 농업인의 애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주말을 이용 농림부장관의 직접 농촌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장관실」 운영을 “농림부장관은 거리의 악사처럼 이곳 저곳 이동하며 나팔만 불어대는데 되는 것이 무엇이고, 해 놓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표현하는 등 여러곳에서 농림부 및 농림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의법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한국일보('98. 9. 18자) 광고 1부.

1998. 9. 23

위고발인 농림부

법무담당관 이창범

고 발 장

고발인 : 농림부

법무담당관 이 창 범

피고발인 : 기호농지개량조합

대의원 서 정 용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내우리 214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고 발 장

고 발 인 : 농림부

법무담당관 이 창 범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피고발인 : 기호농지개량조합

대의원 서 정 용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내우리 214번지

피고발인 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명예훼손 혐의 사실로 고발하오니 조사하시어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분관계

고발인은 농림부에 법무담당관으로 재직중이고, 피고발인 서정용은 기호농지개량조합 대의원으로 재직하는 자입니다.

2. 혐의사실

피고발인은 정부가 농업기반정비관련 조직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3개기관 통합을 반대하기 위해 '98.9.24 국회농림해양위원회 의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농림부 및 농림부장관을 비방할 목적으로 “김 장관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이제 29살이 된 자신의 둘째 아들의 병역을 면제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김 장관에게 있어서는 농어촌진흥공사는 '88년 3월 11일부터 '90년 2월 24일까지 위촉직 이사로 일한 곳이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 파산직전인 농어촌진흥공사를 살리기 위한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표현하는 등 여러곳에서 농림부 및 농림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의법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1. 농림해양위원회 의원배포 유인물 1부.
2. 자녀 병역관계 자료목록 1부.
3. 언론계 및 기타동향 1부.

1998. 9. 25

위고발인 농림부
 법무담당관 이 창 범

고 발 장

고발인 : 농림부

농촌개발국장 손 정 수

피고발인 : 김 용 전국농조노조 의장 (55세)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문봉동 100

최수원 전국농조노조 경기 부지회장 (43세)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943-6

김부동 전국농조노조 강원 지회장 (42세)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오덕8리 세용APT 나동307호

이상진 전국농조노조 충북 지회장 (43세)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917

강인식 전국농조노조 충남 지회장 (52세)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46-11

김재효 전국농조노조 경남 지회장 (47세)

경남 함안군 배산면 우해리 771-2

김종석 전국농조노조 전남 지회장 (40세)

전남 영암군 시종면 만수리 931-5

박경필 농조연합회 노조위원장 (38세)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1-889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고 발 장

고발인 : 농림부

농촌개발국장 손 정 수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피고발인 : 김 용 전국농조노조 의장 (55세)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문봉동 100

최수원 전국농조노조 경기 부지회장 (43세)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943-6

김부동 전국농조노조 강원 지회장 (42세)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오덕8리 세용APT 나동307호

이상진 전국농조노조 충북 지회장 (43세)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917

강인식 전국농조노조 충남 지회장(52세)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46-11

김재효 전국농조노조 경남 지회장(47세)

경남 함안군 배산면 우해리 771-2

김종석 전국농조노조 전남 지회장(40세)

전남 영암군 시종면 만수리 931-5

박경필 농조연합회 노조위원장(38세)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1-889

피고발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및 직무유기의 혐의사실로 고발
하오니 조사하시어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분관계

고발인은 농림부 농촌개발국장으로 재직중이고, 피고발인 김 용의 7인은 전국농조노조위원장 및 각도 (부)지회장으로 재직하는 자입니다.

2. 혐의사실

피고발인은 정부가 농업기반정비관련조직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 3개기관의 통합을 반대하기 위하여 조합원 인장을 도용한 불법서명을 주도하였으며, '98. 9. 30 태풍 예니호에 의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예상되는 농경지 침수 및 농업기반시설의 파손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대규모 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지개량조합법 제89조에 의거 농림부장관이 명한 비상근무지시를 무시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선량한 농민들을 선동, 동일 12:00 부터 15:30 까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3개기관 통합반대시위를 주도하였으며, 동 시위 및 농림부·농림부장관에 대한 비방광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을 강요하였다는 혐의가 있으며, 통합반대시위시 농림부장관을 비방할 목적으로 「농지개량조합 자체개혁방안 수용촉구 및 투쟁관련 속보」라는 유인물중 농토만평이라는 삽화에서 농림부장관 아들이 출국하면서 “병역기피 신경좀 써주세요”라고 표현하는 등 농림부 및 농림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위 비상근무지시를 위반하여 수리시설 유지관리의 직무를 유기한 피고발인들을 의법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증빙자료 1부.

1998.10.7

위고발인 농림부 농촌개발국장

손 정 수

고 발 장

고 발 인 : 농림부 개발정책과장 김 영 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피고발인 : 1. 김용 전국농조노조 공동의장(56세)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문본동 100
2. 박경필 전국농조노조 공동의장(39세)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1-889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고 발 장

고 발 인 : 농림부

개발정책과장 김 영 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피고발인 : 1. 김용 전국농조노조 공동의장(56세)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문본동 100

2. 박경필 전국농조노조 공동의장(39세)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1-889

위 피고발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직무유기, 무고, 공문서 위조·변조, 공문서부정행사,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의 교사,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등의 혐의로 고발하오니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분관계

고발인은 농림부 농촌개발국 개발정책과장으로 재직중이고, 피고발인 김용, 박경필은 전국농조노조의장으로 재직하는 자입니다.

2. 혐의사실

농림부는 역대정부에서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혁을 시도해왔으나 실패했던 농업기반 및 수리관련 분야의 구조조정을 위해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등 3개기관을 통합하여 농업기반공사를 설립하는 근거법률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제정과정에서, 이 법 제정을 반대하는 피고발인이 각종 일간지 광고와 집회유인물을 통하여 농림부 및 농림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과 지난 1998. 9. 30. 농림부의 비상근무지시에도 불구하고 수리시설의 유지·관리라는 직무를 저버리고 상경하여 통합반대집회를 주도함으로써 막대한 수해를 초래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1999. 1. 5. 위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 그때까지의 논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대상기관의 화해와 화합을 이루기 위하여 위 고발조치를 취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은 농림부의 이러한 화합을 위한 배려에도 불구하고, 1999. 2. 5. 공포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법률 제5759호)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 설립 작업을 반대하고 지연시키기 위하여 농림부 및 농림부장관을 비방할 목적으로 1999. 10. 16자 중앙일보 4면에 “민심·농심이반 주역 김성훈 장관을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하면서 농림부가 정당한 권한과 책무에 따라 벼 수확기간 중 수시 강우 예보와 폭풍주의보 등 기상특보에 따라 수확기의 농작물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부분부를 비롯하여 모든 농림관계기관에 비상근무태세를 확립하여 근무지이탈이 없도록 지시한 것에 대하여 농림부가 공권력을 남용하여 피고

발인 등이 개최할 예정이었던 통합반대를 위한 집회의 방해를 획책하였다고 하고, 1999. 11. 27자 중앙일보 4면의 “노·사자율교섭 방해하는 김성훈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라는 제하의 광고에서 농림부가 정당한 감독권의 행사로서 각 시·도지사에게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 및 동보수규정준칙 등 농림부 훈령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을 철저히 지도·감독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이를 농림부가 피고발인이 사용자단체와 추진중인 단체교섭을 방해하는 등 노동조합 파괴공작을 추진한 것이라 하고 부도덕하다는 등의 표현을 하는 등 여러 곳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부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농림부장관을 농심·민심 이반의 주역으로 표현하는 등 농림부 및 농림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농림부장관을 집회방해 및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위협하여 위와 같은 농림부의 정당한 직무행사를 방해·저지하려 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또한 농림부가 전술한 바와 같은 배경 하에 시·도지사에게 발송한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감독철저 지시공문을 변조하여 위 1999. 11. 27자 중앙일보 광고에 게재하고, 1999. 7. 16. 기획예산처가 농림부에 발송한 공문서를 변조하여 1999. 9. 1.자 경향신문 27면 광고에 게재하는 등 정부의 중요한 공문서를 농림부와 기획예산처의 의사에 반하여 변조하였음은 물론 옳지 않게 함부로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위 피고발인은 1998년 3개 기관 통합법률의 제정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농림부 농촌개발국장 전결로 농림부가 농지개량조합에 대하여 태풍예니호의 복상에 대비하여 농지개량조합에 비상근무지시를 한 것을 두고 직권을 남용하여 자신들이 계획한 집회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형사처분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농림부장관을 검찰에 무

고(1999. 9. 9. 서울지방검찰청은 농림부장관에 대하여 무혐의 처리하였음) 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그 주된 직무가 수리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고 작년 9. 30. 태풍예니호의 북상중에도 근무지를 이탈하여 통합반대집회를 주도함으로써 농작물피해를 가중시킨 일이 있음에도, 금년에도 수확기 계속된 강우로 인한 농작물 침수피해를 줄이고 기상당국에서 10. 17 전국적으로 강우 및 태풍이 예상된다는 예보에 대해 농림부가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등 수리관련조직과 각 시·도, 농·축협등에 발령한 비상근무지시를 무시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지난 10. 17. 서울역 앞에서 통합유보시위를 주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더욱이 피고발인들은 농지개량조합의 대부분의 재산이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등 국가목적수행을 위해 막대한 국고가 투입된 결과 조성·유지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수리시설의 개·보수 등을 통해 농업인들을 위해 사용될 재산임에도, 통합을 불과 수십일 앞둔 과도기적 상황을 이용하여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취득하고자 직원들의 퇴직금조차도 적립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극히 열악한 재정상태에 있는 농지개량조합에 지난 수십년간 적용해온 농지개량조합보수규정준칙(농림부예규)등 관련규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농지개량조합장들에게 요구하여 농지개량조합에 손해를 가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가 농업인을 위해 조성한 수리시설 관련 농지개량조합재산에 600억원이상의 손실을 입히게 하려는 등 농지개량조합장들로 하여금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을 하도록 교사한 바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상술한 바와 같이 명예훼손, 직무유기, 공문서위조·변조 등의 혐의사실을 상습적으로 행하고 있으면서도 3개 기관 통합을 앞두고 농림부가 화합의 차원에서 배려하여 이러한 혐의에 대하여 피고발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 사실을 두고 검찰이 무혐의처분을 하였다고 위 중앙일보 10. 16자 신문에 광고하는 등 공조직의 일원로서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패륜적인 행태를 자행하면서 반성의 빛이 전혀 없는 자들로서 법에 의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 피고발인 중 김용은 농림부가 3개기관 통합을 앞두고 준칙의 개정을 통해 마련한 직원의 정년단축 및 명예퇴직 등으로 직원들이 연쇄 승진하는 등 농지개량조합내 조직의 활성화가 이루어져 직급이 아직 낮고 젊은 직원으로 구성된 농지개량조합 노조원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음에도, 본인이 정년단축으로 1999년말에 퇴직해야 할 처지에 있음을 기화로 대다수 농지개량조합 노동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정년단축을 내용으로 개정된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농림부훈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자신의 정년을 연장하려는 등 직권을 남용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헌법소원청구가 각하되자 헌법재판소가 동인사규정준칙이 무효인 행위임을 확인한 것이라는 등 허위사실을 위 1999. 11. 27자 중앙일보 광고에 신고, 일부 농지개량조합에서 위 농림부훈령에 따라 1999년말 퇴직할 대상자에게 대기명령을 한 것에 대해, 해당 농지개량조합이 이사회 의결과 근로자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당사자를 원직복귀토록 할 것을 지방노동위원회가 판정하였는 바, 이를 마치 위 농림부준칙이 무효인 것처럼 왜곡하여 전술한 1999. 11. 27일자 중앙일

보에 광고하는 등 자신의 정년연장을 위해 노조활동을 병자, 농지개량조합의 전직원을 담보로 삼아 갖은 수단을 동원하는 등 파렴치한 자로서 더욱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증빙자료 1부.

1999. 11. 29

위 고발인 농림부 개발정책과장

김 영 만

여 백

9. 여·야 3당 및 농업인단체 통합지지 입장발표 사례

1. 국민회의·자민련의 3개 기관 통합방침
확정발표
2. 한나라당의 3개 기관 통합지지 성명
3. 농업인단체의 반응

여 백

1. 국민회의·자민련의 3개기관 통합방침 확정발표

농정분야 당정협의 결과

공동 집권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98.11.20 (금) 07:30 국회에서 주요 농정현안에 관한 당정협의를 갖고 IMF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부담경감과 농촌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률개정 등의 조치를 금년 정기 국회에서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 ① 농업인의 불편해소와 각종 진입장벽 철폐로 공정경쟁과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분야 총 규제 701건중 75.2%에 해당하는 527건을 금년중에 폐지(362건) 또는 개선(165건)하기로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24개 규제 관련법률을 개정한다. 다만, 농지전용완화 및 축산업 등록·허가제 폐지는 국회심의 과정에서 재검토한다.
- ② 기존 농특세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농어촌 구조개선특별회계에 별도계정을 설치하고 재원확보 방안도 제도적으로 확고히 마련한다.
- ③ 국민의 정부 『농업·농촌발전계획』을 구체화한 『'99년이후 중장기 농촌투융자계획』을 정부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금년말까지 마련한다.
- ④ 농가경제의 회생을 위해 중장기 정책자금 금리를 6.5%에서 IMF이전 수준인 5.0%로 환원하고 '98.10~'99기간중 상환도래하는 생산성 중장기정책자금 상환을 2년 순연한다. 생산목적의 상호

금융부채에 대해서는 농가의 경영안정차원에서 성실농가를 엄선하여 정부와 협동조합이 함께 저리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 부채대책추진에 따른 보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해 주는 특례규정을 마련한다.

※ 금리인하에 소요되는 예산 600억원은 정기국회 예산심의시 이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 ⑤ 중간유통비용을 줄여 농가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는 농산물 유통개혁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금년 정기국회에서 개정한다. 일부 쟁점이 되고 있는 도매상제도의 도입은 농업인의 출하선택권 확대차원에서 법으로는 허용하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신설 또는 지방도매시장에 시험실시하고 그 실효성이 입증될 경우 확대 적용한다.
- ⑥ 한국마사회는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어려움에 빠진 축산업 진흥을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을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농림부로 이관한다.
- ⑦ 농업생산기반 정비조직인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3개기관은 11.5 국정협의회에서 당정간에 합의한대로 2000년 1월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제정한다.

1998. 11. 20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원회 의장 김 원 길

자유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의장 차 수 명

2. 한나라당의 3개기관 통합지지성명

<p>▶ 현 정권의 부정부패와 머리 신고전화 782-1230 www.@hannara.or.kr</p> <p>▶ 당비 자동납부전화 700-2111 1통화 : 5,000원</p>	<h1>성명</h1>	<p>政爭의 광과 참용 녹여 政策의 정기를 만들겠습니다.</p> <p>☎ : 783-9811(교,전문위원실) Fax : 3786-3690</p>
---	-------------	--

- 농조통합을 지지하며 정부의 분발을 촉구한다 -

- 그간 농업계에 논란이 되어온 농조·농조연·농진공사의 통합 및 농업기반 공사 설립문제에 관하여 우리 한나라당은 여러 경로를 통한 여론 수렴과 진지한 검토 끝에 농조재산권 귀속의 문제, 수세철폐관련 예산문제, 그리고 민영화추세에의 역행문제 등에 미진한 면이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조직의 슬림화를 통한 구조조정이라는 大義에 맞도록 3개기관을 통합하여 하나의 기관이 겨울에는 농지개발·관리, 여름에는 물관리를 함으로써 농업기반 및 물관리 조직의 효율화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 이로써 朝野간의 소모적인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농업인이 하나가 되어 산적한 농업과제를 풀어 나가는데 합심협력하는 자세로 매진할 것을 충심으로 기원한다.
-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제2단계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획 마련,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이관, 정책자금을 포함한 영농자금의 금리 5% 수준 인하, 농어촌특별세 존치, 농어가저축 비과세기간 연장 그리고 내년도 농어촌 예산의 합리적 증액 등을 통해 생명산업·안보산업인 농수산업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각별히 분발할 것을 엄히 촉구하는 바이다.

1998. 11. 26.

한 나라 당 정 책 위 원 회
의 장 강 현 옥

3. < 농업인단체의 반응 >

가. 한나라당의 농조·농조연·농진공 통합지지 환영(한농연·한여농)

□ 성 명 서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황창주(黃昌柱)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편정옥(片貞玉)

● 한나라당의 농조·농조연·농진공 통합 지지를 환영한다 ●

- 농조통합반대 청원 서명의원은 당론에 따라 철회의사를 밝혀야 한다 -

한나라당이 농조·농조연·농진공 통합에 적극 찬성하는 당론을 확정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대해 커다란 환영의 뜻을 표한다.

농조·농조연·농진공 통합은 농관련 기구의 개혁을 통해 농업인에 실익을 돌려주기 위한 농정개혁의 시급적이다. 기득권과 조직이기주의의 반발에 개혁이 물러서느냐, 더 높은 차원의 개혁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는가 하는 귀로에 서있는 것이다.

그동안 개혁에 반발하는 농조와 농조연의 기득권을 중심으로 잦은 집단행동과 악의적 왜곡이 평행한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마저 농조의 반개혁적인 주장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개혁의 좌절이 우려되어 왔다.

이러한 순간에 한나라당이 과감한 결단을 내려 농조·농조연·농진공 3개 기관 통합에 찬성하고 나섬으로써 성숙한 원내 다수야당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농조·농조연·농진공 통합에 찬성하는 5백만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민의를 수렴하는 정책정당의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크게 환영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조·농조연·농진공 3개기관 통합을 위한 법안이 여야의 합의속에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을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론 결정이전에 농조의 통합반대 청원을 소개에 참여한 각당 소속 의원들은 통합반대 주장을 철회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조통합 반대 청원에 서명한 의원들은 5백만 농업인의 개혁열망을 그대로 받아들여, 농조통합반대 의사를 번복하여 개혁에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998년 11월 2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나. 한나라당의 농조·농조연·농진공 통폐합 입장 환영(농단협)

성명서

한나라당의 농조·농조연·농진공 통폐합 입장을 환영한다

11월 26일 한나라당이 오랜 숙고 끝에 농조·농조연·농진공 통폐합 및 농업기반공사 설립문제에 대한 지지입장 표명을 적극 환영해 마지 않는다.

농조·농조연·농진공 통폐합은 농민단체를 비롯한 농업계 내부의 통일된 입장임은 물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농정개혁의 선결과제가 누차 확인되어왔던 차이다. 업무의 유사중복과 방만한 운영 그리고 자체개혁의 지지부진 등은 이들 기관의 통폐합과 이를 통한 농업기반공사 설립의 가장 기초가 되는 요건들이다.

농조·농조연·농진공 통폐합과 농업기반공사 설립은 국민정부의 농관련 기구 개혁의 시금식으로 향후 농업 개혁의 가능자로 큰 비중을 차지하여 왔고 더욱이 5백만 농업인의 한결같은 지지속에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통폐합의 당위성과 범농업계의 지지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관의 구조조정은 당사자들의 집단 행동 등 조직적 이기주의에 부딪혀 큰 난관에 봉착하였고, 정치권에서도 분분한 의견이 노출되는 등 자칫 개혁의 좌초가 우려되기도 하였다.

한나라당의 “농조통합을 지지하며 정부의 분발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의 성명은 농조·농조연 측의 집단이기주의에 썩기를 받고 농업발전을 위한 오랜 숙고 끝에 나온 결론으로 5백만 농업인의 민의를 올바르게 수렴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들 기관의 구조조정 입장과 함께 한나라당이 국회내 제일 다수당으로서 농업발전을 위해 전향적인 정책과 함께 여권의 미진한 농정을 적극 견인하고자 하는 노력을 또한 크게 환영하며 감사를 표한다.

우리는 여·야의 합의를 거친 농조·농조연·농진공의 통합을 통한 농업기반공사 설립 등이 이번 정기국회중에 반드시 구체화된 결실이 있기를 바라며, 농정개혁차원에서 한국마사회 농림부 환원과 제2단계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계획 마련 등의 여·야 합의사항도 함께 처리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바이다.

농조·농조연·농진공 통합에 대한 한나라당의 성명을 거듭 환영하며, 향후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당으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가기를 함께 요청하는 바이다.

1998. 11. 27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화 : 02-521-7181, 팩스 : 02-584-5144)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기독교농민회,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생활개선중앙회, 한국포도회

다. 농조·농조연·농진공 통합법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어야(한농연)

□ 성 명 서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黃基柱)

● 농조·농조연·농진공 통합법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

- 농조·농조연 반개혁 활동에 동조한 국회의원은 지지를 철회하라 -

5백만 농업인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농조·농조연·농진공 통합에 반대하는 정원이 부러 30명의 국회의원의 소개로 받아들여진데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변화된 농업생산 구조에 걸맞는 농정기구의 개혁은 농업인 부담 경감, 농업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농조·농조연·농진공의 통합 작업은 농정기구 개혁의 시작이자 시험대가 되고 있다.

농관련 기구의 최우선 개혁과제에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농조와 농조연의 통합반대 청원에 여야 국회의원 30명이 찬성한 것은 5백만 농업인을 위한 개혁과제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농조와 농조연은 통합반대의 주된 이유로 농민조합원의 재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의보통합 등의 사례에서 복리 증진을 위한 통합과 공공 재산의 승계는 합헌이라는 판결이 난 바 있으며, 농조의 수리시설 관리주체가 바뀐다고 해서 농민에게 시세의 혜택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농조의 재산을 농민조합원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문제는 농업용수 관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확충하여 농업인의 편익을 증대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유사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통합관리하자는 농림부 3개기관 통합안은 한농연 여론조사 결과 76.1%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지난 17일 한농연 대회에서도 9대 요구사항의 하나로 2만여 농업경영인의 압도적인 찬성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농조와 농조연은 농림부의 통합방안보다 강도높은 개혁방안을 스스로 마련했다는 수장을 하고 있지만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미 농조와 농조연은 94년 농발위에서 농민단체의 통합주장에 자재적인 개혁을 약속했지만 이의 이행을 갖가지 이유로 미뤄오다 오늘의 3개기관 통합을 스스로 유망했다.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자체개혁안 제시로 개혁의 파고만 남자는 기회주의를 반복하고 있다.

한농연은 농조·농조연·농진공 통합법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기득권에 사로잡혀 반개혁을 외치고 있는 농조와 농조연의 청원에 서명한 국회의원들은 국정의 남지자로서 5백만 농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성찰해야 한다.

한농연은 농조와 농조연의 개혁반대 주장에 동의하는 서명을 한 30명의 의원에 지지철회를 요구하며, 농림부가 제출할 통합법안의 불과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998년 11월 2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라. 농조·농조연·농진공 통합반대 서명의원중 일부 철회(한농연)

□ 보 도 자 료 □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黃 昌 柱), 98년 11월 21일

● 농조의 기만과 파렴치를 고발한다 ●

- 농조·농조연·농진공 통합 반대 의원서명 중 일부 철회
- 자체 구조조정 건의에 동의하고 서명했을 뿐이라고 밝혀

농조의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정과 농지개량조합법 개정에 따른 청원”에 서명한 30명의 의원중 자민련 변용전의원실 관계자는 “통합에 반대하는 내용에 서명한 것이 아니며, 농조 자체 구조조정을 한다고 농조 노조 관계자가 자꾸 찾아와 서명해 주었을 따름”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변용전의원은 농림해양수산위에 있을 때 농조·농조연·농진공의 통합을 주장했었고, 지금도 통합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농조측에 서명철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은 한농연이 농조의 청원접수 사실에 강력히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30명 의원에 대해 해명과 통합반대 의사를 재차 확인해줄 것을 요구하자, 해당 의원실에서 해명에 나서면서 속속 밝혀지고 있다.

변용전 의원실의 해명에 따르면, 농조는 통합반대 여론을 만들기 위해 자신들의 청원 내용을 정확히 알리지 않고 의원서명을 받아내었을 개연성이 있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자신들의 주장의 일부만을 강조하여 의도적으로 청원내용을 오인토록 했다면 서명국민의원 뿐 아니라 5백만 농업인을 기만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한농연은 변용전 의원실과 같이 정확한 내용에 합의하지 않고, 농조관계자가 지속적으로 방문하자 자체 구조조정안으로 알고 서명해준 의원이 다수있을 것으로 보고, 의원실에 확인 작업을 계속 진행중에 있다.

다. 3개기관의 통폐합을 환영하며(전업농)

3개기관의 통폐합을 환영하며...

저희 전업농들은 장관님께서 그 동안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바쳐 노력하심에 진심어린 경의를 표하며, 개혁 농정을 수행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쌀 생산 전문농업인들인 전국 63,373명의 “쌀”전업농들은 그 동안 주곡인 쌀 자급을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여 왔습니다.

아뢰을 말씀은 최근 농업생산기반정비관련 조직 통폐합 추진에 관하여 저희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어촌진흥공사등 농업생산기반정비관련 3개기관을 통합, 조직의 효율을 높여 예산을 절감하고 대농민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농정대개혁 차원에서 추진하고 계신 3개기관의 통폐합은 5백만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의 강력한 요구이며, 특히 그 직접대상자중 가장 중심이되는 쌀 전업농들은 이를 강력히 요청드릴 바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 이것은 IMF 관리체제 극복과 21세기를 대비한 식량안보 수행을 위해서는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관련기관 3개기관의 통폐합은 필연적인 시대의 흐름이라고 사료되며 한편, 장관님의 농정개혁의지를 공감한 여야 정치권에서도 3개기관 통합을 적극지지하고 있는데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무분별한 통합 반대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현실을 통탄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우리 63,373명의 쌀 전업농은 농지개량조합이 우리 농업에 적진적적으로 관련된 농업지원조직인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9월 25일 태풍 정보가 발효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로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농조직원들이 농조직원들이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은 커녕 지역 주민들을 동원하여 통합반대 집회에 참가시키므로써 본분을 상실하고 이기주의와 극단을 표출한 바 있으며, 또한 모든 농업인들의 축제일이며, 온 국민에게 “농민·농촌사랑” 정신을 전파하고 모두가 하나된 “농업인의 날”에 “동폐합저지대회”를 개최하여 축제분위기를 파괴하고, 자기 이익만을 챙기며, 집단이기주의를 관철하려는 기도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농조가 과연 우리 농업에 대한 애정이 있나, 없나의 여부를 떠나 농업지원조직으로서 기능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도 서슴치 않을 조직이며, 자신외에는 그 무엇도 인정하지 않는 단체라고 간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농수로 관리 및 농업기반조성 사업의 이해 당사자는 농업인이며, 그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쌀 전업농들은 이와같이 반개혁적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아쉬움을 표명하며, 이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장관님께 감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전업농들은 농정개혁을 원하고, 정부의 개혁이 장관님의 의지가 흔들림없이 추진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장관님의 건승을 빌며, 우리 농업의 미래를 밝게 열어 주시길 간곡히 기원합니다.

1998. 11. 26.

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한수웅

※ 관련기사 모음

연합 H1-185_ S01-018 정치(756)

당정 '농업기반공사법' 등 국회서 처리키로

(서울=연합) 鄭在滂 기자 = 정부와 여당은 금년 정기국회에서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3개 기관을 '농업기반공사'로 통합하는 내용의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2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의회의 金元吉, 자민련 車秀明 정책위의장과 金成勳 농림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농림당정회의에서 정기국회 입법추진계획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안'은 농업기반정비사업 및 농업기반시설과 관련해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3개 기관을 자본금 5조원 규모의 농업기반공사로 통합하는 것으로 돼 있다.

법안은 농업기반공사가 농어촌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사업,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의 개발·보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등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제정, ▲농림장관 또는 해양수산장관이 우수농산물에 대해 품질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농수산물 인증제도'와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 농산물을 대해선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임을 표시해 주는 '지리적 표시등록제도'를 각각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다양화를 위해 도매상제도를 도입하고 농수산물의 매수 및 수탁을 허용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끝)

(YONHAP) 981120 0920 KST

内外經濟新聞
11月20日 4面

농가부채 상환기간 2년씩 順延

·당정, 정책자금 금리도 年5%로 환원 ·농진공등 3개기관 2001년 1월내 통합

정부와 여당은 20일 시중금리하락 등을 감안해 농가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를 현재의 6.5%에서 IMF이전수준인 5.0%로 환원키로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6백여억원을 99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또 농가부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호금융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성실농가를 엄선해 농가당 일정한도의 경영자금을 저리(6.5%)로 지원키로 했다.

이 자금은 농·축산경영자금융 일부와 농·축협중앙회의 자금으로 충당되는데 농가당 2천만원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와 함께 지난 10월부터 99년말까지 갚아야되

는 중장기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2년씩 순연시키기로 했다.

이는 정책자금의 상환을 단 순히 2년 연기할 경우 2년후에는 한꺼번에 2년분을 동시에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국민회의 金元吉·자민련 車秀明 정책위의장과 朴光泰·李相晚 제2정조위원장, 金成勳 농림부 장관 등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농가부채 경감과 7백여건에 이르는 농림부 소관 규제개혁방안 및 정기국회

상정법안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농진공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3개기관을 지난 5일 국정협의회에서 합의한대로 2001년 1월까지 5조원 규모의 농업기반공사로 통합키로 하고 이를 위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 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특히 유통분야 규제정비와 관련, 양곡매매업의 신고제와 민간인에 대한 도매시장 개설제한을 폐지

키로 했다. 또 농협 축협 농수산물유통공사로 제한되어 있는 농산물공판장 개설자격 제한도 폐지, 생산자조직도 공판장 개설이 가능토록 했다.

또 도시자본 등 외부자본의 농촌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농업인의 농업회사법인 출자한도 및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제한도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가구당 3ha로 제한돼 있는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소유상한을 가구당 5ha로 늘리는 문제와 공장설립을 위한 농지전용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폐지 등 농지분야 규제정비문제는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우원택 기자

신문보도 해명자료

(☎ 504-9402~3)

1. 보도요지 (내외경제 '98.11.20, 4면)

- 국민회의 및 자민련과 농림부의 당정회의에서 농진공·농조·농조연 3개기관을 지난 5일 국정협의회에서 협의한대로 2001년 1월까지 농업기반공사로 통합하기로 함

2. 해명내용 : 상기 보도내용중 3개기관 통합시기는 2001년 1월이 아니라, 2000년 1월임

농가부채 이자 5%로 인하

黨政합의 내년말 상환부채도 2년간 유예

한국의 농업과 농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농민들의 생활고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가부채 이자율을 6.5%에서 5%로 낮추고, 내년 말 상환부채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가부채 이자율을 6.5%에서 5%로 낮추고, 내년 말 상환부채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가부채 이자율을 6.5%에서 5%로 낮추고, 내년 말 상환부채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韓國經濟新聞 1999年10月27日

농가부채상환 2년연장 새만금·보령신항 유보

정부와 여당은 20일 농업경제 회생을 위해 중·장기 정책자금 금리를 현재 6.5%에서 5%로 낮추고 생산적 정책자금 중 지난 10월부터 99년 말까지의 만기 도래분에 대한 상환을 2년간 연장 해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 자민련 차수명(車秀明) 정책위의장과 김성훈(金成勳) 농림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등 3개 기관을 '농업기반공사'로 통합하는 내용의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매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이날 해양수산부와 당정회의를 열고 각종 항만에 대한 투자우선 순위를 재조정, 부산신항 광양항 인천북항에 투자를 집중하고 새만금신항 보령신항에 대해서는 공사를 유보하기로 했다.

김남국 기자 nkkim@



與 國政협의회

박경모기자

5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김종필국무총리(오른쪽에서 두번째)와 김종권청와대비서실장(오른쪽)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회수 못한 농촌지원금 1조4천억 2년 동안 원금상환 유예

국정협의회

김용철 기자

정부와 여당은 내년 말까지 농민들에게서 상환받아야 할 2조5000억원의 정책자금 중 1조4000억원에 대해 2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해주기로 5일 협의했다.

또 당정은 농·축·임업협동조합의 상호금융자금 중 내년 말까지 상환도래하는 13조원에 대해서도 원금상환을 2년 연기하고 금리도 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경영평가를 통해 부실로 판정된 영농법인 등의 원활한 제3차 인수를 위해 인수자금 1000억원을 용자해주기로 했다.

김성훈(金成勳) 농림부 장관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 참석, 이 같은 내

용의 농가부채 경감대책을 보고했다고 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 대변인이 밝혔다.

그러나 당정은 농가부채대책위원회가 건의한 내용 중 정책자금 금리를 6.5%에서 5%로 인하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농업진흥공사와 농지조합 및 농지개발조합연합회의 통합은 국고납비와 부조리·비능률요인을 제거한다는 농정개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기구를 통합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본면 의견·제보
politics@mk.co.kr

**Ⅱ. 농업기반공사 설립추진과 관련한
설립사무국 입장자료**

여 백

차 례

1. 농조노조 및 농진공노조 주장 등에 대한 설립사무국의 입장 ...	221
2. 화합과 순조로운 통합을 위한 설립사무국의 입장	230
3. 농진공 노조의 농조에 대한 감사요구 문제와 최근 농조의 시위·집회 등에 대한 설립사무국의 입장	232
4. 농조의 고용불안 우려에 대한 설립사무국의 입장	235
5. '99. 10. 17 서울역 농조 시위계획에 대한 설립사무국의 중간평가결과	238
6. 2000년 1월 농업기반공사 출범과 그에 따른 공정한 인사배치를 위한 설립사무국의 입장	241
7. 중앙일보 11. 27일자 농조노조 광고에 대한 설립사무국의 입장	243
8. 중앙일보 12. 10일자 농조노조 광고에 대한 설립사무국의 입장	246
9. 농초·농조연 광고에 대한 해명자료	254

<참고자료>

1. 농조의 허위주장 광고	257
2. 설립사무국 해명광고	260

여 백

농조노조 및 농진공노조 주장 등에 대한 농업기반공사 설립사무국의 입장

I. 발표배경

- 농조·농조연·농진공 통합법률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 여·야 3당 및 모든 시민·농업인단체 등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지난 1.5일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공포(2.5)되었음
 - 이를 계기로 모든 국민과 농업인의 관심은 2000년 1월 새롭게 출발하는 농업기반공사가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당초 정부가 약속한 조합비(일명 수세) 철폐 등 농민부담경감과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어떻게 이루어내는가에 집중되어 있음
 - 정부에서는 이러한 국민적 관심을 실현하고자 농업기반공사법에 따라 3기관 대표가 참여하는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농림부 및 각 기관의 직원으로 구성된 설립사무국을 설치하여 각 기관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그러나 3기관 노동조합에서는 이러한 국민적 기대와 설립사무국의 노력과는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어 유감이 아닐 수 없음
 - 통합을 앞두고 긴밀한 협조관계에 있어야 할 노조간의 대화 조차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조직 이기주의 차원의 억지·왜곡주장을 하여 농민단체들의 오해와 지탄을 받는 일도 발생하고 있음

- 물론 각 조직의 입장에서만 볼 때에는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조직이기주의 차원에서 나온 주장도 상당수 있고, 전체 조직구성원의 의사와는 전혀 다른 주장을 제기함으로써 조직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특히 노동조합 집행부에서는 통합과정에서 노조원을 설득하여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원만한 3기관통합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 대신 모든 불만을 설립사무국에 전가함으로써 노조원 설득능력에 한계가 노출되기도 하였음
- 이러한 상황이 조기에 정리되지 않을 경우 3기관 모두가 농업계 뿐만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협동조합 통합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임.

따라서 농업기반공사 설립사무국에서는 새공사의 설립추진 상황과 각 조직의 구성원들이 신설공사의 새로운 인사·조직체계 등과 관련 불안해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설립사무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불필요한 기관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신설공사가 농업인을 위한 새로운 기관으로 성공적으로 출범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함

II. 공사 설립추진상황과 노조주장에 대한 사무국의 견해

- 지금까지 농업기반공사 설립사무국은 신설공사의 근간이 되는 조직·인사·보수 및 회계제도 등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통합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왔음
 - 설립사무국은 2000.1월 출범될 새공사가 새천년·통일한국 시대의 농업기반 정비와 대농민 서비스 향상의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한편 정부는, 농업인에 대한 부담 경감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새공사의 자립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관련예산의 확대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최대한의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음
 - 당초 정부 약속사항인 수세 폐지에 대해서는 고위당정조정회의 등을 통해 이를 실현시켜나가고 있음
 - 농업생산기반정비분야 예산은 국가 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금년수준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새공사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정부출자 예산을 대폭 증액편성('99 : 70억 → 2000 : 400억원)하였음
 - 앞으로는 파주·연천 수해와 같은 국지적인 기상재해에 대해서도 과거 개별 조합 대응체제에서 벗어나 강력한 통합공사가 예방 및 사후조치를 강구하게 되어 농업기반 보호능력이 대폭 강화될 것임

<농조·승진문제관련 노조주장에 대한 사무국의 견해>

- 3기관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지난해 통합추진위원회가 3개 기관 직원 7,174명을 같은 수준으로 감축하여 통합시까지 5,974명으로 감축하되 각기관별로 자체 구조조정계획을 발표하였음(첨부1), 이에따라
 - 농진공, 농조연은 이미 자체적으로 구조조정 계획을 마무리한 상태이며
 - 농조는 제4차 설립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직원정년 조정(1~3년 단축)을 통하여 추진하되 농번기 물관리가 끝나는 '99.9.30 실시키로 결정한 바 있음
- 그러나 제4차 설립위원회('99.5.28)의 보고·심의를 거쳐 확정된 방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농조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승진문제를 가지고 노조간에 갈등관계가 조성되고 있음
 - 농진공노조는 농조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보직자 등 결원 발생시 이에대한 승진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가 하면
 - 농조노조는 결원에 대한 승진은 물론 추가적인 승진을 통해 농진공 등과 보직자 비율을 균형있게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있는 실정임
 - 더 나아가 이문제는 어디까지나 새공사의 조직내부문제이기 때문에, 건설적인 대안을 가지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상대방 노조와 설립사무국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행태까지 벌어지고 있음

※ 농조직원 승진문제에 대한 노동조합간의 주요 주장 내용

<농진공 노조 주장>

- ① 농조 정년단축에 따른 명예퇴직 등으로 상위직에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후속 승진인사를 실시하지 않아야 함
 - 농진공·농조연은 전체인원 감축시 보직자수도 함께 조정하였으나 농조의 경우 전체 인원만 감축하는 것은 불합리
- ② 농조직원에 대한 최저승진소요년수 단축(3년 →2년)조치는 즉각 철회 되어야 함

<농조 노조 주장>

- ① 농조의 보직자(3급 이상) 비율이 타 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으므로 상위직 결원시 후속 승진인사를 실시함은 물론, 또한 추가승진 조치로 격차를 완화해야 함
 - 구조조정전 보직자 비율: 농진공39.8%,농조연37.1%,농조25.6%
- ② 농조의 경우 상위직에 결원이 발생하여도 최저승진소요년수를 다채우지 못해 승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최저승진소요년수 제한은 철폐 되어야 함
 - 정부의 승진동결 조치에 따라 농조직원의 4급에서 3급승진이 과거 5년간 ('93 ~'97.2월) 동결되어 왔음

- 이러한 노조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농업기반공사법이 공포된 순간부터 국민들의 관심은 조직의 효율성제고와 농업인 서비스 개선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함
 - IMF 경제위기속에서 많은 인력이 실업의 고통속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에서 승진문제를 놓고 노조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제3자의 눈으로 볼 때 「살아남은 자의 행복한 고민」으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지금 각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이슈는 농업기반공사의 내부 문제임을 명심하고 이러한 문제를 불필요하게 확대하는 것은 일반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며, 농업기반공사법 통과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준 여·야 3당과 모든 농민단체 그리고 시민단체를 크게 실망시키는 일임
- 한편, 3기관이 통합전 각자 구조조정을 통해 17%수준의 인력감축과 조직슬림(Slim)화를 마무리할 수 있게됨에 따라 통합후 추가 감축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음
 - 뿐만아니라 3기관 통합은, 은행 등의 합병에서 나타나는 중복인력처리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예와는 달리
 - 농조는 현장 물관리중심 인력, 농조연은 경지정리, 농진공은 대단위·용수개발사업 및 국제협력 등 인력중심으로 각 조직의 특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 여기에 본인희망을 반영한 합리적인 인사배치 노력만 추가된다면 통합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조성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임

Ⅲ. 3기관 노조에 대한 사무국의 당부사항

- 새천년 첫날 농조·농조연·농진공을 통합, 「농업기반공사」로 출범하는 것은 우리 농정사에 길이 남을 획기적인 성과임은 물론 3개기관 직원모두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깊이 명심해주시기 바람
 - 기능중복과 조직운영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생산기반정비확충 및 농업용수관리 전담기관으로 재탄생함으로써 우리 농업·농촌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될 것임
 - 각 기관이 부족한 점은 상호보완하고 특성과 장점은 시너지 효과를 통해 국민과 농민에게 차원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맡은바 역할과 소명을 다할수 있게 될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불과 몇 달뒤면 한 직장에서 아침 저녁으로 머리를 맞대고 근무하게 될 예비 동료끼리 통합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질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을 감안할 때 더이상의 비난과 반목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재연되어서는 안될 것임
 - 소속 조직원의 무리한 주장이라도 이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 각 노조집행부의 고충이 어느정도 이해되는 면도 있으나
 - 각 기관을 대표해서 설립사무국에 파견된 직원들간에 진지한 논의 끝에 내려진 결론을 왜곡하고 무시하면서 상대방 노조와 조직을 무차별 공격하고
 -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생각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되풀이 하는 것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고 통합후 후유증과 상처만 남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각 노조의 입장은 그동안 수차례의 의사표시를 통해 충분히 알고도 남음이 있는만큼 앞으로 설립사무국은 통합과정에서 소속직원들에게 불합리하거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상식(Common Sense)에 입각하여 인내를 가지고 적극적인 대화(Conference)와 타협(Compromise) 을 모색해 나가겠음
- 서로의 입장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노조는 상생(相生)하는 자세로 조만간 회동하여 머리를 맞대고 관심사항을 함께 논의하는 등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함
- 아울러, 각 기관의 노조원들도 무리한 요구를 노조집행부에 강요함으로써 집행부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소속기관의 도덕성과 자질을 의심받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임
-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남아있는 3기관의 구성원들이, 정년인하조치 등으로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이미 조직을 떠났거나 앞으로 떠날 선배·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면서 궁극적인 봉사대상인 농업인과 농업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함

21세기 한국농업을 이끌어갈 중추기관을 성공적으로 출범 시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농업 기반공사 설립사무국의 분명한 입장 표명과 간곡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요구나 상식이하의 방법을 동원한 의사 표시 행위가 되풀이 된다면, 이는 앞으로 출범할 공사의 일원으로서의 존재와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 하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고자함

1999. 9. 13

농업기반공사 설립사무국

첨부 1

3기관 자체구조조정 추진실적

인 력

기관별	자체구조조정계획		추진실적(B) ('99.8현재)	비고 (B-A)
	당초	'99말(A)		
농진공	2,478	2,078	2,065	△13
농조연	672	564	563	△1
농 조	4,024	3,332	3,504	178
계	7,178	5,974		

- 농진공 자체구조조정 계획은 기획예산위원회의 공기업경영혁신 발표('98.8.4)에 따라 감축
- 농조연, 농조는 농진공수준으로 자체구조조정계획에 따라 감축
 - 농조는 '99.9.30 명예퇴직 등을 통해 추가로 감축하여 통합전 완료예정

조 직

- 농진공 : 본사 5본부 20처(실) → 4본부 16처(실)
지방 9지사 7사업단 83지부 → 9지사 5사업단 69지부
- 농조연 : 본회 5실 4처 1시험소 → 1실 4처 1시험소
지방 8지회 1출장소 → 8지회
- 농 조 : 전국 104개농조 → 지대별 특성, 수계 등을 감안하여 적정 규모(80~90여개)로 광역화 추진중(통합전 완료)

화합과 순조로운 통합을 위한 농업기반공사 설립사무국의 입장

- 3기관 통합을 앞두고 그 동안 야기되었던 갈등은 이제 마무리 되어야 함. 설립사무국은 그 동안 각 노조가 주장했던 내용에 무리가 있었고, 상대방에 대한 공격으로 갈등이 증폭되었던 것은 3기관의 화합과 농업기반공사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 이제 종식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그간 입법추진과정은 물론, 그이후 통합업무추진과정에서 신문 광고·성명서 등에 제기된 각 노조의 주장은 정당한 경우도 있었고, 사실과 다른 내용도 많이 발견되었으나, 이것은 각 기관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고, 소속 기관의 고용안정과 후생복지를 위한 충정에서 나온 것으로 크게 이해하려고 계속 노력하겠다는 것이 사무국의 기본입장임.
 - 다만, 각 노조가 자기 입장을 밝히는 방식에 있어서는 좀더 세련되고 논리적이면서도 합리적이어서 소속직원은 물론, 타기관으로부터도 공감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 앞으로 설립사무국은 통합추진 모든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 또한 각 기관과 노조역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언행은 상호 삼가는 것이 서로 서로를 지키는 길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 주기바람
 - 3기관통합 문제의 본질은 사람에 있으며, 사람에 바탕을 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길은 서로에 대한 공격이나 갈등에 있지 않고, 서로 양보하면서 이해와 포용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해 주기 바람

- 이제 3기관 직원들은 몇 달 후면 통합소속 일원으로 한가족처럼 일하면서 국가와 농업발전을 위한 위치에 놓이게 됨
-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 기관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립사무국은 조직·인사·보수제도 등 측면에서 3기관의 조직이 갖고있는 각각의 특성과 현실여건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조화로운 타결점을 모색하여 각 기관이 갖고있는 명예와 자존심이 손상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임
 - 물론, 이러한 조직·인사 등의 설계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공사가 지향하는 목표에 걸맞게 하면서 소속원들의 자율과 창의·특성·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새공사가 21세기 한국농업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둘 것임
- 그동안 각각 여건이 다르게 발전해온 3기관이 통합을 앞두고 갈등이 전혀 없을 수는 없으나, 이러한 갈등표출이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의 봉사대상인 농업인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이 되어서는 안될 것임
- 특히, 건전한 방법에 의한 의사표시를 통해서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함에도 집단시위 등 과격한 방식을 동원하여 서로의 진의가 왜곡되고, 일반 국민과 농업인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결과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한다면, 이는 선량한 3기관 직원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 하고자 함

1999. 9. 22

농업기반공사 설립사무국

농진공노조의 농조에 대한 감사요구 문제와 최근 농조의 시위·집회 등에 대한 설립사무국의 입장

- 그동안 설립사무국의 단호한 입장표명과 간곡한 설득, 그리고 3기관 인사·보수 등 갈등요소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농조·농조연노조가 10.2 전북 집회에 이어 10.17 서울역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3기관의 화합과 농업기반공사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은 물론,
- 이러한 기도가 계속되면 3기관 전체의 도덕성과 자질을 의심받게 되면서 각 소속조직원에 대한 피해마저 우려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설립사무국의 입장을 밝히고자 함

1. 농진공노조의 감사원 감사 요구 등에 관한 설립사무국의 입장

- 농진공노조가 통합 상대기관인 농조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함
 - 감사원 감사는 어떤 특정조직이나 기관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감사원 자체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임. 농조에 대한 감사원감사는 설립사무국이 요구할 계획도 없을 뿐만아니라 요구할 수도 없는 것임.
 - 농조는 그간 감사원의 감사는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농림부와 시·도로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지속적인 감사를 받아왔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이에 필요한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하에 농조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었음

- 농진공노조가 상대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무리 그 취지가 선의라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상대방의 반발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농진공 노조의 농조에 대한 감사요구는 사려깊지 못했고, 3기관의 순조로운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므로 농진공사장이 이미 해명을 한 바와 같이 정리되는 것이 타당함
- 한편 농조 노조측에서도 3기관 통합을 앞두고 특정 상대조직의 입장표명에 대해 피해의식을 느끼거나 또는 이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투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또한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함

2. 농조·농조연 노조의 서울역 집회계획에 대한 설립사무국의 입장

- 농조가 시위명분으로 내세우는
- 농민재산 국유화 반대 문제는 이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현재 헌법 재판소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 고용문제도 이미 9.30 기준으로 구조조정이 완료된 상황에서 (퇴직한 직원들에게는 안타까움이 있으나) 남아있는 직원들은 오히려 신분안정, 보수보장등 고용이 안정되는 결과를 감안할 때 시위명분이 전혀 설득력이 없음
 - 한편 농조조합원들이 주장하는 조합비 폐지문제는 이미 정부 방침으로 내년(2000년)부터 징수하지 않기로 확정된 바 있음

□ 이러한 상황인데도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 3기관 통합과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는 기도로 해석될 수 있으나 설립사무국을 중심으로 3기관의 대표가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시위 등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조직 이기주의적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임.
- 오히려 특정조직의 시위 등은 상대방 조직을 자극시켜 또다른 의사표시를 불가피하게 하는 악순환을 가져오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 농업생산기반정비·유지관리조직 전체의 도덕성과 자질을 의심받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임.
- 이러한 상태에서도 시위를 강행할 경우, 무리한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말못할 사정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여야 3당과 시민·농민단체가 전폭적으로 지지한 3기관 통합의 기본 정신과 화합을 훼손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해석될 수 밖에 없으며 스스로의 자존심과 새로 출범할 공사의 일원으로서 존재가치마저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됨

결론 : 농민단체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3기관 임직원들마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명분으로 과격한 방식을 동원한 의사표시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속직원과 그 가족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건전하고도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한 의견조율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함. 아울러 명분없는 무리한 시위 등으로 그 소속조직이 입게될 모든 피해와 후유증에 대해서는 시위지도부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함

1999. 10. 7.

농업기반공사 설립사무국

농조의 고용불안 우려에 대한 설립사무국의 입장

- 2000년 1월 농업기반공사 출범후의 3기관 직원 고용문제는, 다행히 그간 농진공·농조연의 구조조정에 이어 99.9.30 기준으로 농조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마무리함으로써 통합전 각기관 슬림화를 이루게 되어 농업기반공사 출범후 추가적인 인력감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음
 - 또한 2001년말까지 매년 200명정도의 인력을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이 인원은 현재 정년체제하에서 자연감축 추세만 감안하더라도 충분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감축을 할 필요가 없는 수준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조·농조연측에서는 끊임없는 고용불안 우려와 함께 고용안정달성이라는 투쟁목표를 내세워 집회·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는데 대해서, 이러한 움직임은 고용안정을 위하기는커녕 도리어 고용불안 요인을 스스로 제공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그 이유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농조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무엇이 소속직원과 그 가족들을 위한 것인지 꼼꼼히 생각해 주기 바람
 - ① 최근의 세계적인 이상기후등 빈번한 기상재해발생으로 인하여 우리농업에서 물관리업무는 날로 그 중요성이 더해져가고 있음. 농업기반공사가 출범하는 21세기는 이상기후 뿐만아니라 물 부족시대가 예고되고 있기도 함.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업용수의 개발 및 관리등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한방울의 물도 절약하는 효율적인 물관리능력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한 시점임.

- ② 뿐만아니라 작년, 금년에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게릴라성 호우 및 태풍등에 따른 농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용수저장·공급 능력의 확보와 하천정비·수리시설개보수등 투자확대는 물론이고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관·배수능력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또한 현재의 농조구역만으로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모든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업무영역도 계속 확충될 수 밖에 없는 것임. 따라서 정부가 농조인력을 추가적으로 감축해서는 안되는 상황임이 분명함에도 물관리업무를 전담하는 농조인력이 고용불안을 우려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음.
- ③ 정부가 개혁을 하려는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을 감축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 농업생산기반정비 및 관리업무 추진과정에서 그동안 문제가 되어온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 잡자는 뜻이고,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으로써 진정한 농업인 봉사조직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자는데 근본 취지가 있는 것임을 이해하여야 함.
- ④ 혹시 그간 농조가 3기관 통합반대투쟁과정에서 농조노조 등을 주축으로 정부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의사표시, 언동 등을 해온 것 때문에 통합후 그에 상응한 정부의 어떤 조치가 뒤따를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들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고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말에 관련법률통과를 계기로 농촌개발국장이 농조직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음. 또 농조노조대표, 대의원 등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한 바 있고 최근 발표한 설립사무국의 입장에서 이들을 다시 천명한 바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해 주기 바람.

⑤ 따라서 지금 이시점에서 농조등 직원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은 그간 잘못된 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공사에서 국가와 국민, 농업인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하는 기본자세를 가다듬는 일이라고 하겠음. 그렇게 하는 것이야 말로 농조등 직원들이 농업인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고용안정도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토대로 달성될 수 있는 것임.

□ 만약 그렇지 않고 추수기 한사람의 농촌일손도 아쉬운 시기에 일부 농조직원들이 현장을 떠나, 농촌인력을 동원한 명분없는 집회나 시위 등을 통한 과격한 의사표시로 인하여 일반 국민과 농민들로 하여금 농조등 물관리인력 전체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지금 농조가 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과 존재가치를 의심 받게하는 결과가 야기된다면 그것이 바로 앞으로의 고용불안을 증대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함.

○ 공교롭게도 농조가 집회를 했거나 집회를 계획할 때마다 거의 예외없이 그 현장에 많은 비가 내렸던 사실을 감안할 때 그러한 우려를 금할 수 없음.

- 예) 98.9.30 과천청사앞 집회시 태풍 “애니” 피해, 금년 9.19 취소된 서울역집회, 10.2. 전북지역 집회등

□ 결론적으로 국가가 존재하는 이상 현재 농조등이 하고 있는 물관리등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음. 특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 여건하에서 세계적인 식량위기와 물부족시대가 예상되는 21세기에 주어진 임무와 그 역량을 최대한 완수·발휘해야할 농조 직원들중 일부가 막연한 피해의식으로 인하여 무리한 의사표시를 한다면 통합을 지지해준 여야 3당은 물론 모든 국민과 농민단체로부터 그 본분을 망각한 행위로 지탄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임.

1999.10.11

농업기반공사 설립사무국

<http://www.rdc.or.kr/ric>, tel (02)504-6093~4, fax (02)504-6095

10.17. 서울역 농조 시위계획에 대한 설립사무국의 중간평가 결과

- 조만간 출범할 농업기반공사의 기본정신과 출범이념을 설립 사무국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협조를 당부함에 따라 전국의 104개 농조가 당초에 느꼈던 피해의식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새공사의 일원으로서 농업인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의지와 기대가 최근들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의미있고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함
- 구체적으로, 10월 17일 집회에 대한 각 조합의 움직임을 설립 사무국에서 점검 평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여 농조전체의 움직임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진단하는 것은 농조등 직원들이 새공사의 일원으로서 그 임무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는 중요한 척도라 할 것임

□ 현재 각 조합의 분위기는 대체로 그간 수차례에 걸친 설립사무국의 입장표명내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다소의 불만과 불안감이 있더라도 정부를 신뢰하고 농업기반공사 설립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정부와 국민이 농조등 물관리인력에 걸고 있는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또한 10월 17일 집회참석을 계획했던 조합들도 뜻있는 조합의 임직원들의 지속적인 설득노력을 통해 무모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는, 명분없는 집회에 참석을 자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3기관 화합과 성공적인 공사출범을 위해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됨

□ 그러나 한편, 3기관 통합으로 신분안정·보수 등 처우개선 혜택이 대부분 농조직원들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고 우리 농민들이 지난 한세기동안 그렇게 열망하던 조합비(수세)폐지가 2000년 1월 농업기반공사 출범을 계기로 실현되는 마당에 100만 농민조합원이라는 이름하에 일부 농조 노조원들에 의해 시도되는 이 집회와 관련,

○ 지금까지도 3기관 통합과 농업기반공사 출범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연한 피해의식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음

□ 최근 설립사무국이 파악한 104개 조합에 대한 동향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뉘어 짐.

① 농조전체의 이미지, 농민들의 신뢰 등을 감안할 때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무의미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정부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새롭게 태어나려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조합

- 서울, 수화, 이천, 포천, 영북, 보은, 제천, 청양, 전주, 여수, 보성, 완도, 신안, 진도, 영동, 고령, 영주, 진산, 의령, 밀양, 창령, 양산, 창원, 고성, 남해, 하동, 거제, 제주농조 등

② 참석여부가 불투명하지만 뜻있는 임직원들이 정부시책에 대한 정확한 홍보와 이해증진을 통해서 불필요한 시위참여를 자제하려고 노력하는 조합

- 여주, 파주, 광주, 연천, 양평, 강화, 중앙, 춘천, 강릉, 원주, 청원, 옥천, 진천, 충주, 대금, 연기, 공주, 논산, 부여, 서천, 보령, 홍성, 예당, 천안, 동진, 전북, 금강, 남원, 정읍, 순창, 구례, 곡성, 광양, 순천, 고흥, 화순, 장흥, 해남, 영암, 무안, 달성, 안동, 청송, 영천, 경산, 성주, 칠곡, 상주, 문경, 예천, 김해, 사천, 거창농조 등

③ 아직도 정부의 확고한 기반공사 설립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농조직원들이 막연하고 실제없는 피해의식을 극복하지 못하여 현재까지는 10월 17일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

- 기호, 한강, 홍안, 평택, 홍천, 음성, 서산, 당진, 온양, 고창, 정읍, 영산강, 곡성, 강진, 영광, 의성, 포항, 경주, 구미, 울산, 함안, 합천농조 등

- 위와같은 설립사무국의 조합간 동향평가결과 발표는 특정조합 임직원을 매도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새공사에서 열심히 일하려는 대부분의 농조와 선량한 직원들에 대해서 새롭게 평가를 내림으로써 그들이 그간 겪었을 말못할 마음고생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홀가분하게 새공사의 일원으로서 마음가짐을 가다듬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 지금 이시점에서 국민과 농민들의 기대는 아직도 명분없는 집회를 참석하거나 참석을 추진중인 조합들이 맹목적으로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과연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 있는 명분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되새겨 보는 것이라 하겠음
 - 자유민주국가에서 건전하고도 합리적인 집회와 시위는 얼마든지 허용되어야 하지만, 명분없는 무리하고도 과격한 시위 등이 농조 전체와 그 가족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무엇이 농업을 위하고 농민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바탕으로 더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한 시점임.

정부와 3기관의 대표가 참여하는 농업기반공사 설립사무국을 중심으로 그동안 꾸준히 전개되어온 화합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약 뚜렷한 논리나 명분없이 추수기 바쁜 농촌현장사정하에서 막연한 피해의식 등으로 집회를 강행할 경우 발생할 농업생산기반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의 이미지 추락등 부작용을 감안할 때, 이번 집회에 대한 각 조합 임직원의 소신있는 대응여부가 농조 등 인력중에서 새공사 이념에 부응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玉과 石을 가리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임

1999.10.12

농업기반공사 설립사무국

<http://www.rdc.or.kr/ric>, tel (02)504-6093~4, fax (02)504-6095

2000년 1월 농업기반공사 출범과 그에 따른 공정한 인사배치를 위한 설립사무국의 입장

○ 농조·농조연·농진공 통합에 따른 2000.1월 농업기반공사 출범과 관련, 최근 새조직의 인사문제가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3기관의 소속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정치권 등을 동원한 인사청탁행위 등이 발견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을 방치할 경우 계속 이러한 행태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고 3기관의 화합과 원만한 새공사 출범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설립사무국의 입장을 밝히고자함.

□ 농업기반공사 「설립준비단」이 지난 11.1일 발족되고 새공사 사장이 내정되어 설립준비단장직을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등 농업기반공사 설립 마무리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재 농업기반공사 설립사무국과 준비단에서는 새공사의 직제 및 정원(5,974명)에 맞추어 3기관 소속 직원들의 공정한 인사배치를 위하여 희망근무지 등을 조사하고 있음.

○ 또한 앞으로 3기관 소속직원들의 희망근무지 등이 최대한 반영되는 인사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 설립준비단에 3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특별인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될 예정임.

- 이와같이 공정하고 엄정한 인사를 위한 합리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일부 소속원들이 정치권 등을 동원하는 인사청탁행위 등을 시도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음.
 - 신설될 공사의 인사배치는 어디까지나 현행 3기관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특별인사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절차에 따라 결정될 것임.
- 앞으로 3기관 직원들의 근무희망지 등을 감안하여 설립준비단 「특별인사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임.
 - 현행 3기관 소속 직원들은 새공사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전혀 동요하지말고 기존 소속기관의 업무마무리와 새공사 출범에 필요한 업무준비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람.

- 현재 진행중인 근무희망조사 등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도 얼마든지 본인의 뜻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음을 설립사무국이 위와 같이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앞으로도 정치권 · 사적친분 등을 동원한 인사청탁 행위가 발생한다면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특별인사위원회」에 회부, 공개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임을 미리 밝혀두고자 함.

1999. 11. 22

농업기반공사 설립사무국

<http://www.rdc.or.kr/ric>, tel (02)504-6093~4, fax (02)504-6095

“국민을 움직여야 농업이 산다”

중앙일보 11.27자 광고 4면
“노사자율교섭 방해하는 김성훈장관은 즉각 사퇴하라”에
대한 농업기반공사 설립사무국의 입장

- 정부는 그동안 농업생산정비관련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던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등 3기관을 2000년 1월 농업기반공사로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함에 있어
 - 인력 구조조정을 금년 9월말까지 마무리짓고 공사로 승계되는 농조등 3기관 직원에 대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키로 하였음.
 - 이에따라 특히 농조의 경우는 전국 104개 농조중 퇴직금 대책이 거의 없는 70~80여개 조합에 대해서도 퇴직금중간정산 실시가 정부의 3기관 통합 조치로 가능하게 되었음
- 그러나 그간 정상적으로 퇴직하는 직원에 대한 퇴직금조차도 지급할 수 없었던 특정조합이 이번 정부의 전직원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를 기회로 정상적인 퇴직금 수준보다도 40~50% 인상하는 실현불가능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등 극단적인 도덕적 해이현상이 발생하여
 - 정부는 현행 관련법령에 따라 농조에 대한 지도감독 차원에서 이와 같은 도덕적 해이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농조의 감독기관인 각 시도에 농지개량조합 보수규정준칙을 준수할 것을 지시하였음 (첨부1,2)
- 한편 농조는 통합을 앞두고 대부분 농조직원들이 지지했던 정년단축으로 명예퇴직 및 연쇄승진등 조직활성화가 이루어져 왔음

- 그러나 금년말 퇴출이 확정된 일부 고령의 농조노조 지도세력들은 대부분의 농조조직원들의 의사와는 달리
 - 이미 금년 9월말 기준으로 명예퇴직에 따른 승진등 후속인사 조치가 모두 완료된 지금 이 시점에서
 - 특정농조의 퇴직금 변칙인상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틈타 조합장 대표들과의 단체협약이라는 형식으로 무리하게 퇴직금 변칙인상과 함께 정년연장을 추진하려다 11월26일 좌절됨에 따라 이를 정부의 조치 탓으로 전가하고 있음
- 농조노조광고에서 농림부의 농조인사규정준칙이 무효인 행위임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이는 농조노조에서 농림부의 농조인사규정준칙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바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을 거꾸로 왜곡한 것임
- 또한 광고에서 잘못된 농림부인사규정에 의한 부당인사발령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 이는 농림부의 인사규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인사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부 개별농조에서 거쳐야 할 이사회결 및 노조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노동위원회에서 지적하여 절차만 보완하면 해결되는 사안으로 농림부는 잘못이 없다는 것은 농조노조도 이미 인정하고 있음(첨부3)
- 이러한 허위, 왜곡주장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는 아무리 민주정부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동안 농조의 조직속에서 기생하여 왔고 앞으로도 기생하려는 일부세력들을 깨끗이 척결하는 것이
 - 대부분의 선량한 농조직원들의 신분안정은 물론 21세기 식량 위기와 물부족시대를 극복하기위한 농업기반공사 출범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완수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것으로 판단함

- 그리고 이러한 작태는 정부의 포용능력의 한계를 시험하려는 시도로 밖에 이해할 수 없으며 이번 광고로 인하여 어디까지를 정부가 보호해야할 국민이고 아닌지 분명히 선을 긋게되면서
 - 해묵은 과제인 농조문제에 대한 정리의 필요성을 정부와 정치권, 국민, 농민 모두가 다시 한번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음.
- 설립사무국은 앞으로 두번 다시 이러한 기도자체가 시도되지 않도록 그간 각종 왜곡·허위신문광고 및 집회시위등을 주도했던 인력들에 대해서 그동안 인내했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여
 - 농림부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죄, 태풍등 비상근무명령을 위반하고 집회를 강행한 직무유기죄(별첨: 관련공문 및 사진), 무고죄,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문서등의 부정행사죄등 모든 형법상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 선량한 농조직원들을 보호하고 농조·농조연·농진공 3기관 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차질없이 완수할 것임
- 3기관 통합과 농업기반공사 출범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지지해 준 여야 3당등 정치권과 국민, 농민단체에서는 앞으로 2000년 1월 농업기반공사 출범을 앞두고 이를 훼손하려는 세력들을 척결하는 개혁업무의 마무리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 왜 정부가 어려움을 무릎쓰고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가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감하게 될 것임
- 21세기를 앞두고 여야 3당과 모든 국민이 한목소리로 3기관 통합과 농업기반공사 출범을 지지해 준 것은 지난 100년간 농정분야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라는 시대적인 지상명령이며 정치권이 우리 농업부문에 베푼어준 최대의 선물이라고 인식하고 법을 통과시켜준 그 취지에 따라 역사적인 농업기반공사 출범에 최선을 다해 나갈것임

1999.11.27.

농업기반공사 설립사무국

<http://www.rdc.or.kr/ric>, tel (02)504-6093~4, fax (02) 504-6095

“국민을 움직여야 농업이 산다”

◆ 농지개량조합노조가 중앙일보 12.10일자
“우리는 왜? 농림부장관과 손정수국장, 조합장
들을 고소하는가?”라는 광고에 대한 농업기반
공사 설립사무국의 입장을 붙임과 같이 밝힙니다.

① 3개기관 통합이 대통령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추진
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

② 기타 사항에 대한 입장

1999. 12. 10.

농업기반공사 설립사무국

<http://www.rdc.or.kr/ric>, tel (02) 504-6093~4

“국민을 움직여야 농업이 산다.”

① 3개기관 통합이 대통령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

- 김대중 대통령이 대중경제론에서 언급한 내용은 70년대 농지 개량조합 (이하 농조) 운영상황을 전제로 한 것으로 현재 농조 등 3기관 통합상황과는 시대적 배경이 완전히 다르다
 - 공화당 시절인 1970년대에는 농조의 조합장을 도지사들이 임명하고, 조합비(일명“수세”)도 10a당평균 26Kg(최고 80Kg)으로서 농민의 부담이 극도로 과중한 시기였다.
 - '89년부터 농조의 조합장 선거제도가 도입되고, 조합비도 10a당 5kg수준으로 대폭 인하됨으로써 당시 대중경제론에서 주장한 내용이 사실상 대부분 구체화되었다.

- 그동안 정부에서 매년 1,000억원 수준의 운영비와 1조원이상의 사업비를 농조에 지원해 왔으나, 대부분 농조의 운영이 부실화되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 또한 민선제의 폐단으로 우려되었던 대의원에 의한 타락선거 등 선거후유증, 비전문가인 조합장과 조합직원간의 불화, 차기 선거를 노린 선심경영 등 조직운영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 ※ 전국 104개농조중 퇴직적립금이 1억원미만인 농조가 80여개에 달하고, 많은 조합들이 앞으로의 봉급지급 문제를 걱정할 정도였음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규모 조합 통폐합과 자립육성금고 설치 등 자구 노력을 유도하였으나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지원여력이 충분한 조합이 단 한곳도 금고에 출연하지 않는 등 농조의 자구 노력이 부족하여 현 제도하에서 농조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 이러한 상황속에서 유사중복기능을 가진 기관은 과감히 통폐합하여 경영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따라 농업생산정비기능을 중복 수행하는 농조·농조연·농진공 3기관을 통합하게 된 것이다.
- 3기관을 통합으로 지난 1세기 동안 농민들의 숙원이었던 농조 조합비(수세)를 폐지하여 연간 300억원 수준의 농민 부담을 경감하게 되었다.
- 정부는 여야 3당, 농민, 시민단체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3기관 통합법률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1999년 2월 제정·공포하였고 2000년 1월 농업기반공사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 농조의 재산권 문제는 국회의 법안 심의과정에서 6차례에 걸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고
 - 법 부칙에 농조재산은 당초목적대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만 사용하고 유지관리부문은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등 논란의 소지를 완벽히 제거하였다.
- 농업기반공사 출범으로 전국단위의 농업기반조성, 수자원관리 체계의 효율화 등으로 생산기반의 정비 및 관리능력을 대폭 확충하는 등 21세기 식량위기와 물부족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 농진공의 기술력을 보강하고, 농조직원의 퇴직금중간정산 등 직원의 신분 및 생활안정을 기함으로서 물관리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여 대농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요약 및 결론

-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제안한 조합장직선제, 조합비(수세) 경감 등은 80년대 후반에 일차적으로 구체화되었다.
- 그러나 이후 농조는 조합장 직선제 등으로 인한 폐단과 농조의자구노력 부족 등으로 대부분의 농조직원들이 퇴직금은 물론 보수마저 걱정해야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 현 체제로는 농조의 구조적인 문제해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농조의 궁극적인 봉사대상인 농민을 보호하고 우리 농업을 지켜나갈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여야 3당, 농민단체,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지지로 3기관 통합을 이루게 되었다.
- 정부는 2000년 1월 농업기반공사 출범을 계기로 조합비(수세) 폐지, 직원신분안정, 물관리 체계의 효율화 등을 통하여
 - 21세기 맞게될 세계적인 식량위기와 WTO 협상 등에 대비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상기후 등 재해대처 능력도 획기적으로 보강함으로써
 - 농민·농업의 보호는 물론 더 나아가 전체국민과 국가의 생존권을 지킨다는 「대중경제론」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확고한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다.

② 기타 사항에 대한 입장

- 정부는 그동안 농업생산정비관련,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던 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어촌진흥공사 등 3기관을 2000.1월 농업기반공사로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함에 있어
 - 금년 2.5발족되어 운영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 설립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농업기반공사 설립준비단」(11.1발족)을 통하여 설립작업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설립작업을 최종 마무리중에 있음
- 그러나 통합대상기관인 농조와 농조연의 노동조합 극히 일부 관계자는 통합을 적극 찬성한 여야 3당, 전체 국민, 그리고 통합작업에 적극 협조적인 통합대상 3기관 임·직원의 의사와는 전혀 다른 계속된 주장을 하고 있기에 그들의 주장에 대한 설립사무국 입장을 밝히고자 함
- 먼저, 3기관 통합이 대통령의 뜻과 전혀 거꾸로 추진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 ※ 대통령께서 당시 「대중경제론」을 통해 주장하신 내용과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 그리고 그 후 변화된 여건과 정책에 반영된 사항, 지난해부터 통합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앞의 별도자료 참조
- 둘째,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이어 집중호우, 태풍 등의 어려운 기상 여건 때문에 많은 수리시설과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여 농림부에서는 지난 10. 14일 수확기 기상재해로 인한 벼품질 저하 및 수량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벼수확 10일 앞당기기”를 전국적으로 전개한 바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금년도도 풍년농사 달성이 가능하였음

- 농조노조에서는 농조의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위 지시를 내렸다 하나 농림부의 지시는 각 시·도, 농촌진흥청, 농어촌진흥공사, 농·축협 등 전 농림관련 기관에 대해 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도 집회일인 10. 17일 하루가 아니라 10.15~10.30일 까지 해당됨을 감안하면 농조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
- 오히려 한창 바쁜 수확기에 농촌현장을 버리고 「자기몫 챙기기」 위해 집회를 개최한 노조의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함

□ 셋째, 노·사 자율교섭에 직권을 남용했다고 하는데 대하여

- 그 동안 농조의 경우 전국 104개 농조중 70~80여개 조합이 퇴직금 대책이 거의 없는 실정이었으나 정부의 3기관 통합 조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게 되었음
- 그러나 그간 정상적으로 퇴직하는 직원에 대한 퇴직금조차도 지급할 수 없었던 몇몇 특정조합이 이번 정부의 전직원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를 기회로 정상적인 퇴직금 수준보다도 40~50% 인상(약 700억원 추가지급 소요)하는 실현 불가능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극단적인 도덕적 해이현상이 발생하였음
- 이는 결국 노사단체교섭이라는 미명하에 농민 조합원의 재산에 큰 손실을 안겨 주게 되므로 정부는 현행 관련법령에 따라 농조에 대한 지도감독 차원에서 모든 농조의 감독기관인 각 시도에 농지개량조합 보수규정준칙을 준수할 것을 지시 하였던 것으로 이러한 조치는 정부로서는 당연한 책무이며, 만약 이를 소홀히 했을 경우 오히려 정부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음

□ 넷째, 통합후에도 추가적인 인력조정을 앞둔 상황에서 농림부 직원을 무더기로 낙하산 인사시키고 있다는 데 대하여,

- 지난해 통합추진위원회에서는 통합에 앞서 3기관의 자체구조 조정을 실시하도록 결정한 바 있고, 이에 따라 금년중 3기관이 동일 비율로 구조조정을 완료하였음
- 앞으로 2001년말까지 매년 200명정도의 인력을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이 인원은 현재 정년체제하에서 자연감축추세만 감안하더라도 충분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감축을 할 필요가 없는 수준임은 수차례 밝힌 바 있음
- 한편, 농조노조에서는 무더기 낙하산인사를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농업기반공사 설립준비단에는 불과 9명(농업기반공사 정원 5,974명)의 농림부직원이 3기관직원들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3개기관 구성원간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는 임직원에 대한 인력배치, 보수·호봉체계 결정 및 대외협력 업무에 지원 근무를 하고 있음
- 이들은 앞으로 적법한 절차를 밟아 농업기반공사 직원으로 임용될 것이며, 향후 농림부의 정책결정과 공사의 집행기능을 원활하게 연결시키는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직원들임

□ 농림부는 이러한 농조노조의 행태에 대해 지난해 「명예훼손과 직무유기」로 고발하였으나, '99.1.5 농업기반공사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 화해와 화합차원에서 고발을 취하한 바 있음

- 그러나 농조노조가 금년에 들어서도 '9.1, 10.16, 11.27, 그리고 오늘(12.10)도 농림부에 대한 비방과 허위에 가득한 광고를 통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농림부가 지난 11.29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농조노조가 광고를 통하여 “맞고소 운운” 하는 것은 타당성 없는 것임

□ 앞으로 농업기반공사 설립사무국은 2000.1월 출범예정인 농업기반공사 설립작업에 박차를 가해 온 국민의 기대속에 농업인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임

**농조·농조연 광고(8월 27일자)에 대한
해명 자료**

지난 8월 27일 농조·농조연 명의로 일간지
신문광고에 게재된 농조·농조연·농진공
통합 관련 내용이 기획예산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달라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고자
다음과 같은 해명자료를 드립니다.

기획예산위원회
행정개혁단 행정3팀

□ 농조·농조연 게재 광고 내용 (동아일보, 8월 27일자 광고)

기획예산위원회는 2차에 걸쳐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혁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 계획은 공기업인 『농어촌진흥공사(농진공)』의 경영혁신방안으로 농업인의 자조·자치조직인 『농지개량조합(농조)』과 『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조연)』을 해체 통합하여 가칭 『농업기반공사』로 변형시키겠다는 것이고, 현재 통합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기본방침과 달리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막을 보고 받으셨습니까?

<관련내용 발췌>

□ 사실 확인

-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 방안('98. 8. 4일 확정)
 -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지개량조합의 통합(2000년)에 대비하여 구조조정 추진
-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방안('98. 8. 17일 확정)
 - 농진공, 농조, 농조연 등 3개기관 통합 추진

▶ 농진공·농조·농조연의 통합은 여러 발표된 공기업 경영혁신 방안과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방안에 포함된 사항으로서 기획예산위원회의 열정은 농림부와 동일하며 정부의 기본방침과는 달리 농림부에서 독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여 여부를 밝혀드립니다.

여 백

10. 농조의 허위주장 광고

□ 경향신문 ('99. 9. 1, 27면)

밀실풍혜 기획예산처는 해체하고 - 농림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기 획 예 산 처

우 135-7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20-3 / 전화 (02)3496-5053-4 / 전송 (02)3496-5055
정부개혁실 공공간인도 공공1팀 팀장 : 유성걸 사무관 : 윤원태

문서번호	공일 12451-18	선	지
시행일자	1999. 07. 16	결	시
경 유		일지	1999. 7. 19.
수 신	농림부장관	수 번호	3001
장 조	농촌개발국장	처 리 과	
		당 당 자	

제 목 농어촌진흥공사 경영혁신계획 일부 수정 홍보

1. 귀부 개발(12451-213호(99.5.11)와 관련입니다.

2. 위 발문 귀부에서 건의 요청한 귀부 소관 농어촌진흥공사 경영혁신 제1차장 일부는 아래와 같이 수정 홍보하오니 경영혁신추진에, 단점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및 농지개발조합연합회를 통합하여 농업기반공사 설립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해 일부 계획 수정

나. 경영혁신 계획 수정

당초 경영혁신 계획	수정 계획	양호 계획대비
○ 지방조직 공여화 - 9지사, 83지부 → 5지사 60지부 (△4지사 △23지부)	○ 지방조직 공여화 - 9지사, 83지부 → 9지사 69지부 (△14지부)	○ 4지사 9지부 미강축

※ 통합 「농업기반공사」에 대해서는 설립이후 강도높은 구조조정 추진

다. 농업기반공사 설립이후의 지방조직 개편을 포함한 경영혁신 계획은 우리처와 추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기 획 예 산 처

개혁의 미명아래 농림부가 수십조원의 農民財産을 강탈

- 농조 · 농조연 · 농진공 강제 통합의 결과 -

1. 앞에서는 公正한 개혁을 외치고-뒤로는 **특정기관에 特惠부여**(좌측공문참조) “국정에도 밀실거래가 있나? 왜 그런가?” “힘없는 농지개발조합의 직원은 29.8%나 줄이고, 농진공은 16.1%만, 그것도 모자라 기구도 4지사 9지부 **는 뒤에서 줄이지 말라고**”
보직자(과장이상) 비율도 농조는 정원의 25.6% 농진공은 42.7% 이것이 국민앞에 약속한 대등한 통합인가?
2. 공청회도 쌀농사 짓는 **이해당사자(조합원)**는 **절저히 배제**시키고,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양돈·양계·사과·화훼·포도 등”의 단체를 동원하는 등 **관계데모 의혹도 곳곳에...**
3. 대명천지에 농민의 **私有財産을 國·公有化**하고 **農民主權을 박탈**하는 장관은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인가 말겠다는 것인가? “이해당사자인 농민조합원 65%(약 60만여명) 서명·청원도 철저히 묵살”(98. 7. 10 제출)
4. 통합하면 “조합비를 폐지해주겠다” 했으나 약속을 파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성 개혁.....**

김성훈 장관식 개혁이 심각한 농심이반과 민심이반을 낳았습니다. 잘못된 개혁은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5. 통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잔뜩 있는 듯이 해놓고 막상 통합을 해보니 내년(2,000년) 예산도 짜지 못하여 농민재산을 팔아서 충당해야할 처지에 있는 **잘못된 개혁은 즉시 중단**하고 농민중심의 농조자체 개혁안을 수용해야 합니다.

※ 위 특혜 사실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를 청원합니다.

전국농조100만농민조합원회 · 한국노총 / 연합노련 / 전국농조노동조합

노·사 자율교섭 방해하는 김성훈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단체교섭 방해 지시 공문)

"국민을 움직여야 농업이 산다"
농 립 부

정보통신망 보고심사

우427-760 경기 과천 중앙 1 / 전화(02)504-9402 FAX (02)507-3964
개인정책과 과장 김영만 담당자 이우곤(E-mail : leewg@maf.go.kr)

문서번호 개발 51070-733
시행일자 1999. 11. 25(10년)

(장유)

받은 곳 참조
참조

선	지				
결	시	일	재	일	일
수	간	자	제	자	자
		1999.			
		번호			
		처리과			
		담당자			

제목 농지개발조합제규정준칙 이행 절차

1. 관련 : 농지 개발조합인사규정준칙개정(개발 51331-349, '99. 5. 29)
보수규정준칙개정(개발 51070-695, '99.11.18)
2. 농조·농조연·농진공을 통합하여 2000. 1월 농업기반공사 출범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기반공사 설립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농지개발조합지원의 정년 조정 및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토록 관련규정준칙을 개정 시달한 바 있습니다.
3. 관련호로 농지개발조합임·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농지개발조합보수규정 준칙 제34조의 2 및 퇴직금중간정산실시요령에 따라 지급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4. 따라서, 각시·도지사는 퇴직금 중간정산 등에 필요한 예산승인시 이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농지개발조합 임·직원이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등을 실시 함으로써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 등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각 농지개발조합에 시달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관련규정 1부, 같.

농 립 부 장 관

- 우리 전국농지개발조합 노동조합은 지난 6월부터 오늘까지 사용자 단체와 단체교섭을 추진하여 왔다. 노·사가 진행해온 단체교섭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의 하나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근거한 법률적 행위이다. 또한, 동교섭의 결과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은 장관이 발령하는 훈령과 제규정에 앞서는 상위 규정으로서의 법률적 효력을 지니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 그런데, 농림부 장관은 헌법과 국법이 보장하는 노·사간의 자율적 단체교섭을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헌법을 무시하고 국법질서를 파괴하는 노동조합 탄압을 획책하고 있으니 과연 김 성훈 장관이 국민의 정부가 임각시킨 장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우리 전국농조노동조합은 김 성훈 장관이 일방적 구조조정 지침으로 발령했던 인사규정준칙('99. 5. 29)이 무효인 행위임을 헌법소원에 따른 헌재 결정문과 근로기준법, 대법원 판례, 노동부 유권해석 등으로 확인시켜 줬고, 동 규정에 의한 부당인사발령이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되어 "원칙 복직명령"이 나온바 있으며, 앞으로도 동일한 결정이 줄을 이을 예정이다.
-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점을 우려하고 보다 생산적인 협상을 위해 실질적 권한이 있는 농림부와 협상을 요구하였으나 노사문제는 전혀 농림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정부 스스로가 입장을 밝혔으면서도 뒤로는 부당한 지시공문을 내는등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 있다.
- 김 성훈 장관은 사안이 이렇함에도 불구하고 앞뒤가 다르게 또다시, 노·사 자율 교섭을 방해하는 등 노동조합 파괴 공작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노동자·농민이 선택했던 "국민의 정부"와 이반했던 민심·농심 회복을 위해서는 지금 즉시 김 성훈 장관을 퇴진시켜야 마땅할 것임을 밝혀둔다.
- ※좌측공문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으로의 퇴직금 산정을 거부토록 하는 부도덕한 농림부의 지시 문서임.

한국노총 / 연합노련 / 전국농조노동조합

우리는 왜? 농림부 장관과 손정수 국장, 조합장들을 고소하는가?

필도 많고 탈도 많은 농업관련 3개기관(104개농지개발조합·농협·농어촌진흥공사)통합은 국정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뜻과는 전혀 거꾸로 추진되었다. 대통령의 소신은 "조합(농조)재산은 궁극적으로 조합원인 농민의 재산이다. 이것을 어떻게 주인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국가라고 해서 가져갈 수 있겠는가. 이것은 부당한 처사다" (김대중저서·대중경제론 제2권 312~313)라고 밝힌바 있음에 유의하고자 한다.

□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10. 17(일요일) 서울역 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합법적으로 신고한 집회였으며 더욱이 집회일은 일요일이었고 일기예보는 한때 약간의 소나기만이 예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비상근무명령(농림부시설51317-919 10. 4)을 발동하여 집회를 방해하였다.

□ 또한, 4,000여직원의 전국농지개발조합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와의 7개월에 걸친 단체교섭을 하루 앞두고, 농림부가 노·사 자율교섭을 방해하는 부당한 공문지시(농림부개발51070-733 11.25)등 갖은 방법의 협상방해를 일삼아 우리는 "노·사 자율교섭을 방해하는 김성훈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는 제하의 광고 성명을 낸바 있다. 이에 농림부가 시정잡배나 쓰는 저속한 용어 사용과 노조위원장고소를 내세우는 등 노동탄압을 게재한 성명('99.11.27)으로 대응해 왔기에 이제 우리의 주장을 밝히고자 한다.

- 첫 째, 합법적인 집회에 대한 방해와 노·사 자율 단체교섭에 직권을 남용하였을 뿐 아니라 무고한 우리를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검찰에 먼저 고소하였기에 김성훈 농림부장관과 손정수 농촌개발국장을 맞고소한다.
- 둘 째, 3개기관을 통합하면서 약1,200여명의 고용조정을 단행한 농림부가 내년·내후년에 인력조정을 앞두고 있으면서 농림부직원들을 무더기로 낙하산 인사시키고 또다시 낙하산인사를 획책하는 것은 3자통합을 하는 것인지 농림부를 포함한 4자통합을 하겠다는 것인지 농림부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라.
- 셋 째, 통치권자의 뜻이 농민조직의 육성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통합의 원인을 제공한 현직 조합장은 100%퇴출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처벌의 대상임을 알아야 하고, 예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조합이사, 대의원, 감사가 받아야 한다.
- 넷 째, 전국농조노동조합은 출범이래 6개월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왔으나 협상안 조차도 마련하지 않는등 단체교섭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거나 해태한 전국104개 조합장을 고소한다.
- 다섯째, 농림부는 3개기관을 대등한 조건으로 통합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이러한 원칙하에서 우리노동조합이 추진한 농조직원 평균임금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이미 두기관이 시행하고 있고 퇴직금 총액도 두기관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주장임을 농림부는 알고 더 이상 노·사 자율교섭을 방해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여섯째, 새술은 새부대에 담기 위해서도 3기관의 상근임원은 물론, 각종사건에 연루되고 최근 징계자, 무능력자, 부도덕한 간부도 이번엔 과감히 정리되어야 한다.

우리는 3개기관 통합을 틈타 농림부가 취하고 있는 낙하산인사와 노·사 자율교섭 방해, 농민재산의 국유화는 정당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퇴직금 산정을 요구하는 근로자는 부도덕한 것인지 차이에 분명한 답변을 요구한다.

한국노총 / 연합노련 / 전국농조노동조합

문화일보



2 1999년 12월 10일 금요일

The Munhwa Ilbo <http://www.munhwa.co.kr>

농조 · 농조연 · 농진공 통합으로 83년만에 수세 완전폐지

- 농지개량조합 노조 광고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밝힙니다 -

■ 김대중 대통령이 대중경제론에서 언급한 내용은 70년대 농지개량조합 (이하 농조) 운영 상황을 전제로 한 것으로 현재 농조 등 3기관 통합상황과는 시대적 배경이 완전히 다르다.
○ 공화당 시절인 1970년대에는 농조의 조합장을 도지사들이 임명하고, 조합비(일명 "수세")도 10a당 평균 26Kg(최고 80Kg)으로서 농민의 부담이 극도로 과중한 시기였다.
○ '89년부터 농조의 조합장 선거제도가 도입되고, 조합비도 10a당 5kg수준으로 대폭 인하됨으로써 당시 대중경제론에서 주장한 내용이 사실상 대부분 구체화되었다.

■ 그동안 정부에서 매년 1,000억원 수준의 운영비와 1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농조에 지원해 왔으나, 대부분 농조의 운영이 부실화되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 또한 민선제의 폐단으로 우려되었던 대의원에 의한 타락선거 등 선거후유증, 비전문가인 조합장과 조합직원간의 불화, 차기 선거를 노린 선심경영 등 조직운영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 전국 104개 농조 중 퇴직직원금이 1억원미만인 농조가 80여개에 달하고, 많은 조합들이 앞으로의 붕괴지급 문제를 걱정할 정도였음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규모 조합 통합과 자립육성금고 설치 등 자구 노력을 유도하였으나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지원여력이 충분한 조합이 단 한곳도 금고에 출연하지 않는 등 농조의 자구 노력이 부족하여 현 제도하에서 농조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 이러한 상황속에서 유사중복기능을 가진 기관은 과감히 통폐합하여 경영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따라 농업생산정비기능을 중복 수행하는 농조 · 농조연 · 농진공 3기관을 통합하게 된 것이다.
○ 3기관을 통합으로 지난 1세기 동안 농민들의 숙원이었던 농조 조합비(수세)를 폐지하여 연간 300억원 수준의 농민 부담을 경감하게 되었다.

■ 정부는 여야 3당, 농민, 시민단체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3기관 통합법률인 「농업기반공사 사잇농자관리기금법」을 1999년 2월 제정 · 공포하였고 2000년 1월 농업기반공사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 농조의 재산권 문제는 국회의 법안 심의과정에서 6차례에 걸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고
○ 법 부칙에 농조재산은 당초목적대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만 사용하고 유지관리부문은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등 논란의 소지를 완벽히 제거하였다.

■ 농업기반공사 출범으로 전국단위의 농업기반조성, 수자원관리 체계의 효율화 등으로 생산기반의 정비 및 관리능력을 대폭 확충하는 등 21세기 식량위기와 물부족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 농진공의 기술력을 보강하고, 농조직원의 퇴직금중간청산 등 직원의 신분 및 생활안정을 기함으로써 물관리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여 대농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요약 및 결론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제안한 조합장직선제, 조합비(수세) 경감 등은 80년대 후반에 일차적으로 구체화되었다.

■ 그러나 이후 농조는 조합장 직선제 등으로 인한 폐단과 농조의 자구노력 부족 등으로 대부분의 농조직원들이 퇴직금은 물론 보수마저 걱정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 현 체제로는 농조의 구조적인 문제해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농조의 궁극적인 봉사 대상인 농민을 보호하고 우리 농업을 지켜나갈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여야3당, 농민단체,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지지로 3기관 통합을 이루게 되었다.

■ 정부는 2000년 1월 농업기반공사 출범을 계기로 조합비(수세)폐지, 직원신분안정, 물관리 체계의 효율화 등을 통하여
○ 21세기 맞게 될 세계적인 식량위기와 WTO 협상 등에 대비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상기후 등 제해 대처 능력도 획기적으로 보강함으로써
○ 농민 · 농업의 보호는 물론 더 나아가 전체국민과 국가의 생존권을 지킨다는 「대중경제론」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확고한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다.

1999. 12. 10.

농업기반공사 설립사무국 <http://www.rdc.or.kr/ric>, tel:(02)504-6093~4

※ 그의 사실과 다른 농조주장에 대한 정확한 해명내용은 설립사무국의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농업기반공사 출범 보도기사

1. TV 보도
2. 라디오 보도
3. 신문기사 보도
4. 농업기반공사 출범홍보물
5. 농업기반공사 노동조합 성명서
6. 신문광고

여 백

1. TV 보도

가. KBS-1TV(뉴스광장, 뉴스라인)

나. YTN(연합뉴스), K-TV(국정뉴스), ABC(안양케이블)

여 백

"83년만의 수세 폐지"

KBS 뉴스광장('99.12.27 06:14)

주요 내용



<KBS 뉴스광장 >

- 농민들의 오랜 민원이 되어 왔던 농지개량조합비, 일명 수세가 83년만에 폐지됨
- 일제의 강점기인 1917년 부터 한때는 전국 농가에서 연간 1,000억원이상 걷어온 수세가 농민들의 오랜 민원이 됨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수세징수 제도를 전면 폐지키로 했음
- 농지개량조합과 농조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 3개 기관이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되기 때문에 수세폐지가 가능하게 되어 농업인의 부담이 경감됨
- 3개 기관의 유사하고 중복된 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기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성 제고
- 다음달 출범하는 농업기반공사는 농민들의 새로운 기대를 안게 되었지만 빈약한 농업기반시설과 부족한 농업용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음

“농업기반공사 이렇게 달라집니다.”

KBS 뉴스라인(2000.1.14 23:25)

주요내용



<KBS 뉴스라인>

- 83년만에 수세가 폐지되어 농업인의 부담은 줄어 들고 서비스의 질은 더욱 높아짐
- 전국 104개 농지개량조합이 지역별로 관리하던 물관리체제를 전국단위의 물관리체계 구축으로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음



<KBS 뉴스라인>

- 사업추진체계의 일원화로 업무의 능률화와 투자의 효율화를 거둘 수 있음
- 환경친화적 개발과 환경복원 노력으로 국민의 환경욕구를 충족시켜 나감 (인터뷰 농업기반공사 사장 문동신)

“농업기반공사 공식 출범”

YTN 경제뉴스와이드 (2000. 1. 5. 18:00, 22:00)

주요 내용



<YTN경제와이드>

- 농어촌정비와 농업용수관리, 간척사업 등을 담당할 농업기반공사가 공식 출범함.
- 농업기반공사는 그동안 농지개량조합과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의 3개 기관으로 나누어진 업무를 통합하고 9개 지사와 87개 지부에 5,900여명의 인원이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 감.

- 초대사장에 취임한 문동신사장은 세계적인 수준의 농촌개발과 물관리 전문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업무 기술 고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YTN경제와이드>

“농업기반공사 출범”

YTN 경제뉴스와이드 (2000. 1.20. 17:30)

주요내용



<YTN 경제뉴스와이드>



<YTN 경제뉴스와이드>

- 83년만에 수세가 폐지되어 농민의 부담이 경감되며 이로 인해 농민들이 받는 혜택은 연간 300여억원으로 수세폐지는 농민들의 숙원이었지만 농조 운영이 어려워 조치를 못하고 있던 것이 3개기관이 통합됨으로써 폐지가 가능하게 됨
- 물관리가 과거 전국 104개 농지개량조합에서 지역단위로 관리해 오던 것을 전국단위 체계로 관리하게 되어 물공급이 균형있게 이루어지고 효율성이 높아짐
- 과거 3개기관의 유사 중복기능이 통합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예산이 절감되며 농민지원기능이 단일화되어 서비스의 질은 높아짐

□ 3개기관 통합은 역대정부에서 시도해 왔지만 큰 저항으로 이루지 못한 것을 이번에 정부의 강력한 농정개혁의지로 우여곡절 끝에 그 성사를 보게 됨

□ 우리공사의 고객은 농업인이며, 금번 공사 출범과 동시에 고객헌장을 선포하고 농업인 서비스를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고객신고센터 설치 및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인터뷰 농업기반공사 사장 문동신)

“농업기반공사 공식 출범”

K-TV 국정소식 (2000. 1. 5. 18:00, 22:00)

주요내용



<K-TV 국정소식 >

- 농어촌정비와 농업용수관리, 간척사업 등을 담당할 농업기반공사가 공식 출범함.
- 농업기반공사는 그동안 농지개량조합과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의 3개 기관으로 나누어진 업무를 통합하고 9개 지사와 87개 지부에 5,900여명의 인원이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 감.
- 초대사장에 취임한 문동신사장은 세계적인 수준의 농촌개발과 물관리 전문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업무 기술 고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농업기반공사 공식출범”

ABC뉴스 (2000. 1. 6. 10:00, 17:00)

주요내용



<ABC뉴스>

- 농어촌정비와 농업용수관리, 간척사업 등을 담당할 농업기반공사가 공식출범함.
- 농업기반공사는 그동안 농지개량조합과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의 3개 기관으로 나누어진 업무를 통합하고 9개 지사와 87개 지부에 5,900여명의 인원이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 감.
- 초대사장에 취임한 문동신사장은 세계적인 수준의 농촌개발과 물관리 전문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업무기술 고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여 백

2. 라디오 보도

가. KBS - 1R

나. 불교 방송

여 백

“농업기반공사 출범에 바란다.”

KBS-1R 밝아 오는 새아침(2000.1.6 05:15)

주요내용

-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발조합 그리고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등 3개 기관이 통합한 농업기반공사가 5일 창립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 감.
- 농업기반공사의 출범의 의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사한 중복 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기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성이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됨. 특히, 농어촌진흥공사의 기술경험과 농조 및 연합회의 현장경험을 통합해서 큰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음. 또한, 한국 농업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농지.농업용수의 효율적 개발과 유지관리를 통한 식량의 안정적 기반이 다져지고 농업인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동안 수세는 70년대에 10a당 평균 26kg에서 89년에는 5kg에 달하는 조합비를 받아 왔지만 이번에 농업기반공사가 출범하면서 부터는 83년만에 완전 폐지됨.
- 새공사는 과거 3개기관의 출신과는 관계없이 능력있고 실력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함.
- 앞으로 환경친화적 농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겠음.
(인터뷰 농업기반공사 사장 문동신)

“농업기반공사의 역할 및 변화에 대하여”

KBS-1R (2000. 1.22. 05:30)

주요내용

- 83년만에 수세가 폐지되어 농민의 부담은 경감되고 서비스의 질은 높아짐
- 3개기관 통합에 따른 인력절감과 조직의 슬림화로 예산을 절감하여 수세가 폐지되는 것이므로 다른 명목으로 농민에게 전가되는 것은 없음
- 물관리 체계가 과거에 지역단위로 관리해 오던 것을 전국단위 체계로 관리하게 되어 물 공급이 균형있게 이루어지고 효율성이 높아짐
- 농업기반공사 출범에 따른 기대효과는 첫째, 사업추진체계의 일원화로 업무의 능률화, 투자의 효율화, 기술의 전문화가 실현될 수 있음. 둘째, 농업용수 및 시설물 관리체계가 일원화됨으로써 지역간 용수의 균등분배는 물론 한수해 등 재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대처능력도 강화됨
- 새로 출범한 농업기반공사가 하는 사업으로는 첫째, 주곡의 자급과 항구적인 안전영농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조성·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둘째, 종전 104개 농조가 관리하던 지역단위 물관리 체계를 전국단위로 광역화하여 효율적인 물관리가 가능해지고 시설물 관리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짐. 셋째, 질높은 영농 급배수로 농업인에 대한 무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이라 할 수 있음

□ 올해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으로는 우선 세계적인 수준의 농업기술 개발과, 21세기 선진농업개발을 위해 정보화, 지식농업 개발에 역점을 둘 것임.

또한 농업기반의 친환경적 개발과 환경복원 노력으로 농어촌의 환경욕구를 충족해 나가는 친환경농업개발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임.

□ 저희 공사 지사, 사업단, 시군지부에 민원신고센터가 개설되어 있으므로 이곳에 이용하시거나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음.

(인터뷰 농업기반공사 사장 문동신)

라디오방송 전화인터뷰

불교방송 박종돈의 아침저널('99.12.24 07:25)

주요내용

- 농지개량조합, 농조연합회와 농어촌진흥공사 3개 기관의 유사중복기능 및 조직을 통폐합하여 「농업기반공사」로 새롭게 탄생시킴으로써 사업시행체계의 일원화 및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게 됨.

- 3기관 통합에 따른 기대효과는 첫째, 사업추진체계의 일원화로 업무의 능률화, 투자의 효율화, 기술의 전문화가 실현될 수 있음. 둘째, 농업용수 및 시설물관리체계가 통합 일원화됨으로써 지역간 용수의 균등분배는 물론 한수해 등 재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대처능력도 강화됨. 셋째, 3기관 통합에 따른 인력절감과 조직슬림화로 예산을 절감하여 과거 83년 동안 징수해오던 조합비가 폐지됨.

- 새천년 보다 새로운 각오로 출범하게 되는 농업기반공사가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뉴라운드시대 우리의 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과 농업인으로 부터 더욱 신망받는 모범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인터뷰 농업기반공사 설립준비단 기획총괄팀장 김완주)

3. 신문 기사 보도

가. 중앙지

나. 전문지

다. 지방지

여 백

가. 중앙지

여 백

중요 기사

농협공 사장 文東信씨 내정

농림부는 농지개량조합과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합해 내년 1월 출범시킬 농업기반공사 사장에 문동신(文東信·61·시진) 현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을 내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선일보(99.11.17)

농업기반공사 초대사장 문동신씨 내정



정부는 16일 농지개량조합과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합,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농업기반공사 초대사장에 문동신(文東信·시진)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을 내정했다.

한국일보(99.11.17)

농업기반공사 사장 문동신씨

정부는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3개 기관을 통합해 내년 1월 출범하는 농업기반공사 사장에 문동신(文東信) 현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을 내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매일경제(99.11.17)

농업기반공 사장에 文東信씨



사장을 내정했다.

정부는 16일 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합, 내년 1월 출범하는 농업기반공사 초대 사장에 문동신(文東信) 농어촌진흥공사

대한매일(99.11.17)

농업기반공사 사장 문동신씨

정부는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 등을 통합해 내년 1월 출범할 예정인 농업기반공사 사장에 문동신(文東信) 현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을 16일 내정했다.

동아일보(99.11.17)

농업기반공 사장 문동신씨

정부는 농지개량조합과 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합, 내년 1월 출범할 예정인 농업기반공사 사장에 문동신(文東信·61)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을 16일 내정했다.

중앙일보(99.11.17)

농협공 사장 문동신씨 내정

정부는 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어촌진흥공사의 통합기구로 내년 1월 출범할 예정인 농업기반공사 사장에 문동신(文東信·61) 현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을 내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경향신문(99.11.17)

농업기반공사 사장 문동신씨

정부는 농지개량조합과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합해 내년 1월 출범하는 농업기반공사 사장에 문동신(61) 현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을 내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겨레(99.11.17)

농업기반공사 사장 문동신씨

정부는 농지개량조합과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합, 내년 1월 출범할 예정인 농업기반공사 사장에 문동신(文東信·61)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을 내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일보(99.11.17)

□ 문화일보 (2000. 1. 6, 23면)



농업기반공사 현판식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등 3개기관을 통합해 출범한 농업기반공사가 5일 창립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영진(金榮鎭) 전농어촌진흥공사 사장, 이길재(李吉載) 국회의원, 문동신(文東信) 사장, 김성훈(金成勳) 농림부장관, 김영진(金泳鎭)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장, 신동선 농민대표, 윤근환(尹勤煥) 전농림부장관, 최선영(崔善榮) 국회의원.

□ 내외경제 (2000. 1. 6, 18면)



농업기반공사 현판식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농지개발2조합연합회 등 3개 기관을 통합한 농업기반공사가 5일 경기도 의왕시 본사에서 창립기념식과 현판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김영진 전 농어촌진흥공사 사장, 이길재 국회의원, 문동신 농업기반공사 사장, 김성훈 농림부 장관, 김영진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신동선 농민대표, 윤근환 전 농림부 장관, 최선영 국회의원.

□ 연합뉴스 (2000. 1. 6, 식가2면)

농업기반공사 공식 출범 업무 시작

쾌적한 복지농어촌 건설 다짐

(서울=연합뉴스) 채삼석 기자 =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농지개발조합연합회를 통합한 농업기반공사가 5일 창립기념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농업기반공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 의왕시 본사에서 김성훈(金成勳) 농림부장관을 비롯해 농림단체 대표들과 임직원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관식에 이어 창립기념식을 가졌다.

창립식에서 농업기반공사 임직원들은 '비전' 선언문을 통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고 쾌적한 복지농어촌을 건설하기 위한 증추기관으로 재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초대사장으로 부임한 문동신(文東信) 사장은 취임사에서 "농촌개발 조직과 물관리 조직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면서 직원들간 융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sahmsok@yonhapnews.co.kr (끝)

인물 포커스

문동신 농업기반공사 사장

“새만금호 간척사업 환경친화적으로 추진”

“새만금호 간척사업은 환경문제를 철저히 해결해 오는 5월부터 환경친화적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문동신(文東信·62) 사장은 10일 오후 새만금호 간척사업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농업기반공사는 기존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3개 기관을 합쳐 연초 출범했다.

문사장은 말문을 새만금호 문제와 관련, “오는 4월말까지 민간합동조사단이 환경문제에 따른 수질정화 등의 대안을 제시하게 되면 정부의 환경친화적 추진 방침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보안책을 마련하면 일반의 우려와 달리 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질 오염의 주 성분(인) 제거를 위해 고도처리 시설을 갖추고 6군데에 슬지틀 조성해 나가

는 등 7,7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사장은 “독막이 공사는 환경처리 시설 설치에 따라 가변적이나 예정대로 2003년까지 완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3개 기관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와 관련, “기존 농업용수 공급과 배수개선 사업, 경지정리 부문에서 40%가량 업무가 중복됐으나 통합함으로써 그만큼의 업무부담을 줄이게 된다”고 밝혔다. 인사상의 불협화음 우려에 대해서는 “일선조직은 최대한 농조출신 인사들을 우대하는 등 업무를 공명히 맡겨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연내 7,000명의 직원이 최소한 2번이상 얼굴을 맞대는 교육을 실시하고 2차례 인사를 실시, 한가족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사장은 “수세를 83년만에 폐지했듯 농업기반공사가 농민을 위한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북 군산 출신으로 69년 농어촌진흥공사에 입사한 뒤 최초로 내부에서 사장에 발탁됐으며 업무에 밝다.

● 박선화기자 psh@kdaily.com

□ 내외경제 (2000. 1.11, 17면)

“전국 농촌용수 통합관리로 효율 높일터”



인터뷰

농업기반공사 文東信 초대사장

“조직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살기좋은 농촌과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등 3개 기관의 통합조직인 농업기반공사의 초대 최고경영자인 문동신(文東信) 사장은 10일 농림부 기자실에서 취임(3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통합과 창의적 활동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생산적 상생(相生)문화라는 새로운 조직문화를 창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통합 공사의 출범으로 104개 구역(농지개발조합)으로 나뉘었던 전국의 농업용수 관리체제가 단일 관리 시스템으로 정비됐다”며 “전국의 농업용수를 수계별, 지역별로 통합관리해 물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어느 지역에서는 물이 부족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물이 넘치는 것과 같은 물사용의 비효율성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다짐이다.

농업기반공사는 이를 위해 올부터 농촌용수 수요량 증가와 산업화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비하는 ‘농업·농촌용수



종합이용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 사장은 “농업기반공사는 엄밀히 말해 3개의 조직이 통합된 게 아니라 독립채산제로 운영돼온 104개 농조와 농어촌진흥공사, 농조연 등 106개 조직이 통합된 것”이라며 “업무의 표준화와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일사불란한 조직체제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임시직 1000명을 포함해 7000명에 달하는 거대조직을 표준화와 데이터베이스화로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얘기다.

문 사장은 이어 “농업기반공사의 최대 프로젝트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수행해온 새만금간척사업”이라며 “시화호와 같은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 경영학 석사 출신으로 옥스퍼드대에서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한 문 사장은 지난 69년 농어촌진흥공사에 입사. 이 공사 처음으로 내부승진 사장에 발탁되는 등 탁월한 경영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김원기 기자/kw.k@naeway.co.kr

□ 한겨레신문 (2000. 1.18. 7면)

수세 없어지고 전국적 물관리 가능

3개기관 농업기반공사로 통합 효과

농업관련 개혁의 첫 성과인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발조합·농지개발조합연합회 등 3개 기관 통합의 효과가 가시화하고 있다.

3개 기관이 통합해 을초 출범한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가 짚는 통합의 가장 큰 효과는 수세 폐지다. 일제 때부터 농민들의 민원대상이던 수세가 83년 만에 폐지되면서 담장 300억원의 농민 부담이 줄었다는 것이다.

공사측은 17일 "온갖 원성에도 수세가 폐지되지 못했던 것은 농지개발조합의 존재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300억원에 이르는 농조 일반조합비(수세)의 대부분이 농조의 인건비나 경비 등으로 사용되고 대농민서비스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104개 농조의 총대 6700명의 관리비와 선거직 조합장의 관공비·차량유지비 등으로 연간 100억원이 들었다는 것이다.

공사측은 이와 함께 같은 사업을 3개 기관이 나눠 하는 대신 사업주체

를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지역단위 물관리체제를 전국단위로 광역화함으로써 기술축적과 지역간 용수 균등배분, 중앙단위의 재해조기경보시스템 등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공사측은 원격자동제어시스템(TM/T C) 도입 등 물관리 체제를 자동화하고 흙 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바꾸는 등 공사가 수로 관리를 전담하게 되면 98년 현재 76%에 머무르는 수리담 비율을 오는 2004년까지 88%, 2014년까지 94%로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사측은 이와 함께 3개 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이 통합되면서 경지정리사업과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등 다른 사업의 업무능률과 투자효율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7월로 예정된 농·축·인 삼협 중앙회 통합에서도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현호 기자 yeopo@hani.co.kr

중 앙 일 보
/ 月 3 日 3 / 面

농업기반공사 공식 출범

농업용수 관리와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업무를 중복 수행해온 농지개발조합(농조)과 농조연합회·농어촌진흥공사(농진공)가 통합된 농업기반공사가 3일부터 공식 출범한다.

世 界 日 報
/ 月 5 日 19 面

농업기반공 현판식 참석



△김성훈(金成勳)농림부장관 = 5일 오후 3시 농어촌진흥공사 교육원 대강당에서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등 3개기관이 통합·출범한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농진공사장) 현판식 및 창립기념식에 참석한다.

중 앙 일 보
/ 月 5 日 16 面

농업기반공사 창립기념식

문동신(文東信)농업기반공사 사장은 5일 오후 3시 경기도 의왕시 공사 본사에서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발조합·농지개발조합연합회 등 3개 기관을 통합해 출범하는 농업기반공사 창립기념식을 갖는다.



京 鄉 新 聞
/ 月 5 日 6 面

농업기반공사 창립기념식



문동신(文東信) 농업기반공사 사장은 5일 오후 3시 경기 의왕시 본사에서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등 3개 기관이 통합해 출범한 공사 현판식 및 창립기념식을 갖는다.

대 한 매 일
/ 月 5 日 7 / 面

오늘 농업기반공사 창립기념식

농업기반공사(사장 文東信)는 5일 오후 3시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 김성훈(金成勳) 농림부 장관, 김영진(金泳鎭)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의왕시 본사에서 현판식 및 창립기념식을 갖는다.

농업기반공사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등 3개 기관을 통합한 것이다.

國 民 日 報
/ 月 5 日 7 面

공사 현판식 및 창립기념식



문동신 농업기반공사사장 5일 오후 3시 김종필 국무총리, 김성훈 농림부장관, 김영진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장, 농업인단체 대표 등 각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의왕시 소재 공사 본사에서 현판식과 창립기념식을 갖는다.

농업인단체 대표 등 각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의왕시 소재 공사 본사에서 현판식과 창립기념식을 갖는다.

한겨레신문
1月5日 29面



농업기반공사 창립기념식

문동신 농업기반공사 사장은 5일 오후 3시 공사에서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3개 기관을 통합 출범시키며 창립기념식을 연다.

한국일보
1月5日 29面

■ 文東信 농업기반공사 사장은 5일 오후 3시 경기 의왕시 포일동 본사에서 현판식 및 공사 창립 기념식을 개최한다.



일간건설
1月6日 8面

농업기반공사 현판식

농업기반공사는 5일 김종필 총리와 김성훈 농림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과 창립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문동신 초대사장은 이날 "농업기반공사를 세계적 수준의 농촌개발과 물관리 전문기관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업무기술의 고도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
1月6日 37面

의왕시서 현판식·창립기념식



▷ 문동신(文東信) 농업기반공사 사장은 5일 오후 3시 경기도 의왕시 본사에서 현판식 및 창립기념식을 가졌다. 공사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3개 기관이 통합해 출범했다.

새로 출범한 농업기반공사는 21세기 선진농업·농촌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어촌진흥공사는 통합을 앞두고 야기되었던 갈등을 상호이해와 협조로 해소하여 2000년 1월 농업기반공사로 새로 출범하였습니다. 농업기반공사는 통합초기 조직의 안정화와 통합기관간의 형평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삼아 특별인사위원회를 구성,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였고, 일선 조직인 시·군 지부 총87개 중 58개 지부장(67%)을 농조출신 임직원으로 임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농업기반공사 임직원은 국가와 농업·농촌 그리고 농업인을 위하여 한가죽처럼 일하겠습니다.

□3개기관이 각 지역에서 사용하던 사무실을 통합운영함으로써 95개 사무실을 감축·운영하는 등 경영합리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농업기반공사 출범 첫해인 2000년에는 현금 400억원을 신규로 출자하여 공사의 자립경영기반 구축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수세를 83년만에 완전 폐지하고 농조의 현장 경험과 농진공·농조연의 기술을 바탕으로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일 것입니다.

□농업기반공사의 인력은 지방조직에 우선하여 배치하고, 중앙조직과 지방 조직의 비율을 14:86으로 하여 지역중심의 조직체계를 갖추었으며, 지방조직의 핵심인 시·군지부 87개소중 58개 지부장을 현장감각이 뛰어난 농지개량조합출신 임직원으로 임명하여 물관리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업기반공사의 모든 임직원은 노사간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업문화 창달에 앞장서겠습니다.

3개기관이 통합되어 새로 출범한 농업기반공사 임직원 모두는 3기관 통합이 시대적인 지상명령임과 동시에 통합을 지지해 준 농업인, 시민단체는 물론 정부와 여야 3당 등 정치권이 우리 농업부문에 베풀어준 20세기 최대의 선물이라는 점을 깊이 명심하고 국민여러분과 농업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혼신의 힘을 다하여 국가와 우리 농업·농촌 농업인을 위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2000. 1. 5

농업기반공사 임직원 일동

여 백

나. 전 문 지

여 백

농업기반공사 출범을 보며

社 說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농지개발조합연합회의 3기관을 통합해 탄생한 농업기반공사가 지난 5일 김성훈 농림부장관, 김영진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장 등 농업관계인사 5백여명의 축복 속에 현판식을 갖고 정식 업무에 돌입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작고 강한 정부를 만든다는 의지에 따라 단행된 농업계의 구조조정에서 상기한 3개 기관은 하는 일과 사업 등이 유사 중복된 것이 많아 하나로 통합해 진정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의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여망에 따라 통합이라는 쉽지 않은 산고 끝에 이날 정식 출범한 것이다.

그동안 농어촌진흥공사나 농지개발조합 그리고 농지개발조합연합회가 농업기반조성과 농업용수 이용 및 관리 등에 기여한 바는 무척 크며 3기관의 일직인들이 우리 나라 농업발전을 위해 보여준 헌신적 노력은 오늘의 우리 농업이 있기까지 초석의 사명을 다했다고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는데 인색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굳이 통합과정을 돌이켜 본다면 각기 조직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름대로의 농업인을 위하는 마음, 그리고 농업발전을 위해 더욱 땀흘려 일하고픈 욕망 때문에 그러했겠지만 통합 반대를 강력하게 외쳤고 우리 농업과는 상관도 없는 외부의 (민주) 총까지를 끌어들이어 결사 항쟁식의 통합 반대를 일부에서나마 했던 일들을 그냥 지나쳐 버리고 싶지 않다.

본란에서 지난 일들을 들추어 누구의 잘잘못, 시시비비를 가리지는 것은 아니고 농업기반공사가 출범함으로써 인해 농업인이 피해를 받는대거나 농업이 마치 망한다는 것처럼 소리높히는 기우였을 뿐이고 자칫 제 밭그릇을 찾는 일부 집단의 이기심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우선 농업기반공사의 출범과 함께 농업인이 제일 먼저 받은 것은 수세의 폐지다. 수세는 농업인들의 오랜 숙원으로 83년만에 이룩한 쾌거이기도 하지만 연간 3백여원이 농업인에게 수해되는

것이기에 때문에 3기관 통합의 대표적 1등 공신역을 특출히 한 것이다.

지금까지 역대 정권은 농업인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 3기관 통합의 당위성을 알면서도 하려다 못하고 하려다 못하는 반복을 계속했음은 주지하는 바다.

오늘 농업기반공사가 현판식을 갖고 정식 업무에 돌입하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갈등·고통을 감내하고 온갖 수모와 오해, 모락을 받으면서도 굳건하게 새 조직을 출산케 한 농림부장관과 관계관, 그리고 농업인의 의지에 경의를 표하며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비이다.

지금 세계는 나라와 나라간 민족과 민족간 심한 경쟁과 첨단 기술속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이 여파는 개방이란 막을 수 없는 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키 위해서는 내만의 영역을 그은 이기주의적 발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저마다 고비용, 저효율이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태어나려고 율트림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귀감이라도 되는양 탄생한 농업기반공사는 앞으로 기대·주목되는 비가 탄생보다도 더 큰 것임을 밝힌다.

올해 7월이면 농협·축협·인삼협회의 3개 협동조합이 또 통합된다.

뉴리온드가 진행되면서 그 결론이 우리 농·축산업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까 하는 촉각에 뒤돌아볼 틈도 없는데 이들 3협동조합 통합을 놓고 말할 수 없는 갈등과 반목이 거듭되고 있다.

앞으로 펼쳐질 개방화 시대를 맞은 우리 농·축산업은 냉혹한 국제 경쟁이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흠어집 보다는 하나로 뭉치는 편이 좋다면 갈등, 반목, 고뇌를 물어버리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동조합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이해와 존중·신뢰 속에서 응징한 새 협동조합이 탄생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보리고개에서 쌀자금을 이룩해냈고 불모지에서 낙농업을 만들어냈다. 계란은 버릴 정도로 생산할 자력이 있으며 돼지고기는 이제 수출상품의 육동지이다.

농업인과 축산인을 위하고 농업인·축산인과 함께 하면서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농·축산 부국의 건설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보자.

한국

사설

농정 추진기구 개혁의 시련
 대가 될 농업기반공사가 5일 창립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로써 그동안 기능이 중복된 3개의 농업생산기반정비기관인 농지개발조합,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가 통합돼 인원감축 등의 경비절감과 함께 조직효율화를 기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반공사의 출범으로 수세라 불리던 조합비가 83년만에 완전 폐지돼 연간 3백억원에 달하던 농민부담이 줄게 됐다.

우리가 기반공사의 설립을 주시하는 것은 농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농지와 농업용수의 효율적 개발과 유지관리를 통한

식량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다지는데 있어 그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이다.

농업기반공사가 앞으로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대농민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 사실 농업의 주인은 당연히 농민이어

야 결정되고 추진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에 출범한 기반공사는 농진공의 기술경험과 농조 및 농조연의 현장경험이 순조롭게 조화를 이루어 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3개기관의 통합과

새 출발, 농업기반공사에 바란다

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까지 농민은 농정추진의 대상이었고,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농민 통제수단으로 활용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에 출범한 농업기반공사가 순조로운 항해를 위해서는 모든 사업은 농민 중심이어야 한다. 최대고객인 농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 사업

정에서 아끼된 조직·직원간의 갈등과 반목을 치유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겠다. 물론 통합공사의 경영진이 직원용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앞장서겠다고 밝히고는 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통해 갈등요인을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사도 철저히 농민중심이어야 한다. 갈등과 반목요인을 제거하면서도 농민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함께 21세기는 변화의 시대다. 농어촌과 농어업의 환경보존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기반공사의 사업구조도 재편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농업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앞장서되 그것은 철저히 환경보전적이어야 한다. 농업은 국토를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전하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농업기반공사가 농정추진체계 개혁의 모범이 돼 21세기 이 나라 농업발전의 견인차가 되기를 기대한다.

□ 농수축산신문 (2000. 1.10, 1면)



농업기반공사 '출범'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발조합, 농조연합회 등 3개기관을 통합해 출범한 농업기반공사가 5일 현판식과 창립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영진 전농어촌진흥공사사장, 이길재 국회의원, 문동신 농업기반공사사장, 김성훈 농림부장관, 김영진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장, 신동선 농민대표, 윤근환 전농림수산부장관이 현판식을 하는 모습.

• 임익복 ickbok@afinews.co.kr



농업기반공사 출범 업무개시

지난 5일 5백명 참석 현판식 가져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가 창립기념식을 갖고 정식 출범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등 3개 기관을 통합해 지난 5일 농업기반공사로 첫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 행사에는 문동

신 농업기반공사사장, 김성훈 농림부장관, 김영진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농업인대표 등 내외빈 30여명과 농업기반공사 직원 5백여명이 참석, 현판식을 갖고 공사 교육원 대강당에서 창립기념식을 가졌다.

초대 사장으로 부임한 문동신 시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초대사장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소감을 밝히고 새조직의 가치 기준을 세계적 수준의 농촌개발, 풀관리 전문기관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 공사 출범 초기에는 무엇보다 조속한 융화와 업무체계 구축에 중점을 둘 것이며 새로운 조직문화 창조 업무의 표준화 D/B화와 조직의 체계화, 조직통합의 시너지효과제고 및 업무기술 고도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기반공사 순조로운 첫출발

5일 창립기념식 갖고 본격 업무 돌입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등 3개 기관을 통합해 출범한 농업기반공사가 지난 5일 창립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농업기반공사는 본사(6실 12층2월4사업처), 9지사, 87지부에, 인원은 5천974명으로 새해 1월1일자로 정식 출발했다.

또한 그 동안 진통을 겪었던 직원들의 인사도 별 무리 없이 순조롭게 끝마쳤다.

농업기반공사는 이에 따라 지난 5일 김성훈 농림부장관, 김영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장, 농업인단체 대표 등 외빈 30여명과 농업기반공사 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공사 교육원 대강당에서 창립기념식을 거행하는 것으로 첫근무를 시작했다.

농업기반공사 직원들은 또한 이날 전직원의 의지를 모은 비전 2004 선언문을 낭독, 새천년을 맞아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충하고, 풍요롭게 쾌



좌로부터 김영진 전 농어촌진흥공사 사장, 이길재 국회의원, 문동신사장, 김성훈 농림부장관, 김영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장, 신동선 농민대표, 윤근환 전 농림부장관, 최선영 국회의원.

적한 복지농어촌을 건설하기 위한 중추기관으로서 핵심역량을 갖춘 농어촌정비, 농업기반시설관리 전문기업으로 재도약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특히 농업기반공사 초대사장으로 부임한 문동신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초대사장으로 부임한데 대해 무거운 책무를 느낀다고 소감을 밝히고, 새 조직의 가치기준을 세계적 수준의 농촌개발·물관

리 전문기관으로 높이는데 돌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새공사 출범 초기에는 무엇보다 조속한 융화와 업무체계 구축에 중점을 둘 것이며, 새로운 조직문화 창조, 업무의 표준화·D/B화와 조직의 체계화, 조직통합의 시너지효과 제고 및 업무기술 고도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관계기사 6면〉

농업기반공사 본격 업무 돌입

5일, 金成勳 농림장관 등 5백여명 참석 현판식



◇ 농업기반공사가 본격 출범했다. 사진은 지난 5일 현판식 장면. 좌로부터 김영진 전 농어촌진흥공사 사장, 이길재 국회의원, 문동신 사장, 김성훈 농림부장관, 김영진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신동선 농민대표, 윤근환 전립부장관, 최선영 국회의원.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등 3개기관을 통합해 출범한 농업기반공사가 1월 5일 창립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농업기반공사는 본사(6실12처 2원4사업처), 9지사, 87지부에 인원은 5,974명으로 새해 1월 1일자로 정식출발했다.

또한 그동안 진통을 겪었던 직원들의 인사도 별 두리없이 순조롭게 끝마쳤다.

농업기반공사는 이에따라 1월 5일 3시 김성훈 농림부장관, 김영진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농업

인단체 대표 등 외빈 30여명과 농업기반공사 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공사 교육원 대강당에서 창립기념식을 거행하는 것으로 첫근무를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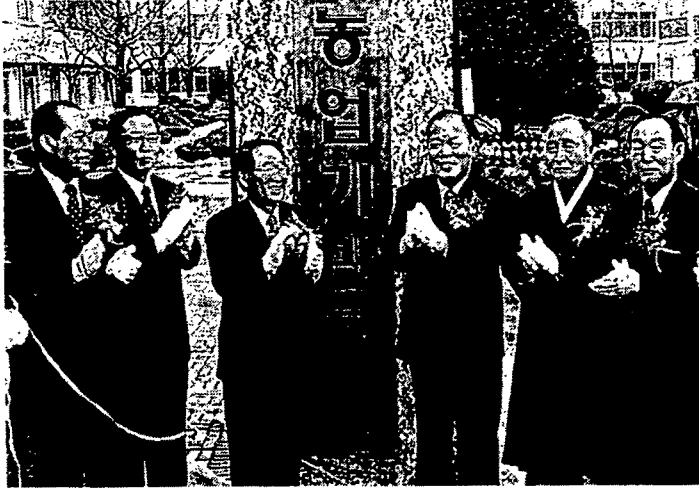
농업기반공사 직원들은 또한 이날 전직원의 의지를 모은 비전 2004 선언문을 낭독, 새천년을 맞아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충하고 풍요롭고 쾌적한 복지농어촌을 건설하기 위한 중추기관으로서 핵심역량을 갖춘 농어촌 정비, 농업기반시설관리 전문기업으로 재도약할 것을 다짐하기

도 했다. 특히 농업기반공사 초대사장으로 부임한 문동신 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초대사장으로 부임한데 대해 두거운 책무를 느낀다고 소감을 밝히고, 새 조직의 가치기준을 세계적 수준의 농촌 개발·물관리 전문기관으로 높이는 데 틀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새공사 출범 초기에는 무엇보다 조속한 용화와 업무체계 구축에 중점을 둘 것이며, 새로운 조직문화 창조, 업무의 표준화, D/B화의 조직의 체계화, 조직통합의 시너지효과 제고 및 업무기술 고도화를 역설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농민신문 (2000. 1. 6, 2면)



농업기반공사 출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
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
연합회 등 3개 기관이 통

합돼 1일 출범한 농업기반공사는 5일 창립기념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경기 의왕시 농업기반공사 본사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
는 김성훈 농림부장관, 김영진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정대근
농협중앙회장 등 30여명의 외빈과 문동신 농업기반공사 사장 등
50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과 창립기념식을 가졌다.

〈김봉아〉bong@nongmin.co.kr



현판식 농업기반공사 창립기념식에 참석한 인사들이 현판식을 갖고 있다. 좌로부터 김영진 농어촌진흥공사 사장, 이길재 국회의원, 문동신 농업기반공사 사장, 김성훈 농림부 장관, 김영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장, 신동선 농민대표, 윤근환 전 농림부 장관, 최선영 국회의원

“복지농어촌 건설 앞장” 다짐

농업기반공사 출범 문동신 사장 “공익기능 충실” 강조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등 3개 기관을 통합해 출범한 농업기반공사가 지난 5일 농업기반공사 대강당에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식을 가졌다.

농업기반공사는 창립기념식에 앞서 3시에 김성훈 농림부 장관, 김영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장, 농업인단체 대표 등 내외빈 30여명과 농업기반공사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공사 교육원 대강당에서 창립기념식을 거행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3면에 관련기사>
이날 창립기념식에서 김성훈 농림부 장관은 치사를 통해 3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이 통합되어 이제는 사업추진체계가 일원화되

며 업무 능률과 투자 효율이 크게 향상 될 것이라며 강조한 뒤 농민의 숙원이었던 농조조합비가 폐지되어 농업인의 부담은 줄게 되고 서비스의 질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업기반공사가 주곡의 안정적 생산과 21세기 통일농정의 기틀을 다지는 주역이 되자고 당부했다.

이어 농업기반공사 초대사장으로 부임한 문동신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초대사장으로 부임한데 대해 무거운 책무를 느낀다고 소감을 밝히고, 새조직의 가치 기준을 세계적 수준의 농촌개발·물관리 전문기관으로 높이는데 돌것 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새공사 출범초기에는 무엇보다 조속한 융화와 업무체계

구축에 중점을 둘 것이며 새로운 조직문화 창조, 업무의 표준화 D/B화와 조직의 체계화, 조직통합의 시너지 효과 및 업무 기술 고도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농업기반공사 직원들은 전직원의 의지를 모은 비전 2004 선언문을 낭독, 새천년을 맞이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충하고 중요롭고 쾌적한 복지농어촌을 건설하기 위한 중추기관으로서 핵심역량을 갖춘 농어촌정비, 농업기반시설관리 전문기업으로 재도약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한편, 농업기반공사는 본사 6실 12처 2원4사업처와 9지사, 87지부에 인원 5천 974명을 지난 1일자로 정식 발령했다.

□ 농산원에신문 (2000. 1.13. 1면)



▲농업기반공사가 지난 5일 현판식을 갖고 정식업무에 들어갔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영진 전 농어촌진흥공사 사장, 이길재 국회의원, 문동신 사장, 김성훈 농림부장관, 김영진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신동선 농민대표, 윤근환 전 농림부장관, 최선영 국회의원.

“농업의 공익적 기능확충에 진력”

농업기반공사 현판식 본격업무개시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발조합·농지개발조합연합회 등 3개 기관을 통합한 농업기반공사가 지난 5일 창립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농업기반공사는 6일 12층 2원 4사 업처의 본사를 축으로 9개 지사와 87개 지부를 포함해 모두 5974명의 직원으로 2000년 1월 1일 정식 출범했다.

이에 맞춰 지난 5일 김성훈 농림부장관·김영진 국회 농림해양수산

위원장을 비롯 농업인단체 대표 등 외빈 30여명과 농업기반공사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 교육원 대강당에서 창립기념식과 현판식을 갖고 첫근무를 시작했다.

이날 직원들은 전직원의 의지를 모은 '비전 2004 선언문'을 통해 새 천년을 맞아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충하고 풍요로운 복지 농어촌을 건설하기 위한 중추기관으로서 핵심역량을 갖춘 농어촌 정비, 농업기반시설관리 전문기업으로 재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문동신 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초대 사장으로 부임한데 대해 무거운 책무를 느낀다”며 “새 조직의 가치기준을 세계적 수준의 농촌개발, 물관리 전문기관으로 높이는데 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사장은 또 “새 공사 출범 초기에는 무엇보다 조속한 융화와 업무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조직문화 창조, 업무의 표준화 및 D/B 화와 조직의 체계화, 조직통합의 시너지 효과 제고, 업무기술 고도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농축유통신문 (2000. 1.13. 1면)



농업기반공사가 지난 5일 현판식을 갖고 정식업무를 개시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영진 전 농어촌진흥공사 사장, 이길재 국회의원, 문동신 사장, 김성훈 농림부장관, 김영진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장, 신동산 농민대표, 윤근환 전 농림부장관, 최선영 국회의원

“복지 농어촌 건설 중추기관으로 거듭난다”

농업기반공사 현판식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등 3개 기관을 통합한 농업기반공사가 지난 5일 창립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농업기반공사는 6일 12층 2만 4천 사립채의 본사를 축으로 9개 지사와 87개 지부를 포함, 총 5,974명의 직원으로 올 1월 1일 정식 출발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김성훈 농림부장관, 김영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장, 농업인 단체 대표 등 외빈

30여명과 농업기반공사 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 교육원 대강당에서 창립기념식을 거행하고 현판식을 갖는 것으로 첫 근무를 시작했다.

이날 직원들은 전직원의 의지를 모은 비전 2004 선언문을 낭독, 새천년을 맞이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충하고 풍요로운 복지 농어촌을 건설하기 위한 중추기관으로서 핵심역량을 갖춘 농어촌 정비, 농업기반시설관리 전문기업으로 농업기반공사가 재도약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특히 초대 사장으로 부임한 문

동신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초대 사장으로 부임한 데 대해 무거운 책무를 느낀다”고 말하고 “새 조직의 가치기준을 세계적 수준의 농촌개발, 물관리 전문기관으로 높이는데 틀”임을 강조했다.

문사장은 또 “새공사 출범 초기에는 무엇보다 조속한 융화와 업무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조직문화 창조, 업무의 표준화 및 D/B화와 조직의 체계화, 조직통합의 시너지 효과 제고, 업무기술 고도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전업농신문 (2000. 1. 4, 1면)

농업기반공사로 새출범

복지농어촌 건설 중추기관으로 핵심 역량 갖춰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등 3개 기관을 통합해 출범한 농업기반공사(사장 文東信)가 1월5일 창립기념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농업기반공사는 본사(6실12차2원4시업체), 9지사, 87지부에, 인원은 5천974명으로 새해 1월1일자로 정식출범했다.

또한 그동안 진통을 겪었던 직원들의 인사도 별 무리없이 순조롭게 끝마쳤다.

농업기반공사는 이에따라 1월5일 오후 3시 경기도 의왕시 소재 농업기반공사 본사에서 김종필 국무총리, 김성훈 농림부장관, 김영진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농업인단체 대표 등 외빈 30여명과 농업기반공사 직원 500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공사 교육원 대강당에서 창립기념식을 거행하는 것으로 첫근무를 시작했다.

농업기반공사 직원들은 이날 전직원의 의지를 모은 비전 2004 선언문을 낭독, 새천년을 맞이해 농업의 기능을 확충하고, 풍요롭고 쾌적한 복지농어촌정비, 농업 기반시설관리 전문기업으로 새

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농업기반공사 초대사장으로 부임한 문동신(文東信) 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초대사장으로 부임한데 대해 무거운 책무를 느낀다는 소감을 밝히고, 새 조직의 가치기준을 세계적 수준의 농촌개발·물관리 전문기관으로 높이는데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 농수축산신문 (2000. 1. 6, 2면)

농업기반공사 업무시작

3일 문동신사장 취임 5일 창립기념식

농조농조연농진공 등 3개기관이 통합돼 출범한 농업기반공사가 지난 5일 창립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는 지난 5일 공사 교육원 대강당에서 김종필 국무총리, 김성훈 농림부

장관, 김영진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농업인단체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 및 창립기념식을 가졌다.

특히 농업기반공사 직원들은 이날 전직원의 의지를 모은 비전 2004 선언문을 낭독, 새천년을 맞아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충하고 풍요롭고 쾌적한 복지농어촌을 건설하기 위한 중추기관으로 재도약 할 것을 다짐했다.

농업기반공사는 본사(6실 12차

2원 4사업처), 9지사, 87지부에 인원 5974명으로 지난 3일 정식으로 공사설립등기를 마쳤다.

한편 지난 3일에는 공사교육원 대강당에서 400여명의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동신 초대사장 취임식 및 2000년 시무식」을 가졌다.

• 박유신 yusinya@afnews.co.kr

취임사



문동신

농업기반공사 사장

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넷째, 고부가가치의 창출과 새로운 사업의 개척입니다.

전 임직원이 자기직무분야에서 압축적 자식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고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신지식 경영이 가능하며 선진 농촌 개발 모델을 연구하며 농업·농촌개발에 창조적이며 선도적 역할을 할 때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공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정보체계구축과 Process 혁신입니다.

7000여 임직원이 같은 시간에 정보의 공유가 가능하도록 각자가 정보기술을 높이고 정보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하며 아울러 업무처리체계를 혁신시켜 나갈 때 조직은 알맞은 체격을 갖게 되고 생산성을 높여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조직의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여섯째, 경영자립기반의 조기구축입니다.

농업기반공사의 경영구조는 특히 유동성면에서 아주 취약한 상태입니다. 개인이나 조직 할 것 없이 경영활동의

새천년의 시작인 희망찬 200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적 기대와 대망을 품고 크나큰 진흥을 겪으며 드디어 새로운 농업기반공사가 출범하였습니다.

오늘 새공사 출발의 벽두에서 그 의의를 되새기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자 합니다.

새로운 농업기반공사가 출범하기까지 지난 2년여 동안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갈등과 고통을 감내하며 마침내 웅장한 새조직을 출산시키게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3개 기관이 뭉쳐서 뽐낸 한 하나의 조직으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우리는 그간의 갈등과 고뇌를 과감히 털쳐 버리고 서로가 양보하며 마음도 하나가 되어 오직 미래를 위한 단합된 노력만이 필요한 때입니다.

새로운 조직문화 창조 최선

제가 오늘 이러한 막중한 사명을 띄고 출범하는 농업기반공사의 초대사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에 대하여 영광보다는 우선 국가와 국민 앞에 무거운 책무를 느끼면서 시장 취입에 즈음하여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몇가지 경영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새로운 조직문화의 창조입니다. 주변환경은 산업혁명 사회에서 지식정보화 사회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의 관성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화합과 창의적 활동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생산적 상생문화를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업무의 표준화·D/B화와의 조직의 체계화입니다.

전 임직원은 새로운 재정의된 사규를 빠른 시일내에 숙독하여 자기자신의 것으로 체화시키고 이를 D/B화 하며 사장을 중심으로 일상불란한 조직활동 체계로 익숙해져야 생산성이 향상되고 조직이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조직통합의 시너지 효과 제고와 업무기술의 고도화입니다.

중복된 업무기능이 통합·조정되므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업무시행체계를 정립하여야 하며 나아가서는 우리의 업무수행능력과 기술수준을 세계적 수준에 Benchmark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경쟁에

기본은 경제력 확보입니다.

전사적으로 미수금 회수, 자산운용의 효율성 증대와 불용자산의 처분, 무상안여 추진, 출자확대 등 온갖 노력을 기울여 경영기반을 조기에 구축하여야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질도 높여 나갈 수 있습니다.

일곱째, 부조리가 없는 투명한 업무처리입니다.

농업인에 봉사하는 길은 외형적으로만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아니고 청렴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이 먼저 확립되어야 합니다.

여덟째, 고객지향적인 품질경영체제 구축입니다.

고객지향내용의 한 예를 들면 사업시행면에 있어 조사과정에서부터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값싸고 질 좋은 시설을 적기에 공급관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아울러 매사에 성실성을 다하는 것만이 고객이 만족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농업기반공사는 불공의 정식으로 명실상부한 경쟁력 있는 모범 공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제 7000여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새천년 희망찬 발걸음을 크게 내디디며 사랑과 혼연일체가 되어 그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우리 모두 약속합니다.

□ 한국임업신문 (2000. 1.10, 6면)

취임사

● 문 동 신 농업기반공사사장

경쟁력있는 모범공기업 발전확신



국민적 기대와 대망을 품고 크나 큰 진통을 겪으며 드디어 새로운 농업기반공사가 출범하였습니다.

오늘 새공사 출발의 벽두에서 그 의의를 되새기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3개 기관이 뭉쳐 튼튼한 하나의 조직으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우리는 그간의 갈등과 고뇌를 과감히 떨쳐 버리고 서로가 양보하며 마음도 하나가 되어 오직 미래를 위한 단합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하여 냉혹한 국제경쟁 환경속에서 우리 농업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바로 보고 과거 실패를 이룩한 우리의 저력

을 거울삼아 정성을 다하며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조직으로 거듭날 때 새 공사의 위상은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경영의 기본틀은 자율과 참여가 존중되고 업무처리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업무의 능률과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기술을 고도화하며, 환경친화적 개발관리를 경영이념으로 하여, 조직의 가치 기준을 세계적 수준의 농촌개발·물 관리 전문기관으로 높이는 데 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2000년 새공사 출범 초기에는 무엇보다 통합전 3개 기관이 서로 다른 경영환경속에서 오랜 기간 성장해온 점을 감안하여 조속한 융화와 업무체계 구축이 우선하여야 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 새로운 조직문화의 창조입니다. 주변환경은 산업문명 사회에서 지식정보화 사회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모두는 과거의 관성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화합과 창의적 활동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생산적 상생문화를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업무의 표준화·D/B화와 조직의 체계화입니다. 셋째, 조직통합의 시너지 효과 제고와 업무기술의 고도화입니다. 넷째, 고부가가치의 창출과 새로운 사업의 개척입니다. 다섯째, 정보체계 구축과 Process 혁신입니다. 여섯째, 경영지렛대 기반의 조기 구축입니다. 일곱째, 부조리가 없는 투명한 업무처리입니다. 여덟째, 고객지향적인 품질경영체제 구축입니다.

그 동안 우리는 하면 된다는 교훈을 스스로 검증한 위대한 역사적인 조직기반을 만들고 새로운 세기의 첫해에 새로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공사는 WTO 환경속에서 농업인을 위하여, 농업인과 함께 농업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고 쾌적한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21세기 선진 농업·농촌건설의 주역으로 태어났습니다.

농업기반공사는 불굴의 정신으로 명실상부한 경쟁력있는 모범 공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2000년 경진(庚辰)년新春 對談

3기관 통합, 우리 농업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

- 먼저 농업기반공사 초대사장이란 중책을 맡게 됐는데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솔직히 너무도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등 3개 기관 통합은 한국 농업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만큼 새로 출범하게 될 농업기반공사가 한국 농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역사의 문화가 다른 3기관의 통합이냐만큼 갈등과 반목도 많고 넘어야 할 어려움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출발이 중요한 만큼 초대사장으로서 인이아할 책임감 또한 참으로 막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충동없이 농업기반공사를 순조롭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 걱정은 됩니다. 다만, 한국농업발전의 성패가 본인에게 달려있다는 각오로 농업기반공사의 안정적 기반구축에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 농업기반공사 출범의 의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동안 3개 기관이 농업기반 조성사업 중시에 수월해 왔습니다. 이번이 이러한 유사한 중복업무 통합해 하나의 기관으로 일원화시킴으로써 효율성을 높였고, 특히 농민공의 기술경험과 농조 및 연합회의 현장경험을 통합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 농업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농지와 농업용수의 효율적 개발과 유지관리를 통한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다지고, 농업인에게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 3개 기관 통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건은 직원간의 융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사장님의 복안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그리고 노사가 공동으로 직원간의 융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합과정에서 이기된 갈등과 반목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제는 한가득이 된 만큼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부터 가지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통해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사화합입니다. 노사가 화합하지 않으면 직원간의 갈등요인이 더 크게 됩니다. 조직 내부의 갈등, 직원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갈등해소를 통한 직원융화를 최우선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입니다.

- 농업기반공사 경영의 중점목표는 어디에 둘 수 있는지.

무엇보다 경영안정과 직원용화가 급선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창립초기 경영정상화를 위한 전략경영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은 크게 다섯가지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식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창조적 지식경영체제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둘째는 현장중심 경영과 과감한 권한이양을 통한 자율적 책임경영체제의 구축입니다. 셋째는 미래지향적 비전이 담긴 중장기 전략경영계획 수립과 업무프로세스 혁신 등 전략적 미래경영체제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넷째는 지속가능한 환경경영체제 구축입니다.

- 농업기반공사 출범으로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농민들에게 수혜가 빨리 더 조합비가 83년만에 완전 폐지되게 됩니다.

70년대에는 10a당 평균 26kg(최고 80kg까지), 89년부터는 5kg에 달하는 조합비를 받아왔지만 이번에 농업기반공사로 출범하면서 완전 폐지된 것입니다.

둘째, 전국단위의 물관리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재해를 예방하며 첨단장비 도입으로 유지관리업무를 첨단과학화 하여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를 대폭 향상할 수 있습니다.

셋째, 농촌용수에 대한 수질수질향

을 단계적으로 확대설치해 깨끗한 용수 확보 및 공급이 가능토록 할 것입니다.

넷째, 축적된 기술 및 선진화된 정보 마인드로 미래의 정보화, 지식농업에 대비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사장 文東信

부족 시대에 대비해 농어촌용수와 지하수 자원을 체계적,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전문공기업으로 성장 발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업문화가 자율과 창의, 인간이 존중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21세기 변화하는 시대를 맞아 선도적이고 진취적인 조직, 공유가치를 정립하고 봉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업문화의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목표에 있어서도 2002년도 농업기반공사의 매출액을 약 2조5천억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2004년까지는 2조7천억원의 사업규모로서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해 핵심역량을 갖춘 농업인 개발종합정보시스템의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기반공사는 농업인에 대한 최고의 서비스를 창출하고 질을 중시하는 경영조직을 확립하는 한편, 팀워크 부문, 재충전의 벽이 없는 조직,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 농업·농촌부흥지계획 등 농업정책 방향을 보면 간척사업이나, 영농규모 확대 등의 전망이 그치지 않지만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계획인지.

지금까지는 사업구조가 대단위농업 개발, 간척, 농어촌용수개발, 영농규모 확대 등에 편중돼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화, 개발의 가속으로

할 핵심사업과 비핵심사업을 새롭게 구분하는 등 사업구조를 재편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5개 사업을 새공사의 주력사업으로 선정해 집중화,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식량안보 등 국가적 차원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대단위 종합개발사업은 지속적인 주요정책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을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 차원에서 공사의 신규 핵심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영농규모확대사업 등을 새공사 주력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 직원들에게 있어 개인적으로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인사부문일 것이라 생각되는데 3기관 직원이 모두 만족할 만한 인사정책을 가지고 있느냐.

가장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첫째, 인력증가 및 업무다양화에 따른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일이며, 둘째는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제도를 능력·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셋째, 합리적인 전파배치 기준을 도입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 조직 확대에 직원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 단계별 카운셀링제도를 도입,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승진제도에 있어서도 경력평정제도와 발탁인사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우수인력 개발에 힘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인재 발굴을 위해 해당 업무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 의욕을 가진 인재를 공개적으로 선발, 충원하는 인사공모제를 도입하고, 교육방향도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교육 위주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순환근무 방식도 경력개발계획과 연계해 개개인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해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인사평정에 있어서도 부하와 상사, 그리고 동료들간의 상호평기로 종합적 평가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면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담·후갑조 記者]

우리 농업 발전 성패 달렸다는 각오로 안정 기반구축에 혼신

유사 중복업무 통합, 기술·현장체험 살리면 시너지 효과 방대

3기관 한가족 된 만큼 갈등·반목벗고 상호 존중·융화에 총력

농업용수 안정 공급 재해 예방, 농업인 서비스크게 향상 가능



문동신 농업기반공사 사장

준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새천년의 시작인 희망찬 200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적 기대와 대방을 품고 크나큰 진풍을 겪으며 드디어 새로운 농업기반공사가 출범하였습니다.

오늘 새공사 출범의 백두에서 그 의의와 보배로 새로운 길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세기동안 주권의 자급을 일구어 낸 역군으로서 그 소임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왔습니다. 국가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개방화과정에서 고비용·저효율이란 비판을 받으며 농업인들 위한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요구를 받아 왔습니다.

이에 오늘 새로운 농업기반공사가 출범하기까지 지난 2년여동안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고생을 감내하며 마침내 웅장한 새조직을 출산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그동안 온갖 수모를 겪으며 오늘의 영광된 출범을 낳게 하신 준경하는 김성훈 농림부장관님과 관계관님들 그리고 성원해 주신 새이 농민단체 여러분과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국회 여야 의원님들, 또 수고하신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사를 드립니다.

준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이제 우리는 3개기관이 통치하여

튼튼한 하나의 조직으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우리는 그간의 갈등과 고뇌를 과감히 떨쳐 버리고 서로가 양보하며 마음도 하나가 되어 오직 미래를 위한 단합된 노력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하여 남쪽한 국제경쟁환경 속에서 우리 농업이 처해있는 어려움을 바로보고 과거 발자국을 이룩한 우리의 저력을 거울삼아 정성을 다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조직으로 거듭남에 새공

환경친화적 개발관리를 경영이념으로

농업인과 함께 농업경쟁력 향상기반 구축

와 국민 앞에 무거운 책무를 느끼면서 회장 취임에 즈음하여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몇가지 경영과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시경영의 기본틀은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고 업무처리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업무의 능률과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기술을 고도화하며, 환경친화적 개발관리를 경영이념으로 하여 조직의 가치기준을 세계적 수준의 농촌개발·물관리 전문기관으로 높이는데 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2000년 새공사 출범 초기에는 무엇보다 통합된 3개기관이 서로 다른 경영환경속에서 오랜 기간 성장해 온 점을 감안하여 조속한 융화와 업무체계 구축이 우선하여야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새로운 조직문화의 창조입니다.

주변환경은 산업혁명 사회에서 지식정보화 사회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둘째 업무의 표준화·D/B화와 조직의 체계화입니다.

전 임직원은 새로운 제정된 규율 빠른 시일내에 숙속하여 자기자신의 것으로 체질화시키고 이를 D/B화하여 시장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조직활동 체계로 신속해 저야 생산성이 향상되고 조직이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시행체계를 정립하여야 하며, 나아가서는 우리의 업무수행능력 과 기술수준을 세계적 수준에 Benchmark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가 창출될 수 있는 신지식 경영이 가능하며, 선진 농촌개발 모델 연구하여 농업·농촌개발에 창조적이며 선도적 역할을 할 때

운용의 효율성 증대와 활용자산의 처분, 무상인여 추진, 순지향 대 등 온갖 노력을 기울여 경영기반을 조기에 구축하여야 농업

준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하연한다는 고통을 스스로 감동한 위대한 역사적인 조직기반을 닦고 새로운 새



“새로운 조직문화의 창조”로 상생문화 창조 업무의 표준화·D/B화와 조직의 체계화 통합시너지효과와 업무기술의 고도화 고부가가치의 창출과 새로운 사업의 개척

시의 위상은 무뎌 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러한 막중한 사명을 띠고 출범하는 농업기반공사의 초대회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에 대하여 영광보다는 우선 국가

셋째 조직문화의 시너지 효과 제고와 업무기술의 고도화입니다.

중핵된 업무기능이 통합·조정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업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넷째, 고부가가치의 창출과 새로운 사업의 개척입니다.
전 임직원이 자기직무분야에서 탐구적 지식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고부가가치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공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정보체계구축과 Process 혁신입니다.

7000여 임직원이 같은 시간에 정보의 공유가 가능하도록 각자가 정보기술을 높이고 정보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하며, 아울러 업무처리체계를 혁신시켜 나갈 때 조직은 일맞은 체격을 갖게 되고 생산성을 높여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조직의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여섯째, 경영자립기반의 조기 구축입니다.

농업기반공사의 경영구조는 특히 유동성면에서 아주 취약한 상태입니다. 개인이나 조직 할것없이 경영활동의 기본은 경제적 확보입니다.
전사적으로 미수금 회수, 자산

인에 대한 서비스 질도 높여 나갈 수 있습니다.

일곱째 무조리가 없는 투명한 업무처리입니다.

농업인에 봉사하는 길은 외형적으로만 업무를 완수하는 것이 아니고 청렴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이 먼저 확립되어야 합니다.

여덟째, 고객지향적인 품질경영체제 구축입니다.

큰 의미에서 우리공사의 고객은 국가와 국민이며 좁은 의미의 고객은 농업인입니다. 고객지향 내용의 한 예를 들면 사업시행연에 있어 조사과정에서부터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값싸고 질 좋은 시설을 적기에 공급관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아울러 매사에 성실성을 더하는 것만이 고객이 만족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기의 첫째에 새로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공사는 WTO환경속에서 농업인을 위하여, 농업인과 함께 농업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고 쾌적한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21세기 선진 농업·농촌건설의 주역으로 태어났습니다.

농업기반공사는 불굴의 정신으로 평실상무한, 경쟁력있는 모범중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제 7천여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새천년 희망찬 발걸음을 크게 내디디며, 시장과 현연일체가 되어 그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우리모두 약속합니다.

경건년 새해아침 농업인 여러분은 온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천년 농업기반 구축에 혼신 다할 터”

농조·농조연·농어촌진흥공사가 통합된 '농업기반공사'가 지난 5일 창립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그동안 통합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갖가지 부작용과 갈등을 훌훌 털어버리고 세계 농업무대라는 대해(大海)로 출항한 '농업기반공사'는 새천년 한국농업의 굳건한 기반조성을 위해 농업인에 대한 차원높은 서비스 제공을 다짐하고 있다.

아마도 농업기반공사의 출범으로 농업인이 느끼는 직접적 혜택은 83년간 지속되었던 수세(水稅)의 폐지가 아닌가 싶다. 수세의 폐지로 농업인의 부담은 연간 3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지만 농업기반공사의 탄생 의의를 단지 수세폐지에서 찾아서는 안될 것이다. 농업기반공사는 이제 새천년 한국농업의 인프라 조성과 관리, 21세기 선진 농어촌 개발이라는 막중한 사명과 역할이 주어졌다. 그러한 기대와 영광을 어렵고도 가득신고 '농업기반공사'의 '힘찬 항해를 지휘해 나가야 할 사람'이 바로 문동신(60) 초대 사장이다.

문동신 사장은 1969년 농어촌진흥공사에 입사한 이후 창사 27년만에 처음으로 내부에서 사장으로 발탁될 정도로 리더십과 경영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다.

농업인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오랜 산고 끝에 태어난 '농업기반공사'의 첫 선장인 문동신 사장을 만나 소감과 더불어 공사의 사업 및 경영전반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 문동신사장 프로필 ◆

- (출신)
- 전북 군산
- (학력)
-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육스퍼드대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경력)
- 69년 농어촌진흥공사 입사, 농어촌진흥공사 기획본부장 및 부사장역임
- 농어촌진흥공사 사장 역임 (97.7.21 ~ 99.12.31)
- 농업기반공사 사장 취임(2000. 1. 1)
- (수상)
- '97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 1위
- '97, '98 전국 생산성대상 2년연속 수상 (세계화, 정보화 부문)
- '98 안전경영대상 수상
- '98 산업포장 수상(대통령)
- '99 품질경영대상 수상(대통령)



인 터 뷰

농업기반공사
초대 사장

문 동 신

식량기반 구축·질 높은 서비스 역점 신지식·친환경농업 중추기관으로 육성

—농업기반공사 초대사장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돼 이께가 무겁습니다. 모든 일은 출발이 중요한 만큼 초대사장으로 안아야 할 책임감이 막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농조·농조연·농진공 등 3개 기관의 통합은 우리 농업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새로 출범하는 농업기반공사는 우리 농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한국농업의 성패가 자에게 달려있다는 각오로 농업기반공사의 안정적 기반구축에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출범의 의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크게 두가지 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농조연합회 등 3개 기관이 농업기반조성사업을 동시에 수행해 왔습니다만 이제 이러한 유사·중복업무 할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고 농진공의 기술경험과 농조

및 농조연합회가 갖고 있는 현장경험이 합쳐져 높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한국농업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농지와 농업용수의 효율적 개발과 유지관리를 통한 식량안정공급 기반을 다지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기틀이 마련된다는 점일 것입니다.

—농업기반공사의 출범으로 농업인에게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 수세라고 불리는 조항비가 83년만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전국 단위 물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서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재해 예방 및 첨단기술의 유지관리 등이 가능해집니다.

게다가 깨끗한 농촌용수의 확보와 공급도 가능해질 것이며 축적된 기술가 선진화된 정보마인드로 지식·정보농업을 농가에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기반공사 경영의 중점 목표를 어디에 둘 계획입니까?

경영안정과 직원용화를 바탕으로 삼아 다섯가지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식시대에 대비하는 창조적

지식경영체제의 구축이고 둘째는 현장 중심의 권한이동을 통한 자율적 경영체제 구축입니다. 셋째는 미래지향적 비전을 담은 중장기 전략경영계획 수립과 전략적 미래경영체계를 만드는 일이며 넷째는 농업인 서비스 품질향상등 고객 지향적 품질경영체제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속가능한 환경경영체제 실현입니다.

—3개 기관의 통합으로 직원간의 융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새가지 원칙을 갖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며 둘째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입니다. 셋째는 노사가 공동으로 직원간의 융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일 조직내부의 갈등이 남아 있다면 그만큼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향상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이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세기 모든 개발은 환경과 무관해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환경친화적 농촌개발과 관련해 농업기반공사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우리 공사는 일찍부터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한 환경경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94년부터 2002년까지 총 9년 걸친 대호간척지에 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하고 UNDP와 기술협력력을 통해 친환경 간척지 개발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협력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새반금, 시화, 회용 등 타 간척지주에도 이를 적용, 그동안 환경파괴 요인으로 인식되어 오던 간척사업의 이미지를 북돋우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의 새장을 열어 나갈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농업기반공사가 한국농업의 발전을 위해 담당해 나가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다가오는 21세기 농업은 신지식·친환경농업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력을 가진 농토와 농업용수의 확보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유의하면서 농업기반공사는 앞으로 신지식·친환경농업의 기반조성과 주력자금과 관련된 산업 즉 Agri-Business 산업 육성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담=전우승 차장)

“창조적 지식경영체계 구축 현장중심 과감한 권한이양”

농업기반공사 초대사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는데 먼저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
 △솔직히 너무도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등 3개 기관 통합은 한국 농업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만큼 새로 출범하게 된 농업기반공사가 한국농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뜻이었지요. 그러나 역사와 문화가 다른 3기관의 통합이니만큼 갈등과 반목도 많고 넘어야 할 어려움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출발이 중요한만큼 초대사장으로서 안이할 책임감 또한 참으로 막중한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충동없이 농업기반공사를 손조롭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 걱정은 합니다만, 한국농업발전의 성과가 본인에게 달려있다는 각오로 농업기반공사의 안정적 기반 구축에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출범의 의의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통합갈등 통합 책임감 막중

△농업기반공사 출범의 의의는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만 크게 두가지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그동안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등 3개 기관이 농업기반조성사업을 동시에 수행해 왔습니다만 이번엔 이러한 유사·중복업무를 통합하여 하나의 기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였고, 특히 농민들의 기술검토와 농도 및 연합회의 현장경영을 통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지는 않겠습니까. 둘째, 한국농업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농지의 농업용수의 효율적 개발과 유지관리를 통한 식량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다지고 농업인에게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농업기반공사 경영의 중점목표는 어디에 둘 계획입니까?

△무엇보다 경영인정과 직원육성이 급선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창립초기 경영성화를 위한 전략경영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크게 다섯가지로 공사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식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창조적 지식경영체계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둘째는 현장중심 경영과 과감한 권한 이양을 통한 자율적 책임 경영체계의 구축입니다. 셋째는 미래지향적 비전이 담긴 중장기 전략 경영계획 수립과 업무프로세스 혁신 등 전략적 미래경영체계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넷째는 농업인 서비스 품질향상 등 고객지향적 품질 경영체계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다섯째는 지속 가능한 환경경영체계의 구축입니다.

-농업기반공사 출범으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무엇보다도 농민들에게 수혜가 될리던 조합비가 83년만에 완전 폐지됩니다. 둘째는 전국단위의 물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용수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재해를 예방하며 청단장비 도입으로 유지관리업무를 청단화하여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를 더욱 향상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농촌용수에 대한 수질측정망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깨끗한 용수 확보 및 공급이 가능토록 할 것입니다. 넷째, 축적된 기술 및 선진화된 정보마인드로 미래의 정보화·지식농업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섯째, 투명한 경영으로 부조리를 없애고 선진농어촌 건설의 중추기관으로 발전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의 기업문화와 사업비전 등에 관해 생각하고

계시는 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생각하는 농업기반공사의 장기적인 비전은 ‘세계적인 농어촌개발 및 용수관리 종합전문기관’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즉 농어촌을 하나의 공간단위로 농업생산기반과 소득기반을 정비하고 생활환경을 체계적 복합적으로 개발할 뿐 아니라 물 부족 시대에 대비해 농어촌용수와 지하수자원을 체계적,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전문공기업으로 성장 발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업문화가 자랄 것과 창, 인간이 존중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21세기 변화하는 시대를 맞아 선도적이고 진취적인 조직, 공유가치를 정립하고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업문화의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목표에 있어서도 2002년도 농업기반공사의 매출액을 약 2355억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2004년까지는 2조7천억의 사업규모로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해 핵심 역량을 갖춘 농어촌개발종합정보·용수관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기반공사는 농업인에 대한 최고의 서비스를 창출하고 질을 중시하는 경영조직을 확립하는 한편, 필적과 부문, 계층간의 벽이 없는 조직,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농업·농촌부흥정책 등 농업정책방향을 보면 간척사업이나 영농규모화사업 등의 전망이 그다지 밝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계획입니까?

△지금까지는 저의 사업구조가 대단위농업개발·간척, 농어촌용수개발, 영농규모화사업 등에 편중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화·개발의 가속으로 새로운 농업·농촌부흥정책 등 21세기농촌환경과 농업정책은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내·외부적 환경변화를 통해 경영자원을 집중부임해야 할

전국적인 물관리로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 가능

핵심사업과 비핵심사업을 새롭게 구분하는 등 사업구조를 재편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5개사업을 새공사의 주력사업으로 선정해 집중화,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식량안보 등 국가적 차원의 중요성을 감안할때 대단위종합개발사업은 지속적인 주요정책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을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 차원에서 공사의 신규 핵심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셋째, 용수개발과 배수개선, 경지정리사업 등을 추진하는 영농기반정비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영농규모화촉진사업 등을 새공사의 주력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와외의 비효율·한계사업은 아웃소싱이나 민간이양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철수해 나갈 것입니다.

-농조는 그동안 104개농조가 각각의 지역현정을 발판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농어촌진흥공사는 아무래도 공사형태이다 보니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이렇듯 중앙집권적 성격을 앞으로 어떻게 편성하고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까?

△지금 우리가 새롭게 접하고 있는 시대는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너무도 복잡하고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문동신 초대 농업기반공사 사장에 듣는다



경영에 있어서도 ‘시장개방’이나 ‘환경’, ‘지식’과 같은 새로운 변수들이 계속 출몰하고 있어 과거와 같은 경직된 조직과 경영형태로는 급속히 변해가는 환경에 도저히 적응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에따라 저희는 새공사의 조직구조를 우선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현장중심의 프로세스조직으로 개편하며,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연한 조직으로 체질을 개선한다는데 목표를 두고 몇가지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사중복기능을 통합하고, 간접부문을 축소하는 등

대단위 종합개발 지속적 추진

조직을 슬림화하고, 지역밀착조직을 ‘보강형’ 제형입니다. 또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력운영의 pool제를 도입하고, 유연성은 책임경영체제를 실현하기 위해 권한을 과감히 하부로 이양할 것입니다.

이와외에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프로세스 중심의 조직을 설계하고, 관리업무 프로세스를 과감히 혁신하며, 그밖의 비핵심업무의 발굴 및 아웃소싱 확대도 조직의 군살을 제거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1본사와 9개도시사무소, 87개지역사무소로 편성되어 있는 현재의 조직체계 중 본사는 주로 사업계획 지원기능 위주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치고 그밖의 사업시행 및 조사설계업무는 대폭 지방으로 이양할 계획입니다.

도시사무소는 지역중심 경영체제로 하여 지역단위별 사업수행 능력을 강화시키고, 지역사무소는 회계단위별 독립운영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문사장은 농어촌진흥공사 시장 제척지식부터 탁월한 경영능력을 발휘해 온 전문경영인으로 인정받고 계십니다. 새공

사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일만한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반세기동안 축적해 온 많은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거나 조직 내부의 보편적인 지식으로 공유하지 못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식경영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21C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부응해, 새공사에서는 이처럼 보유하고 있는 지식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고부가가치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식경영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우선 2004년까지를 목표로 지식경영시스템 구축 및 지식경영 마인드 확산, 추진환경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 창출에 노력

특히 지식을 창조, 공유할 수 있는 정보기술을 개발하고,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 CKO, 지식관리자, 지식근로자 등의 역할을 정립하며, 지식경영을 위한 조직구조와 평가·보상 등의 공식·비공식제도를 새롭게 구축하는 등 총체적인 지식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식경영을 본격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지식경영의 성공여부는 이처럼 탄탄한 지식인프라 구축과 함께 지식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업문화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에 부응하는 기업문화를 창출하는 일이 새공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반공사가 한국농업의 발전을 위해 담당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가오는 21세기의 농업은 신지식·친환경농업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력이 있는 농도와 농업용수의 확보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고려한다면 농업기반공사가 앞으로 21세기 신지식·친환경농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주곡지급과 농업관련산업 즉 Agri-Business산업 육성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21C 가장 중요한 이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농민들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까?

△우리공사는 일찍부터 환경의 중요성을 감지하고, 공사 경영영역을 인간·환경·기술로 설정하는 등 환경경영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환경경영의 일환으로 공사는 94년부터 2002년까지 총 10만 4천여ha(대략 13만 4천여ha)에 달하는 대농간척지 794ha를 대상으로 환경농업시범단지를 조성하고, UNDP와 기술협력으로 친환경적 간척지 이용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농간척지농업시범지구를 조성함으로써 간척지 내에 생태계 보전 복원을 위한 토지이용방안과 친환경적 개발모형을 세

우는 한편, 간척지 주변의 유류자원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환경친화적 생태공원조성방안을 수립하는 등 환경농업에 있어서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농업시범단지 내에서는 앞으로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극대화하여 안전한 농산물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생태계 종합방역 및 직할영양 관리관리(IPNM)사업을 도입하고, 환경농업기술 지도교육, 거점형 푸른농업기반조성, 미국 치리장 및 기계화농업시범단지 등 농 조성, 2000년까지 환경농업의 기초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친환경간척지이용사업으로는 오양물질을 걸러주는 모래층지와 수생식물원, 생태복원지 등을 만들고, 초지 및 인공담수호 복지대를 조성, 철새나 각종 동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며, 육지와 바다가 열려있는 식생원이공간과 시민들이 쉽게 물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친수공간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는 UNDP와의 기술협력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대 농간척지농업시범지구 외에 대안급, 시화, 회화 등 타 간척사업 지구에도 적용, 그동안 환경과외의 요인으로만 인식되어 오던 간척사업의 이미지를刷新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개발의 새장을 열리 나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서민 기자

환경경영
추구하는

농업기반공사 “출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등 3개 기관을 통합한 농업기반공사가 지난 5일 출범했다.
이날 김성호 농림부 장관, 김영진 국회의원해양수산위원회장, 농업인 단체 대표 등 내외빈 30여명과 농업기반공사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창립기념식을 갖고 본격업무에 들어갔다.
농업기반공사 초대사장으로 부임한 문동신 시장으로부터 소감과 출범의 의 및 환경친화적 경영의념을 들어본다. (편집국)



문동신
농업기반공사 사장

프로필

- ①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②옥스퍼드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③89년 농어촌진흥공사 이사, 기획본부장, 부사장 역임
- ④농어촌진흥공사 사장 역임 ('97. 7. 21 ~ '99. 12. 31)
- ⑤농업기반공사 사장 취임 (2000. 1. 1 ~ 현재)

수상/경력

- ◆ '97. 정부부처기관 경영실적 평가 1위(최우수)
- ◆ '97. '98. 전국 생산성대상 2년연속 수상(세계, 정보부문)
- ◆ '98. 인건경쟁대상 수상
- ◆ '98. 산업포장수상(대통령)
- ◆ '99. 품질경영대상수상(대통령)

농업기반공사 초대사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그에 따른 책임감과 막중한 짐입니다. 먼저 소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솔직한 너무도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서 어제가 무겁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등 3개기관 통합한 한국 농업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만큼 서로 슬브하게 될 농업기반공사가 한국농업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나 역사와 문화가 다른 3개기관의 통합이만큼 갈등과 반목도 많고 넘어야 할 어려움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총괄하는 농업기반공사를 손조를 이끌 수 있을지 걱정도 됩니다만, 한국농업발전의 성과가 본인에게 달려있다는 마음으로 농업기반공사의 인정을 거꾸로써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① 농업기반공사 경영의 중점 목표는 어디에 둘 계획입니까?
▷ 지식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창조적 지식경영체제를 구축, 현장중심 경영과 파급력 구현의약을 통한 자율적 책임 경영체제의 구축, 미래

지향적 비전이 담긴 중점적 전략경영계획 수립과 업무프로세스 혁신 등 전략적 미래경영체제를 구축, 농업인 서비스 품질향상 등 고객지향적 품질경영체제를 구축, 지속가능한 환경경영체제의 구축입니다.

② 21C 가장 중요한 이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민공의 앞으로 대응 계획은?
▷ 우리공사는 일찍부터 환경의 중요성을 감지하고, 공사 경영의념을 인간, 환경, 기술로 설정하는 등 환경경영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공사는 환경경영의 일환으로 94년부터 2002년까지 총남 당진군 대곡간척지내 794를 대상으로 환경농업시범단지를 조성하고, UNDP와 기술협력으로 친환경적 간척지 이용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추환경농업 시범구역을 조성함으로써 간척지 내에 생태계 보존 복원을 위한 토지이용방안과 친환경적 개발모형을 제시하는 한편, 간척지 주변의 유류자원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환경친화적 생태공민조성방안을 수립하는 등 환경농업에 있어서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③ 지하수사업 향후 추진계획은?
▷ 우리공사는 30여년의 지하수

사업 경험과 전문기술, 최첨단 탐사기 및 고성능장정장비를 보유한 국내 최대의 지하수 전문가로서, 지하수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00년도 계획으로는 지하수 수력조사 4,380km와 해수침투조사 77개소, 논용수개발 70공(210ha), 방류수개발 207공(1,656ha), 생활용수개발 154공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④ 환경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까?
▷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은 1970년대 금강·평택지구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되어, 30여년전 15개지구를 준공하고, 현재 금강(2), 영산강(3-2, 3-3)지구 등 6개지구를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96년 사회초 오염이 사회 문제화되면서 대형담수호의 수질오염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간척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해 솔직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개발과 환경의 조화, 즉 철저한 사전·사후 환경영향의 실시 및 환경친화적 개발로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미 총남 당진군 대곡간척지 내에 환경농업시범구역을 조성,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모형을 개발중이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앞으로 이를 세안금 등 전국 간척지에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⑤ 최근 세안금 간척사업을 두고 백지화논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안금 오염대비책과 향후 추진방향은?
▷ 세안금 오염대비책과 향후 추진방향은?



○농업기반공사 현판식

▷ 세안금간척사업은 '91년 착수하여, '99년까지 1조 200억원을 투입하여 방조제 총 33km를 19.1km의 물막이 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59%가 진척되었습니다.
그러나, '96년 사회초 오염이 사회 문제화되면서 환경관제를 중심으로 세안금호 수질보전과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자, 정부에서는 환경문제를 중간 점검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현재 공중조사를 하고 있어 더 이상 진척없이 물막이 완료구간에 대한 보강공사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부간척지는 농지를 주목적으로 조성되며, 환경친화적으로 개발·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와 UNDP 협력하에 총남 당진군 대곡간척지 내 PCNWS종인, 대추 친환경적 시범사업(간척지 800ha, 유수지 180ha)과를 모델로하여 세안금간척지에도 적용, 앞으로 이곳에 인공습지와 생태마을을 조성하고,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 등 환경적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형태로 개발·관리할 계획입니다.

⑥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은 최근 농어민뿐 아니라 도시민에게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은 장수 생활개선개발, 환경기초시설 등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생산기반비 및 소득증대사업을 병행추진하여 건강한 농촌공간을 조성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지역 생활개발사업입니다.

특히 농촌마을하수도 시설설치사업은 문화마을조성사업과 연계해 농촌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배출조기단계에서 처리함으로써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청결한 생활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1년도에도 36억원을 투자해, 9개소의 농촌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성호 농림부장관이 시기를 전달하고 있다.

⑦ [내고향을 살리기 운동] 추진 실적과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연계해 나갈 계획인지?
▷ 저희는 이 운동을 농업기반공사 출범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세 조화에 맞춰 살명제 관리현, 수질오염감시단 등을 지정하고, 각 지역사무소별 기관·시민단체·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지역단위 추진원칙제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고향 물살리기 운동 역시 발전, 환경보전 시민공모전, 수질관련 세미나 등 각종 환경이벤트도 개최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 특집기사, 행사보도, 환경관련 전경 등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정리·이미희 기자)

고객지향적 품질경영체계 구축...

■ 문동신 농업기반공사 사장 ■

국민적기대와 대망을 품고 드디어 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어촌진흥공사 3개기관이 통합되어 오늘 새로운 농업기반공사로 출범하기까지 지난 2년여동안 우리모두는 헤아릴 수 없는 갈등과 고통을 견디며 튼튼한 하나의 조직으로 태어났습니다.



2000년 새해 출범하는 농업기반공사의 사장 취임에 즈음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경영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공사경영의 기본틀은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업무에 능률과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기술을 고도화한다. 또한 친환경 농업·농촌개발을 경영의 기본이념으로 하여 조직의 가치기준을 세계적 수준의 농촌개발

·물관리 전문기관으로 높이는 데 두고 이의 실천을 위한 통합 1차 년도의 핵심추진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첫째, 새로운 조직문화의 창조입니다. 둘째, 업무의 표준화·D/B화와 조직의 체계화와입니다. 셋째, 조직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기술을 고도화 해 나가야 합니다. 넷째, 고부가가치의 창출과 새로운 사업의 개척 노력입니다. 다섯째, 정보체계 구축과 process 혁신입니다. 여섯째, 경영자립기반의 조기 구축입니다. 일곱째, 고객지향적인 품질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친애하는 농업인 여러분

이제 농업기반공사는 WTO환경속에서 농업인과 함께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쾌적한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21세기 선진농업·농촌건설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인터뷰

문 동 신
농업기반공사 사장

“한국농업발전의 한 뚝이 되겠다”



-농업기
반공사 출
범을 축하
드립니다.

우선 초
대사장의
정책을 말
으셨는데
소감부터
한 말씀

□ 문사장 = 어려운 시기에 정책을
말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농조 농조연, 농진중 3개 기관의 통
합은 한국농업사의 한 획을 긋는 역사
적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각기
정서가 다른 3개 기관의 통합이라 갈
등과 반목도 있겠지요.

그러나 한국농업발전의 한류이 저
에게 달려있다는 각오로 공사의 안정
적기반 구축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런만
큼 새 공사에서는 어느때보다
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출범의 의의를 찾는
다면

□ 문사장 = 크게 두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간 3개 기관에
분산돼 있던 농업기반조성사업을 한
곳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
성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가장 중요한 농업인프라
인 농지와 농업용수의 효율적 개발과
유지관리를 통하여 식량의 안정적 공
급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
를 찾을 수 있겠지요.

- 사직으로서 경영의 중점목표는

□ 문사장 = 경영안정과 직원용화
가 급선무입니다. 그 다음은 창조적 지

식경영체제를 구축하고, 과감한 권한
이양을 통한 자율경영체를 만들어 미
래를 대비한 경영을 일궈나가는 것입
니다.

아울러 대 농업인 서비스향상과 지
속가능한 환경경영에 초점을 맞추고
자 합니다.

-공사 출범으로 달라지는 것은

□ 문사장 = 가장 큰 변화는 물세
라 불리던 조합비가 83년만에 완전히
폐지돼 연간 300억원의 농민부담이 덜
어집니다. 둘째는 전국단위의 물관리체
제 구축으로 농업용수의 안정적공급
은 물론 효율적인 재해예방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앞으로의 농업정책이 간척사업이
나 영농규모화사업 등에 별로 무게를
두지 않고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 문사장 = 지금까지의 사업구조가
대단위농업개발, 간척, 영농규모화사
업 등에 편중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
는 핵심사업과 비핵심사업을 구분하
는 등 사업구조를 재편성코자 합니다.

우선 대단위종합개발사업은 지속적
인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수리시설
개보수와 유지관리사업은 신규 핵심
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용수개발과 배수개선, 경지
정리사업 등 기반정비사업, 그리고 농
촌생활환경개선, 영농규모화촉진사업
등을 주력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입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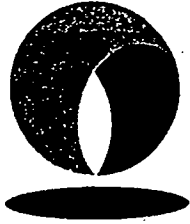
-직원들의 최대관심사는 인사일텐
데요.

□ 문사장 =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
런만큼 새 공사에서는 어느때보다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때문에 업무다양화에 따른 효율적
인 인적자원관리로 연공서열위주에서
탈피, 능력과 성과중심으로 인사를 하
려고 생각합니다.

또 합리적인 전환배치 기준을 도입
해 개인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최대
한 고려하고자 합니다.

여 백



■ 기획연재

농업기반공사 출범

고품질 서비스 실천 농업·농촌발전 이끈다

글 쓰는 순서

- ① 무엇이 달라지나
- ② 주력사업추진 전략
- ③ 경영혁신과 조직활성화
- ④ 향후 과제·발전방향

전국 104개 농지개발조합,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 등 3개 기관을 통합한 농업기반공사는 오랜 산고 끝에 5일 창립행사를 갖고 본격 가동됐다.

통합과정에서 수많은 갈등과 반목이 있었던 만큼 농업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로운 공사의 인사·조직체계와 사업구조 변화는 물론 대농민서비스가 어느정도 향상될 지도 주요 관심사이다.

본지는 새 농업기반공사 출범의 의미와 앞으로 과제를 4회에 걸쳐 집중 분석한다.

<편집자 주>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등의 목표에 대해 농고농조연 농진공 등 3개 기관이 통합된 농업기반공사가 출범했다.

88년 7월 정부의 통합방침발표를 기점으로 그동안 수면 밑에 있던 물관리 조직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후 농림부에 통합추진위원회가 설치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안을 마련, 그해 11월 27일에 국회에 제출됐으며, 지난해 1월 5일 국회를 통과해 본격적인 통합작업에 나섰다.

통합작업을 위해 3개 기관 대표와 학계, 농업인단체 등으로 농업기반공사 창립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시행령, 시행규칙과 조직, 인사, 보수, 회계제도 등의 공사실립의 골격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각기 다른 기관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나타났으나 지난 3일 공사실립동기를 마치고 정식 업무활동에 들어갔다.

새롭게 출범한 농업기반공사는 본사, 9지사, 87지부, 4사업단으로 구성됐다. 본사에 6실12차 2원을 두었으며, 인원은 본사 832명, 9개지사 924명, 87지부 4095명, 4사업단 133명 등 총 5074명으로 이뤄졌다.

이번 농업기반공사 출범으로 3개 기관이 농업기반포장 사업을 동시에 수행해 있던 것을 이번엔 유사 중복 업무를 통합해 하나의 기관으로 일원화시킴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특히 농진공의 기술경험과 농고 및 농조연의 현장경험을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용수개발·경지정리·영농 규모화등 주력사업 추진 조합비 83년만에 폐지 농민부담 300억 줄어

창출했다.

또한 우리농업의 중요한 기반인 농지와 농업용수의 효율적인 개발과 유지관리를 통해 식량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다지고, 농업인에게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

다.

이러한 농민들에게 수세라고 불리던 조합비가 83년만에 완전히 폐지돼 연간 300억원에 달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단위의 물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재해 예방 기능을 수행하게 됐으며, 원격 자동제어시스템의 도입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첨단과학화해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를 대폭 향상할 수 있게 됐다.

공사에 효율적인 경영체제를 이루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3개 기관직원들간의 조속한 융화가 선결과제다. 경영안정과 농민서비스 제고의 담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선 문동신 사장이 취임사를 통해 「새공시 출범 초기에는 무엇보다 조속한 융화와 업무체계 구축에 중점을 둘 것이며, 새로운 조직문화 창조와 업무의 표준화, 조직의 체계화뿐 아니라 「역점을 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안철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자립경영 체제 확립도 숙제다.

연간 300여억원에 이르는 수세(조합비)가 폐지됨에 따라 대체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전까지 1000억원 수준이던 수리시설 유지관리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올해 6·8% 인위로 감축된 것도 문제다.

이에 따라 사업부분을 핵심사업과 비핵심사업을 내분계 구분하는 등 전채적인 사업구조가 재편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공사는 대단위종합개발사업과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 용수개발과 배수개선·경지정리사업,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영농규모화촉진사업 등 5개사업이 주력사

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돼야 한다.

농지개발조합법의 폐지로 공사에 대한 시도지사의 지도감독권은 없어졌으나 지자체가 사업계획인가 등을 빌미로 지도감독권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지사, 사업단, 시군지부 등이 지자체와의 복잡한 관계가 야기될 우려도 있다. 또 수세 폐지에 따른 시군관리 농업기반시설을 공사가 인수관리해 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지자체와의 갈등도 우려된다.

또 지역농민들이 시군관리구역과 공사관리구역에 대해 서비스의 질을 놓고 형평성 시비를 제기할 여지를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농진공 2155명, 농고농조연 3780명 등 총 5934명에 이르는 조합원을 어떻게 하나로 융화시키나.

노사가 화합하지 않으면 자채경영만 아니라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공사가 대외의 참을 이라는 것도 공사가 짊어져야 할 과제이다.

정립식 이모저모

전·현직 농림장관 한자리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거창원 현관실에 김성춘 농림부장관, 김영진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이길백 최선영 의원, 윤근환 전농림수산장관, 신동선 농민대표 등이 참가, 김장관은 83년만의 수세폐지로 전농부 농부들이 기쁨과 눈물을 흘릴 것 이라고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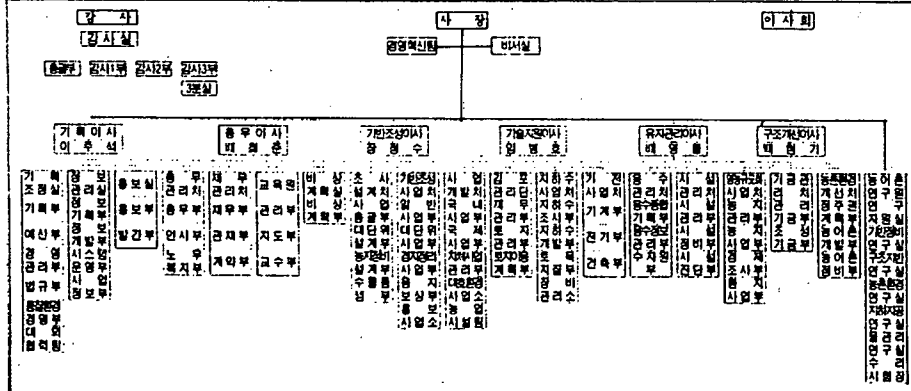
복지 농촌 건설 다짐

○이날 행사 가운데 농업기반공사 직원들과 「비전 2000 선언문」 낭독은 복지농촌 건설을 위한 중추기관으로 거듭나려는 직원들의 노력이 그대로 표출.

대농민봉사 마음가짐 다져

○600여명의 참석자들이 처음 사가(社歌)를 부르는 모습은 그동안의 갈등을 잊고 한가득이 돼 농민에게 봉사하는 새로운 자세를 다지려는 직원들의 감동적인 장면으로 승화돼 이날 행사의 백미라는 평가.

● 농업기반공사 본사 조직도



농산기획

농업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水稅폐지로 농업인 '年300억 혜택'

△먼저 초대사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진 소감은.
—솔직히 너무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농지개발조합,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 등 3개기관 통합은 한국 농업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새로 출범한 농업기반공사가 한국농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모든일에 솔밭이 중요 한만큼 초대사장으로서 안정적인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코 순탄치만은 않은 통합과정으로 인해 직원들간의 융화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생각하고 있으신 방안은 무엇인지.
—세가지 원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가족이 편 만큼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였으며, 둘째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통해 또 다른 갈등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로 공사도 직원용화에 노력하겠지만 노조도 직원간의 융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조직 내부의 갈등, 직원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갈등해소를 통한 직원용화를 최우선으로 해결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농업기반공사 출범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동안 3개기관이 농업기반조성사업을 동시에 수행해 오면서 비효율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하나의 기관으로 일원화시킴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특히 농진공의 기술경험과 농조 및 농조연의 현장경험을 통합해 시너지효과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 우리나라 농업의 기반인 농지와 농업용수의 효율적인 개발과 유지관리를 통해 식량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다지는 한편 농업인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반공사 출범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우선 농민들이 수세라고 불리던 조합비가 완전 폐지돼 연간 300억원에 달하는 농업인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전국단위의 물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재해 예방은 물론 원격자동제어시스템 등의 도입으로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외에 농촌용수에 대한 수질측정망을 단계적으로 확대설치해 깨끗한 용수 확보 및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농어촌 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화 기술을 영농현장 및 농가에 확산해 21세기 정보화·신식농업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특별지원 계획 등 농업정책방향을 보면 긴박사업이다. 영농규모회사 등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사업방향은 어떻게 이끌어 갈 계획인지.
—21세기 농어촌환경과 농업정책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사업구조를 보면 대단위농업개발기획, 농어촌용수개발, 영농규모회사 등에 편중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영자원을 집중투입해야 할 핵심사업으로 대단위종합개발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 영농기반정보사업,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영농규모화촉진사업 등을 새 공사의 주력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외에 비효율한계사업은 아웃소싱이나 민간이양을 통해 점진적으로 철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직원들에게 있어 개인적으로 가장 큰 관심사는 인사부문일 것이라 생각되는데 3개기관 직원들이 만족할 만한 인사정책은.
—인적자원관리는 그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만한 핵심요소입니다. 그만큼 새 공사도 어느때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 공사는 인사원칙을 크게 세가지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하나는 인력증가 및 업무다양화에 따른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며,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제도를 능력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합리적인 전환배치기준을 도입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단계별 카운셀링제도를 도입하거나 경력평정제도와 발탁인사제도등의 승진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인재 발굴을 위해 인사공모제를 도입하고, 교육병합도 전문기술 양성하는 전문교육 위주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104개의 농지개발조합은 그동안 각각의 지역현황을 발판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농어촌진흥공사는 공

인터뷰 문 동 신 농업기반공사 사장 비효율 제거 서비스 극대화 주곡자금 중추역할 직선

농업기반공사가 창립된지 2주가 지났다. 농조·농조연·농진공이란 각기 다른 3개 기관의 통합으로 출범초기 직원들간의 융화나 경영·사업측면에서 얼마나 빠른 민정민합을 찾을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본지는 농업기반공사를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문동신 사장을 만나 향후 경영전반에 대한 의견과 사업 구상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사태이다 보니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했는데 이제 좀 이질적인 조직을 어떻게 편성·운영할 계획인지.
—우선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현장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며,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연한 조직으로 체질을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유사중복업무를 통폐합하고, 간접부문을 축소하는 등 조직을 슬림화하는 한편 지역밀착조직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또한 책임경영체제를 실현하기 위해 대폭적으로 권한을 하부로 이양할 것입니다.
특히 본사의 0개지사, 87개지부로 편성돼 있는 현재의 조직체계 중 본사는 사업계획 지원기능 위주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밖의 사업시행 및 조사설계업무는 대폭 지방으로 이양합니다. 자사도 지역중심 경영체제로 운영해 지역단위별 사업수행능력을 강화시키고, 지방은 회계단위를 독립운영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유도하겠습니다.

나 지식관리자, 지식근로자 등의 역할을 정립하는 등 공식적으로나 비공식 제도를 구축해 총체적인 지식인프라 구축에 노력할 것입니다.
한편 지식경영의 성공여부는 탄탄한 지식인프라 구축과 함께 지식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업문화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기업문화 창출도 새공사의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21세기 가장 중요한 이슈는 환경이 될것으로 보는데 이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인지.
—공사 경영이념이 인간·환경·기술인 만큼 환경경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환경경영의 일환으로 지난 9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충남 담진군 대호간척지대 794ha를 대상으로 환경농업 시범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간척지 내에 생태계 보존 복원을 위한 토지이용 방안과 친환경적 개발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농업시범단지 내에 병해충 종합방제 및 작물영양 종합관리(I-PNM)사업을 도입해 안전 농산물 공급체계를 확립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경우 새안금·시화·화옹 등 타 간척사업지구에도 적용해 그동안 환경파괴의 요인으로만 인식됐던 간척사업의 이미지를 불식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개발을 이루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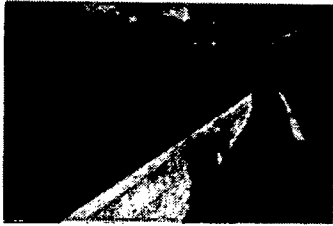
△농업·농촌용수종합이용계획 및 농촌용수 10개년계획이 새로 수립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최근 산업화·도시화 및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물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수자원개발과 함께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이용방안이 필요하며, 수자원의 오염문제 등 환경 문제도 중요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 농업·농촌용수종합이용계획 및 농촌용수 10개년계획은 주로 ▲전국 농촌지역 464개소의 용수구역을 설정해 권역별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 및 관리 ▲이미 개발된 수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용수원의 효율적 이용 ▲용수공급능력이 부족한 수리시설의 보강개발 ▲신기술개발 및 공법개선과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완벽시공 ▲투자규모 확대와 집중투자로 사업효과 제고 등에 역점을 두고 수립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반공사가 한국 농업의 발전을 위해 담당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21세기 농업은 신식·친환경농업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력 있는 농토와 농업용수의 확보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고자 공사는 앞으로 21세기 신식·친환경 농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주곡자금과 농업관련산업을 육성시키는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 박유신 yusina@afnews.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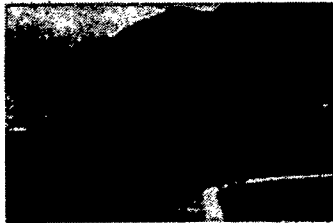
기획연재
농업기반공사 출범
* 지면관계로 생략.

□ 기획인재 **농업기반공사 출범**

‘통합 시너지’ 극대화 한다



농업용수로 정비



다목적용 저수지



문화마을 조성



자동 물관리시스템(TM/TC)



환경기초시설

□ **국 산는 순시**

- ① 무엇이 달라지나
- ② 주력사업추진 전략
- ③ 경영혁신·조직활성화
- ④ 향후 과제·발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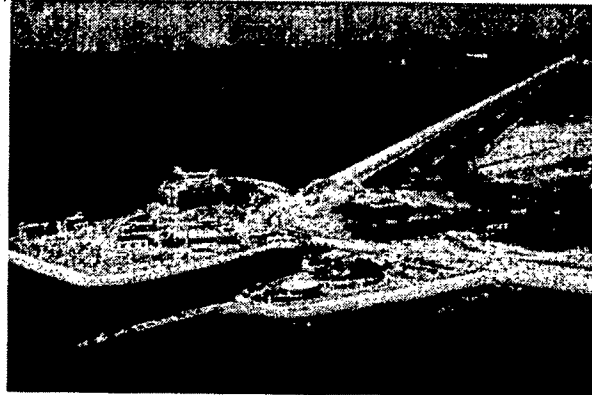
지방화·개발화 속에서 농업·농촌 무용지계획 등 21세기 농업정책과 환경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 농업기반공사도 경영자원을 집중 투입해야 할 핵심사업과 비핵심사업을 새롭게 구분하는 등 통합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구조로 조직을 재편,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 **영농규모화사업**

2004년까지 쌀 전업농 10만호 육성을 목표로 양적인 규모확대와 함께 국내 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곡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영농규모화사업은 농지매매 임대차사업과 농지의 교환·분할사업, 직접지불사업 등으로 나뉜다. 여기에 올해부터 농지개발종합협회가 담당하던 환지사업이 추가됐다. 당초 일반전업농을 대상으로 했던 영농규모화사업은 95년부터 쌀전업농육성사업으로 집중지원해 지난해까지 쌀전업농육성대상자 7만호를 선정 완료했다. 2002년까지는 3만호를 추가로 선정해 총 10만호의 쌀전업농을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목표관리 시스템' 제도를 도입해 전업농의 능력과 지역여건을 감안해 적정영농규모 확대목표를 수립하고 영농권을 중심으로 농지의 규모화와 집단체화도 도모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높일수 있도록 했다. 또 개발농가에 대해 경영능력과 소득목표에 따라 최적의 영농조건을 찾을 수 있도록 영농경영에 대한 진단·지도가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전국 1400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장부를 보급해 가장방법을 지도키로 했으며,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한편 사·군자부를 경영진단·지도 전문조직으로 탈바꿈해 나가기로 했다.

□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농업생산기반장비 농어촌생활환경



농업기반공사기 21세기 새로운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사업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익성·수익성 동시 추구 신규사업도 개발

개선 소득원 확보사업 등과 연계된 '광역별 종합개발(Package)'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 현재 시행중인 사업은 예산지원의 부족과 공사기간의 장기화로 사업비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조기에 마무리키로 했다. 대단위 간척사업과 사남해안간척개발사업 등으로 대변되던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은 그동안 국토연적 확대와 유망농지 확보로 식량의 자급기반 확충과 대규모 공단 조성은 물론 배후도시 개발을 촉진시켰다. 또 방조제 및 하구둑 건설로 운송 거리를 단축시켜 물류비 절감에도 일익을 담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로 유망농경지가 적감해 대체농지의 개발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반공사는 대형 담수호 조성을 통한 농업·생활·공업용수 등 다목적용 수자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농촌의 물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간척지 개발로 집단화된 우량농지 확보와 쌀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미 대호지구 간척지 등 대규모 간척지를 '한국형 쌀 전문생산단지'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 사업 시행시 철저한 환경영향평가와 사후관리 등으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개발위주에서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는 환경친화적 중·소규모 간척사업 위주의 사업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 **생활환경개선사업**

현재의 행정구역별로 추진되어온 농촌 생활환경개선사업은 관련사업과 연계한 생활환경영농권 중심의 복합개발사업으로 전환된다. 개발사업 위주의 시행에 따른 사업 지역간의 연계성 부족과 정부부처별 유사 중복사업의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주생활환경개발과 환경기초시설 등을 통해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생산기반장비 및 소득증대사업과 연계해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국토의 균형 개발을 이룰 내겠다는 것이다. 90년부터 시행중인 전국 1230개 면에 대한 정주생활환경개발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1000억 원으로 늘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면단위의 평면적 개발이 아닌 생활환경 중심의 공간적 개발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자연 및 생활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올해도 36억 원의 투자액 9개소에 대한 하수도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 **농업기반정비사업**

민간개발에 대응, 대·중규모의 기반사업과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업에 집중투자해 나간다.

대·중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은 단 순 농업용수 개념의 개발사업에서 관계 생활·공업·하천유지·환경·축산용수 등 다목적 용수 개념의 사업으로 변화시켜 '농촌용수 10개년 계획(95년~2004년)'과 연계해 추진된다. 기본조사 업무는 민간개발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공익성이 강한 고부가가치의 기술집약사업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또 권역단위의 농촌종합정비사업과 연계추진하는 한편 용수공급 능력이 부족한 수리시설에 대해 보강·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로 했다. 배수개선사업은 조사·설계·공사·감독의 개방화에 따른 사업조정과 함께 소규모지구와 세부설계·감리업무를 점차적으로 정리된다. 지하배수개선사업을 확대해 영농작업환경과 작물재배·토양환경을 개선하며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경지정리사업도 일반 경지정리는 점진적으로 민간용역업체에 이양하고 공익성이 강한 고부가가치의 기술집약사업으로 대체된다. 경지정리, 배수개선, 농촌용수 등 병행사업지구를 적극 발굴하면서 경지정리공법 개선을 통해 사업비 절감 및 생산기반과 생활환경이 조화된 환경친화적 개발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발기반정비사업은 정주권 개발사업, 농어촌마을정비, 파수쇄소·연어·특작 생산 유통지원 등 타사

업과 연계한 종합개발방식으로 추진되며 지역실정에 맞는 '한국형 사업지구 모델'을 개발해 사업계획수립 능력의 제고 및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외에 배영환 유지관리이사는 '안정적인 물공급 분배에 역점을 두면서 공익성과 수익성이 강한 시설 정비·진단사업부문을 적극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 **해외사업**

기존의 해외사업을 중심으로 해외진출방향을 개선하고 사업을 다변화해 독자경영 실현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기반공사의 해외사업은 국제금융기관이나 개도국에서 발주한 사업을 수주해 기본조사, 타당성조사, 세부설계, 공사감독, 유지관리 등 기술적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술협력사업과 정부의 무상공여자금으로 개도국에 전문가를 파견해 기술자문하는 기술지원사업, 개도국 농업관련기술자를 교육훈련하는 기술교육훈련사업, 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해외식량기지의 조사 및 민간기업에 농업개발기술훈원을 제공하는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사업 등 4개 분야로 분류된다. 김삼근 사업개발처장은 '동남아지역에 한정됐던 사업지역을 아프리카 등으로 다변화하고 해외사업도 관계 배수 단일목적사업에서 농업·농촌 종합개발사업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외주재 사무소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서북아시아, 중남미 등 지역별로 4개소를 운영하는 한편, 민간기업의 해외 농장 개발 사업에 관련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메단시 흡수조질사업과 가나 소규모 관계개발사업 등 총 35개국 96지구에 기술협력 및 기술지원으로 343억 원의 수익을 달성했다. 또 해외지역의 농업개발투자 정보수집 및 자금 등을 위해 중국 김립성 고지도지구에 대한 정책조사팀 지난해 8월부터 2개월간 실시한 바 있다.

□ **신규사업**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뉴리온도형상 등 급변하는 '개방과 경쟁의 시대'에 대응하면서 농업·농촌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신·새로운 농촌 개발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검토중인 신규사업은 저수지 다목적 이용사업, 유티도지 개발사업, 친환경 간척지 이용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권역별 농촌종합정비사업, 농촌지하수 환경개선대책사업, 농촌 다목적 강변어파수 개발사업 등이다. 박종태 자재사업관리부장은 이와관련 '신규사업은 농업인과 국민의 거주·휴식·생태공간을 개발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룰 사업이거나 대단위간척사업으로 조성된 유티도지를 농업·복합단지로 조성하는 환경친화적 사업 위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숙 yunhye@afnews.co.kr

농산기획

농업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경영 혁신

● 고객중심의 경영체계 확립

기반공사는 출범의 의의를 사업체계의 효율화와 대농민 서비스의 향상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부문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전략목표중 하나로 고객지향적사업추진·고객중심의 기업문화 정착으로 신뢰받는 공기업을 정착시키는 것으로 정했다.

우선적으로 고객중심의 직원 의식개혁 교육을 강화해 고객중심의 경영마인드를 확산 전파시키는 한편 사업도 지역밀착형 수요자 중심형 경영체제로 전환해 지역별 정보 및 고객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게 된다.

이와함께 계량화·객관화가 가능한 평가모형을 개발해 연도별로 평가결과를 비교분석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지역현장 중심의 홍보역량이 강화된다.

또 지역별 홍보책임자를 배정하거나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해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유대감화로 추진사업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 연구개발 지원 확대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경쟁력을 갖춘 공사로 거듭나기 위해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특히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신규사업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만큼 기반공사도 국고지원과 외부수탁 연구비를 증가해 연구개발부문의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반공사가 연구개발비로 쓰인 규모는 77억8500만원으로 그동안 기반공사 매출액중 4%선에 머물던 연구개발비를 5%수준으로 높였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점차적으로 연구개발비 규모를 늘려 2004년까지는 6%수준으로 올리는 한편 프로젝트 전담 연구인력도 대폭 늘릴 방침이다.

하지만 연구개발비 중 46%가량이 자체자금으로 투자되고 있어 경영상 예로 부분이 많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기반공사는 국고 지원 및 외부조달 자금의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 조직·인사·경영관리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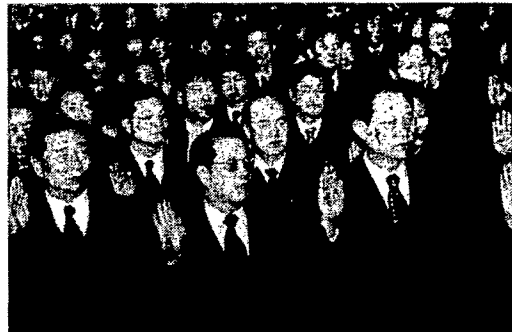
조직구조도 지방분권화 및 지역중심의 농업정책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된다.

또 각종 권한을 지사·지부에 이양해 책임경영체제로 운영키로 했다.

3개 기관의 통합으로 기반공사는 500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조직으로 태어났다. 이로인해 기반공사 조직체계에 대한

■ 기획인재 농업기반공사 출범

‘고객지향 경영마인드’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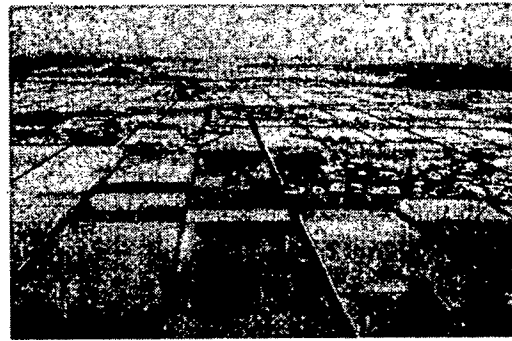


● 신년특수행사

- ① 무엇이 달라지나
- ② 주력사업추진 전략
- ③ 경영혁신·조직 활성화
- ④ 향후 과제·발전방향

농업기반공사는 경영전략을 뒷받침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경영혁신과 조직 활성화라는 두가지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3개기관 통합에 따른 경영인정 기반구축과 이질적인 기업문화로 인한 갈등요인 등의 조기 해소가 필요하며,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자체 역량을 강화해 농업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농업기반공사가 농촌 정비·농업기반시설 관리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경영 및 조직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농업기반공사 창립식에서 직원들이 「비전 2004」 선언문을 낭독하는 모습 (위)

직원간 신뢰 바탕으로 새로운 조직문화 ‘창출’

효율적인 정비가 요구된다. 이에따라 기반공사는 67지점도의 원칙을 가지고 조직체계를 아울러 갈 방침이다.

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기능별 사업별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사업계획·지원기능 이외의 사업시행 및 조사설계 업무는 지방으로 이양키로 했다. 또 유사 중복 기능을 통합키로 하는 한편 본사는 기획조정·통계·사업계획 및 사업총괄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지사는 지역중심의 경영체제로 정비해 지역사업의 수행능력을 제고키로 했다. 지부도 관한 구역의 통합 관리 및 시설행 유지관리업무, 농촌정비사업의 공사감리 및 사업

관리업무를 전담토록 하면서 회계부문을 독립적으로 운영해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인사부문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공사업무의 유지를 위해 기반공사 출범을 앞두고 조직간의 이동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인사조직을 단행했다.

앞으로 조직 및 인력 상황등을 재검토 하반기에 추가적인 인사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며, 연공에 의한 획일적인 인사관리보다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

사관리로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 투자 및 재무구조 건실화

경영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투자 및 재무구조를 건실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시군 및 민간으로부터 신규 사업 수주를 확대하는 한편 기존사업의 수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책사업이나 지역특화사업 등 신규사업을 개발해 시행한다. 또 사업도 비효율한계사업은 정리하고 핵심사업, 고부가가치 사업이 적극 육성된다. 이를 위해 기반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확대된 농업중

합개발사업, 농업기반정비사업, 농촌 생활환경개선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 영농규모화 사업 등을 5대 주력사업으로 선정해 중점 추진키로 했으며, 첨단농업시설사업, 농공단지 조성사업, 한계농지정비사업 등은 비핵심사업으로 선정해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기반공사 내부적으로도 공사실정에 맞는 원가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내부경쟁성비를 점차적으로 절감키로 했다.

■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업무의 자동화체계가 구축된다.

통합 정보시스템이란 사업 경영 후생 등 각기 다른 정보들을 통합해 제공하는 한편 각사업부서와 연계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경영자에게는 효율적인 경영의사결정을 내리게 하며 사용자에게는 전자결재 등을 통해 업무처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토록 하는 정보관리체계를 말한다.

통합 정보관리실장은 「기반공사는 사업규모면에서나 조직체계의 확대 전제적인 정보관리체계를 새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과거의 이질적인 업무들이 정보화를 통해 일괄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 업무의 조기 안정화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 활성화

■ 신규업무 창출

기반공사는 조직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직원들간의 상이한 이해관계부분을 빠른 시일내에 극복해 새로운 기업문화

를 창출할 방침이다.

출범 초기 이질적 환경 조직문화로 인한 업무의 정체나 직원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생길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위해 직원들간의 융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한편 경영참여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우선 이달 24일부터 6월24일까지 대호환경농업시범사업소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조직활성화 교육이 실시된다. 교육내용도 3개 기관간의 이질적인 조직문화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관계이해와 자기진단, 조직간 벽 허물기, 화합의 장, 다짐의 장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직원들간의 일체감조성을 위한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이밖에 「가삼리기 운동」, 「한마음 단합캠프」, 「한마음 공동체 체육대회」, 지역별 순회 홍보교육, 직원 워크샵 등도 추진된다.

또 상이한 조직문화와 업무내용 등에서 오는 직원들의 근무의욕 저하와 자신감 상실 등을 막기위해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와 기본지식 습득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중이다.

올해까지는 공사 설립과 관련한 배경이나 목적, 공사의 사명과 역할, 경영방침이나 농정방향 및 기업환경 변화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직원들간의 일체감을 조성키로 했다.

이와함께 점차적으로 경영관리 및 회계업무에 대한 기초교육에서부터 현업위주의 직무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직원 각자의 업무능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주석 기획이사는 「형식적인 통합이 아닌 진정한 공사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직원간의 융화가 선행돼야 하며 직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한 새로운 조직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사관계 회복

노사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기반공사의 경우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선 단일조합으로의 통합이 필수적이라는 방향 아래 직원간의 신뢰 회복과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점차적으로 통합분위기를 조성키로 했다.

하지만 공사합리 과정에서 야기된 조합원들의 갈등과 상이한 이해관계가 남아 있어 현재 기반공사내에는 노동조합이 농업기반공사노동조합과 전국농노노동조합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이로인해 임금이나 단체협약시 지침 등 노동조합간에 타협점을 찾았을 경우 당초에 계획했던 조직의 안정과 경영의 정상화 시기가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

· 박유신 yusn@afnews.co.kr

전국 물관리 단일체계 구축

농업기반공사 출범 - 무엇이 달라지나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농조연합회 등 3개 기관이 농업기반공사로 통합, 지난 5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감에 따라 농업용수관리와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농업기반공사 출범에 따라 가장 달라지는 것은 수세의 폐지, 연간 3백억원에 달하는 농업인의 수세부담이 사라지게 됐다.

또 하나는 농업용수관리의 전국적인 통합과 효율화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농업기반공사 출범은 전국적으로 단일한 물관리체계를 구축, 첨단장비를 도입한 과학적인 관리로 효율적인 용수관리와 이용, 재해예방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첨단장비를 동원한 수집오염의 측정과 관리, 폐공처리로 깨끗한 용수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지정리, 저수지준설, 용배수로 건설 등과 관련한 각종 비리와 부조리, 민원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경지정리 사업의 입찰과 공사수행은 농업기반공사 도지부와 본사에서 조달청의 관급공사 입찰지침에 준하여 시행하기 때문에 입찰과정, 업체선정 등에 있어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문동



5일 출범한 농업기반공사 현판식. 좌로부터 김영진 전 농어촌진흥공사 사장, 이길재 의원, 문동신 농업기반공사 사장, 김성훈 농림부장관, 김영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신동선 농업인 대표, 윤근한 전 농림부장관, 최선영 의원

효율적 용수관리-재해예방 효과 기대 입찰 등 부조리 근절 사업투명성 제고

신 사장도 입찰비리 같은 부조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와 함께 유사업무의 통폐합에 따른 업무 효율성과 비용절감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가 기대 된다. 또한 지난해 여름 태풍과 폭우 속에서 보여준 제방둑 및 저수지관리를 담당하는 농조직원들의 안전한 근무자세와 직무태만에 따른 범람과 농경지 침수피해 등을 사전에 맞출 수 있게 된다.

농업기반공사 관계자는 "유사업무의 과감한 통폐합과 인력재배치, 공사근무수칙에 따른 철저한 직원들의 근무강화 확립으로 이같은 문제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농업기반공사 출범에 따른 업무의 효율화, 비용절감, 비리근절과 같은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우려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는 것이 농업인과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농업기반공사는 대농민서비스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지선관리 등을 수행하던 인력이 감축됨으로써 농민서비스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것이 현장 농민들의 우려다. 지난 연말 전남지역 농민단체들이 농조가 여러 지소를 두고 관할하던 곳을 하나의 지소만으로 관리하겠다는 공사의 방침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도 이같은 농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사가 갖는 경직성과 관료성을 극복, 3개 기관 통합에 따른 내부직원들의 인화단결을 이루어 내는 것도 새로 출범하는 농업기반공사에게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황성희 기자 hwangsh@agncn.com.kr

농업기반공사 핵심사업은...

▲해외사업 추진=농업기반공사가 수행하는 해외사업은 크게 네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제금융기관이나 개도국에서 발주한 사업을 주주, 용역사업에 대한 기본조사, 타당성조사, 세부설계, 공사감독, 유지관리 등 기술적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술용역사업이다.

둘째, 정부의 무상공여자금에 의거 개도국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기술을 자문하는 기술지원사업이다.

셋째, 개도국 농업관련기술자를 교육 훈련하는 기술교육훈련사업이다. 마지막으로 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해외식량기지의 조사시행 및 민간기업에 농업개발기술자를 제공하는 해외농업투자 환경조사사업이 있다.

▲대단위농업종합개발=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은 1970년대 금강·평

▲발기반정비 계획=2004년까지 총 110,000ha를 개발할 계획이며 이중 99년까지 36,048ha를 완료하여 계획대비 33%의 실적을 달성했다. 발기반정비사업이 지역적 여건을 감안한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설계에서부터 세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한계농지정비, 첨단농업시설, 농공단지, 문화마을조성 등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종합연계한 종합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발기반정비 시설물 고장신고센터=농업기반공사는 대농민 서비스의 일환으로 각 지사 사업관리부에 '발기반정비사업 시설물 고장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고장신고 접수된 시설물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통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계획은 △전국 농어촌지역에 464개소의 용수구역을 설정하여 권역별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보존 및 관리에 힘쓰고 △기개발된 수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용수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 △용수공급능력이 부족한 수리시설의 보강 개발 △수리시설이 없는 가뭄상습 지역의 용수개발 △신기술개발 및 공법개선과 철저한 사업관리로 완벽시공 △투자기규모확대와 집중투자로 사업효과를 제고시키자는데 역점을 뒀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조사·설계, 시공 등 신공법을 연구·개발하여 각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용수 10개년계획을 착실히 수행하여 수리답율을 88%로 높이고 2005년에는 10개년계획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내고항물살리기 운동=이 운동을 농업기반공사 출범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새 조직에 맞춰 실명제관리하천, 수질오염감시단 등을 재정비하고, 각 지역사무소별 기관·시민단체·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지역단위 추진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2004년까지 11만ha 발기반 정비 기술컨설팅 용역등 해외사업 박차

택지구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되어 30여년간 15개지구를 준공하고 현재 금강(2) 영산강(3-2, 3-3)지구 등 6개지구를 추진중에 있다.

▲새만금 오염대비책=새만금간척사업은 91년 착수하여 99년까지 1조251억원을 투입하여 방조제 총 33km중 19.1km의 물막이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59%진척됐다.

앞으로도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당초 사업취지를 유지하면서 환경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설물 정밀안전진단=2000년도에도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중 시설규모가 크고 재해 위험이 높은 시설부터 우선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노후 위험시설에 대한 개보수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수리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진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농촌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정주생활권개발, 환경기초시설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생산기반정비 및 소득증대 사업을 병행추진하여 건강한 농촌공간을 조성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지역 종합개발사업이다.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90년 10월 강원도 횡성군 우천지구와 충남 공주시 계룡지구등 2개의 시범사업지구를 시발로, '99년까지 총 115지구의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으며, 2000년에는 23지구,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모두 52지구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농촌용수 10개년 계획=농업기반공사는 사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농촌용수종합이용계획 및 농촌용수 10개년계획을 수립했다.

□ 일간건설 (2000. 1. 4. 7면)

농기공, 환경친화적 개발 추진

문동신 농업기반공사 초대사장은 앞으로 환경친화적 개발관리를 경영이념에 도입해 농업기반공사가 선진국 수준의 농촌개발과 물관리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사장은 3일 열린 취임식에서 “경영자립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업무의 표준화를 적극 추진하고 미수금회수와 자산운영의 효율성 증대, 불용자산처분, 출자확대 등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사장은 또 업무의 능률과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기술을 고도화하고 환경친화적 개발관리를 경영이념으로 해 조직의 가치기준을 선진국수준의 농촌개발과 물관리분야의 전문기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朴魯一기자 royal11@

여 백

농업기반공사

3개기관 통합 시너지효과 극대화 시대 맞아

농업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경기도지사장 박영택



희망찬 새해 새 청년을 맞이하여 '농업기반공사'도 여타 어느 부문에서 보다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하게 됩니다. 새청년에는 지금까지 대내·외적으로 논인의 대상이 되어왔던 농진공 농조·농조연 사의 3개기관이 통합되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정부'에서 최초로 수직적으로 기관간의 기능통합을 하였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부문도 세계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반증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로운 농업기반공사의 공극적인 목표인 세계화시대에 한국농업의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경쟁력 향상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농업관련기관간의 통합은 어느 정부에서도 해명하지 못한 위기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농업이 한 국가의 단순한 식량자급만을 위하여 아니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자긍심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역사의 교훈으로 배우고 있기 때문인리

수직적 기관간의 기능통합이력

새로운 농업의 패러다임이 제기돼 농업인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구축 지역적 특성을 중요시하는 소명 의식

다. 최근 유사 이래 금융위기는 국가적 어려움속에서도 주곡자급을 통하여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농업이 세계 시장에서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우리 식성에 맞는 자급자족의 길을 자급 할 수 있었음을 구 소련의 붕괴, 인도네시아 및 북한에서의 같은 사회적 충격과 혼란을 보면서 새삼 시사하게 하는 바가 많을 것입니다.

아울러 농업은 이런 식량의 공급을 제공한다는 사명감의외에 새로운 농업의 패러다임으로 제기되고 있는 환경과우에도 여타 어느 부문보다도 친환경적인 산업으로 성장발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농업의 공익적 중요기능의 인정도 작년 11월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3차 WTO 각료회의에서도 그 기능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한 국가에서 농업의 역할과 사명을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정부에서 새롭게 태어난 농업기반공사는 수요자가 농업인임을 인식하여 농지, 용수부문 및 유통관리 등에서 효율적인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회지사는 수도권의 지역적 특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사업 시범의 차별화로 경쟁력있는 농업을 위하여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쌀전업농의 영농규모확대 해야

강원도지사장 이상익



새청년과 함께 200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청년은 우리에게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합니다. 지난 시절 우리농업은 '농자전하지대본'이라하여 우리민족의 근본으로 5천년 역사의 바탕이었던 근대화·산업화과정에서 희생되어 소외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개방화로 치닫고 있는 국제경제 흐름속에서 우리농업은 결코 안전지대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여경속에서도 농업이 붕괴되지 않고 꽃피어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농업인에 대한 애정과 강한 의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농업부문에 2000년의 희망찬 시작은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농지개발조합연합회 통합한 농업기반공사의 출범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공사는 지난 몇해 국가경제적 환경의 변화 속에 농업인들을 위한 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요구를 받았고 이에 새로운 농업기반공사가 출범하기까지 갈등과 고통을 감내하여 마침내 새조직으로 태어났습니다.

새청년을 맞이하여 지난시절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와 경쟁하여 선진농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에 근본

농업의 저비용·고효율 체제로 전환

선진국 수준의 농업생산기반시설확충 쌀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선도지원 농촌주거환경개선과 사업주력

적으로 대처하고 변화와 개방에 대비하여 농업의 고비용·저효율 체제를 저비용·고효율 체제로 전환하고 노동집약적 형태에서 기술집약적 형태로의 전환을 통한 농업의 구조조정과 국제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수자원 개발, 홍수예방, 관개배수시설, 경지정리 및 농촌생활환경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 확충되도록 하고, 수자원을 확보하여 전천후 농업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해 줄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의 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둘째, 90년대부터 시작된 영농규모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쌀전업농의 영농규모를 확대하여 주고 농지의 교환분할을 통한 집단지원 실현은 물론 쌀농사의 전문경영인의 1만호 집중육성으로 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쌀생산량 선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영이양 직접지불사업을 통하여 고령농업인의 경영이양을 촉진하고 농촌의 청장년화를 유도하고 맑은 농촌의 미래를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면으로 농업자료의 정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지정보화 등 농업관련 자료의 I/B를 구축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영농으로 농업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풍부한 자연을 배경으로 농촌주민의 생활하기에 좋고 도시민에게 여유와 편안함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농촌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생산기반과 소득증대사업을 병행하여 쾌적하고 여유있는 삶의 공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개발노력과 지식마인드 구축'해야

충청북도지사장 권기일



새청년이 시작되는 희망찬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공사가 새청년의 시작과 함께 국민적 기대와 성원에 힘입어 뜻깊은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21C는 변화하는 시대, 변화하는 농업환경의 대외적 변화에 부응하는 물론 21C에 걸맞는 새로운 공사상을 부각할 때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공사는 3개기관 통합과정에서 오는 이질적인 조직문화와 직원용화가 지연 될 경우 경영효율화에 장애요인으로 대두될 것이며, 또한 농업용수 이용료의 폐지에 따른 대체재원 부족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조사설계·감리업무와 민간개발·이양으로 재공사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많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조직의 안정을 위한 화합,입니다. 그동안 3개기관 통합과정에서 발생했던 상호간의 갈등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대농민 서비스 강화에 최선

과거의 습관에서 탈피해야 직원간 신뢰를 바탕으로 동질성 회복에 노력해야겠습니다.

둘째 '대농민 서비스 강화,입니다. 농업인의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저는 이 자리에서 SS-Rum을 등을 전격해 나갈 것입니다.

SS! Stand, Sec, Smitk, Speed, Satisfaction을 의미합니다. Stand는 민원이 오면 일어서서만 의미이며, Sec는 상심한 관심을 보이고, Smitk는 밝은 표정을 지으며, Speed는 업무처리 신속하게, Satisfaction은 민원인에 만족을 드리자는 것이며, 마지막 Rum은 앞에서 언급한 SS를 실천하면서 농민과 함께 뛰자는 운동입니다. 이운동을 우리 직원 모두 함께 전개함으로써 대농민 서비스의 실용 한단계 높여 나가리라 믿습니다.

셋째 '과거의 관습에서 탈피,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모두는 그동안의 과거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자세로 업무에 임할 시점입니다. 과거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미래를 향한 전진과 발상의 전환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현실에 인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업무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Zero Rasc에서 출발,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의 기득권, 파벌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며 모두가제로에서부터 출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처리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관리는 물론은 환근부 정착을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자기개발노력 및 지식 마인드 구축,입니다. 21세기는 흔히 지식, 정보와 사회라고 합니다. 지식경쟁을 통한 자가 개발이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농업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충청남도지사장 구광희



WTO출범과 더불어 수입개방등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한 국내농업은 위기인 동시에 새로운 도전의 기회에 직면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식량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과거의 소규모 가족농중심의 농업구조를 과감히 탈피하고은 국민의 먹거리인 식량을 자급하고 우리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거시적인 안목에서 앞으로 투자 발전방향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농업현안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21세기 밀레니엄시대에 적합한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농업인들이 자신감을 갖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속에 우리농업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다양한 농업인들의 소리를 전달하는 전업농 신문과 같은 언론의 역할은 그 어느때 보다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0년 21세기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농업기반공사는 농업인과 함께 21세기의 활기찬 선진농어촌을 건설

거시적인 투자 발전방향이 정립돼야

언론의 역량이 요구되는 시대 활기찬 선진 농어촌을 건설해야 농업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데 전력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심층분석해야

하기 위해 농어촌 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농지개발조합등 농업생산기반정비 관련조직 3개기관이 통합하여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각오가 정립된 가운데 농업인들의 필요사항과 애로사항을 심층분석하여 3개기관이 갖고 있는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기술인력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우리나라 농업과 농어촌진흥사업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속에 모든 농업인과 정부로부터 사랑받는 고단공기업으로 발돋움 할 것이며, 농업인들이 독자적으로 '기세기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국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하며 유익한 정보와 새로운 농정추진 방향을 제안 할과 아울러 농업인들의 정보기술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고, 우리 농업인들의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의 기술농업, 수출농업, 고부가치 농업정책을 제시하는 전문지로서 역할을 굳건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충청남도 지사가 전국 선두 자사로 성장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졌으며 내실있는 경영으로 2000년도 사업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 농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위해 전력할 방침이다.

농업기반공사

전라북도지사장 류중식

“농업인이 소망하는 방향”으로 가야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새해, 새 천년이 시작되는 庚辰年 희망찬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먼저 우리 농업인 가족 여러분에게 마음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농업이 없는 국가, 농업인이 없는 민족, 농촌이 없는 도시를 상상할 수 없으며, 농업은 국가와 민족형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입니다. 농업이 존중받지 않고는 국가경제발전도, 식량안보도 국민의 행복도 있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땀을 둀는 사람은 심신을 닦고, 땀을 짜지하는 사람은 심신을 폐지한다.” 지금 이 말이 갖는 내용을 조금씩 생각해 봅시다. 삶에서 중요한 것이 처음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의 하나가 열 가지의 일에 미치고 백에도 미치므로, 무엇이든지 시작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것을 결심하고 좋은 생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신년을 맞이한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3개기관 통합으로 시너지효과 극대화시켜
인간과환경...기술의 융화로 새로운 가치 창조
풍요롭고 활기찬 농촌건설에 앞장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새천년을 맞아 경쟁력 있는 한국농업 발전의 기틀을 다져나가기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그 동안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었던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농지개발조합연합회 통합하여 농업기반공사로 새롭게 출범하기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에 새 공사가 “농업인이 소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지사 전직원의 다짐을 약속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농촌의 물관리 경험과 농진공의 기술을 바탕으로 3개관 통합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통합된 조직체계를 구축, 전문성과 영농면역도를 제고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의 확충, 관리 및 농촌구조개선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거듭 나겠습니다. 또한 농업용수 공급 이 사설관리에 대한 농업인의 참여를 보장하여 물관리의 효율화와 서비스 질을 높이고, 획기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농업인의 부담과 국가재정을 경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 천년, 이렇게 농업기반공사에 부여된 역사적, 시대적 책임을 우리 지사 전직원은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범 공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21C는 지식의 세기입니다. 이제는 농지의 면적이나 자원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식과 정보, 그리고 기술과 창의력이 앞으로 농업과 농촌의 운명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 농업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가지고 풍요롭고 활기찬 농촌을 가꾸어 나갈 것을 우리 함께 다짐합니다.
앞으로 국민과 농업인의 기대와 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질정과 따뜻한 관심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庚辰年 새해를 맞이 농업인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하시는 일마다 많은 발전과 성취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미래의 농업과 농촌을 생각하는 공사맨이 될터

전라남도지사장 김인현

선진농어촌개발에 앞장설터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경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이 출발하는 농업기반공사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모두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인은 우리공사의 고객이자 주인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섬기고 봉사해야 한다는 의무를 자니고 역사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미래의 농업과 농촌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공사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농업·농촌을 세계수준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용수관리를 통해 국제경쟁력 있는 선진농어촌건설에 앞장설 각오를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농업과 농촌발전을 농업인의 이익증진과 삶에 질을 높이는 데 최선에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농업인이 삶에 의욕과 보람을 가지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과 틀을 조성하여 쌀 산업의 자립도를 높이고 수출농정을 전개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3개 기관이 통합초기에는 조직내부 직원모두에 통렬성 회복과 업무체계 구축으로 경영의 안정화를 찾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 생각하고,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항상 웃음과 활기가 넘치고 행복지수가 높은 공사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21세기 새로운 밀레니엄에 우리 전남도 농업인들도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급변하는 세계적 흐름과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데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남지사장 이정태

농업인을 위한 진정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2000년 농업기반공사가 출범하기 까지 지난 2년은 국내외의 긴박한 여건변화 속에 시대적 요청이었다 하더라도 당시 자로서의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웠던 시기였다고 봅니다.
고비용·저효율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농업인을 위한 진정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국민의 기대와 질책, 기관간의 이해상충에서 새천년의 출발점에서 마침내 농업기반공사라는 새로운 조직이 출범하게 된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조직의 출발선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우선하여야 할 것은 오랜기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해온 직원들의 조속한 융화와 아울러 업무 처리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직장분위기 조성 및 업무 체계의 조기구축으로 업무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 농업기반공사 직원으로서의 하나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직원 용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조직문화 창조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업무 시스템을 분석하여 중복된 업무의 통합조정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 시용체계를 조정하여야 하고 사업의 시범 단계에서부터 시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전무면에 걸쳐 고과의 의견을 존중하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사만의 독특한 업무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물관리 업무의 표준화와 D/B화로 물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세계적 물관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 농업인이 필요로 하고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경상북도지사장 정호언

천년 통일 농업의 나침반 역할을 기대하며



진실과 상상의 영물인 용, 그 용의 해, 경진년!
뉴 밀레니엄 시대 2000년의 새해를 맞아 450만 농업인과 농업계의 농우신 협력, 그리고 넉넉한 과실을 기원하면서 아울러 전업농신문의 변함없는 선도와 발전을 성원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우리농업의 지난 반세기를 반추해 볼 때 6.25한국전쟁을 겪고 보리고개에서 주곡자금을 염원하던 60년대, 통일벼로 녹색혁명을 완수하여 쌀의 자급율을 높이고 새마을 운동으로 농촌에 생기가 들던 70년대, 그리고 본격적 상업농시대를 알리던 비닐하우스로 백색혁명을 불러왔던 80년대, 이젠 우리식탁

에까지 세계의 농산물이 물러지고 오직 힘있는 자와 자기는 지만 살아남는 개방화시대의 90년대로 반세기는 대별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시애틀회의에서는 아직은 결렬로 끝난 WTO 각료회의였지만 그 기류는 대변역의 뉴라운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개도국과 NGO, EU의 영향력으로 당장은 실패한 협상이지만 언제든지 다시 상정될 수 있으며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과 캐너드 그룹들은 합의와 선언문으로 우리를 옥죄어둘게 할 것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도 농업분야에 크게 위 기울고 눈은 모아야 할 때, 언제까지고 생명산업을 경제학자들의 안이한 부자 우산순위 관념에 맡겨 후순위로 밀려나도록 해서 안되며 또 그들의 시각과 정감을 오늘의 농업연상에 모으도록 해야 합니다.
환경농업과 신지식농업으로 새천년을 새로이 무각시켜 나가는 큰일을 우리 각분야 전업농기들은 벌써 나의해부로 인식하고 있으니 만큼 정부와 학계, 관련단체도 여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움직임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지속되어야 합니다.
신년 앞이 아닌 다음세기도 내다보며 조류에 맞도록 조금씩 보완 적용할 수 있는 농업정책의 입안에 신중해야 하며, 그 정책의 최대수혜자이자 최고의 피해자는 우리 농업인입니다. 도상이 아닌 현장에 맞는 정책을 스스로 만들고 건의 보완하여 참여하는 자세의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여집니다.

제주도지사장 한규언

세계화된 제주도 농업생산기반 조성에 박차



농업기반공사의 출범과 더불어 2000년 새해 아침의 찬란한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새천년 우리 농업인의 밝은 미래를 예감하고 농업기반공사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합니다.
과거 농어촌진흥공사는 힘써왔던 우리 농촌에 우렁찬 농지를 조성하고 수자원을 확보함으로써 녹색혁명을 주도하여 주곡자급기반을 확고히 하였으나, 앞으로 농업기반공사는 우리 농업의 세계화에 대비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미래 복지농촌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는 막중한 임무와 함께 변화의 첫발을 내디디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세계화 농업은 지역 교류

의 문화적 가치를 포함하는 지역특성에 의한 농업상품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제주도는 타지역과 매우 다른 지역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상, 지질, 토양, 수문 등 농업환경이 다른 제주도는 전부 밭으로 되어 있어 농작물 역시 감귤 등 과수작목과 밭작물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농촌환경을 청정 미려하게 가꾸어 하며, WTO의 영향권 아래서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제도로 인한 무관세 농산물 유통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공사는 과거 30년 동안 지하수를 개발하여 제주도의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모든 용수를 공급해 왔으나, 새공사에서는 새로운 천년 필수요 대책으로 금년에는 성읍지구, 고신지구 등 제주도 최초의 지표수인 제주지공사에 착수하여 또한번 제주도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며, 5,000ha의 밭기반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시범하고 밭용수공급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특히 감귤영농농민모호사 등으로 130만 감귤전업농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문화마을조성, 관광휴양농촌단지 조성, 농촌하수 정화시설사업 등에 주력하여 세계화된 제주도 농업생산기반·농어촌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농업기반공사 경북도지사장 鄭虎彦



뉴밀레니엄의 시대 2000년!
이제 아무나 농사짓던 시
대는 떠났습니다. 모든 산업
의 근본이며 생명을 키우는
농업은 아무나 할 수 없고
능력있는 자만이 경영할 수
있는 산업이므로 우리는 그 능력을 키워내야 하며
그 책무가 4백50만 농업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4천7백만 국민 모두에게 있는 것입
니다.

새천년에는 농업의 경영규모도 확대 대형화, 자
동화되어야 하고 인위적으로 가공되기 보다는 농
산물의 생산과정이 인간에게 유익하도록 환경농업
을 근간으로 90년대의 상업농 기초가 농업정보화
로 우리의 농업도 보호하고 농촌도 살리며 우리
국민에게도 유용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입
니다.

이제 우리 농업에 대한 행동과 사고방식도 과학
화되고 정확성을 기해야 합니다. 막연한 움직임과
대충대충식의 생각은 세계의 개방화 추세를 볼 때
자충수가 될 확률이 너무도 높기 때문입니다. 정
확성의 추구는 글로벌화되는 현실에 적응하기 위
한 기초이자 기본행동양식이며, 또한 변화는 선택
이 아닌 생존문제로 전진이 없으면 퇴출되고 움직
이지 않으면 도태를 불러오는 상황논리를 볼 때
현실안주형 영농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뉴밀레니엄시대 새천년을 맞아 농업계의 번창은
물론, 농업인과 농촌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부
활을 기원합니다.

새천년 농업·농촌 부활을 꿈꾸며

□ 농수축산신문 (2000. 1. 8, 11면)

「새로 출범하는 농업기반공사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새천년과 함께 출범한 농업기반공사 전남지사장으로 부임한 김인현지사는 「농업인은 우리공사의 고객이자 주인이므로 우리 모두는 이들을 섬기고 봉사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미래의 농업과 농촌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공사맨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인현지사는 「앞으로 우리는 농업 농촌을 세계수준으로 개발하고 효율적인 용수관리를 통해 국제 경쟁력 있는 선진 농어촌건설에 앞장설 각오」라고 말하고 「새로운 농업과 농촌 발전의 패러다임에 맞추어 직

■ 인터뷰 / 김인현 기반공사 전남지사장



농업경쟁력 제고 틀 조성 통합 시너지효과 극대화 선진 농어촌건설 '앞장'

원 동질감 회복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므로써 농업인의 이익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지사는 「농업인 모두가 삶의 의욕과 보람을 가지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과 틀을 조성, 쌀산업의 자립도를 높이고 수출농장을 전개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을 일으키는데 전력투구 하겠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밖에도 「3기관 통합초기에 일어날 수 있는 조직내부 직원들의 동질성 회복과 역량을 결집토록 하고 항상 웃음과 활기가 넘치는 공사의 모습을 보이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할 방침」이라고 다짐했다.

정부투자기관

경영마인드가 탁월하고 업무관리 능력을 평가받고 있는 김지사는 고졸출신으로 성균관대 경상대학교 졸업,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지난71년 농어촌진흥공사 공채1기로 입사 후 영산강사업단부단장, 전남지사장을 역임하는동안 대통령표창, 농어촌진흥대상등을 수상하였으며 부인 박정자씨와 2남이 있으며 취미는 등산.

• 광주=김삼태 samtae@afnews.co.kr

□ 농수축산신문 (2000. 1.10)

■ 인터뷰 / 이정태 기반공사 경남지사장

「고비용 저효율이 라는 비판을 받으며 농업인을 위한 진정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들의 기대와 질책, 기관간의 이해상충속에 새천년의 출발점에서 마침내 농업기반공사라는 새로운 조직이 출범하게 된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 경남도지사장에서 농업기반공사 경남도지사장으로 옷을 갈아 입은 이정태지사의장의 새천년의 각오는 남다르다.

「다른 환경에서 성장해 온 직원들의 조속한 융화와 업무처리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직장분위기 조성 및 효율적 업무체계의 조기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정태지사는 「하루에도 몇번씩 그동안 통합으로 불거진 잡음 등을 제거하고 단결된 힘으로 진정한 농업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지누림을 담한다.」고 한다.

따라서 그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농업기반공사 직원으로서의 하나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융화」를 다질 수 있는 새로운 조직문화 창조이다.



“
**임직원 조기융화
 업무효율성 제고
 고품질 서비스 제공**
 ”

그리고 이정태지사는 「업무시스템을 분석하여 중복된 업무의 통합조정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 시행체계를 조정해야 하고, 사업의 시행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전무면에 걸쳐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제공이 가능한 지사만의 독특한 업무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또한 「물관리 업무의 표준화와 데이터베이스화로 물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세계적 물관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 농업인이 필요로 하고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하는 이정태지사는 경남 통영출생으로 부산대 공과대학을 졸업한후 73년 농어촌진흥공사에 입사 28년여를 농업발전에 이바지 해 온 농어촌진흥맨으로 95년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유공을 인정받아 농림수산부장관상을 수상했고, 97년 품질경영 혁신을 통한 국가산업발전과 99년 농어촌진흥의 공을 인정받아 대통령과 농진공사로부터 표창과 대상을 받은 바 있다.

• 청원=주일용 iwung@afnews.co.kr

여 백

다. 지방지

여 백

농지개량조합·농조연합회·농어촌진흥공사 통합 농업기반공사로 새출범

3개기관 인력 5천974명으로 감축 운영

농업용수 관리와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업무를 중복 수행해 온 농지개량조합(농조)과 농조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농진공)가 통합돼 3일부터 농업기반공사로 새출범한다.

농진공 경기지사는 구랍 30일 농조와 농조연합회, 농진공 3개기관의 통합작업이 지난 24일 설립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무리됐으며 오는 3일 설립 등기를 한 뒤 농업기반공사로 정식 발족한다고 밝혔다.

농진공 경기지사는 3개 기관의 통합으로 3개 기관 인력이 7천174명에서 5천974명으로 감축되고 83년동안 농민의 숙원사업이었던 농조조합비(수세)도 폐지됨으로써 약 300억원에 달하는 농민의 부담경감이 실현될 것으로 내다봤다.

농업기반공사의 본부는 종전 농진공의 5실9처2원에 4사업단, 농조연합회의 3실4처1소에서 6실12처2원에 4사업처로 개편된다.

지역조직은 농진공의 9개 지사와

농조연합회의 8개 지회를 기반공사가 인수해 도별로 1개씩 9개 지사로 재편하고 지부는 지방농조 104개와 농진공의 69개 지부를 통합합, 87개로 조정된다.

농업기반공사 경기지사의 경우 기존 15개 농조와 농진공 7지부 2출장소가 11개 지부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경기지사에는 78명, 지부에는 497명이 근무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구랍 30일 농업기반공사 사장에 문동신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을 임명했다.

김광범기자/kgb@joongboo.com

농업기반공사 출범

농지개량조합 등 3개 관련단체 통합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농업관련 3개 기관단체가 통합돼 내년 1월1일부터 농업기반공사로 공식 출범한다.

경기도 안양에 본사를 둔 농업기반공사는 전국 9개광역도에 지사를 두고, 각 시·군에는 지부를 설치한다. 대구·경북지역에는 농업기반공사 경북지사 아래에 경북지역 16개 지부와 대구지역 달성지부 등 17개 지부가 설치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물리면적 3천ha이하 소규모 농지개량조합의 통합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됐다.

이들 기관단체 직원들의 고용은

전원 승계되며, 지금까지는 농지개량조합장은 조합원 간접 선거로 선출됐지만 지부장은 임명직으로 바뀐다. 다만 농지개량조합의 경우 직원 정년이 61세(3급이상)이던 것이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되면서 직급에 따라 정년이 3~5년까지 단축된다. 3개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자산 역시 농업기반공사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부로부터 보수 체제, 업무분장 등이 명확하게 내려오지 않은데다 지사·지부장은 물론 통합에 따른 직원 인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당분간 업무 추진에 혼선이 예상되고 있다.

/김기억기자 kknnews@yeongnam.com

농업기반공사 출범

농지개량조합 등 3단체 통합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농업관련 3개 기관단체가 통합돼 1월1일부터 농업기반공사로 공식 출범했다.

경기도 안양에 본사를 둔 농업기반공사는 전국 9개광역도에 지사를 두고, 각 시·군에는 지부를 설치한다. 대구·경북지역에는 농업기반공사 경북지사 아래에 경북지역 16개지부와 대구지역 달성지부 등 17개 지부가 설치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물리면적 3천ha이하 소규모 농지개량조합의 통합합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됐다.

이들 기관단체 직원들의 고용은 전원 승계되며, 지금까지는 농지개량조합장은 조합원 간접 선거로 선출됐지만 지부장은 임명직으로 바뀐다. 다만 농지개량조합의 경우 직원 정년이 61세(3급이상)이던 것이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되면서 직급에 따라 정년이 3~5년까지 단축된다. 3개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자산 역시 농업기반공사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부로부터 보수체제, 업무분장 등이 명확하게 내려오지 않아 당분간 업무 추진에 혼선이 예상되고 있다.

/김기억기자 kknews@yeongnam.com

농진공·농지조합 통합 농업기반공사 제주지사 출범

농업기반정비사업 추진체계 일원화 위해

각종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추진체계를 일원화 하기 위한 농업기반공사 제주도지사가 3일 공식 출범했다.

기존 농어촌진흥공사 제주지사와 제주농지개발조합을 통합한 농업기반공사 제주도지사는 초대 지사장에 한규인 농진공 제주지사장을 추대하는 한편 이날 법인등기를 마치고 5일 창립 기념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농업기반공사 제주도지사는 앞으로 관리부 사업관리부 지하수부 행정담당실 등의 부서 외에 기존 제주농지개발조합을 농업기반공사 제주지사로 운영, 각종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일괄 추진하게 된다.

그동안 농진공 제주지사가 추진해 온 지하수 개발 및 보존·정비, 발기반정비 및 개발, 배수개선사업, 농어촌용수개발사업, 영농규모화사업 등의 업

무와 제주농지개발조합에서 맡아 온 저수지·물관리 등의 업무를 통합·운영함으로써 건설비용 절감은 물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절감과 조직운영의 효율화로 경상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도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기현기자

gnkim@hallailbo.co.kr

농업기반공사 공식 출범

농지조합비 폐지 및 재해대처능력 향상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등 3개기관 통합체인 농업기반공사가 2000년 1월 1일 공식 출범했다.

농진공이 주축이 돼 결성된 농업기반공사는 본사와 경북, 경기, 충북 등 9개의 지사로 구성돼 있으며 각지사는 시·군단위의 지부를 두어 이를 관리·감독하는 체계로 편성돼있다.

농업기반공사는 업무의 표준화 및 D/B화 등 조직 체계화를 통해 주무기관 다원화에 따른 비효율성

을 제거했으며 조직축소로 인한 경비 감축과 확대 지원된 정부출자금(99년 : 70억원→ 2000년 : 400억) 등으로 농민들의 숙원이었던 농지개발조합비(일명:수세) 폐지뿐만 아니라 균형예산편성도 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전국단위의 농업·농촌용수 이용합리화계획 등과 연계한 대단위 용수개발 등 체계적인 용수관리로 농업생산기반의 정비·관리 및 보호능력이 대폭 증진됐으며 관리일원화로 수해

등 재해대처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

문동신 농업기반공사 사장은「다가올 21세기 식량위기와 물 부족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선진농업 구현과 복지농촌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기반공사는 오는 5일 각 지사별로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정재호 기자〉

□ 경인일보 (2000. 1. 6, 5면)



농업기반공사 창립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
개량조합 연합회를 통폐합한 농업기반공
사가 5일 김성훈농림부장관을 비롯해 농림단체 대표들과 임직원 등 5
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에 이어 창립기념식을 가졌다.

/金鍾澤기자·Jongtaek@kyeongin.com

□ 경기일보 (2000. 1. 6, 5면)



사진/김시범기자 sbkim@kgib.co.kr

박영택 농업기반공사 경기도지사장이 5일 지사 대회의실에서 농업기반공사 창립기념식을 개최한뒤 기념사를 하고 있다.

농업기반공사 창립식

농진공 등 3개기관 통합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등 3개 기관을 통합해 출범한 농업기반공사가 5일 본사 및 경기도지사에서 창립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농업기반공사는 본사 6실12차2원 4사업처, 9개지사, 87개지부에 인원 5천974명으로 1월1일 출범했다.

농업기반공사 직원들은 이날 '비전 2004' 선언문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충하고 쾌적한 복지농어촌을 건설하기 위한 중추기관으로 재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 경기도민일보 (2000. 1. 7, 10면)

농업기반공사 출범 '순항'

5일 현판식 본격 업무 돌입



◇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농지개발조합 연합회를 통합한 농업기반공사가 5일 김성훈농림부장관을 비롯해 농림단체 대표들과 임직원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에 이어 창립기념식을 갖었다.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농지개발조합연합회등 3개 기관을 통합하여 출범한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가 5일 창립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농업기반공사는 본사(6실12처2원4사업처) 9지사 87지부로

총인원 5천9백74명으로 그동안 진통을 겪었던 직원들의 인사도 별 무리없이 순조롭게 끝나 새해 1월1일에 출범했다.

이에따라 농업기반공사는 5일 오후 3시 경기도 의왕시 소재 본사에서 김종필 국무총리 김성훈 농림부장관 김영진 농림

해양수산위원장 농업인단체 대표등 직원 5백여명이 참가해 현판식을 갖고 공사 교육원 대강당에서 창립기념식을 갖었다.

또한 전직원의 의지를 모은 비전 2004선언문을 낭독 새천년을 맞이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충하고 풍요롭고 쾌적한 복지농어촌을 건설하기 위한 중추기관으로서 핵심역할을 갖춘 농어촌정비, 농업기반시설관리 전문기업으로 재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농업기반공사 초대사장으로 부임한 문동신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초대사장으로 부임한데 대해 무거운 책무를 느낀다고 말하고 새조직의 가치기준을 세계적 수준의 농촌개발, 물관리 전문기관으로 정착해 나갈것을 피력했다. 또한 새공사 출범 초기에는 무엇보다 조속한 융화와 업무체계구축에 중점을 둘 것이며 새로운 조직문화 창조 업무의 표준화 D/B화와 조직의 체계화 조직통합의 시너지효과 제고 및 업무기술 고도화를 역점점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기원기자)



농업기반 공사 제주지사 창립

어제 현판식 가져

농업기반공사 제주도지사(지사장 한규연)가 5일 지사 대회의실에서 전·현직 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식 및 현판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사진)

농어촌진흥공사 제주지사와 농지개발조합을 통합한 농업기반공사 제주도지사는 이날 창립식을 시작으로 농업용수개발과 관리 등

각종농업생산기반사업 추진체계의 일원화를 이루게 되었다.

농기공 제주지사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농업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 지하수·지표수 보전관리, 발기반정비, 배수개선개발사업과 농촌하수·오폐수정화시설사업, 첨단농업 유리온실사업 등과 감귤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영농규모화 사업 등이다.

/김기현기자

ghkim@halla1bo.co.kr

농업기반공사 경북지사 어제 현판식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등 농업관련 3개 기관이 통합해 출범하는 농업기반공사가 5일부터 본사 및 각지소에서 현판식과 창립기념식을 갖고 일제히 업무에 돌입했다.

농업기반공사 경북지사(지사장 정호연)도 이날 오후3시 대구시 북구 구암동 옛 농어촌진흥공사 경북지사에서 관계자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농업기반공사는 본사에 6실 12처2원4사업처, 전국에 9개소의 지사와 87개 지부를 두고, 전체직원 5천 974명으로 구성됐다.

경북지사는 2실8부27과로 117명, 경북지사 관할사무소는 17개지부에 754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이날 창립기념식에서 기반공사 직원들은 '비전 2004' 선언문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충하고 복지농어촌건설을 위해 농업기반공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전문기업으로 재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이학균기자〉



희망 2000

경기·인천 경제단체장
새해 청사진



-취임소감은.
△농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농업기반공사 초대 경기도지사장을 맡게 돼 영광스러우면서도 책임 또한 막중함을 느끼고 있다.
국가와 농업인의 기대속에 출범하는 만큼 신뢰받는 조직으로 정착 되도록 노력하겠다.
-3개 기관 통합으로 인한 효과는.
△3개 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이 통합돼 사업추진체계가 일원화되며 업무능률과 투자효율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단위에서 전국 단위의 물관리 체계가 구축돼 효율적인 물관리가 이뤄지며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높아지게 된다.

"농촌개발 조직과 물관리 조직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면서 직원들간 융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초대 경기지사장으로 부임한 박영택지사장(54)은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21세기 선진농업·농촌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농업인에게 봉사하는 공기업으로 거듭 태어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영택지사장과의 일문일담이다.

박영택 농업기반공사 경기도지사장

“사업체계 일원화 시너지 효과 창출”

전국 단위 물관리 구축
조합비폐지·서비스향상
직원간 화합 조기 정착

-올해 중점 추진 사업계획은.
△무엇보다 인화단결에 중점을 두겠다.
한 조직원으로 조기화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각자의 숙련된 전문지식과 기술을 전직원이 공유해 조직체계의 일원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
-농업인들에 대한 서비스는.
△83년간에 조합비가 폐지돼 농업인의 부담은 줄게 되고 서비스의

질은 높아질 것이다.
감축된 인력으로 물관리 등 대 농민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 농업인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사가 되도록 하겠다.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새롭게 태어난 공사의 직원으로 선진농어촌 건설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공사와 자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박영택신임지사장은 경기도 공주 출생으로 농림부, 농지개발조합연합회 기획실장, 농지개발조합연합회 경기도지회장 등을 역임했다.
/정근호기자 jg@kmg.co.kr



농업활동 지원할 기반 인프라 구축에 역점

새해설계



졌습니다.”

李相焄 농업기반공사 도지사장은 올해가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및 농지개발조합연합회가 통합, 농업기반공사로서 새출발을 하는 만큼, 전직원의 역량

李相焄 농업기반공사 도지사장

이 총집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우선 최근 도내 농촌지역이 관개용수외에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의 수요량 급증으로 농촌용수의 이용·배분·보전관리 등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 현재 71개에 달하는 도내 저수지의 개·보수를 통해 원활한 물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고냉지농업을 하는 지역은 저수지를 통한 물공급이 어려운 만큼 지하수사업을 통한 해결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또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저수, 과수, 특작 등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용배수개발, 농로개설, 밭경지정리 등의 정비사업을 펼쳐, 농가의 밭작물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앞으로 UR 및 WTO체제에 따른 외국 농산물의 대거 유입에 있어서도 영농규모화사업을 통한 생산비 절감이 농가의 절실한 문제인 만큼 농사의향이 없는 땅을 매입, 농가에 2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급해 현재 0.7ha에 불과한 농가당 경지면적을 1.4ha 이상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康昇權 paxomega@kado.net

농업기반공사 권기일 초대 충북지사장

인터뷰



“처음 출범한 농업기반공사의 초대 충북 지사장직을 맡게돼 영광이지만 한편으로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추진 방향에 대해 “공사 출범 초기에는 조속한 융화와 업무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하고 “새로운 조직 문화를 창조하고 업무의 표준화 데이터베이스화는 물론 조직을 체계화 시키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에 국한했던 틀을 벗어나 이제는 종합적인 충북 발전과 농민들의 불만 타개, 원활한 농업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게 된다는 데 의미

“출범초기 업무구축 중점”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발조합, 농지개발조합연합회 3개 기관이 통합돼 처음으로 충북 지역을 관장하게된 권기일지사장(57)은 취임 소감을 이같이 피력했다.

신임권지사장은 앞으로 업무

권지사장은 3개 기관 통합의 의미를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발전’을 들었다.

“통합이 된 만큼 조직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업무 기술의 고도화를 역점 시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과거 지역 발

가 크다고 봅니다”

권기일지사장은 동국대법대, 경북대 경영대학원을 마치고 지난 80년 농조연 농조지원처장을 시작으로 농조연 강원지회장, 경북지회장, 충남지회장, 경남지회장을 거쳐 이번에 부임하게 됐다. 가족으로는 부인 장혜숙(50) 여사와 1남 1녀가 있다. 취미는 등산과 화훼. / 이정규 기자

「새의 자」



구 광 회 이사장

「새로운 천년의 시작과 더불어 출범하는 농업기반공사가 21세기 선진농업건설의 중추기관으로 발전하고 농업인에 봉사하는 기관으

농업기반공사 충남지사
구 광 회 이사장

농업경영을 적극개발, 지원하는데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충남 청양출신으로 충남대 농공학과를 나와 지난 69년 농진공에 입사해 경북지사, 홍보사업단장, 대단위사업처장, 충남지사로 재임하다 초대 충남지사로 발탁 되었다.

청렴하고 소탈한 성품의 소유자 이면서 업무 추진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대내외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구지사는 부드러운 이미지에 폭넓은 시야로 조직전체를 꿰뚫어 보는 인물로 조직 장악력

농업인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풍요롭고
살기좋은 농어촌건설에 앞장설터

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풍요롭고 살기좋은 충남 농어촌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을 1월 1일 취임한 초대 농업기반공사 구광회 충남지사장(55세)은 취임소감을 이렇게 밝히고 「농어민에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 뛰어난데다 대인관계가 원만해 재직하는 곳마다 우수한 업적을 달성하는 덕장으로 소문난 행정의 달변가 이다.

가족으로는 부인 이종희씨(55세)와 3남을 두었으며 취미는 테니스다.

전북농업기반공사 출범

전북지사장에 류종식씨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조, 농조연합회를 통합해 새롭게 출범하는 농업기반공사 전북지사장에 류종식(柳鍾植·54)현 농진공전북지사장에 임명됐다.

또 관리담당실장에는 농조연합회의 임동은씨가 사업담당실장에는 농진공출신의 김영웅씨가 발령됐다.<인사명단 12면>

기존의 8개 농조를 개편한 시군지부장으로는 남원지부장에 김정수씨, 순창지부장에 신현주씨, 동진지부장에는 김수길씨, 동진지부장에 이병준씨,

전북지부장에 오운수씨, 전북지부장에 송재영씨, 고창지부장에 국기천씨, 정읍지부장에 박영렬씨가 임명됐다.

신임 류지사장은 정읍출신으로 농진공 본사 총무부와 감사실, 기획실등을 거쳐 금강사업단부단장과 기금관리처장을 지낸뒤 지난해 2월 전북지사장에 부임했다.

시군사무소와 대야사무소등 5개 지역사무소의 골격을 갖췄으며 전북지사에는 2실, 8부의 조직체계를 마무리지었다.

또 몽리구역이 2만ha를 넘는 동진지부와 전북지부는 1등급 지부로 김제와 부안, 정읍, 진봉사무소와 대야지역사무소를 두도록 했으며 전국최대 규모인 동진지부는 6부,17과를 갖췄

농업인 위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 농수관리 종합 기관으로 발전 다짐

류지사장은 농업기반공사 전북지사를 당초 통합의 취지를 살려 농업인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 기관, 세계적인 농촌개발과 농수관리 종합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진공과 농조, 농조연합회를 통합해 출범하는 농업기반공사는 기존의 8개 농조 시군지부를 개편해 남원지부등 8개

다. 이날 인사에는 1급인 옛 농조 전무출신들을 해당 시군사무소장으로 임명하는등 조직안정을 기한 인사로 평가된다.

농업기반공사는 3일 전북지사와 지역지부별로 사무식과 함께 통합 출범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박명규기자>

경제단체 신년계획

⑤ 농업기반공사 전북지사
류종식 지사장



새 천년의 시작과 함께 농
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발조
합연합회, 8개 농지개발조합
이 농업기반공사 전북지사로
통합돼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 동안 각 기관에서 따로
따로 추진됐던 농업기반 업
무가 단일기간에서 보다 효
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함으로써 농업인의

받는 새 공사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영농기반 확충을 위
한 농어촌정비사업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용수개발, 배수개선, 경지
정리, 밭기반정비, 농업생산
기반종합정비사업 등 영농기
반정비사업을 통하여 주곡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 정
주생활권개발, 문화마을조성,

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수리시설물의 안전진단과
연계하여 노후시설의 과감한
현대화와 물관리자동화시스
템(TM/TC)를 점진적으로
구축하여 합리적인 용수관리
체계를 확립해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넷째, 영농규모적정화사업
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
습니다.

농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조
직화된 농장만이 살아남게
되고 그러한 농장을 많이 보
유한 나라의 농업이 경쟁력
을 갖게됩니다.

영농권별로 농업경영 능력
과 기술력을 갖춘 농업경영
체가 육성될 수 있도록 '영농

“용수관리 전문기관으로 거듭날터”

부담 및 국가 재정부담을 경
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
니다.

반면에 물관리의 효율화를
높이는 방안이 심도있게 검
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
각합니다.

통합에 따른 효과를 높이
고 더욱 생산적인 조직으로
달바꿈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들 각자의 노력이 절대 필요
합니다.

첫째, 최우선적으로 농업인
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질높은 서비스를 제
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공사의 모든 직원은 농
업인은 모두가 내 가족이며,
농촌이 내 고향이라는 사명감
을 가지고 일을 할때 진정한
로 농업인들로부터 지지를

환경기초시설 등 농촌생활환
경개선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농촌을 만들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기 위하여 영농기반정비사업
과 생활환경 정비사업들이
지역단위로 상호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겠
습니다.

또한 금강 제2단계 농업종
합개발사업과 새만금간척사
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준
공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
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농업기반시설의 효율
적 유지관리 및 물관리의 체
계화·과산화를 이루도록 하
겠습니다.

그간 수리시설물의 노후화
로 고비용 저효율 체제를 벗

권별 영농규모화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비전에
계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권역별 농촌종합정
비사업, 저수지재개발사업,
지하수사업 등 정책사업 및
신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농촌지역의 생활환
경과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
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
습니다.

오폐수의 증가에 비해 환
경기초시설이 미흡한 농촌지
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수질
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
고, 수계별 연계와 체계적인
용수관리를 통해 하천과 농
촌생활환경을 보전하는데 심
혈을 기울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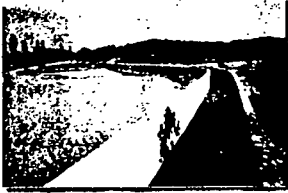
일곱째, 경영정보화 시스템
을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경제초점

농업기반공사 무손일 해나

선진농업 - 복지농촌 기틀 닦는다

정부출연기관중 한국전력 다음으로 거대조직인 농업기반공사가 지난 5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그동안 농조, 농촌연, 농진공으로 3회화된 유휴관리 업무가 한 개 기관으로 통합 일원화된 것이다. 물론 숱한 농민 저항을 불러 일으켰던 수세도 80여년만에 폐지되는 등 물과 농업기반시설과 관련된 많은 정책이 바뀌고 새롭게 탄생한다.



▲농업 용수로 정비



▲다목적용 저수지 축조



▲밭기반 정비사업

농업기반공사는 본사의 전북 등 9개 지사, 87개 지부, 해안군 등 4개 사업단에 인원만 5천9백74명에 달하는 등 초거대 기관으로 거듭난 것.

전북의 경우 전북지사에 관리담당실, 사업담당실 등 2개 실과 관리부, 농지규모화사업부, 원지사업부, 용수관리부, 사업관리부, 조사실계부, 기전부, 지하수부 등 8개부에 27개과를 두고 1백24명 지사 직원과 6백49명의 지부 직원 등 모두 7백73명의 정규직 직원이 근무한다.

시군에는 남원, 순창, 동진, 전북, 금강, 진주, 고창, 정읍 등 8개지부와

간척 등 5개 대단위사업 중점 전국 원스톱물관리체계 강화 대규모 영농사업 계획적추진

김제, 부안, 정읍, 진안, 대야 등 5개 지역사무소가 9만2천8백44ha의 물리면적을 관리한다.

그동안 농조 등 각 기관별로 따로따로 추진했던 농업기반 업무가 단기간으로 통합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농민과 국가 재정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전국단위의 원스톱 물관리 체계 구축으로 환경친화적 개발, 기술축적을 통한 선진화한 정보마인드 확보 등 시너지 효과도 만만치 않다.

농업기반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은 △대단위농업개발사업(간척) △경농기반정비사업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수리시설개수 및 유지관리 △영농규모화촉진사업 등 5대사업으로

대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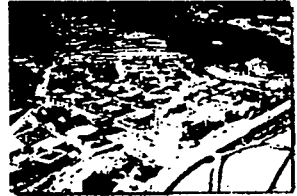
농기공의 예산은 1조9천억원인, 전북지사만도 2천9백45억원에 달하는 때에도 규모로 종합행정기관인 뿐만 아니라 지방단체의 1년 상임직원이 수준을 훨씬 높이고 있다.

주요의 인건비 증가는 도로하고 농민들의 영농편리를 위해 추진하는 용수개발, 배수개선, 경지정리, 밭기반 정비,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사업 등 농업기반정비사업은 무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지형, 지대, 배배차 등 지역실정을 감안한 지역단위로 구분, 이를 상호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앞으로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조직화된 농경간이 살아남게해 도내에서도 영농권력별로 농업경영 능력과 기술력을 갖춘 농업경영체가 육성될 수 있도록 '영농권력 영농규모화사업'에 힘 쓸 수 있다. 장기적인 비전하에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초 생활권 중심으로 한 권역단위로 종합정비사업과 수리시설 개보수 및 보강을 통해 지리지대 개발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과 지하수 개발 사업을 전개하는 등 선진 시군별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제시할 방침이다.

류종식 농가중 전북지사장은 "3개 기관의 통합으로 그동안 민원했던 비효율적 경영과 부실, 부조리를 과감히 척결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공시경영에 농업인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 농업인의 요구가 공시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열린 경영체제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원기자·



▲문화마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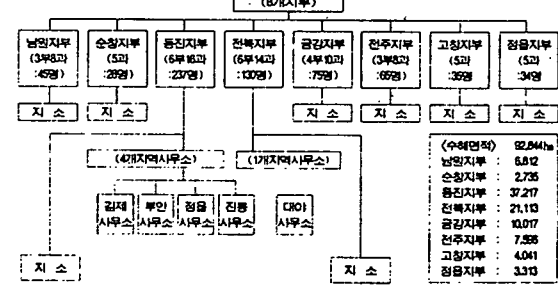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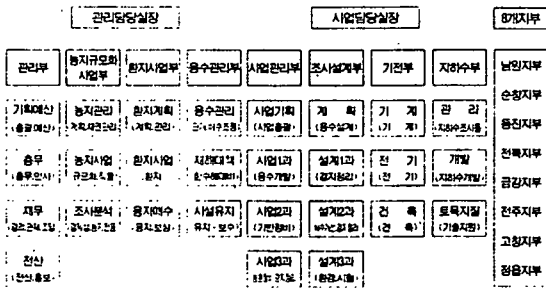


▲지동 물관리시스템 시범



▲함경기초시설 강화

지사장 ——— 농업기반공사 전북지사 기구표 ——— 전북지사(25실8부) : 124명



“농지규모화등 농업기반 조성 주력”

송재영 농업기반공사 전주지부장



“조직통합으로 올 농사를 걱정하는 농민들이 있으나 물관리에 최선을 다해 풍년농사가 이뤄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일 기관통합으로 새롭게 출범한 농업기반공사 전주지부 송재영 지부장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대농

민 서비스에 전력을 할 생각이라고 다짐했다.

송지부장은 특히 3개 기관이 통합, 영농규모화사업과 경지정리 환지업무등 업무가 크게 늘어났으나 기본이 되는 업무는 완벽한 물관리라고 강조하고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물관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송지부장은 또한 그동안 수세에 의존해 수리시설을 관리하다보니 대폭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해 전근대적인 방식에 의존하는 수리시설이 많은것이 사실이라며 공사전환과 함께 정부가 농업기반사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들 기반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지부장은 또 농지규모화 사업도 공사출범과 함께 예산이 확대되고 대상농지도 완화된 만큼 규모의 영농을 하도록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송지부장이 이들 사업추진 못지 않게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역시 조직의 융화.

기관통합과정에서 불거진 진통이 공사출범과 함께 가시긴 했으나 직장문화와 업무스타일이 다른 직원들이 모인 만큼 융화와 협력이 시급한 과제라는게 송지부장의 진단이다.

송지부장은 전북대문리대를 졸업한뒤 지난 69년 부안농조에 입사, 81년 전주농조를 자리를 옮긴뒤 총무와 재무, 경리과장을 지낸뒤 통합 직전까지 2년여동안 전무를 지낸 농조의 산증인. <박명규기자>

새의지

張 成 潤 농업기반공사 중앙지부장



張成潤 농업기반공사 초대 중앙지부장(56)은 중앙농지개발조합의 재선 조합장으로 93년부터 99년까지 7년여 재직기간중 빈틈없는 농업용수관리로 중부 제일의 곡창 철원평야에 14년 연속 풍년농사와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크게 기여했다.

곡창 철원평야 쌀 증산 최선

張지부장은 취임 일성으로 "3개 기관이 뭉쳐 농업기반공사로 출범한 만큼 국제경쟁 환경속에서 우리 농업이 처해있는 어려움을 바로 보고 과거 쌀자급을 이룩한 우리의 저력을 거울삼아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張지부장은 철원출신으로 철원중학교와 경기공고를 졸업. 부인 崔貞玉씨(54)와 2남1녀.

鐵原=文庚世 ksmoon@kado.net

林 平 大 농업기반공사 원주지부장



초대 林平大 농업기반공사 원주지부장(52)은 "공사는 국가의 탄탄한 농업기반을 다지기 위해 3개 기관을 통합,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지역 영농자립기반을 확충하는데 직원들과 함께 온 힘을 쏟겠다"고 약속.

林지부장은 "농업인들을 위해

지역 영농자립기반 확보에 총실

설립된 공사취지를 살리기 위해 농업인을 최대 고객으로 정하고 고객 대민족을 위한 농정을 펼쳐왔다"며 "지난 1월 3개 기관의 통합으로 직원 간에 이질화현상이 보이고 있어 직원단합을 통해 조직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다짐.

서울대 농대를 졸업. 구 농어촌진흥공사 원주지부장을 역임. 부인 朴賢淑씨(49)와 1남1녀.

原州=柳浩一 leelee@kado.net

金 南 振 농업기반공사 강릉지부장



金南振 농업기반공사 강릉지부장(54)은 "전문 기술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농업기반시설 구축과 함께 대농민 서비스 향상에 주력하겠다"고 다짐.

金지부장은 "내부적으로 통합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문화마을 조성등

전문기술인력 활용 기반시설 구축

농어촌 정비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종합관리, 영농규모 적정화 사업등의 고유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소신있게 일하겠다"고 강조.

지난 71년 강릉농지개발조합에 첫 발. 강릉농지개발조합 전무를 10년간 역임하고 통합지부장에 발탁됐다. 강릉농고 졸업. 부인 姜鍾男씨(49)와 1남1녀. 江陵=林漢雄 hwlim@kado.net

朴 勝 均 농업기반공사 영북지부장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일과 농업인들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 설립된 농업기반공사 강원지사 영북지부의 신임 지부장에 임명된 朴勝均지부장(56)은 농업과 농업인을 위한 역할을 거듭 강조.

농업인 이익창출 최대 노력

특히 기구통합으로 업무는 늘어난 반면 인력은 감소함에 따라 통합 인력의 융화와 단결, 유기적이 업무체제의 마련을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연세대 토목학과 졸업. 73년 농어촌진흥공사 입사. 농진공 원주시지부장, 전북지사 기반조성부장, 흥천군지부장등을 두루 거쳤다. 경기도 평택출신. 束草=南宮연 ypry@kado.net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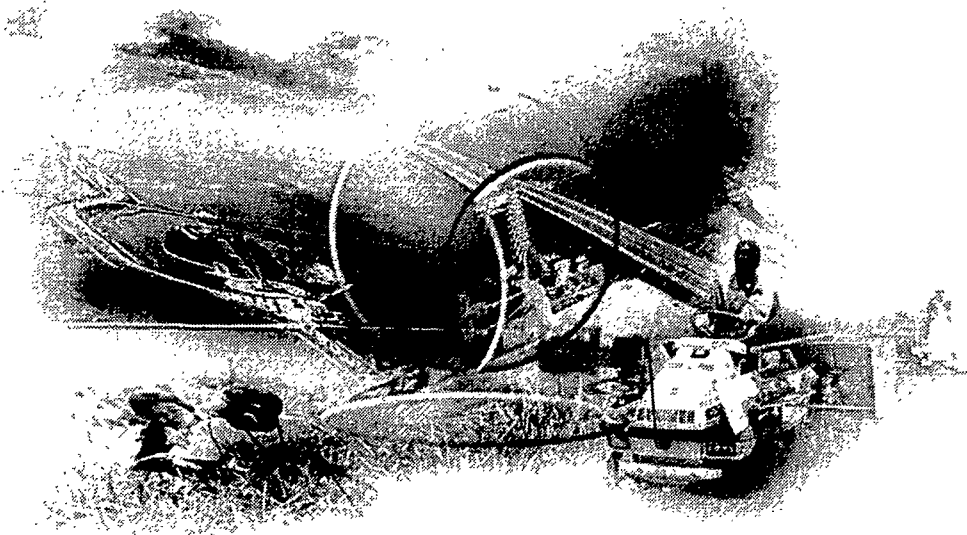
4. 농업기반공사 출범홍보물

여 백

「농업기반공사및농자관리기금법」과 「농어촌정비법」이 지향하는

21C 선진복지 농업·농촌건설구상

200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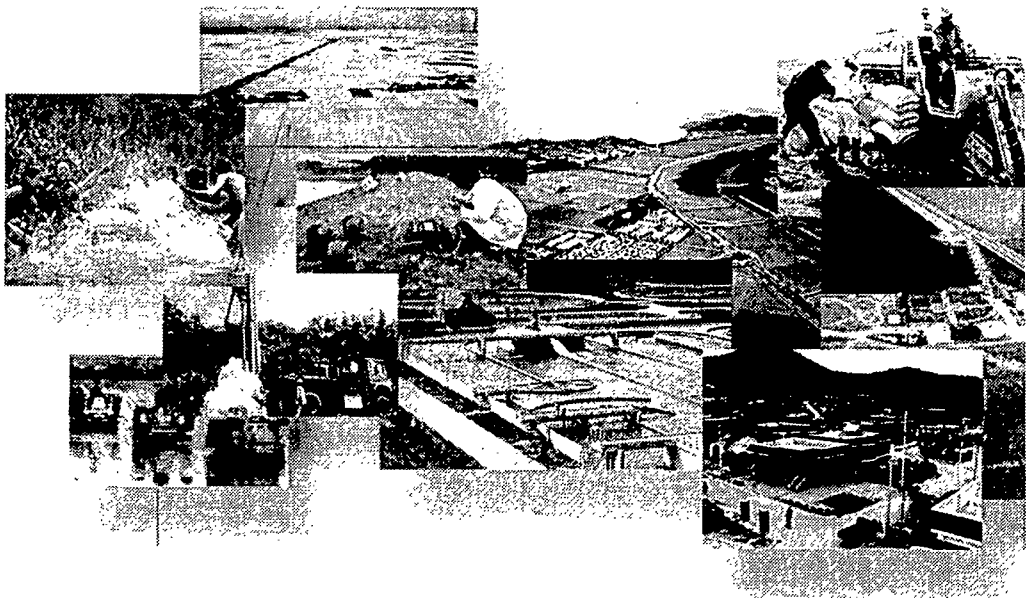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Korea Agricultural & Rural Infrastructure Corporation

21세기의 보다 나은 농업·농촌을 위해
농업기반공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orea Agricultural & Rural Infrastructure Corporation
Korea Agricultural & Rural Infrastructure Corpora
Korea Agricultural & Rural Infrastruct

차례 Contents

I.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거 2000년 1월
농업기반공사가 새롭게 출범합니다.

II. 그 동안 농촌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우리의 농업·
농촌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III. 그러나 21세기 선진 복지 농업·농촌건설을 위해서는
아직도 할일이 많습니다.

IV. 농업기반공사가 이러한 일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
으로 추진합니다.

V. 21C농업·농촌의 미래는 밝습니다.



ion
re Corporation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과 「농어촌정비법」이
결합하여 공동목표를 구현해 갑니다.



21세기 신진복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촌정비사업 전담추진체계 구축
조직의 효율화
전문인력 및 기술력 확보

농업생산기반시설 종합관리
신기술 개발 및 연구체계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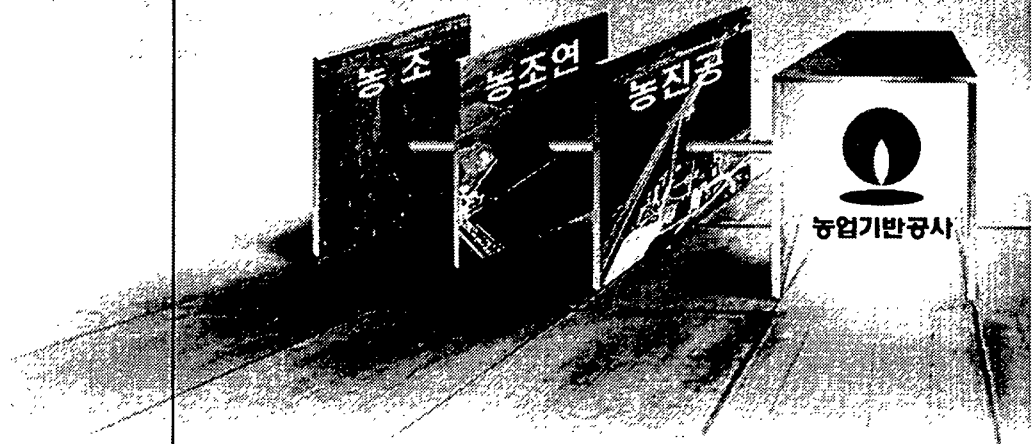
농업기반공사의 출범

Korea Agricultural &

I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거 2000년 1월 농업기반공사가 새롭게 출범합니다.

농업기반공사의 임무가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 21세기 선진 복지농업·농촌 건설을 위해서는 잘 정비된 농업생산기반과 농촌생태환경 개선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 살기 좋은 농촌으로 발전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이를 위하여 1994년 12월에 농어촌정비법을 제정, 농촌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농지개발조합,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 등 3개 기관으로 분산됨에 따라 조직이 중복되고 사업추진상의 비효율이 초래되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0. 1월, 3기관을 발전적으로 통합,
농촌구조 개선 전담기관인 농업기반공사가 새롭게 출범함으로써

21C 선진 농업·농촌 건설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체계의 일원화

- 업무의 능률화
- 투자의 효율화
- 기술발전과 정보화

유사 중복 및 기능의 통폐합으로 예산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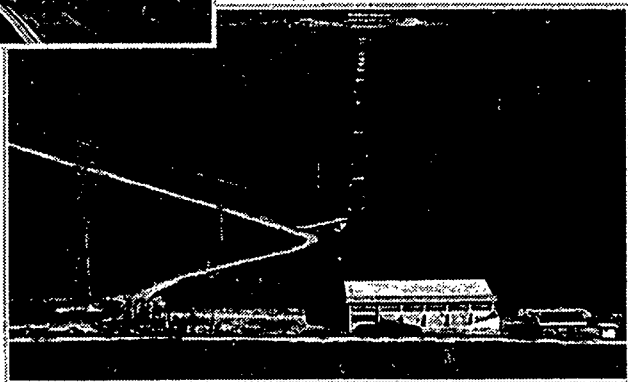
- 83년만에 조함비(수세) 완전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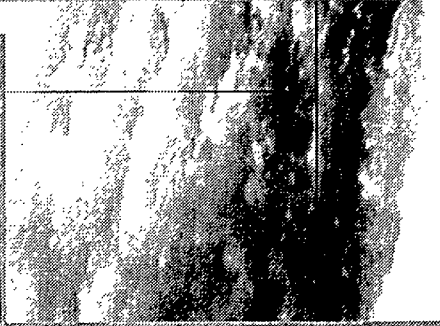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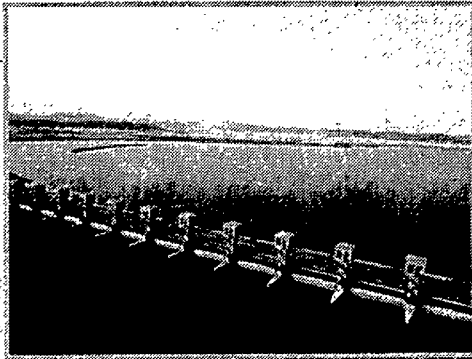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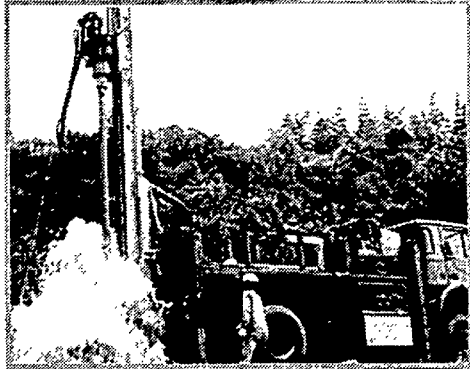
II 그 동안 농촌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우리의 농업·농촌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재해 없는
안정영농이 가능해졌고 주곡의 자급기반도 확충되었습니다

- 지속적인 용수개발과 시설물 개보수, 배수개선사업 추진으로
기본적인 안정영농기반 조성
- '94, '95' 가뭄 및 '96년 봄 가뭄에도 큰 피해 없이 영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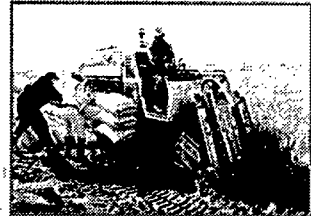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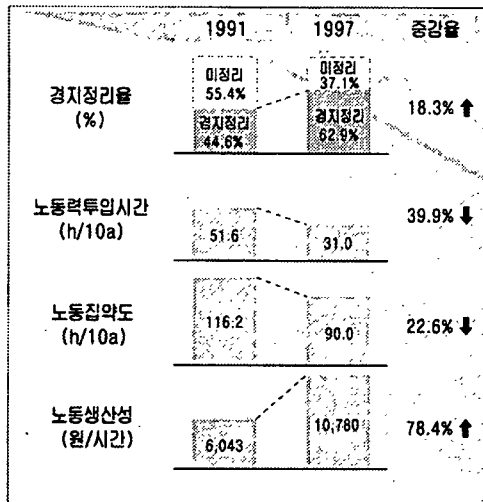


농업기반공사





- 경지정리,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등을 통하여 기계화 영농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제고
 - 수도작 농작업은 기계화가 보편화 되었으며 노동생산성도 대폭 증가



• 기계화영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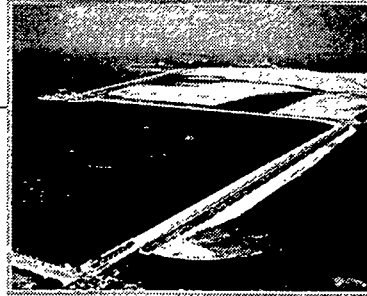


농업기반공사



• 기계화경작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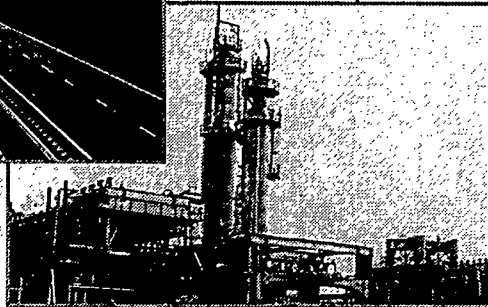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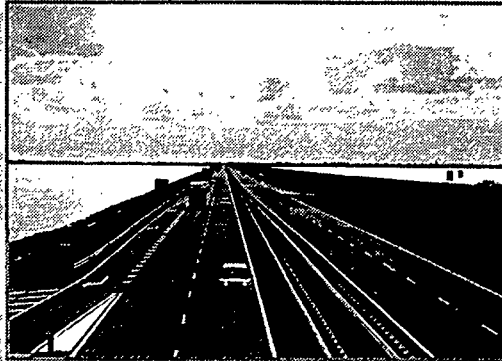
-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을 추진, 국토면적 확대 및 우량농지를 확보함으로써 주곡의 자급기반 확충



• 매립면적 110천ha중 76천ha를 간척농지로 조성

- 하구둑, 담수호 등 대규모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변지역 개발을 촉진시켜 국토의 균형 발전 도모

- 방조제 및 하구둑 건설로 운송거리단축 → 물류비 절감
- 항구적 용수확보에 따른 대규모 공단조성 및 배후도시 개발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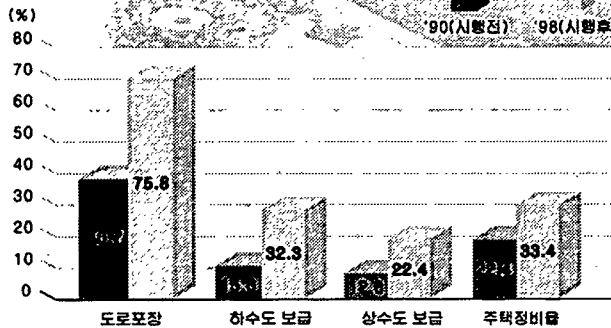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복지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확충하여 왔습니다

■ 농어촌정비법('94. 12) 마련으로 농촌생활환경개선 사업 본격추진

· '98년까지 문화마을 105개, 도로 3,168km, 상수도 187개소, 하수도 525개소, 주택정비 22천동 등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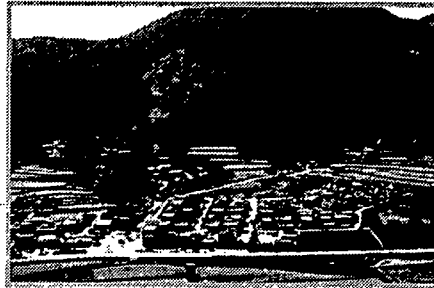
■ 정주권개입사업으로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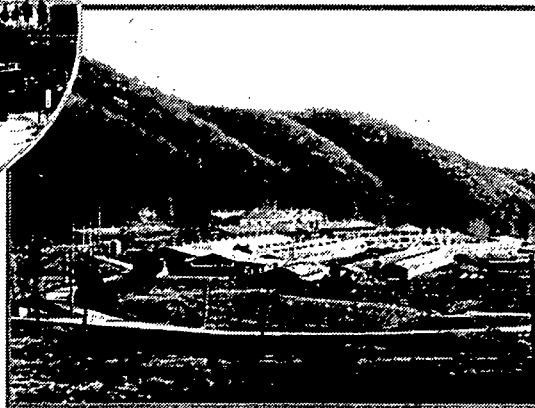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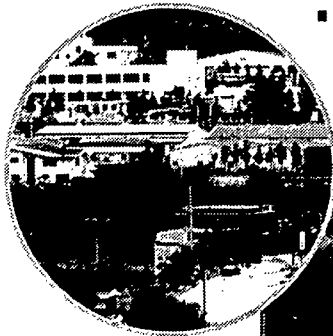
농업기반공사

■ 문화마을 조성으로 면단위 중심권 기능이 보강되어 인구감소를 하향

• 연평균 인구감소율



■ 농공단지, 관광휴양단지 등 농외소득원 개발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촉진, 도·농교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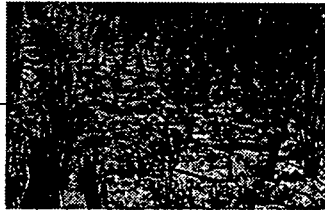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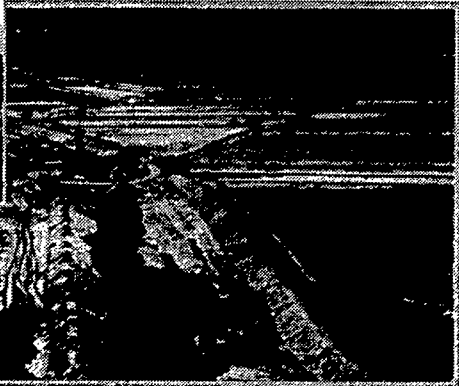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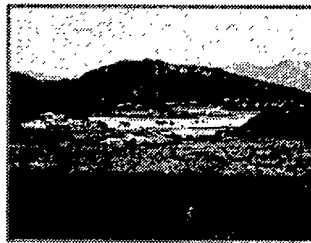
III 그러나 21세기 선진농업 · 농촌 건설을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아직도 한수해 피해는 계속되고 있고 기계화 영농을 위한 생산 기반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 '98년말 현재 전체 논면적 1,157천 ha중 10년 빈도 가뭄에도 견딜 수 있는 논면적은 403천ha(35%)에 불과



- 배수개선 대상면적 총235천ha의 64%인 151천ha가 상습 침수피해 지역
-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논도 전체 논면적의 40%인 476천ha나 되며, 경지정리는 되었으나 대형기계화 영농이 어려운 재정비 대상면적도 145천ha에 이릅니다



농업기반공사

기존 수리시설의 노후화로 시설기능 저하
및 재해위험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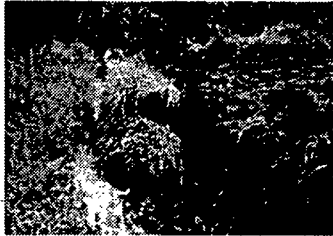
- 저수지 18천개소중 55%인 10천개소가 설치된지 50년이상
- 양배수장 6천개소중 31%인 2천개소가 설치된지 20년 이상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가 미흡하여 물손실 및 물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 기존의 농조관할 용수로 60천ha 중 68%인 41천ha가 흙수리로 누수와 수초변성에 따른 물흐름 방해 등 물손실의 원인이 발생 초래



21세기에는 물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 우리 나라는 현재 물부족 국가군에 속해있으며 계속적인 물사용량 증대 등으로 앞으로는 물기근 국가군으로 분류될 우려

년평균 강우량 (mm)

1,000

500

970

1,274

26,800

26,000

27,000

2,900

3,000

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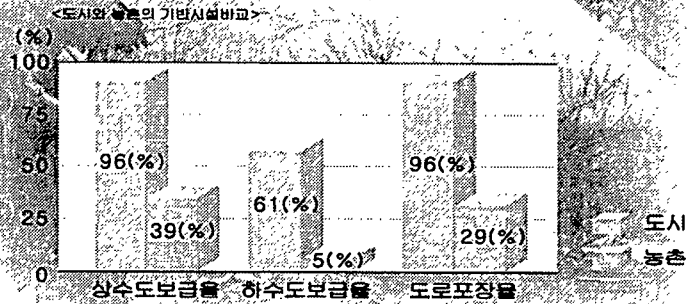
세계평균(A) : 우리나라(B)

세계평균(A) : 우리나라(B)

농업기반공사

농촌지역의 마을, 주택,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환경이 도시보다 크게 낙후되어 있으며 소득격차도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 농촌마을에 대한 투자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대로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환경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도록 개발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 환경친화적인 신기술 · 신공법의 개발 등에 대한 집중노력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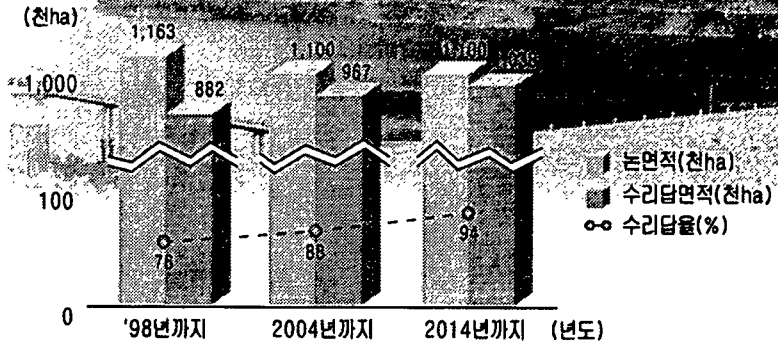
IV 농업기반공사가 이러한 일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합니다.

농림부에서 농촌정비사업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정비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농업기반공사가 사업 추진 체계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합니다

주곡의 지급과 항구적 안정영농을 위한 농업생산 기반조성·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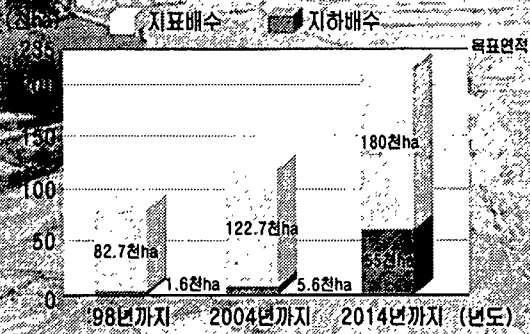
■ 가뭄 및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용수개발 및 배수개선 집중추진

▶ 농촌용수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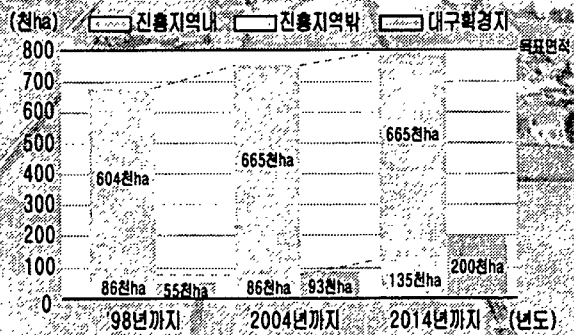
농업기반공사

▶ 배수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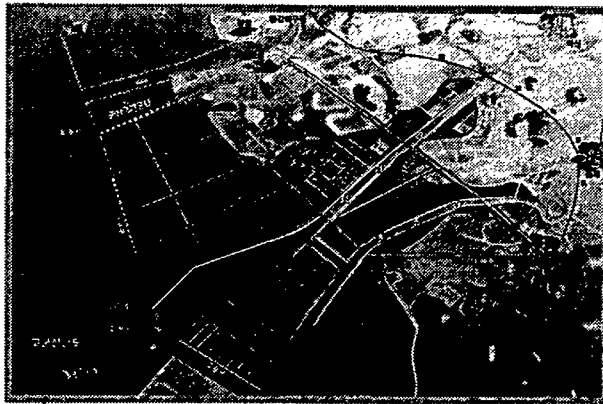
■ 손쉬운 영농을 위하여 경지정리 지속추진

▶ 경지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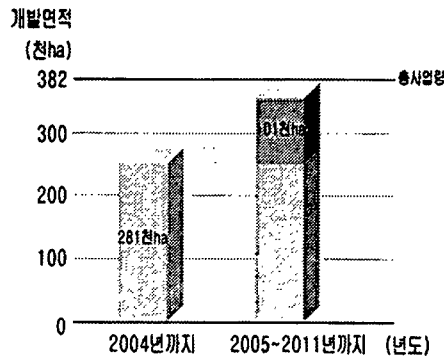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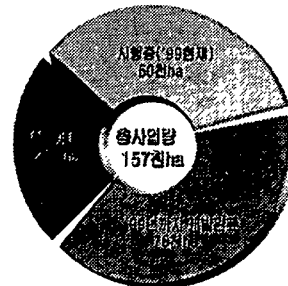
■ 우량농지 확보 및 용수개발을 위한 대단위농업종합개발, 간척사업 지속추진



▶ 대단위농업종합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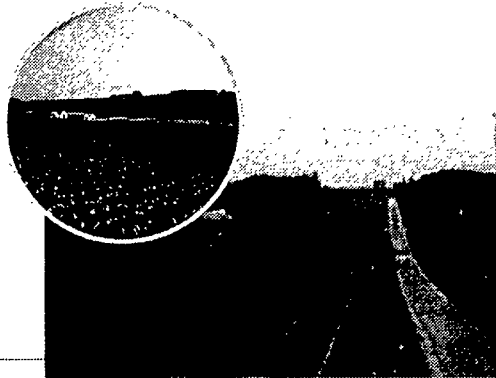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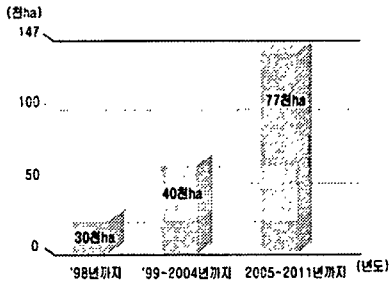


▶ 간척농지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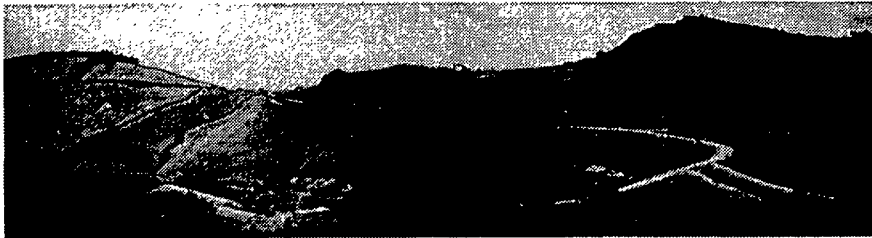
■ 영농여건이 불리하여 휴경화 되는 논과 밭을 우량농지로 개발

▶ 밭기반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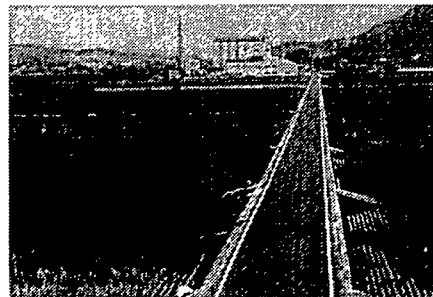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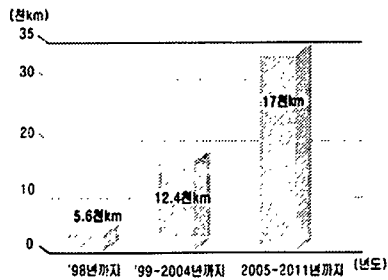


■ 그간에 보전과 개발에서 소외되어 왔으나 하류지역 재해발생을 줄이고 농촌 소득증대에 결정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중산간 농경지의 보전 및 개발 추진

▶ 중산간지 보전개발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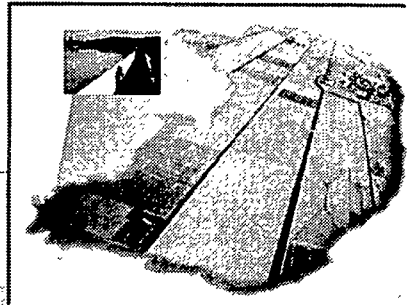


3기관 통합으로 전국이 하나의 Net-work로 연결됨에 따라 전국 단위의 물관리체계가 구축되었으며 농업·농촌용수 종합이용계획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물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총전 104개 농조가 관리하던 지역단위 물관리체계를 전국단위로 광역화하여 효율적인 물관리가 가능해졌고 시설물 관리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전국단위 물관리 효과

- 지역간 용수의 균등배분 및 안정공급 가능
- 풍수해, 가뭄 등 재해에 대비한 중앙단위의 재해대책 및 지원이 강화됨으로써 위기관리능력 제고
- 지역특성에 맞는 물관리기법 개발 등 기술발달



■ 시설물 유지관리

- 3기관의 기술력과 현장경험이 결합되어 시설물 관리의 과학화 체계화 구축

■ 수리시설물 정밀안전진단

- 최첨단 장비와 전문화된 인력에 의한 안전진단시스템 구축



농림기반공사

83년만에 조합비(수세) 완전폐지와 질 높은 영농
급·배수로 농업인에 대한 무한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흙수로 구조물화, 물관리자동화(TM/TC) 도입 등 물관리의 과학화 현대화로 질 높은 영농급·배수 서비스 제공



▶ 조합비(수세)폐지

- 87년 통합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지금까지 농업인에게 부담 시켜온 조합비를 완전히 폐지



▶ 용배수로 수초제거

- 농가단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용·배수로 수초제거를 위하여 우리농촌 실정에 맞는 수초제거기 개발 등 서비스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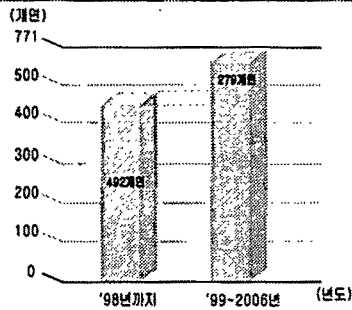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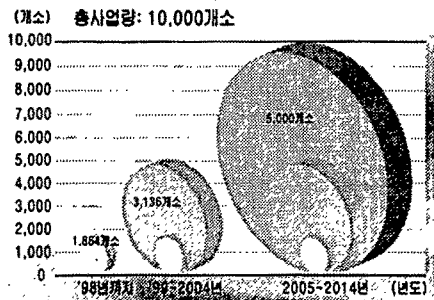
농촌생활환경개선은 행정구역단위의 평면적 개발에서 생활권역 중심의 공간적 개발에 중점을 두고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합니다.

면지역의 중심생활권을 대상으로 지역특성과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여 쾌적한 전원 주거공간을 조성합니다

▶ 농촌정주생활권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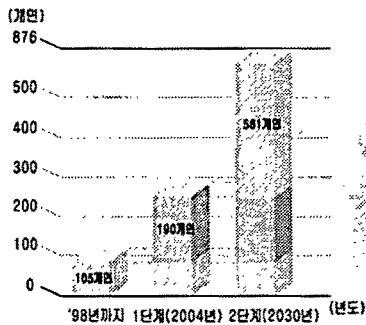


▶ 농촌용수개발



▶ 문화마을 및 하수도 시설

총사업량(2006): 876가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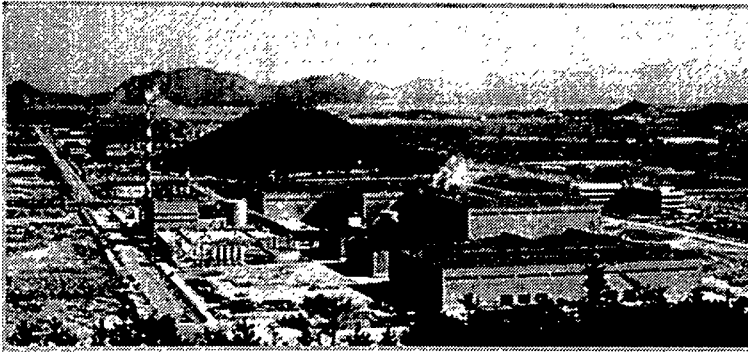


농림기반공사

농촌을 1·2·3차 산업이 공존하는 복합산업
공간으로 조성하여 돌아오는 농촌을 실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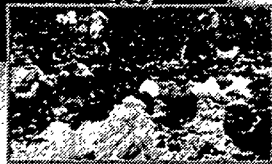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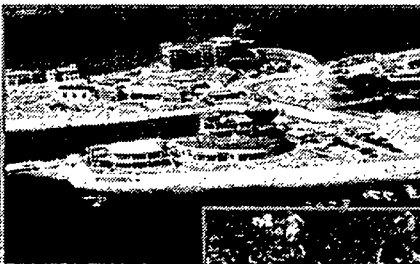
■ 농공단지 활성화

- 부존자원을 활용한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농공단지운영의 내실화를 통하여 농촌지역을 산업거점으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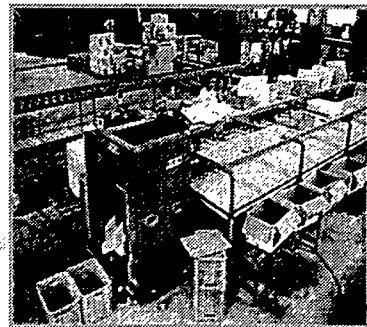
■ 농촌지역 휴양자원 개발

- 농촌휴양·관광자원 등 개발을 통한 소득증대
-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체험공간 창출



■ 소득원 확충

- 지역의 특산물 생산 및 가공산업의 확대



농업부



농촌의 복합사업 공간조성

사업 추진방식도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일정 권역을 중심으로 단위사업간 연계성을 유지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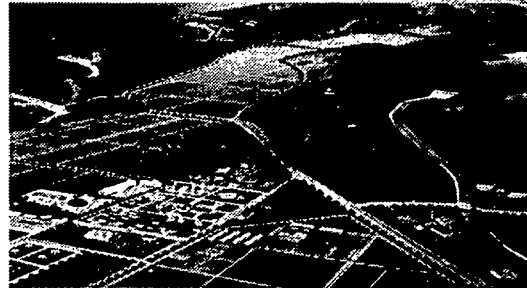
■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

- 농촌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밭기반정비, 기계화경작로, TM/TC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일괄 시행함으로써 투자효과를 극대화



■ 농촌지역 종합정비사업

-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농업 생산기반, 농촌생활환경, 소득원 개발, 유통기반 등 관련사업을 종합 연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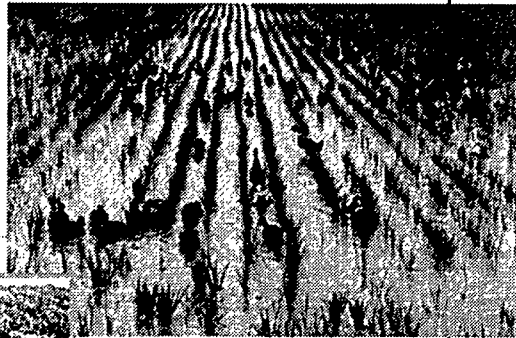


농업개발공사

환경친화적 개발과 환경오염 방지대책, 농촌용수, 수질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욕구를 충족시킵니다

■ 환경친화적 개발

-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한 대국민합의 도출
- 친환경 농법 개발 및 보급



■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방지 대책

- 농촌용수구역(464지구)을 대상으로 지하수 이용·보존관리사업 추진

농촌용수수질개선
 농촌용수의 수질측정망 확대 및
 개선사업 추진
 수질측정망 (09년) 106개업 → 11(09) 1350
 (2000) 450 → (2001년) 500
 수질개선사업 수질개선 효과가 큰
 24지구 우선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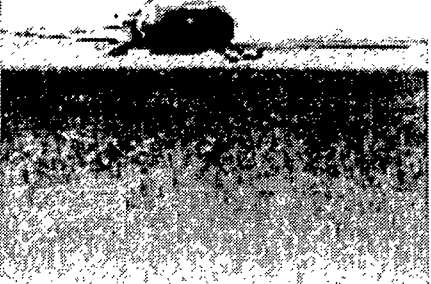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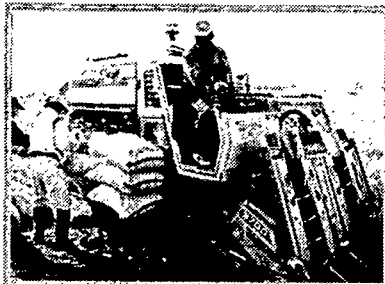


전문화·규모화를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국제화 및 통일시대를 대비합니다

**전업농업인에게 필요한 농지를 지원하는 영농 규모 적정화
사업을 물관리 업무와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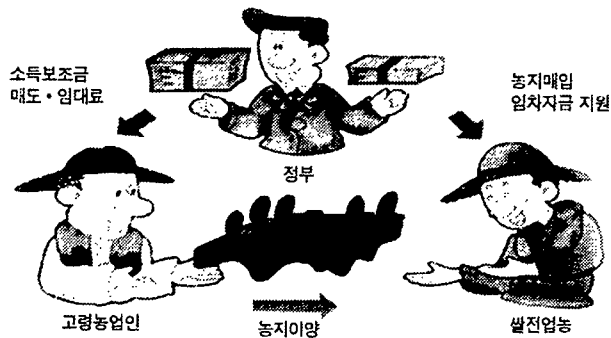
■ 영농규모 적정화사업

- 우량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영농권단위로 종합적인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영농규모 확대 및 집단화를 촉진
- 기업가 정신과 전문적 기술·능력을 갖추고 소득증대를 실현하는 견실한 경영인으로 육성
- 2004년까지 경쟁력 있는 10만 쌀전업농이 육성되어 지역농업 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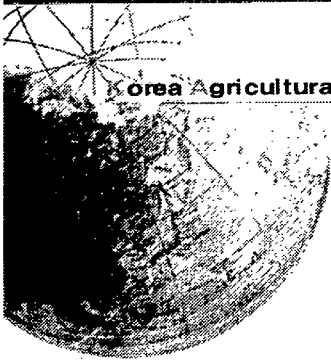


■ 규모외축진직접지불제

- 고령농업인으로부터 쌀전업농으로의 경영이양촉진을 위하여 소득보조금 지급



농업기술공사



세계화·개방화시대에 부응한 해외농업 개발
및 통일시대농정을 착실하게 준비해 갑니다

■ 해외농업 개발

- 축적된 기술력과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기술용역, 해외농장 개발추진, 국제기구와 협조체계 구축



■ 북한농업 연구

- 남북농업 특성 연구 및 북한 농업생산기반정비 계획수립 등 다가오는 통일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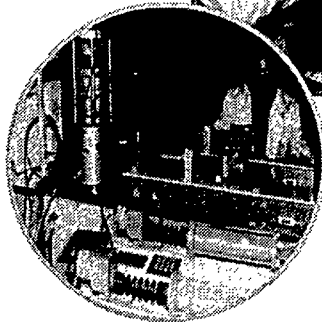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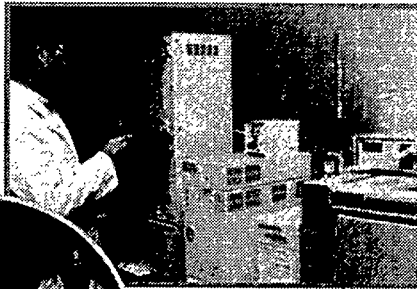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대응한 수준높은
연구개발과 정보화를 구축해 갑니다

실용 가능한 신기술, 신공법 개발등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 기술 개발

- 세계적 수준의 농업토목기술을 개발하여 WTO정부조달협정에 따른
공사시공, 조사설계 등의 용역업무 개방에 대비



첨단기술을 바탕으로한 농어촌
관련정보화를 구축해갑니다

■ 정보화

- 전국의 농지 및 수자원에 대한 D/B구축, GIS, 설계C/A 등으로 기술정보화물 이용으로써 미래 지식농업 실현 뒷받침





⑤

농업기반공사의 주요사업활동 Korea Agricultural

V 21C농업 · 농촌의 미래는 밝습니다.

산업으로서의 농업

■ 잘 정비된 농업생산기반 위에서 농업이 미래 지식기반사회의 선도 산업으로 발전

■ 기계화, 자동화 영농기반이 완비되어 생산하는 농업에서 경영하는 농업으로 정착

· 생산의 질과 수확량을 높이기 위한 영농기술개발
■ 농업이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뿐만 아니라 식량안보, 환경보전, 국토의 균형 개발, 전통문화와 가치관의 계승 등 다면적 기능(Multifunctionality)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 자리잡음

·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여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



농업기반공사





쾌적한 삶의 터전으로서의 농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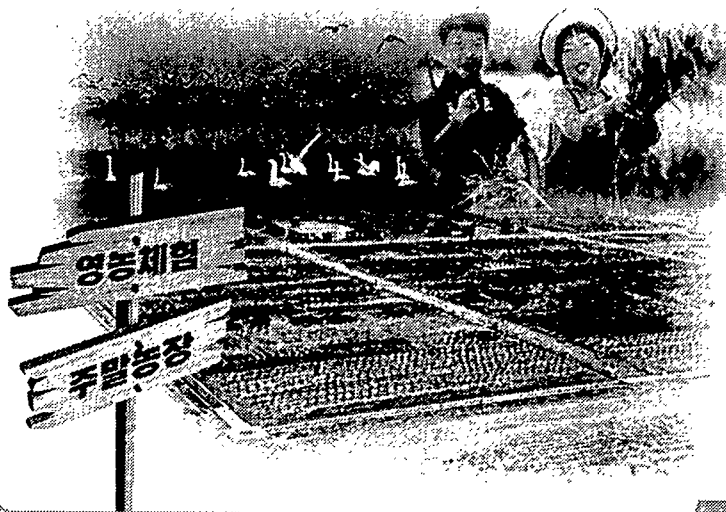
■ 생활편의시설이 완비된 쾌적한 생활공간

- 도로, 상하수도, 현대식 주택, 생활편의시설 등의 완비로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 창출



■ 도시주민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국민의 휴식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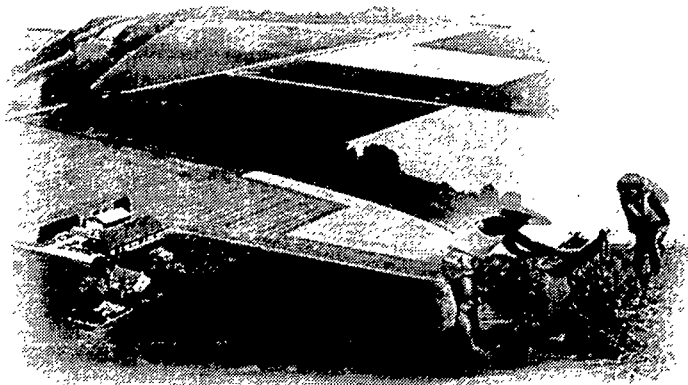
- 영농체험, 주말농장, 관광농원 등 도·농간 교류 활발



농업기반공사

■ 21세기 농촌은 자연환경이 보존되고 친환경농업이 실현되는
그린토피아(Greentopia)

- 자연이나 생태계·환경이 잘 보존된 살기 좋은 농촌



■ 산업, 자연 및 전통문화가 조화된 농촌지역

- 생산·가공·유통 등 농업관련산업의 복합화
-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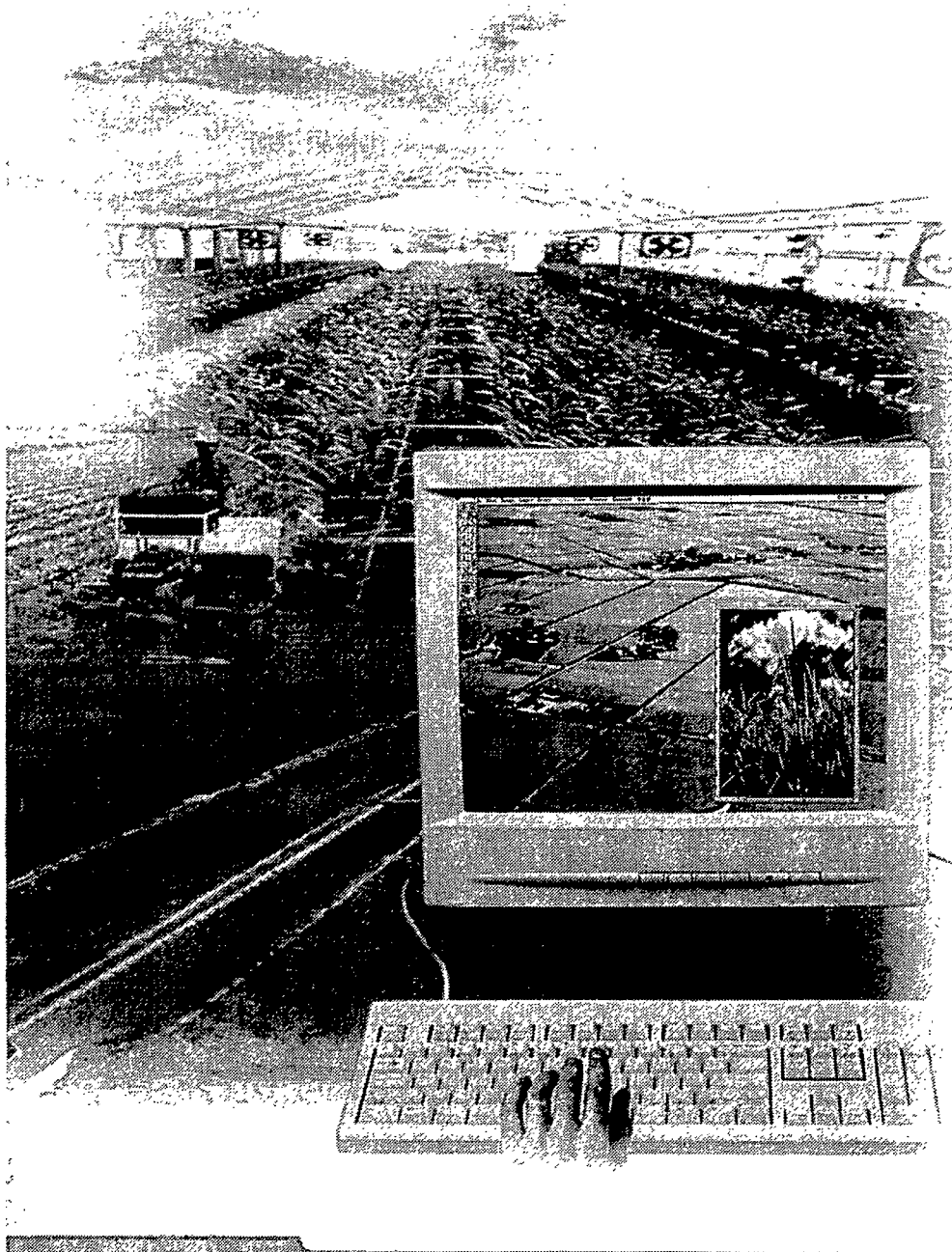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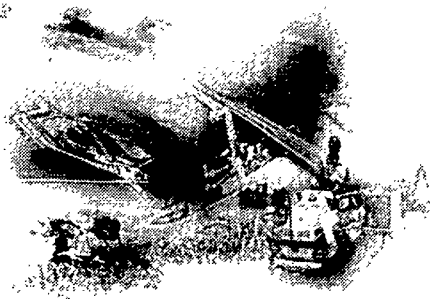


경영인으로서의 농업인

- **이제는 농업인도 어엿한 경영자**
 - 기업이 정신과 전문기술을 갖추고 끊임없이 경영혁신을 주도하는
건실한 경영인으로 성장
 - ▶ 전업농은 농업경영만으로 도시근로자 못지 않은 소득 향유
 - ▶ 중소농은 소량 다품목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체제 구축
- **젊고 유능한 농업후계자가 농업을 직업으로 자랑스럽게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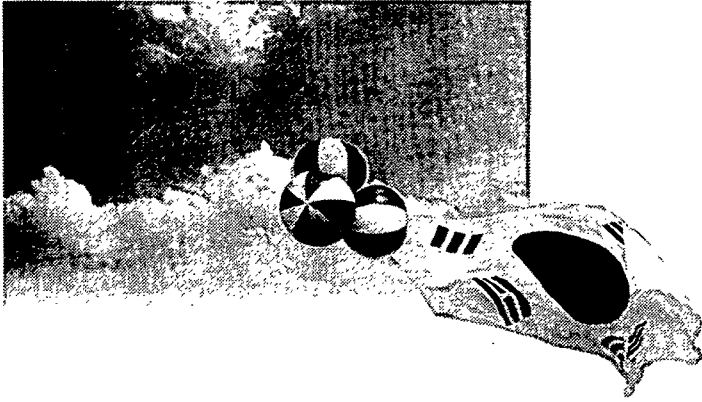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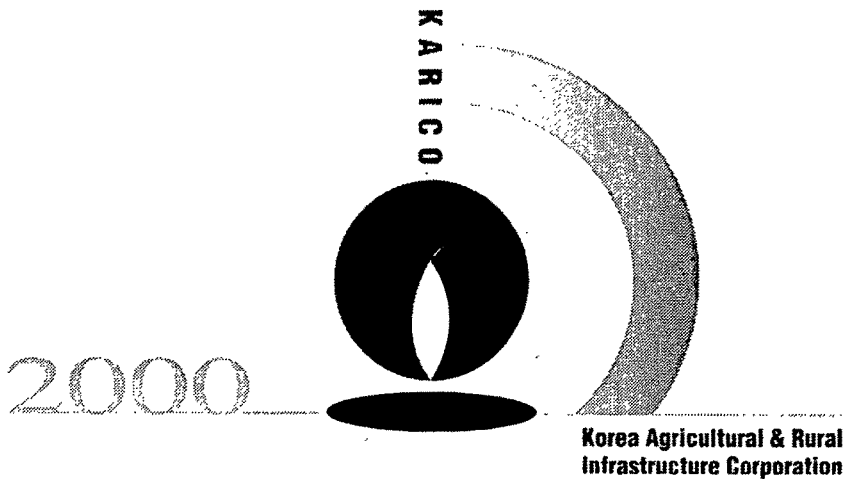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농림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우) 427-760
TEL: (02) 500-2664
FAX: (02) 502-6734
<http://www.maf.go.kr>

농업기반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우) 430-600
TEL: (0343) 420-3392
FAX: (0343) 421-1602
<http://www.karico.or.kr>



농업기반공사 창립 기념식



- 일시 : 2000년 1월 5일(수) 15:00
- 장소 : 농업기반공사 교육원 대강당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사 가

작사 박호준
작곡 박호준

불 줄 기 다 등 고 옥 토 흙 일 구 어 푸 른
 지 혜 와 맘 모 아 한 마 음 한 길 로 발 전

꿈 밝 은 내 - 일 가 꾸 어 나 가 세
 하는 우리 농 - 업 세 계 로 나 가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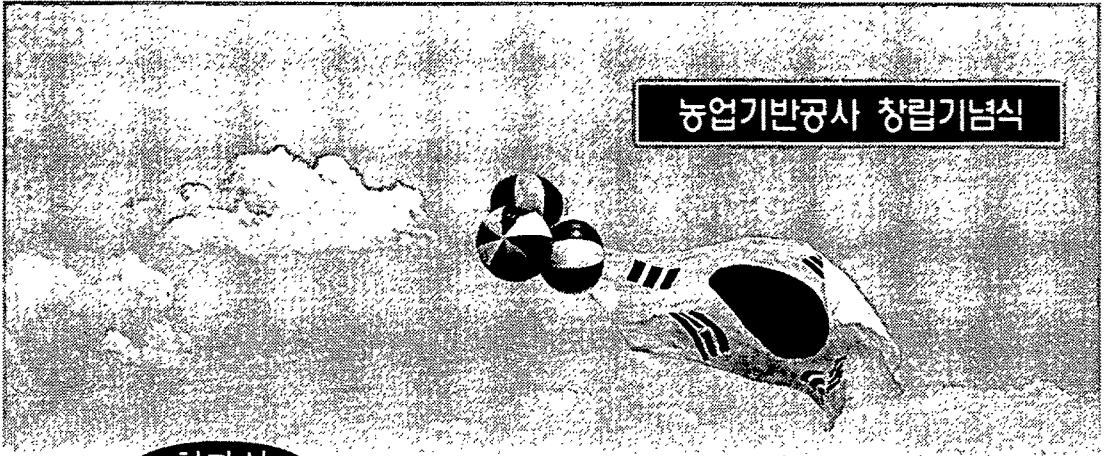
넓은 들 황 금 들 결 을 령 일 때 에
 기술 과 정 성 으 로 다 들 고 매 만 저

풍 요 한 농 손 의 내 일 이 불 처 지 리
 희 망 찬 터 전 을 후 세 에 전 - 하 리

라 - (후렴) 아 아 농 업 인 의
 라 -

기쁨 은 우리 의 보 람 농 업 인 의 영 원 한 동 반

자 농 업 기 반 공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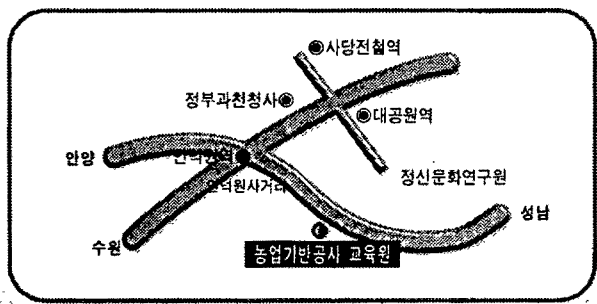
농업기반공사 창립기념식

현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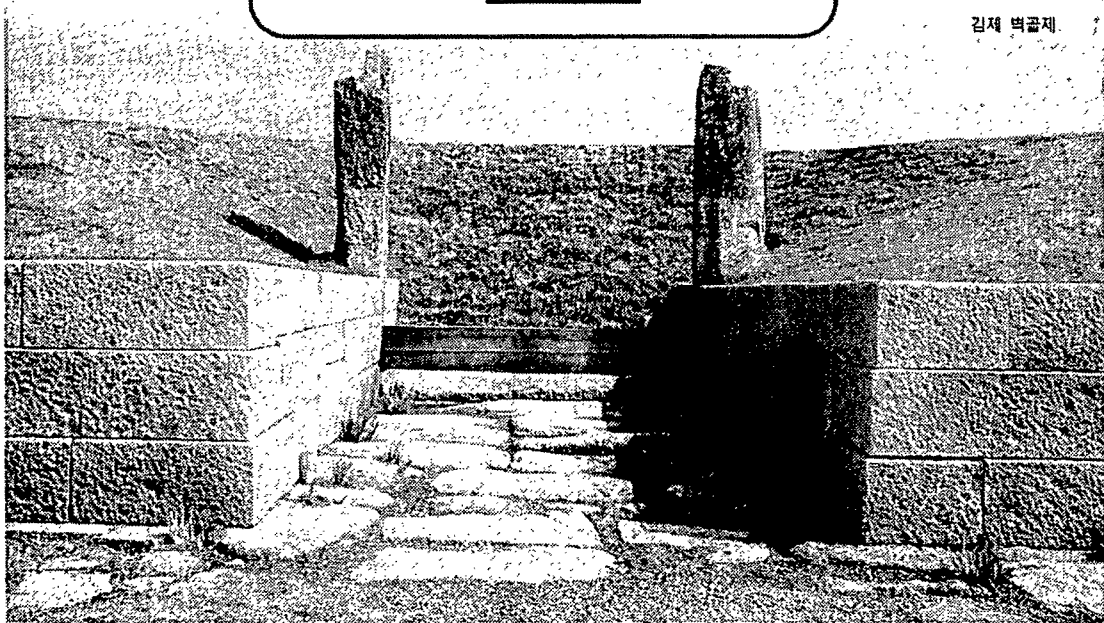
기 념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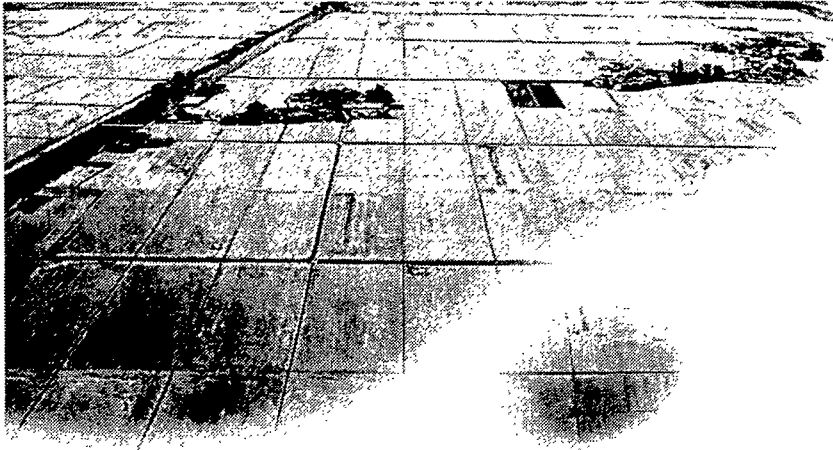
- 식전행사
- 행사장 입장
- 개 식
- 국민의례
- 농업기반공사 사기전수
- 기 념 사
- 치 사
- 우리의 다짐
- 폐 식

기념리셉션



김제 벽골제





농업·농촌용수 종합이용계획 농·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농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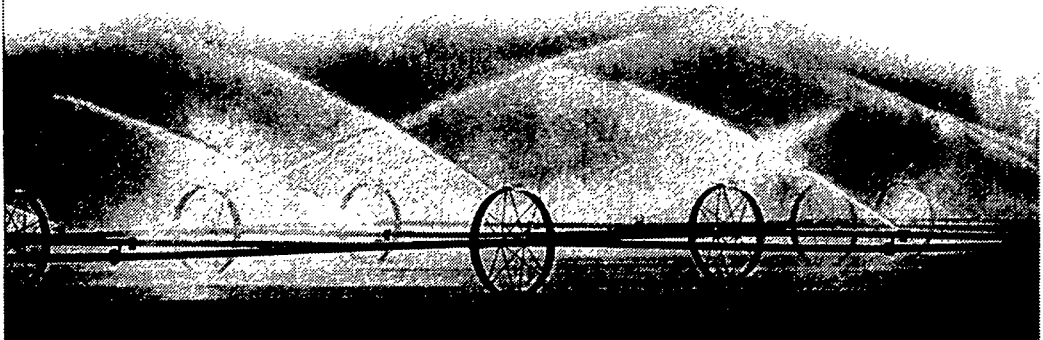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I. 수자원 이용현황 및 특성	04
1. 수자원 이용현황	
2. 수리답 현황	
3. 농촌용수 이용특성	
4. 농촌용수 개발 방법	
II. 계획 수립 내용	07
1. 용수구역 설정	
2. 계획수립	
3. DATA BASE구축	
III. 농업·농촌용수 종합이용계획 예시	10
IV. 향후활용 계획	13
1. 물 관리의 과학화·체계화 기반구축	
2. 종합개발방식을 도입한 계획 수립 및 추진	
V. 종합이용계획 수립 완료후 조치사항	15
1. 농촌용수구역 관리 체계 구축	
2. 자료의 범용화 추진	
VI. 기대효과	15



계획 수립 배경

- 21세기 농촌용수 수요량 증가에 대비
- 산업화에 따른 농촌지역 수질오염 방지
- 한정된 수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

농업·농촌
용수종합
이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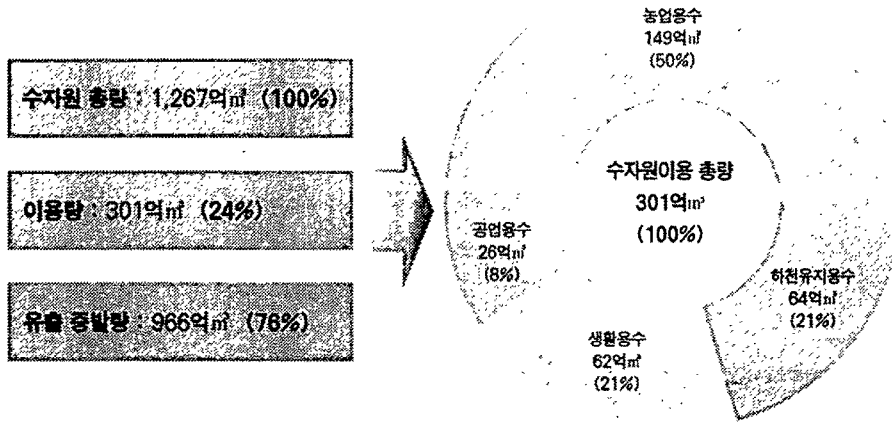
농촌용수의 합리적인 개발·보전·관리

추진경위

- '89 : 농촌용수 종합발전기획단 설치
- '90 :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정·공포
- '91 : 농촌용수구역 설정(464개 용수 구역)
- '98 : 농촌용수구역 자원기초조사 완료
- '99. 1 : 농업·농촌용수 종합이용계획 수립 기획단 설치
- '99. 1 : 도·시군 등 관계자 교육
- '99. 1~4 : 시·도지사 의견 수렴 및 계획(안) 보완
- '99.10 : 관련 부처 협의 및 계획(안) 보완
- '99.11 : 농업·농촌용수 종합이용계획 확정
- '99.11월 이후 : 지자체별 용수구역 설정 및 고시
농촌용수개발 사업 시행추진 및 D/B자료 보완
- 2000.1 : 농업기반공사의 전국단위 물관리 계획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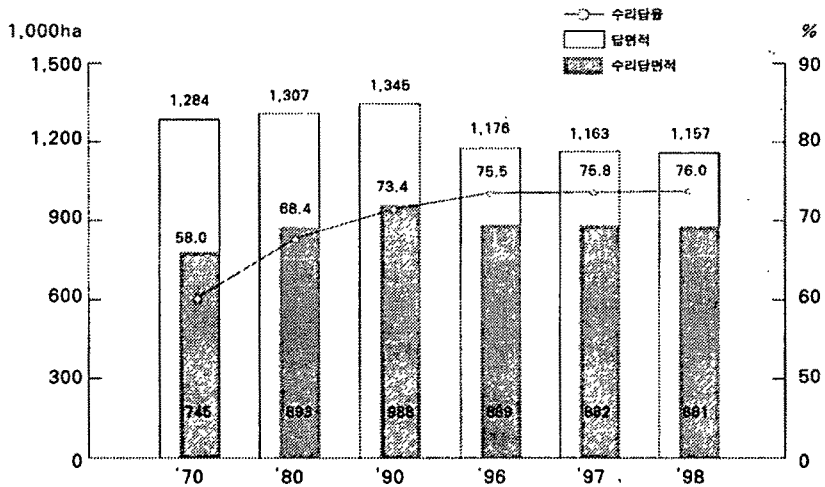
1. 수자원 이용현황 및 특성

1. 수자원 이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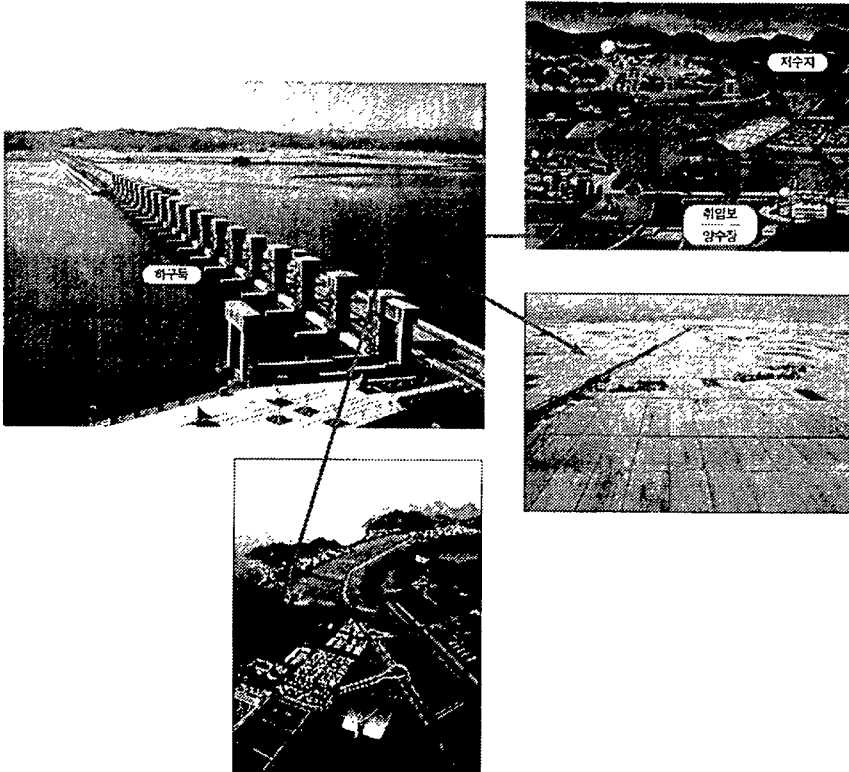
* 자료 : '98 수자원 평가종합계획(건교부)

2. 수리담 현황



· 10년 빈도 가뭄에 견딜 수 있는 면적 412천 ha('98까지)

3. 농촌용수 이용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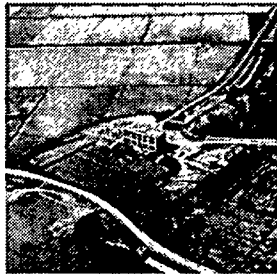
환원수(Return flow)의 반복이용으로
한정된 수자원 이용 효율과 수질개선 효과증대

4. 농촌용수 개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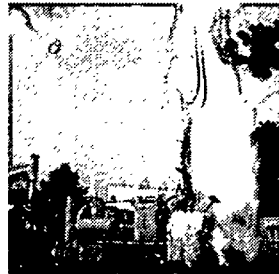
신규개발



저수지



양수장



관정

보강개발



GATE설치

제당높임



신규개발 방식에 비해 30~40% 비용절감 효과

II. 계획 수립 내용

1. 용수구역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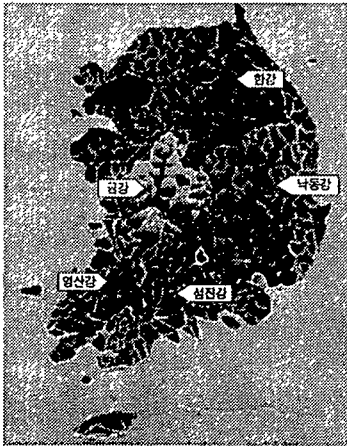
규모결정기준

- 효율적인 수자원 이용계획 수립이 가능한 규모
- 수요·공급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규모
- 용수관리가 용이한 규모

용수구역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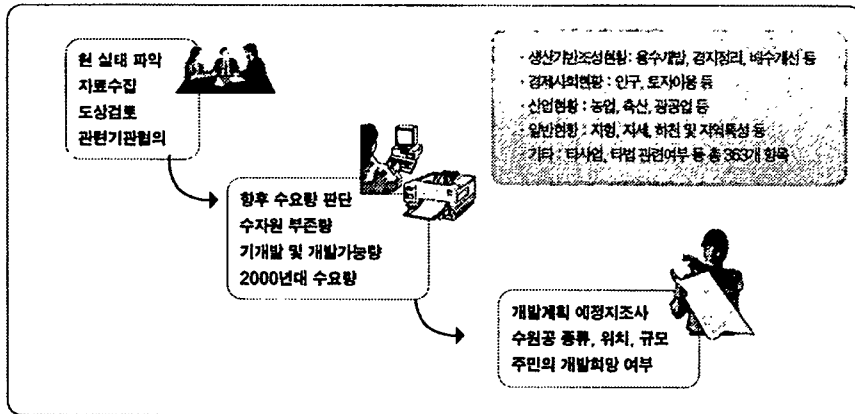
- 전국을 464개 용수구역으로 구분
- 평균 구역면적 : 2~3만ha
 - 평균 농경지면적 : 4~5천 ha

· 수계별 용수구역 설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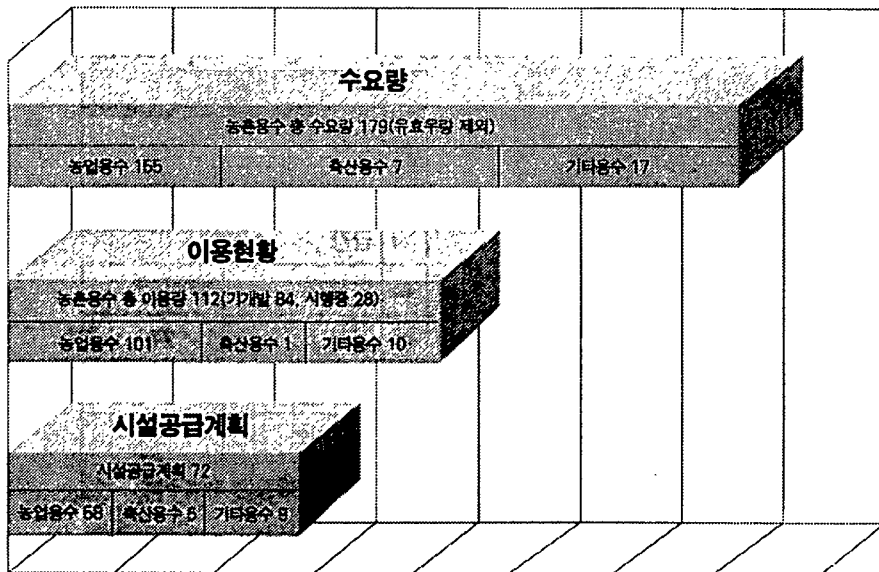


구분	구역수
● 한강	85
● 낙동강	94
● 금강	48
● 영산강	16
● 섬진강	27
● 도서·기타	194
● 제외지역	
총 1,433읍면 464구역	

2. 계획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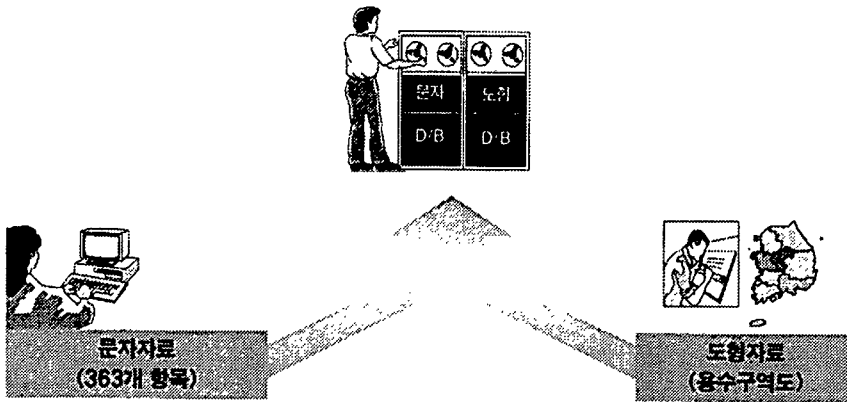


단위 : 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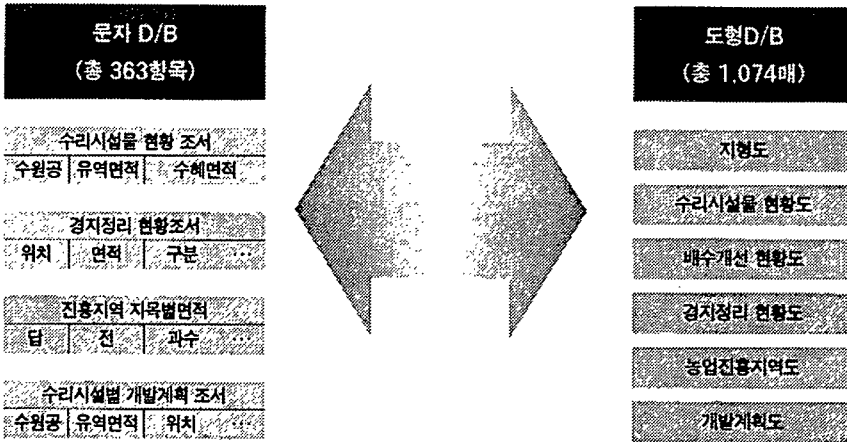


※ 기타용수 : 생활, 공업, 하천유지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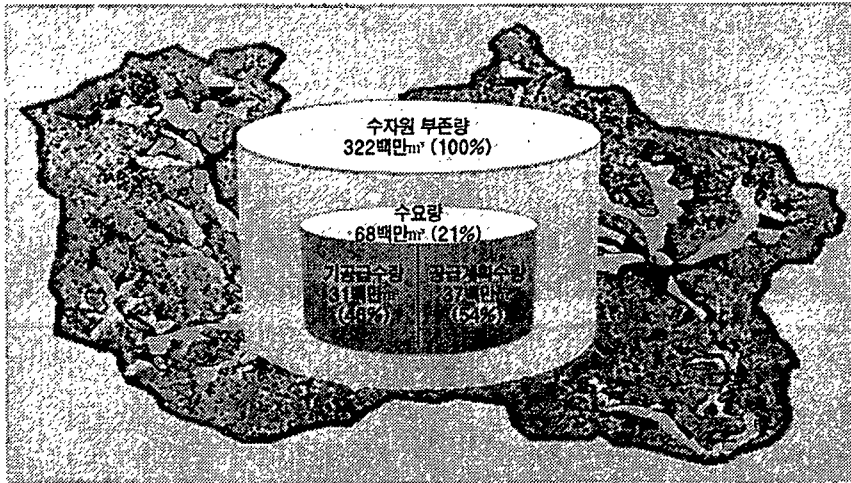
3. DATA BASE 구축



• 문자·도형 자료의 연결



• 수자원 부존 및 수요량 산정(청도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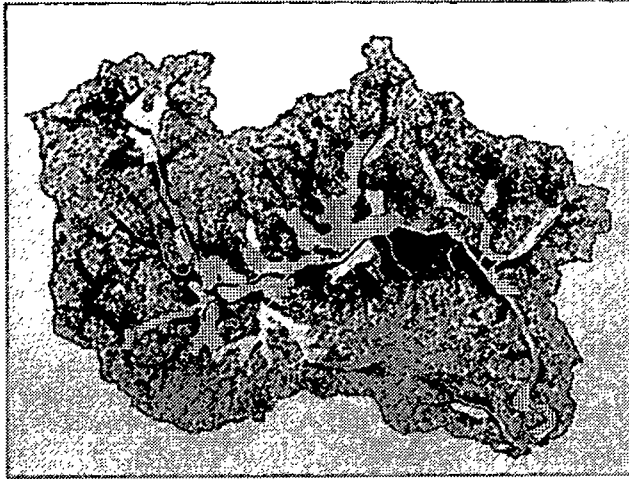
• 수원공 개발계획(청도구역)

구분	ha	천㎡	천㎡	ha	ha	ha	인	천㎡
계	2,560	2,992	3,289	1,081	731	350	1,010	129
산	450	536	589	181	119	62	250	32
신기	490	441	485	193	103	90	200	26
급지	120	134	148	45	25	20	0	0
상지	520	631	694	245	121	124	260	33
동천	360	524	575	182	172	10	0	0
직천	260	262	288	98	72	26	300	38
상중	360	464	510	137	119	18	0	0



-  신규세수지 (7개소)
-  보강세수지 (1개소)
-  양남관정 (23개소)

• 경지정리 현황 및 계획(청도구역)



기시행
18지구
(1,772ha)

예정지
20지구
(1,108ha)

• 배수개선 현황 및 계획(청도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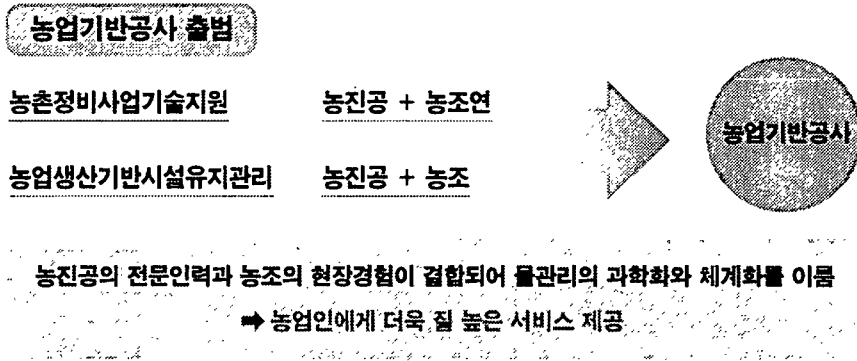


기시행
1지구
(80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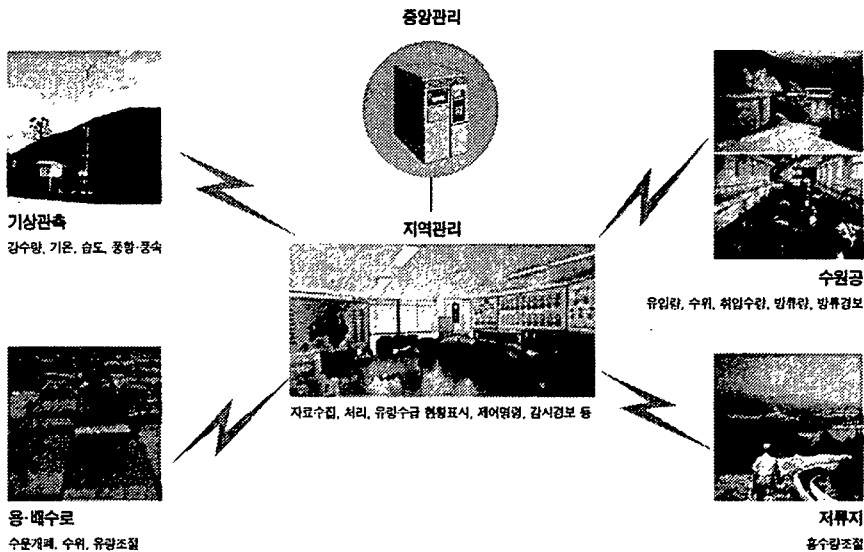
예정지
2지구
(83ha)

IV. 향후 활용 계획

1. 물 관리의 과학화·체계화 기반구축



· 물 관리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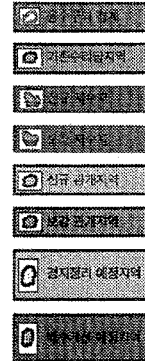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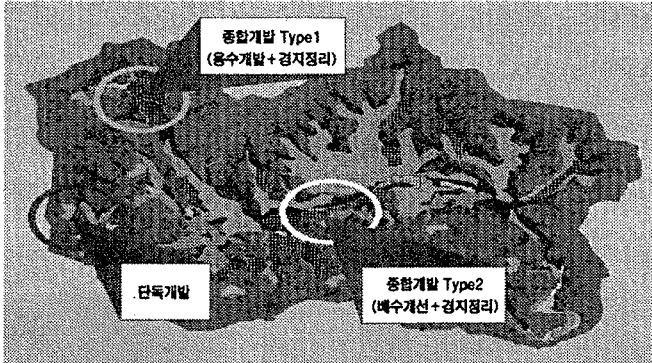


2. 종합개발방식을 도입한 계획 수립 및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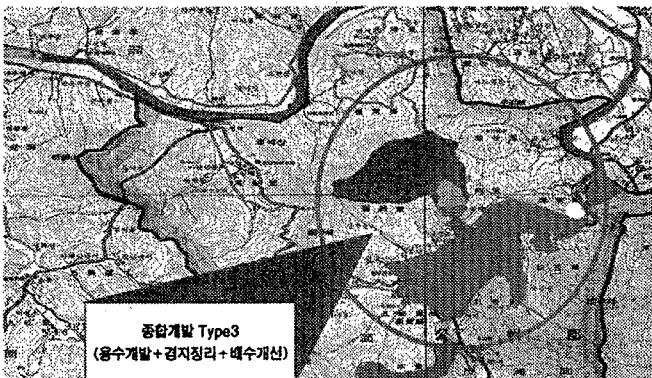
- 단독개발사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사업)
- 종합개발사업
 - Type1, 용수개발+경지정리사업
 - Type2, 경지정리+배수개선사업
 - Type3, 용수개발+경지정리+배수개선사업
 - 기타(발기반정비, 기계화경작료 등)

• 사업추진유형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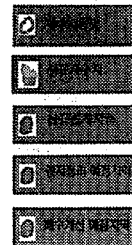
- 단독개발, 종합개발 Type1, Type2



- 종합개발 Type3



용수구역명 : 공정 용수구역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일원



V. 종합이용계획 수립 완료후 조치사항

1. 농촌용수구역 관리 체계 구축

- 기본계획수립 : 농림부장관
- 구역설정고시 : 시·도지사
- 조례제정 : 시장, 군수
- 관리 및 운영 : 시장, 군수, 농업기반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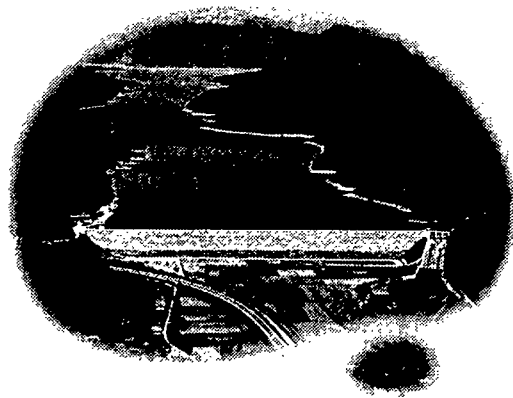
2. 자료의 범용화 추진

- 직접 사업을 담당하는 일선 기관에서 이동하기 쉬운 프로그램 개발보급
-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물 관련 기관간의 정보공유화 촉진 도모

VI. 기대효과



- 한정된 수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
- 물관리의 과학화로 거시적 물문제 해결
-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 및 소득증대
- 가뭄에 대비한 안정영농 기반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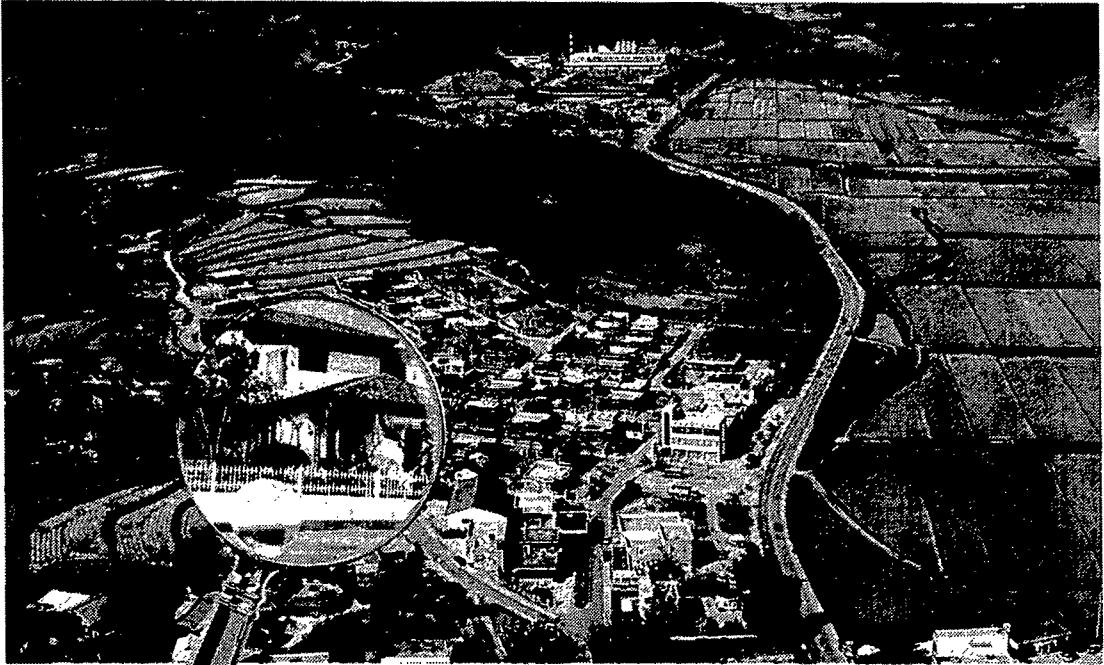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Korea Agricultural & Rural
Infrastructure Corporation

농림부 <http://www.maf.go.kr>

농업기반공사 <http://www.karico.co.kr>

농촌지역 조화로운 삶의 공간

문화마을



농 립 부
농업기반공사
“국민을 움직여야 농업이 산다”



농림부 장관 김성훈

“우리 농촌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농촌마을은 가족농 중심의 전통마을로서 주택과 도로, 상·하수도 등 모든 기반시설이 중·소도시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고 생활쓰레기와 오·폐수 등 환경오염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촌지역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삶의 공간을 마련하여 농민과 도시민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과 편의·복지시설이 종합적으로 정비된 생활공간을 제공하고자 면단위 중심마을에 중·소도시 수준의 현대화된 문화마을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마을조성사업 지구에는 지역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생산기반정비사업은 물론, 소득기반조성사업을 연계 시행하여 풍요롭고 새로운 문화마을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가오는 2000년대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농촌의 현대화 촉진으로 새로운 농촌을 건설하여 전 국민과 우리 후손들이 전국 어디서나 팔고루 잘 살 수 있는 국토공간이 조성되므로써 국가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 장관 김성훈



지 려	
인사말	2
문화마을조성사업이란	4
사업량	5
주요시설	6
사업추진절차	8
지역별 문화마을조성현황	9
유형별 개발모델	10
지구별 사업시행 사례	16
농어촌발전에 기여한 효과	20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22
향후 사업추진방향	24
21세기 농촌의 미래상	28





농업기반공사 사장 문동신

“새농촌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인력의 도시집중으로 농촌지역은 부
 녀화·고령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중·소도시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 낙후된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정부에서는 농촌정주생활
 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마을조성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
 습니다.

우리 공사도 이러한 정부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문
 화마을조성사업을 전담 시행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실태조사
 는 물론, 사업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
 록 경관형성계획을 도입하는 등 환경친화적 농촌마을 조성에 신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마을조성사업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생활환경개선사업
 과 농업생산기반조성 및 소득기반 조성사업을 연계한 종합정비사업추
 진을 유도하여 생활근거지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미래지향적 농촌마
 을을 조성함으로써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새농촌 건설을 위해 최선
 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사장 문 동 신





민화마을 조성사업이란?

농촌지역의 중심마을을 집중지원하여
현대적인 생활환경기반을 조성하고, 생산기반정비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생활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활력있는 미래지향적 농촌마을로 정비

추진방향

- 돌아오는 농촌 건설
 - 농민과 도시민이 함께 살 수 있는 현대화된 마을조성
- 생활환경을 중소도시 수준으로 향상
 - 주택, 상·하수도, 도로, 하수처리시설 등 생활환경시설 완비
 - 복지회관, 어린이놀이터 등 편익복지시설 설치
- 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자율적인 개발추진

관련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29조 내지 제42조의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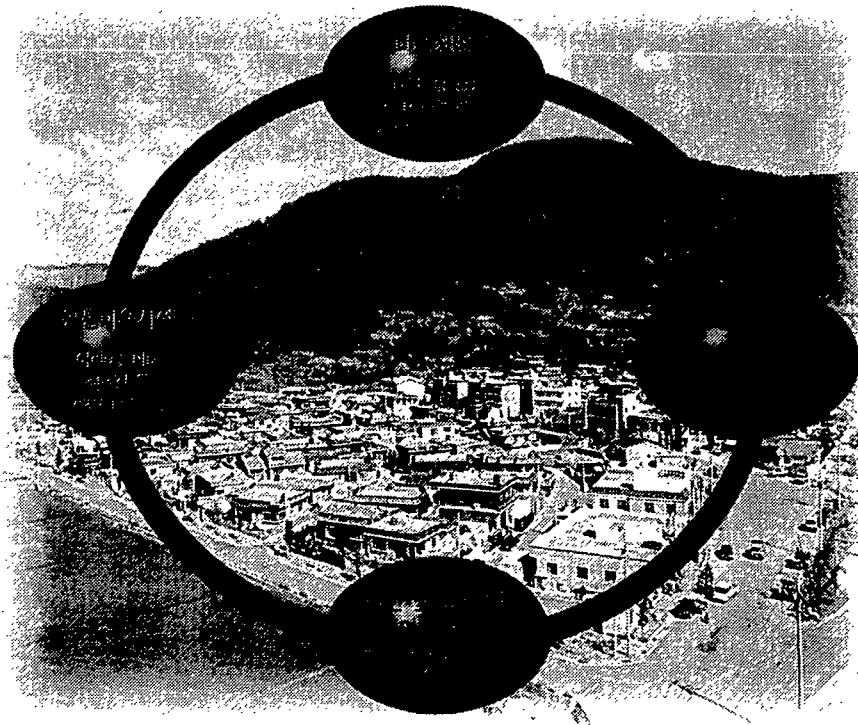


사업량

● 전국 정주권 개발대상 768개 면(面)에 면당 1개소 조성(2004년까지 190개소)

구 분	목 표	'99까지	2000계획	2001이후
마을수(지구)	768	115	23	630
사업비(억원)	31,149	5,084	785	25,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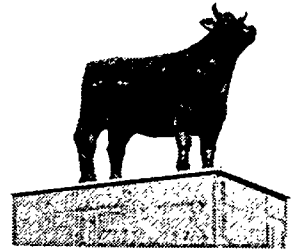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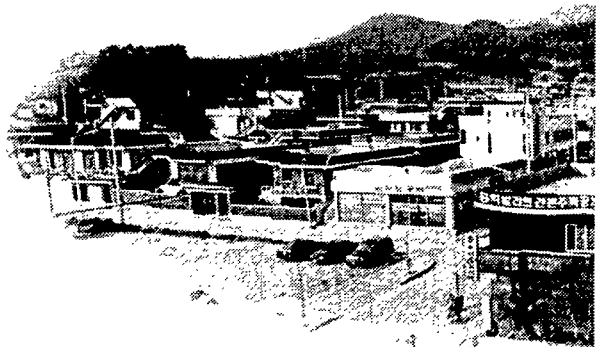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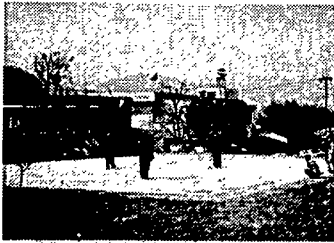
주요시설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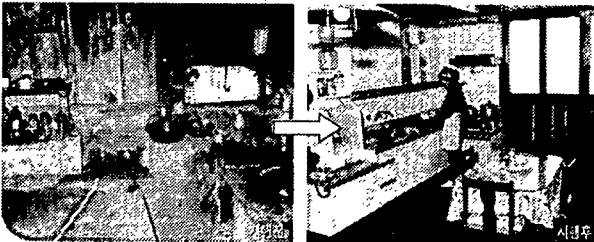
〈마을안길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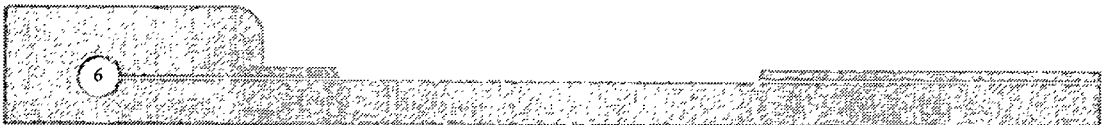
〈주민쉼터〉



〈삼·하수도·부위 개량〉



〈생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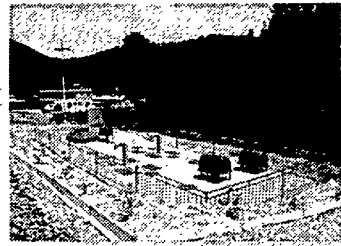
특징화



주택개량(신·개축)



마을하수처리시설



공공시설

의시설



사업추진절차

대상지구 선정

농림부 장관



기본계획수립

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에 위탁)



생활환경정비구역 지정

농림부 장관



시행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에 위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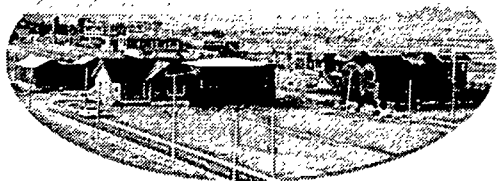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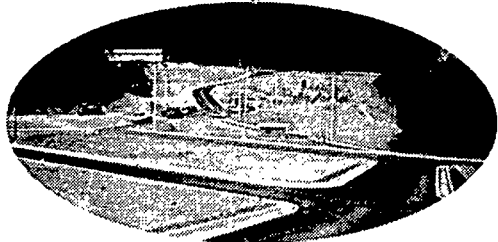
용지분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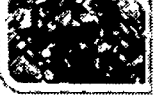
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에 위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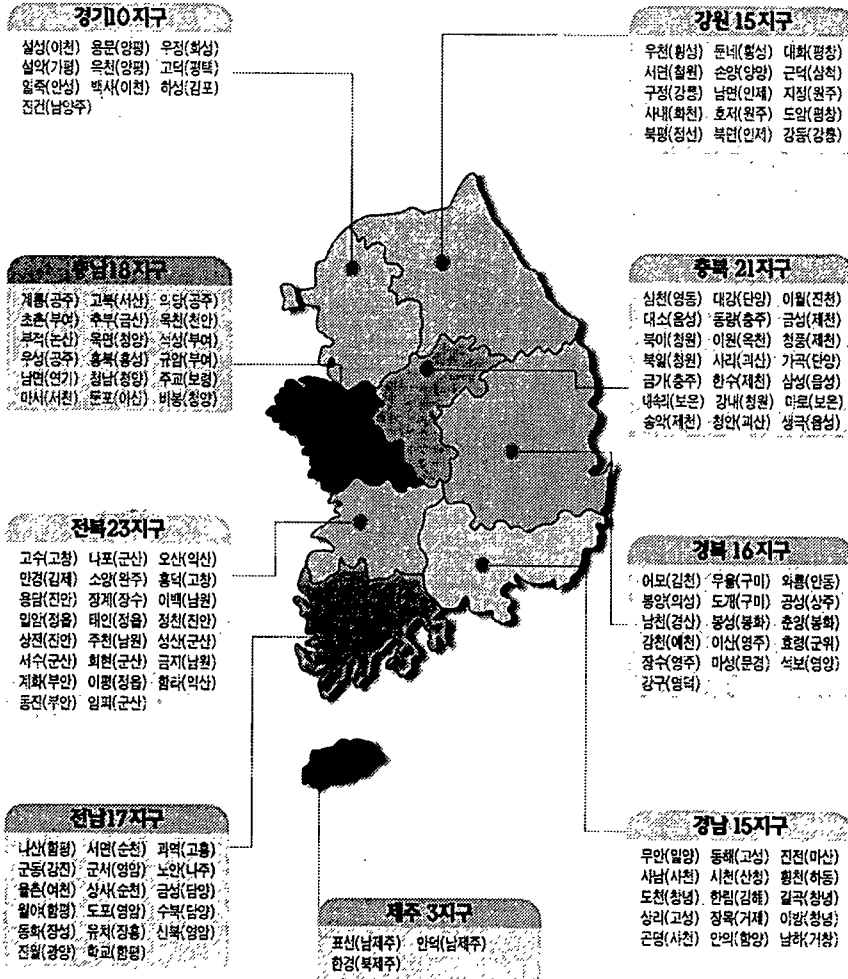
주택건축

입주자 자율





지역별 문화마을조성 현황



※ 청서 : 2000년 예정지구

유형별 개발모델(1)

—신규택지 조성

● 중심마을의 기능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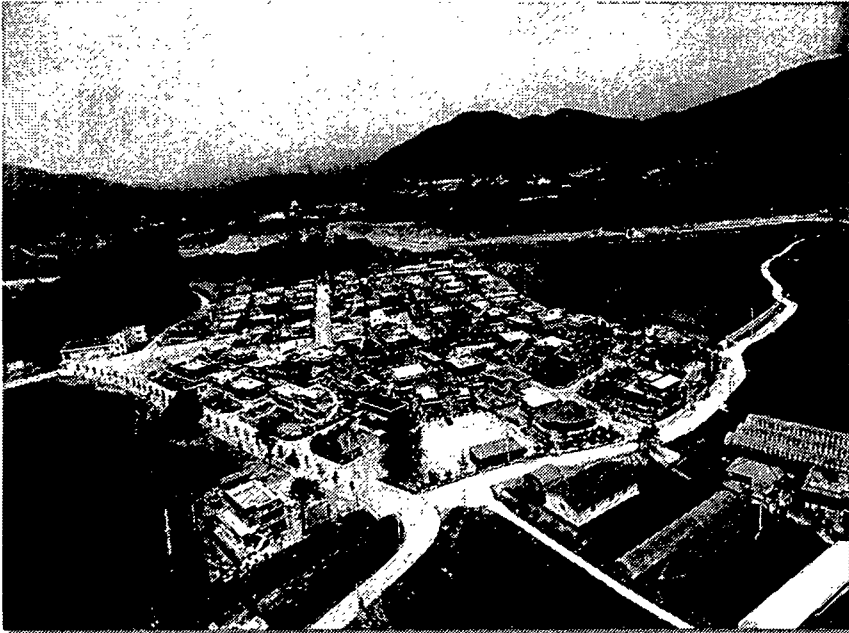
- 농촌의 성장거점 지역으로 마을 규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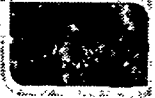
● 지역의 고유특성을 반영한 삶의 공간 조성

- 역사성, 문화성 등 지역여건 최대한 반영
- 신규택지 조성, 마을 공동이용시설 설치, 생활편익시설 설치

● 환경 기초시설 설치

- 마을하수처리장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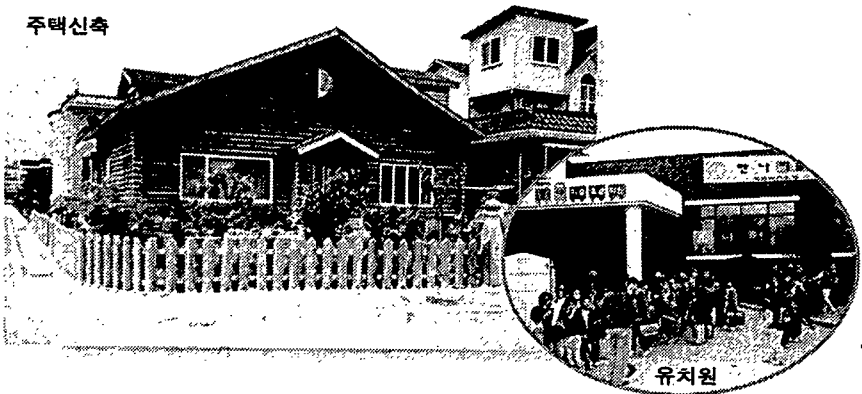


동물병원



새마을금고

주택신축



유치원



상업시설



어린이 놀이터

유형별 개발모델(2)

기존마을 정비

- 기존마을의 토지, 주택 등 합리적 재배치
 -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다목적 광장 등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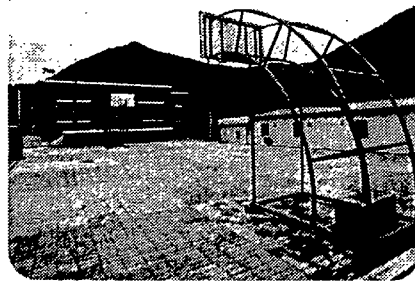
- 낙후된 생활환경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 마을 내 도로, 가로등,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현대화

- 농촌 자연환경 오염 방지
 - 마을하수처리장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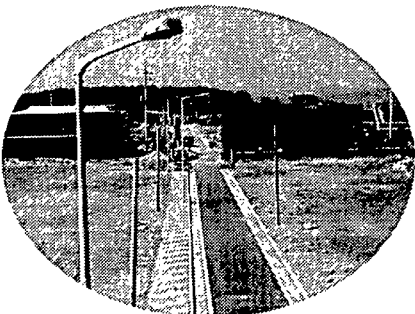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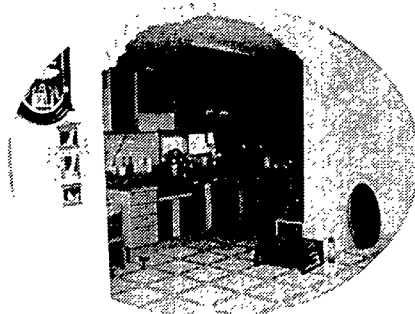
진입로 정비



체육시설



가로등 설치



부엌 개량



주택 신축·개량



마을하수도시설

Formation of Advanced Villages

유형별 개발모델(3)

분산마을 정비

- 분산·산재되어 있는 마을의 정비
 - 부락간 연결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 마을회관, 공원 및 놀이터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 생산기반, 소득기반 정비와 연계 개발
 - 경지정리, 대구획 경지재정비사업 등과 연계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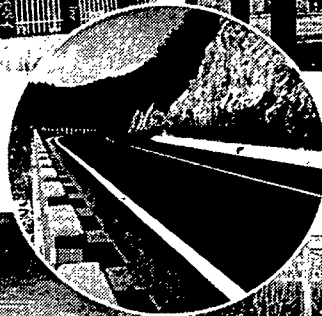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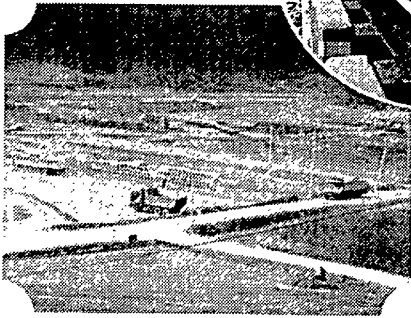
보건소



운동장



마을간 연결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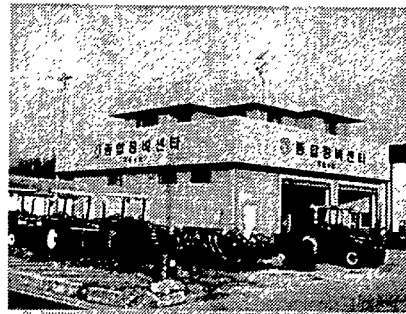
대구획경지정리



소득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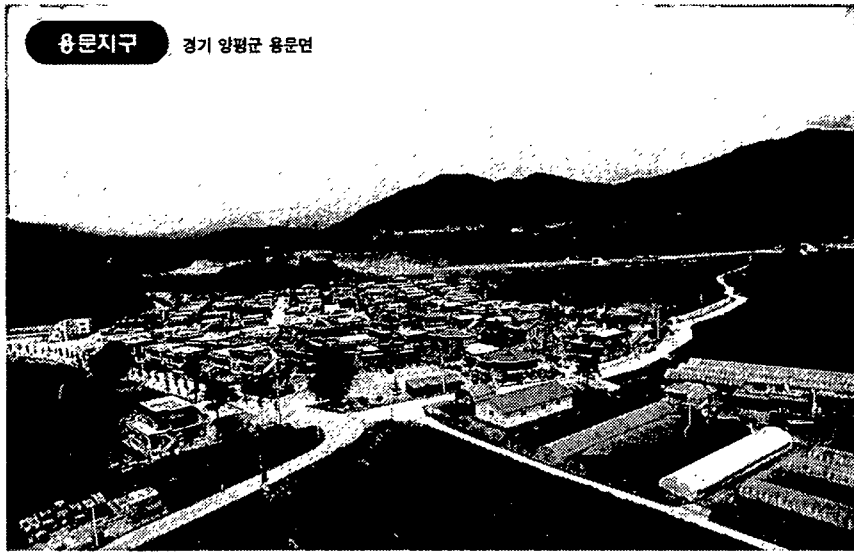
슈퍼



농기계정비센터

Formation of Advanced Villages

지구별 사업시행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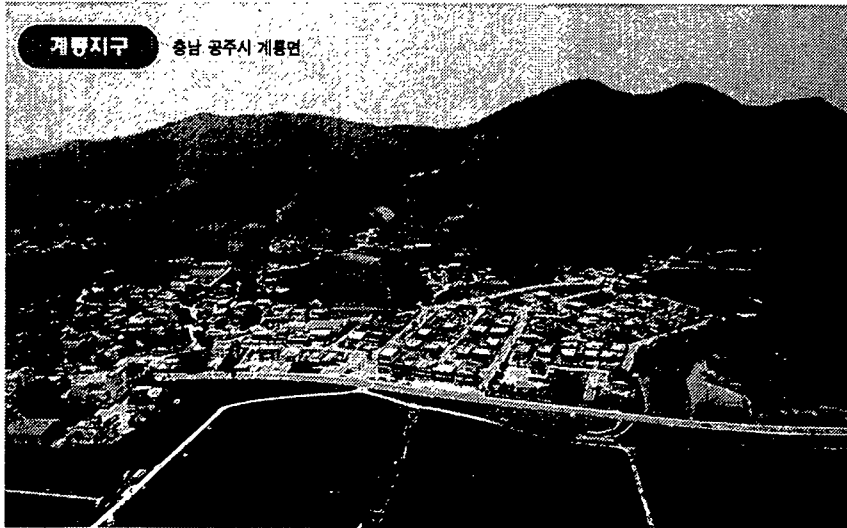




이월지구 충북 진천군 이월면



계룡지구 충남 공주시 계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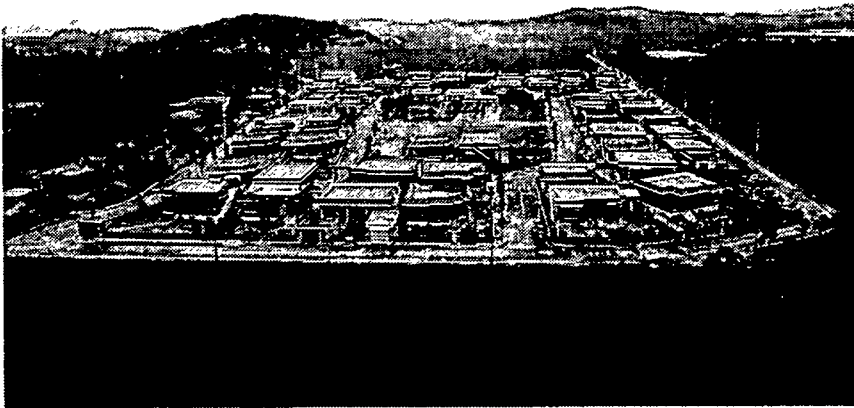


Formation of Advanced Vill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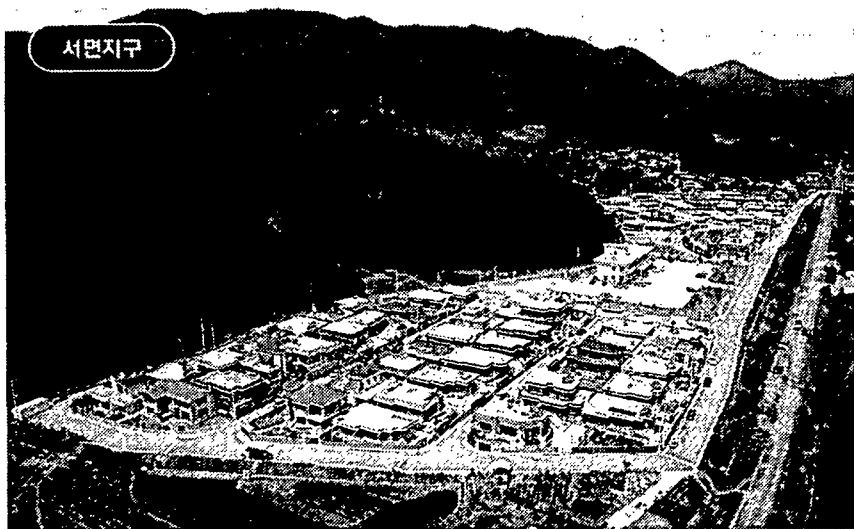
지구별 사업시행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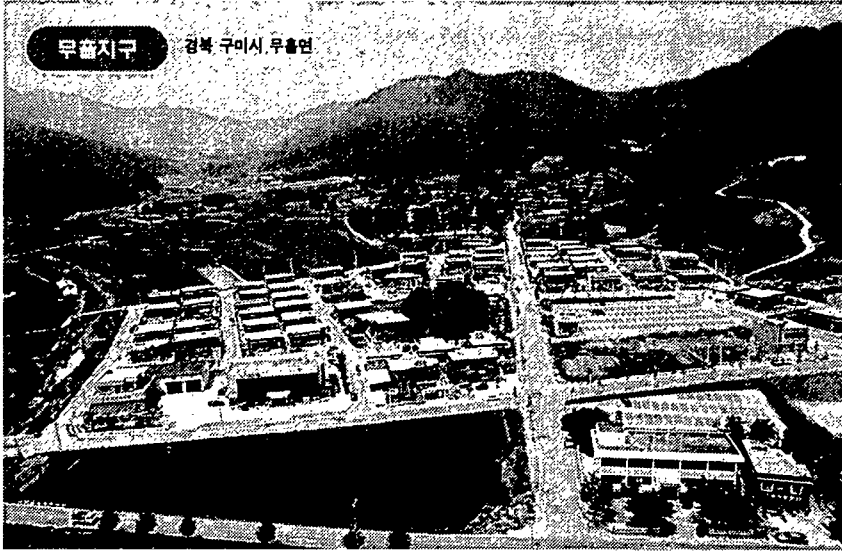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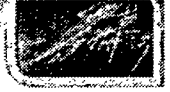
만경지구

전북 김제시 만경면



서면지구





Formation of Advanced Vill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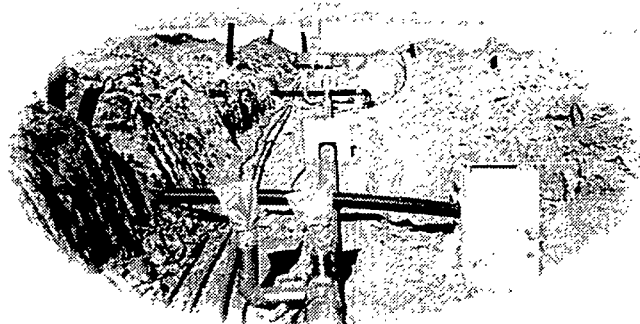
청정 암반지하수(생활용수)공급



옛 우물



지하수 개발



관로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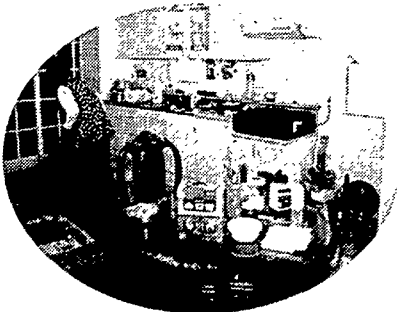
정수장 및 물탱크



가정에서 사용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마을하수도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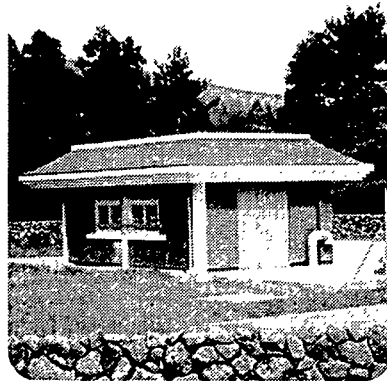
부엌 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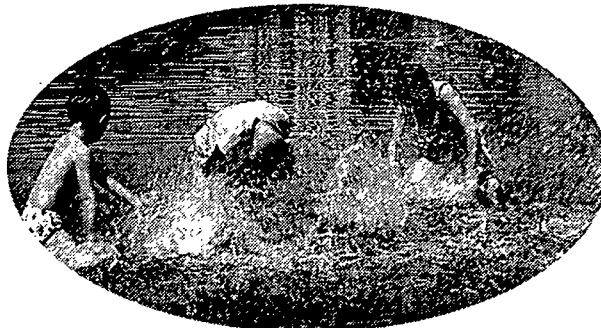
관로공사



CCTV 검측



마을하수처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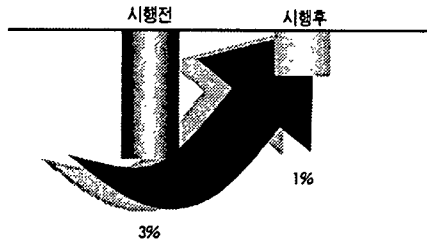
맑은 시냇물

농촌지역 발전에 기여한 효과

▶ 돌아오는 농촌구조 실현

● 지역 인구 감소율 둔화

- 시행전 : 연평균 3% 감소 → 시행후 1%로 감소



● 도로 및 교통여건 개선

- 마을 진입도로 개설, 노선버스 신설 및 운행횟수 증가

● 농촌 생활환경기반 대폭 개선

- 상수도 : (시행전) 간이상수도 → (시행후) 암반지하수 : 수질개선
- 하수도 : (시행전) 하천방류 → (시행후) 집수정화처리 : 환경오염방지
- 전체 수혜대상 가구의 절반 수준(47.5%)이 인근지역 주민

● 농촌 주민 자산가치 증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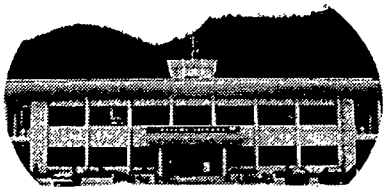
- 토지가격 상승효과로 지역주민의 자산가치 증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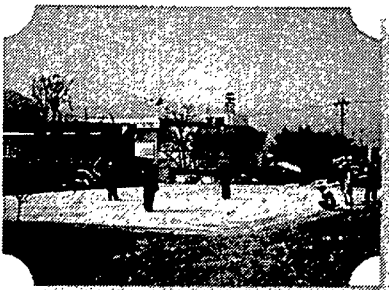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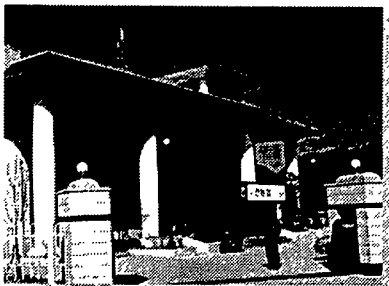
농촌의 중심마을로 성장

● 공공시설 유치

- 면사무소, 우체국, 보건지소 등



● 금융기관, 유아원, 상가, 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연계·확충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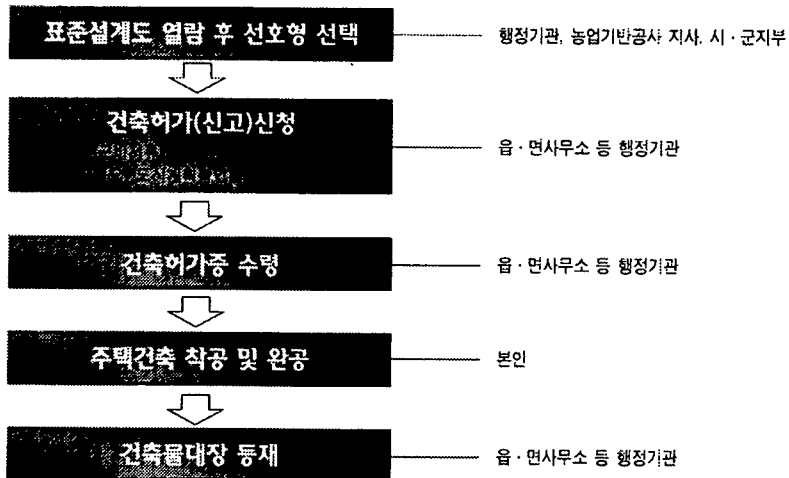
농어촌주택 설계를 위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도서를 미리 작성하여 두고 건축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취향에 따라 이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설계도서를 말합니다.

(법적근거: 건축법 제 19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의 이용방법

행정기관인 시청·군청, 읍·면사무소, 농업기반공사 지사 및 시·군지부에서 상시 열람할 수 있으며, 시공에 필요한 도면을 실비로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한 행정처리방법 안내





● 농어촌주택 표준모형('95~'98년 32종보급)

95 표준설계부서도



95-25-C형



95-28-B형

97 표준설계부서도



97-19-목조형



97-44-복합형

98 표준설계부서도



98-30-1-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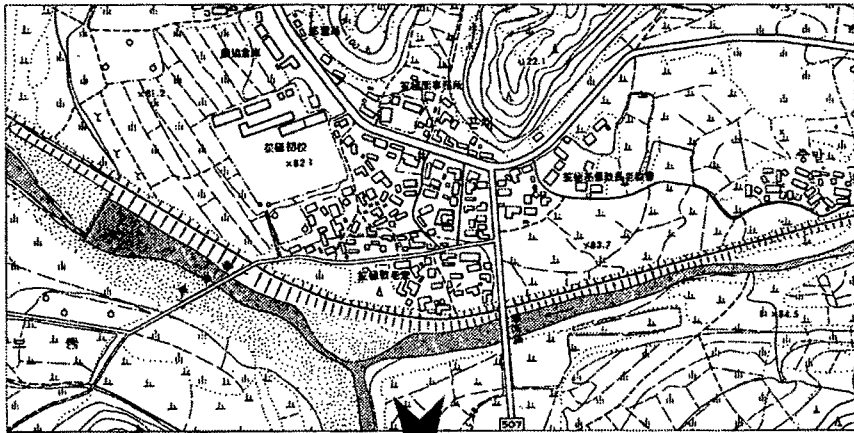
98-30-2-가형

Formation of Advanced Vill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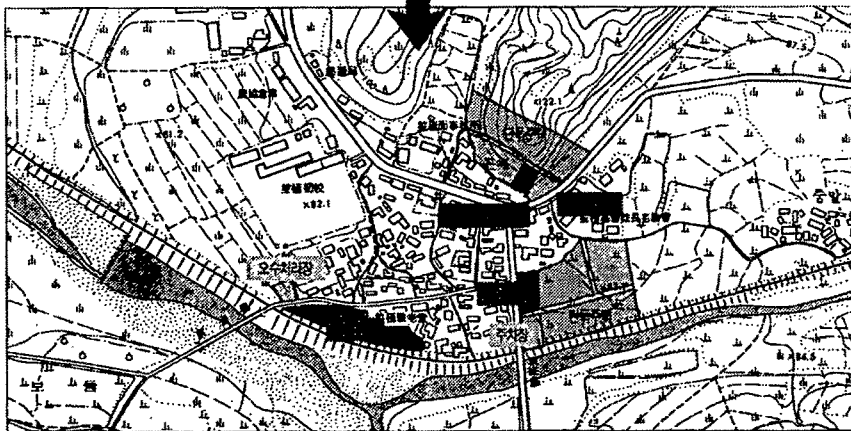
향후 사업 추진방향

기존 중심마을 정비

- 기존 중심마을의 낙후된 생활환경 집중 개선
 - 도로, 상·하수도사업, 휴식공간 등 생활기반시설 정비·확충
- 필요시 중심마을로 기능 보강을 위한 소규모 주택용지 조성 병행



시행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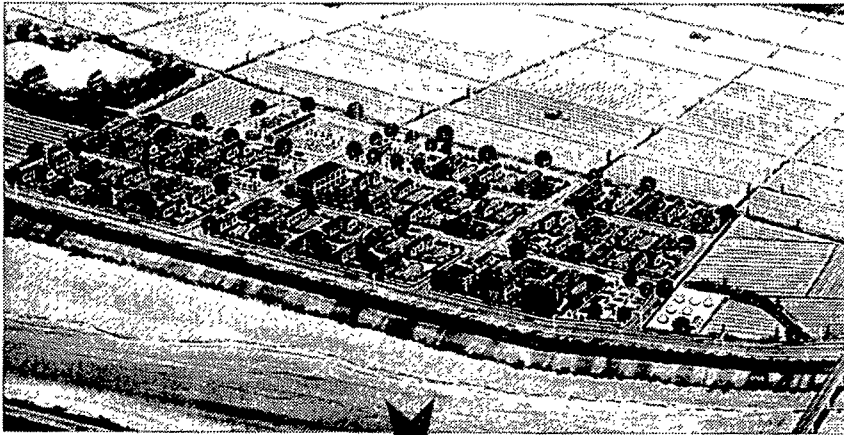


시행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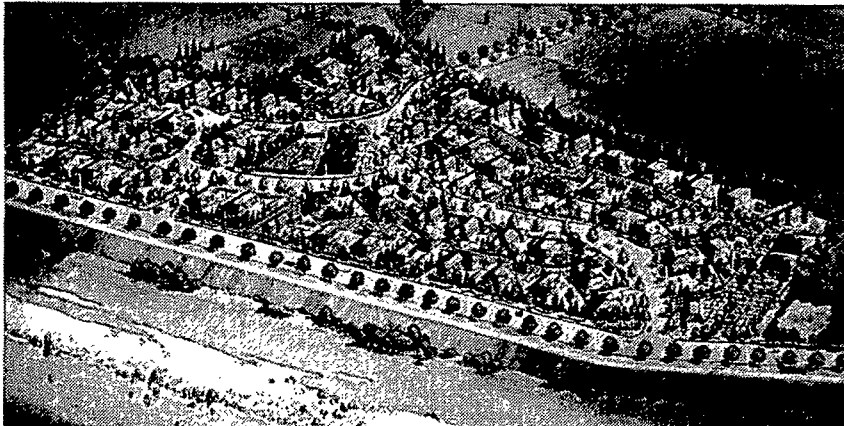


자연 환경 친화적 마을정비

- 마을의 역사·문화적 특성과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
- 경관형성 기법 및 경관변화 예측기법 도입
-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 개발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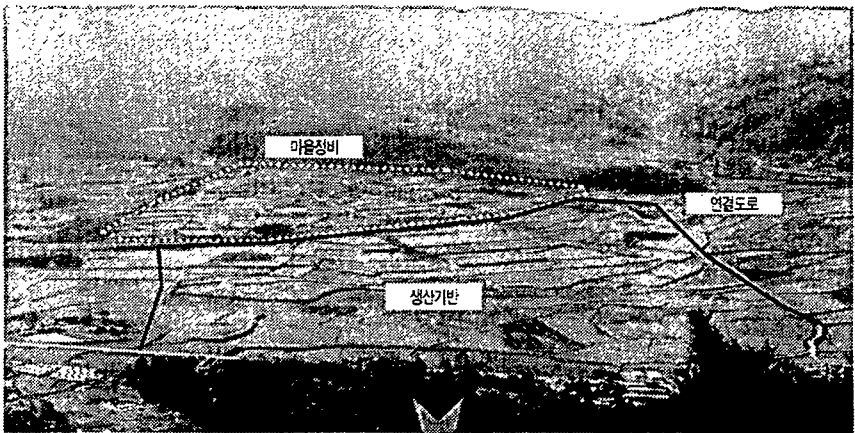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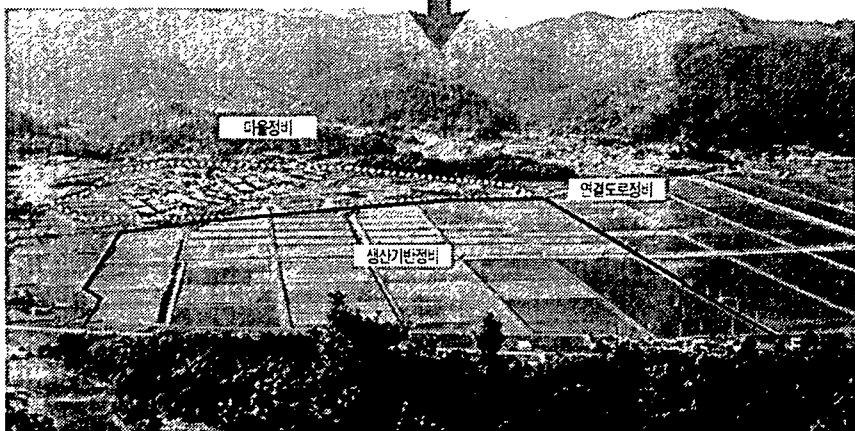
생산기반과 생활환경을 연계·종합정비

● 생산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종합적 연계추진으로 농촌공간의 효율적 정비와 중복공사 방지를 통한 투자효과 증대

- 경지정리사업 시행시 마을정비계획과 연계한 구획정비
- 생활용수 등 추가 필요수량을 고려한 농업용수 개발



시행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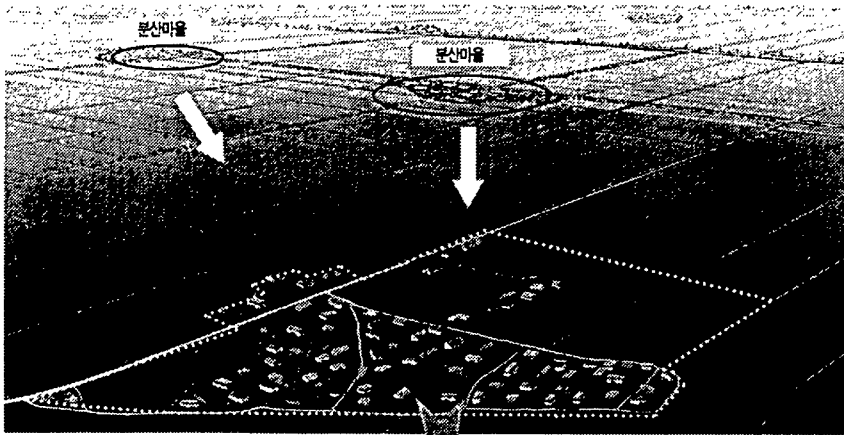
시행후



창설원지 기법을 도입한 정비

●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 시행시 창설원지를 통한 분산마을 집단화로 새로운 주거공간 조성

- 농산물집하장, 농촌공원, 마을하수처리시설 등 설치,공동이용시설 연계설치 및 연결도로망 확보



시행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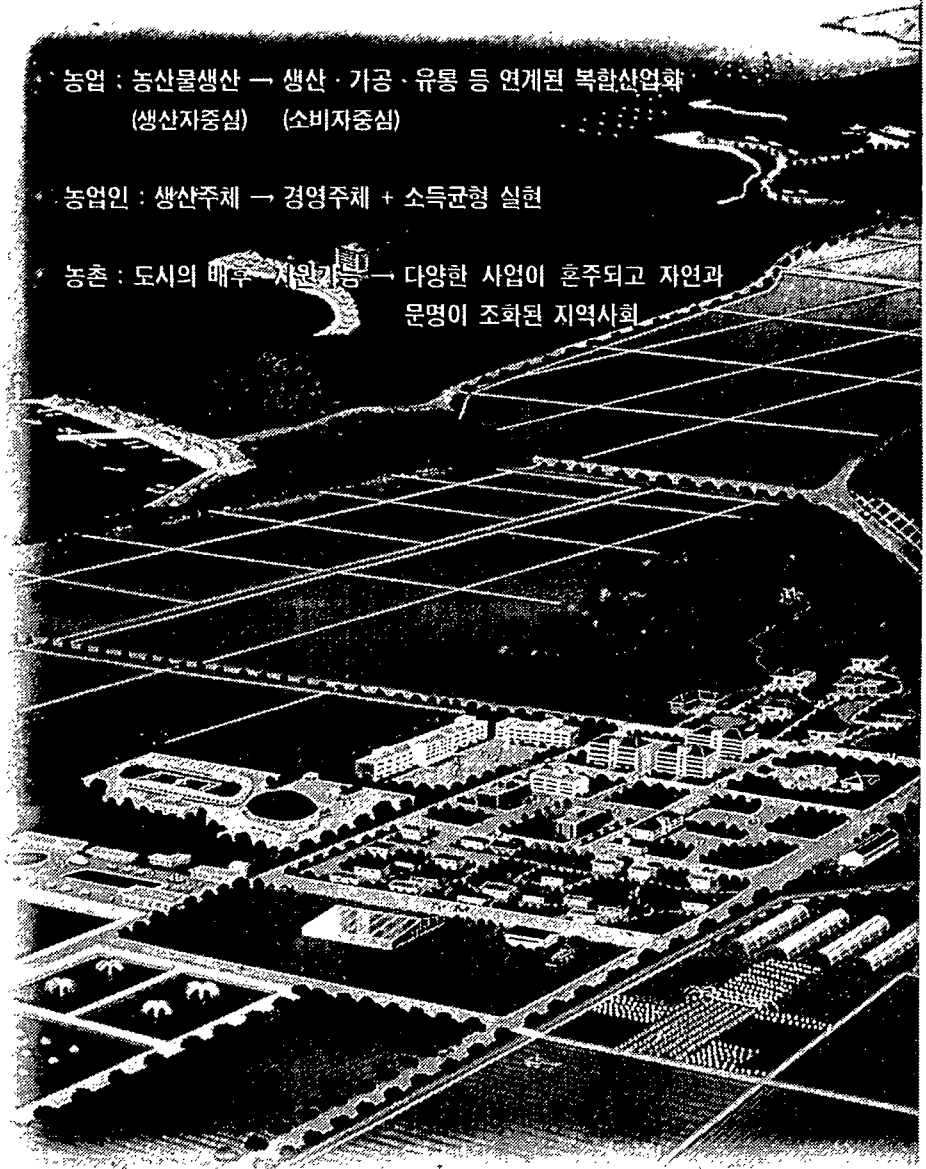


시행후

Formation of Advanced Villages

21세기 농촌의 미래상

- 농업 : 농산물생산 → 생산·가공·유통 등 연계된 복합산업화
(생산자중심) (소비자중심)
- 농업인 : 생산주체 → 경영주체 + 소득균형 실현
- 농촌 : 도시의 매후 자원기능 → 다양한 사업이 혼주되고 자연과
문명이 조화된 지역사회





Formation of Advanced Villages

**“문화마을”에 관한 문의를
아래 연락처로 -**

농 립 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우)427-760
TEL : (02)500-2664
FAX : (02)502-6734
<http://www.maf.go.kr>

농업기반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우)430-600
TEL : (0343)420-3392
FAX : (0343)421-1602
<http://www.karico.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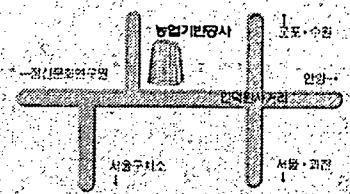
새 천년 농업 선진화 농업기반공사가 맡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는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합한 새 이름입니다.**

21세기를 여는 찬란한 어둠과 함께
우리 농업인들 모두에게 찾아드는 가슴벅찬 기대와 희망은
화려한 새 천년의 꿈을 날게 합니다.
옛 부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말해 오듯
누가 뭐라해도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옆에 밋게하는 농업이야말로
나라의 중추적 기본사업인 만큼 농업한국을 책임질
「농업기반공사」의 사명은 크고 중요하다는 각오로
많은 바 책임을 다한 것을 잊지된 모두의 이름으로 다짐 합니다.

농업기반공사의 상징마크
경동유수를 상징하는 물줄기, 농촌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농업기반공사의 상징마크인 농토와 농촌의 생명력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농토와 농촌의 생명력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농토와 농촌의 생명력을



농업기반공사 지사·사업단 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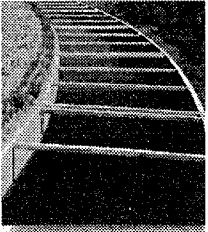
경기지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풍죽동 671-1	03311250-3013
강원지사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765-6	03611240-6617
충북지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광동 1426	04311279-3312
충남지사	대전시 서구 둔산동 943	0421480-0214
전북지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2가 1858-1	06521240-2013
전남지사	광주시 광산구 유신동 1578-3	0521358-2304
경북지사	대구시 북구 규암동 651	0531320-0700
경남지사	경남 김해시 용호동 8-3	05511269-9311
제주지사	제주시 삼양동 토지구획관리지구내 45번지 1호트	0641883-6890
북부사업단	경기 안산시 고잔동 524-3	03451483-7273
금강사업단	전북 군산시 성안면 성덕리 158-2	06541453-0812
서해사업단	전북 김제시 신동동 636-1	06681540-5611
영신사업단	전남 목포시 상동 509	06311276-2191



농업기반공사
경기도 역삼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
TEL: 0343-420-3114 FAX: 0343-423-6661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Korea Agricultural & Rural Infrastructure Corporation

농업기반공사, 이렇게 달라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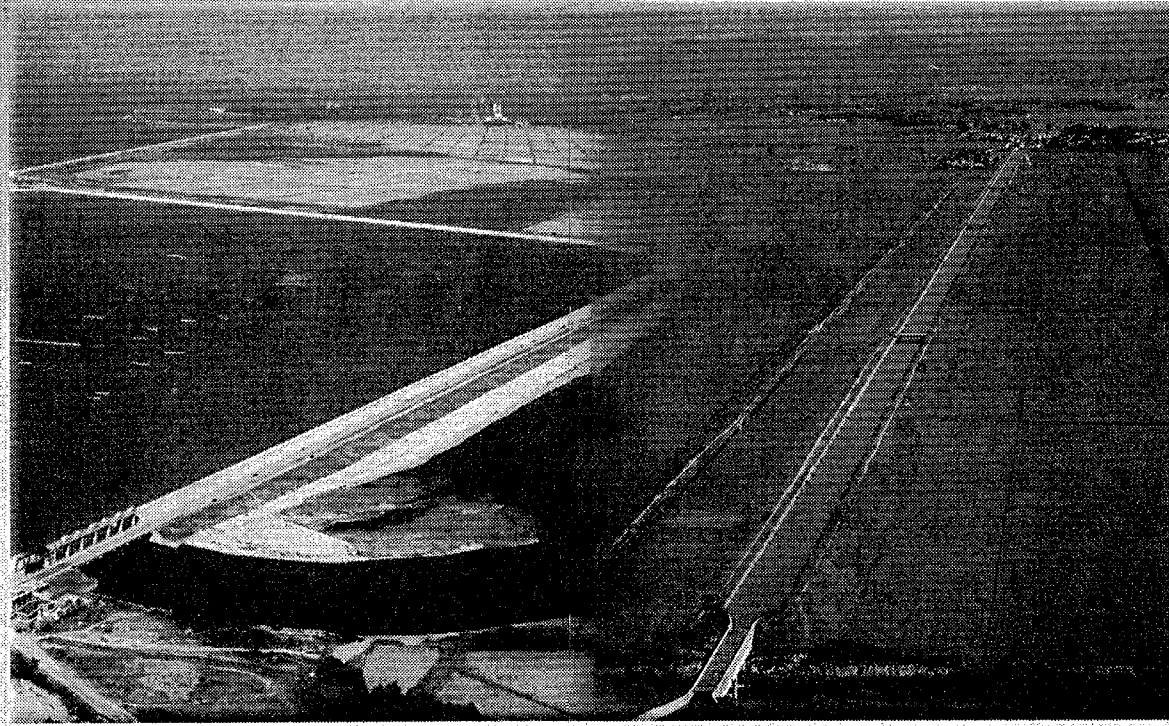
• 농업 용수로 정비



• 다목적용 저수지



• 밭기반 정비사업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영농기반조성사업

사업추진체계의 일원화로 업무의 능률화 및 투자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① 유사·중복 업무의 일원화로 업무효율은 높아지고 사업시행 체계의 일원화로 비용절감 및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 ② 전국의 농어촌을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지며 단위사업간 연계성을 유지,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전문기술과 현장경험의 결합으로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전국단위의 물관리체계 구축으로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 ① 농업용수 전반에 관한 관리체계 개선으로 지역간 용수의 균등배분 및 안정적 공급, 영농편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 ② 중위단위의 재해조기경보시스템(Early-Warning) 구축으로 홍수에 가뭄 등 재해예방 및 대처 능력이 강화됩니다.
- ③ 집단정비와 전문인력으로 수리시설물의 정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유지관리의 과학화, 첨단화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조합비(수세) 폐지로 농업인의 부담은 줄어 들고 서비스의 질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 ① 3개 기관 통합에 따른 경영효율화로 인력 및 비용이 절감되고 경영개선에 따른 기업가치를 농업인에게 환원합니다.
- ② TM/TC도입으로 물관리의 과학화: 현대화로 질 높은 영농 급·배수가 가능하며, 농업경영 진단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③ 수로의 구조물회를 추진하고 농가단위에서 수량하기 어려운 용·배수로 수조제거 등 수로관리서비스를 실시, 농업인의 부담을 줄입니다.

환경친화적 개발과 환경복원 노력으로 국민의 환경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 ① 환경친화적 공법 및 시공기술 개발, 환경영향평가 강화 등으로 개발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 ② 지하수오염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추진하며, 내고향 물 살리기 운동을 전국민적 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 ③ 농촌용수의 수질총량관리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수질개선사업을 추진, 깨끗한 농수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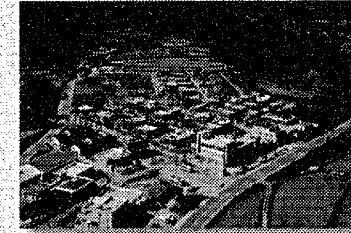
축적된 기술 및 선진화된 정보인프라로 미래의 정보와 지식 농가에 대비하겠습니다.

- ① 민간기업을 능가하는 정보화기술 및 마인드를 영농현장 및 농가에까지 확산 시키고 농지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겠습니다.
- ② 농어촌지형정보시스템(RGIS)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수질정보총량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③ 컴퓨터를 활용한 농업경영진단 지도 등을 통하여 농업인의 최신 마인드 제고와 미래 지식농업경영에 대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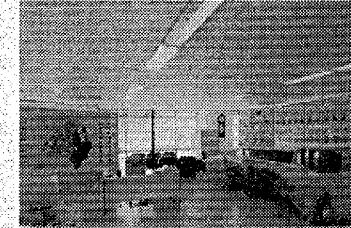
투명한 경영으로 부조리를 없애고 선진농어촌 건설의 동추기관으로 발전하겠습니다.

- ① 선진경영기법 도입으로 조합체제의 비효율과 부실을 제거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개기업으로 태어나게 합니다.
- ② 농업·농어촌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③ 전국단위의 공개기업으로 그 역할과 위상이 제고되며 직원의 신분보장으로 농업인에 대한 봉사에 매진할 수 있게 됩니다.

• 문화미용 조성



• 자동 물관리 시스템 (TM/TC)



• 환경기초사업



5. 농업기반공사 노동조합 성명서

여 백

[농민, 농민단체에 보낸 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庚辰年 새해·새천년을 맞아 저희 노동조합은 농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의 큰 흐름의 시작에 서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 온 국민은 물론 우리 농업인 에게도 깊은 시름을 안겨 주었던 한 해를 접고 이제 농업기반공사와 함께 새로운 도약의 가능성을 내다보면서 새해·새천년의 시작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2000년 1월 농업기반공사의 출범과 더불어 노동조합의 통합을 조속히 이루어내고 공사와 함께 농업개혁, 대 농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농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던 과거를 깨끗이 떨어버리고 농업기반공사로서 새로운 개혁의 선두에서 제도개혁과 자기개발노력으로 농민들로부터 다시 심판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농업·농촌의 개발이 저희들 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농민과 공사와 정부가 함께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농촌은 다시 한번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쟁력에서 뒤떨어지는 농업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정책비중도 낮아졌고, 전체 경제 규모도 낮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농업예산과 투자규모는 줄어만 가고 농촌은 고령화되고 경쟁력이 줄어들어, 더 이상 미래가 없는 듯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정서는 WTO체제의 영향으로 오히려 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식량안보의 중요성과 환경문제로 농업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하는 노력이 점차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농업에 대한 인식이 다시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구축한 농업기반공사의 조합원은 농민과 함께 농업·농촌 발전의 선도자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국회로부터 예산과 투자를 이끌어내고 국제사회에서 당당히 경쟁력 있는 농업기틀을 마련하는 일을 농민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밝아오는 2000년대 농업기반공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새천년 새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농민과 지도자 여러분의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농업·농촌의 선진화를 위하여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대 농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庚辰年 새해, 새로운 희망이 우리 농촌에 찾아오길 기대하면서, 또한 건강과 행운이 모든 농민가정에 깃들 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2000. 1. 11

농업기반공사노동조합 위원장

“농민이 살아야 국민이 살고, 농업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여 백

6. 신문 광고

가. 중앙지(조선일보 등 15개지 16회)

나. 전문지(농수축산신문외 14개지 24회)

다. 지방지(전북일보 등 28개지 28회)

여 백

가. 중앙지

여 백



“2000년 1월 1일”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업기반공사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새 천년엔 농업인이 살 맛 나는 세상! 농업기반공사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83년 만에 농지개량조합비(수세)가 폐지됩니다.
- 과학적인 물 관리 체계 구축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 선진농업·복지농촌 건설! 농업기반공사가 앞장 서겠습니다.

“그동안 성원해주신 정부, 여야 3당, 농민단체, 시민단체와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여
21세기 선진복지 농업·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설립이코
수익을 주체 농가에 반납하게 규정할 수 있.
2001년 1월 1일 2001년 1월 1일
농업기반공사 설립이코
농업기반공사 설립이코



농업기반공사
KARICO
442-246 1034-400-3114 FAX 1030-475-861

□ 위의 광고 게재 매체명

조선일보('99.12.20), 시민의 신문('99.12.20), 한겨레신문('99.12.21),
동아일보('99.12.21), 대한매일('99.12.21), 내외경제('99.12.22),
문화일보('99.12.22), 국민일보('99.12.23),

농업기반공사가 다음 세대의 농업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의 심볼마크
문화를 이룩하는 부분들은 각기 도넓은
부분 중지와 원방의 공급되는 농업물수용,
가운데 단원은 수확·경작의 발달을,
천재의 큰 원은 최상의 이익을 나타내어,
진정적으로 중요으로 농촌을 이룩하는데
기여하는 공익기반임을 상징합니다.

2000년 1월 1일,
농지개발조합·농지개발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업기반공사」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83년만에 농업인의 숙원이던
수세(농지개발 조합비)가 폐지됩니다

전국 단위의 물 관리체계 구축으로 각 지역별
용수 공급이 더욱 안정적이고 원활해집니다.
사업 추진체계의 일환으로 업무의 능률화, 투자의
효율화를 거둘 수 있습니다.
축적된 영농기술 및 선진화된 정보시스템으로
정보의 농촌·지역 농업을 실현해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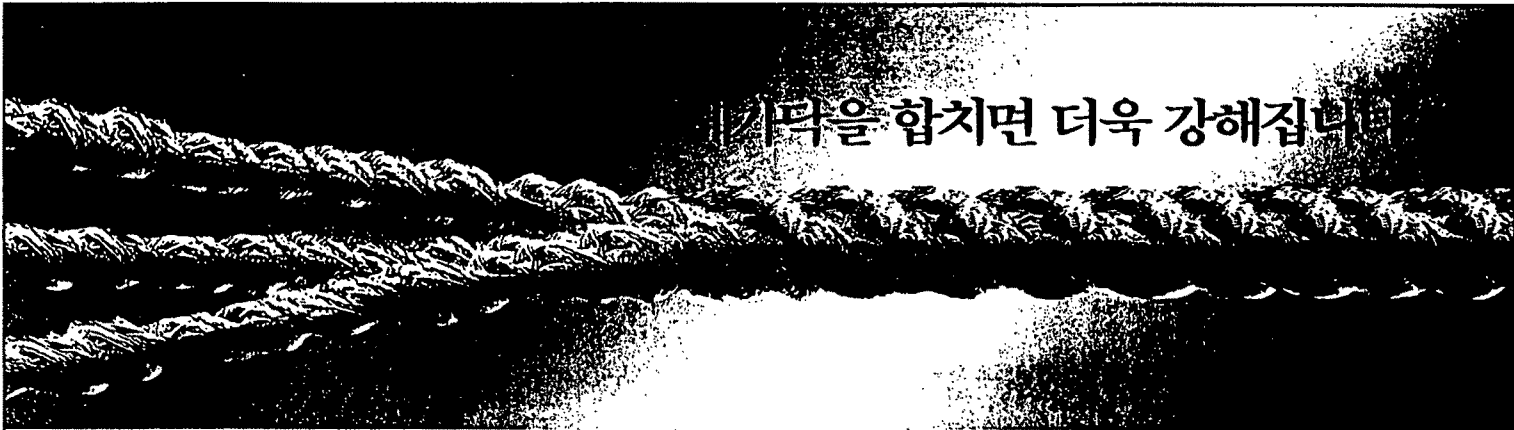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KARICO
대표전화 (02)3110-3114 / <http://www.karico.co.kr>

- 위의 광고 게재 매체명
세계일보('99.12.29), 서울경제('99.12.30), 한국경제('99.12.30),
한국일보('99.12.30), 경향신문(2000. 1. 5), 중앙일보(2000. 1. 5),
노동일보(2000. 1. 5)

여 백

나. 전 문 지

여 백



농업기업을 합치면 더욱 강해집니다

“2000년 1월”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업기반공사」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렇게 바뀔니다

- 조직 융체합과 경영혁신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농업인에 대한 부담을 줄입니다.
- 사업추진체계의 일원화로 업무의 능률화, 투자의 효율화 및 기술발전의 이룩을 꾀합니다.
- 농지개량조합의 오랜 현장경험과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전문인력이 결합되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농업기반공사 설립위원회
<http://www.rdc.or.kr/ric>

□ 위의 광고 게재 매체명

농수축산신문('99.8.9), 농축정보신문('99.8.19), 한국농어민신문('99.8.19),
 농민신문('99.8.20), 한국영농신문('99.8.23), 전업농신문('99.8.24),
 농민저널('99.8.24), 농업인신문('99.8.31), 축산신문('99.8.31)



“2000년 1월 1일”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업기반공사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새 천년엔 농업인이 살 맛 나는 세상! 농업기반공사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83년 만에 농지개량조합비(수세)가 폐지됩니다.
- 과학적인 물 관리 체계 구축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ی겠습니다.
- 선진농업·복지농촌 건설! 농업기반공사가 앞장 서겠습니다.

“그동안 성원해주신 정부, 여야 3당, 농민단체, 시민단체와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여
21세기 선진복지 농업·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상징마크
수확을 통해 농사에 전폭적 지원할 수 있는
농업기반시설 조성 지원사업에
중요로운 부분 농촌을 이루하는 데 기여하
고 국가발전의 상징입니다



농업기반공사
KARICO
TEL 02-6343-420-3114 FAX 02-6343-4881

□ 위의 광고 게재 매체명

농수축산신문('99.12.20), 농업정보신문('99.12.20), 농민신문('99.12.20),
농업인신문('99.12.20), 농민저널('99.12.21), 환경보호신문('99.12.22),
한국임업신문('99.12.23), 한국농어민신문('99.12.23)

농업기반공사가 다음 세대의 농업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의 심볼마크

문화를 이루는 무한들은 각각 드넓은
푸른 농지의 형상이 공급되는 농업용수로,
가운데 타원은 수확·갈무리의 밭갈음,
진체의 큰 잎은 화합의 미래를 나타내어,
전체적으로 중요로운 농촌을 이룩하는데
기여하는 공익기관임을 상징합니다.

2000년 1월 1일,
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업기반공사」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83년만에 농업인의 숙원이던
수세(농지개량 조합비)가 폐지됩니다**

전국 단위의 물 관리체계 구축으로 각 지역별
용수 공급이 더욱 안정적이고 원활해집니다.

사업 추진체계의 일원화로 업무의 능률화, 투자의
효율화를 거둘 수 있습니다.

축적된 영농기술 및 선진화된 정보시스템으로
정보화 농촌·지식 농업을 실현해 갑니다.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KARICO
1487건국 (0303)420-3114 / http://www.karico.co.kr

□ 위의 광고 게재 배차명

전업농신문('99.12.28), 녹색신문('99.1.31), 한국영농신문(2000.1.3),

매일경제(2000. 1.5), 축산경제(2000. 1.10), 축산신문(2000. 1.11)

여 백

다. 지방지

여 백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농어촌진흥공사, 능지개발조합, 농지개발조합연합회가 통합하여

2000. 1. 1. 농업기반공사 창립

새 천년에는 제주도 특성에 맞는 농업, 농어촌환경을
농업기반공사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제주도의 주요사업

- 감귤농지 매매 및 임대차
- 농업용 저수지 개발 및 용수시설 관리
- 지하수개발 및 보호관리
- 밭기반 정비
- 농경지 배수개선
- 문화마을, 농촌휴양단지 조성
- 농촌환경 기초시설, 정화시설
- 시설물 안전진단, 농촌도로
- 환경영향평가, 지하수영향조사
- 가축기술시험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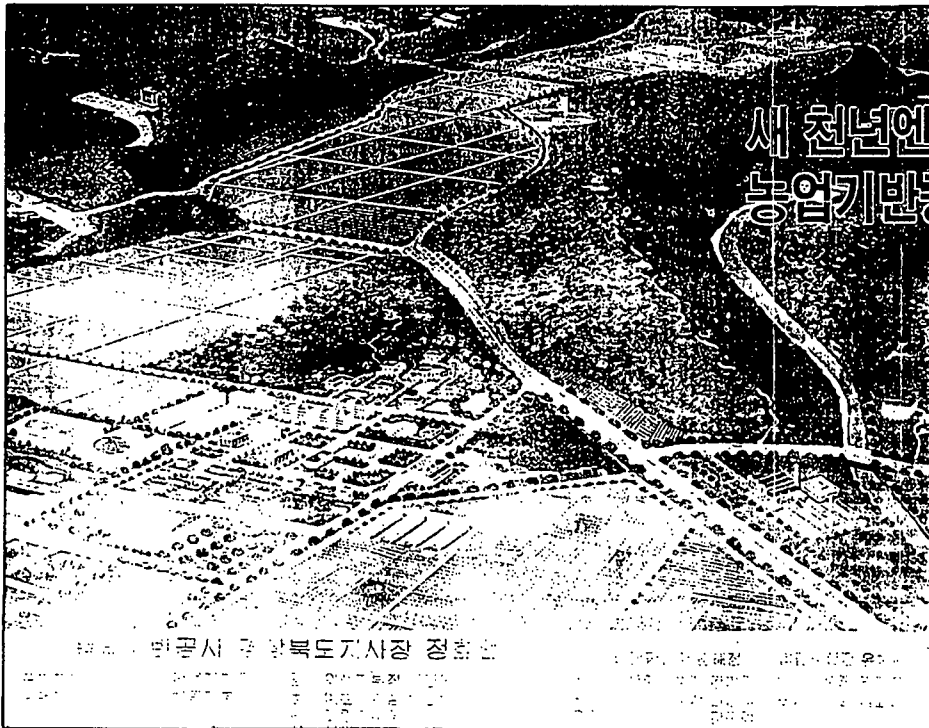
농업기반공사 제주도지사

지사장 한 규 언 외 직원일동
제주시 삼양동 토자구획정리지구 45B 1L
☎750-8800(代)

위의 광고 게재 매체명

한라일보(2000. 1. 3), 제주일보(2000. 1. 4);

□ 영남일보 (2000. 1. 7)



새 천년엔 농업인이 살 맛 나는 세상! 농업기반공사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00년 1월 1일"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업기반공사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 2001년에 농지개량·농촌기반수행 과제 해결
 - 과학적인 물 관리와 농수로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여 생산성 향상
 - 전산농업 복지농촌 건설 농업기반공사로 추진합니다.
- ▶ "농도인"이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의
 국민을 위한 최고의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 농업기반공사의 출범을 환영합니다.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농업기반공사는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합한 새 이름입니다.

새 천년엔 농업인이 살 맛 나는 세상! 농업기반공사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83년 만에 농지개량조합비(수세)를 폐지하였습니다.
- 과학적인 물 관리 체계 구축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였습니다.
- 선진농업 복지농촌 건설! 농업기반공사가 앞장 서겠습니다.

“그 동안 성원해 주신 정부, 여야 3당, 농민단체, 시민단체와
 국민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여
 21세기 선진복지 농업·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Korea Agricultural & Rural Infrastructure Corporation

경기도지사장 **박영택**
 관리담당실장 **소안덕**
 사업담당실장 **조근상**
 회음·사회사업단장 **김진식**

경기도지사

여주·이천지부장	이동휘	기호지부장	고해운	한강지부장	김희원	호준원
영평·영주·세종지부장	문재원	파주지부장	윤길	평택지부장	원충원	
수화·용인지부장	신홍구	고양지부장	한경대	안성지부장		
연천·포천지부장	서갑진	강화지부장	이중대			

축 "농업기반공사" 출범

농업기반공사가
다음 세대의 농업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지 사 장	권 집 이	기 회 장	임 석	관리담당실장	박	송	호	사업담당실장	이	기	윤
관리부장	김	규	해	영농규획사업부	김	태	원	한지사업부장	전	중	수
영수관리부장	이	중	태	사업관리부	이	소	화	조사실제부장	김	규	성
기전부장	김	영	우	지하수부장	김	우	하	풍 무 부	이	교	식
침원지부장	민	영	우	보은지부장	김	우	하	진 천 지 부	신	호	
괴산지부장	이	영	우	영성지부장	이	우	하	중 주 제 천 지 부	리	환	
덕천사무소장	김	영	우	영동사무소장	한	우	하		환	환	



농업기반공사의 심벌마크
천원을 이루는 푸른물은 각자 드넓은
무릇 농지의 참값이 공급되는 농업기술,
기원에 타원은 수확·결실의 희망을
전체의 큰 원은 희망의 미래를 나타내며,
진짜적으로 풍요로운 농촌을 이룩하는데
기여하는 공익기관임을 상징합니다.

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업기반공사」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83년만에 농업인의 숙원이던
수서(농지개량조합법)가 폐지됩니다.

전국단위의 물 관리체계 구축으로 각 지역별
홍수 공급이 더욱 안정적이고 원활해집니다.
사업추진체계의 일환화로 업무의 농특화, 투자의
효용화를 거둘 수 있습니다.
축적된 영농기술 및 선진화된 정보시스템으로
정확화 농촌·지식 농업을 실현해갑니다.

농 립 부
농업기반공사 충북지사
K A R I C O

대표전화:104311279-3300 / http://www.karico.co.kr

□ 위의 광고 게재 매체명

동양일보(2000. 1. 8), 중부매일(2000. 1. 8)

□ 중도일보 (2000. 1. 8)

"2000년 1월 1일"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업기반공사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농업기반공사가 새 천년 선진농업의 새지평을 열겠습니다.

지 사 장 구 광 회

관리담당실장 이 광 호

사업담당실장 박 상 옥

연기대금지부장 방 명 수

천안지부장 이 선 호

청양지부장 황 인 석

홍성지부장 조 병 초

공주지부장 이 병 호

논산지부장 박 태 진

부여지부장 박 태 수

서천지부장 정 성 희

보령지부장 윤 종 천

예산지부장 최 정 진

서산지부장 김 영 건

당진지부장 김 재 도

은양지부장 이 우 진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충청남도지사

대전시 서구 둔산2동 943번지

TEL : (042)483-4600 ~ 08



농업기반공사 신변이력
 1. 설립목적: 농지개량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 설립근거: 농지개량법 제21조 제1항
 3. 설립형태: 공법법인(유형)의 공기업
 4. 설립일자: 2000. 1. 1

농업기반공사가 다음 세대의 농업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전라북도지사장 류종식
 남원지부장 김정수 순창지부장 신현주
 응진지부장 김수길 전북지부장 오운수
 금강지부장 전종철 전주지부장 송재영
 고창지부장 국기천 정읍지부장 박영

농업기반공사 금강사업단장 최태순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장 임채신



농업기반공사의 심벌마크

근원을 이루는 푸르름은 각자 도반은
 푸른 농지의 향연이 공급되는 농업의 수를
 가운데 찬란한 수와 결실의 향연을
 전체의 온 것은 최향의 이념을 나타내어
 전체적으로 중요로운 농업을 이룩하는데
 기여하는 금작기반공사를 상징합니다.

농지개발조합·농지개발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가[농업기반공사]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전병준장군과 동학농민의 흰이 맺힌
 수세(농지개발조합비)가 83년만에
 맺어집니다.”

정국 단위의 읍 관리체계 구축으로 각 지역별
 용수 공급이 더욱 안정적이고 원활해집니다.

사업 추진체계의 일원화로 업무의 농몰피, 투자
 의 효율화를 거둘 수 있습니다.

축적된 영농기술 및 선진화된 정보시스템으로
 정보화 농촌·지식 농업을 실현해갑니다.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KARI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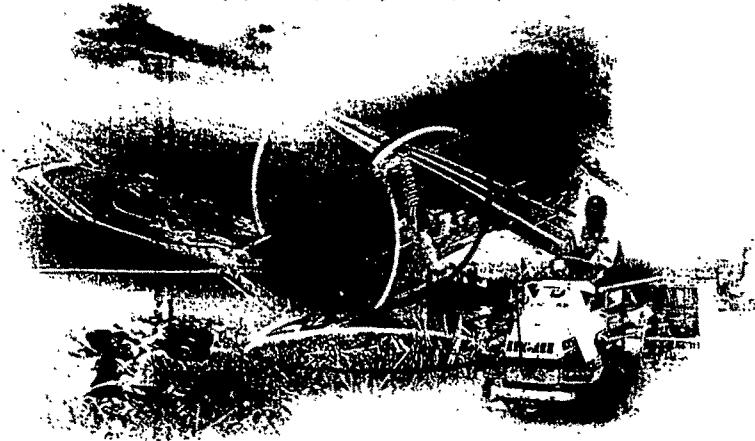
□ 위의 광고 게재 배체명

전북도민일보(2000. 1. 8), 전북제일신문(2000. 1. 8),

전주일보(2000. 1. 8), 전북일보(2000. 1. 8), 전북매일(2000. 1. 8)

□ 대구일보 (2000. 1. 8)

농업기반공사가 다음세대의 농업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경상북도지사장 정호연 (鄭虎彦)

· 구미지부장 이재준 · 달성지부장 박수원 · 의성지부장 이인영 · 경주지부장 조용호 · 상주지부장 김기준 · 영천지부장 신종일 · 포항지부장 이철오 · 영선지부장 박경준 · 경산지부장 신길준 · 고령지부장 정연기 · 상주지부장 배영주 · 문경지부장 강구덕

· 관리담당실장 김해정 · 사업담당실장 유혁우

· 청송지부장 권구오 · 안동지부장 유석우



농업기반공사의 심플마크
관원을 이루는 부분들은 각각 드넓은
푸른 농지의 친환경 공급되는 농업용수를
가운데 타원은 수확·갈상과 생산물
전체의 본원은 희망의 미래를 나타내어
전체적으로 풍요로운 농촌을 이룩하는데
기여하는 공익기관임을 상징 합니다.

2000년 1월 1일
농지개발조합·농지개발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업기반공사」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83년만에 농업인의 숙원이던
수세(농지개발 조합비)가 폐지됩니다.

전국 단위의 물 관리체계 구축으로 각 지역별
용수 공급이 더욱 안정적이고 원활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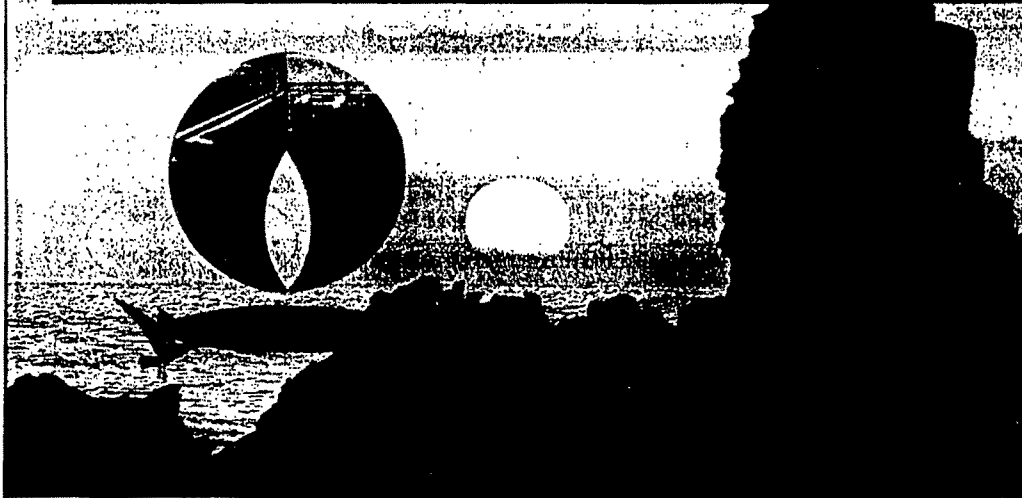
사업 추진체계와 일원화로 업무의 농문화, 부자의
효율화를 거듭 수 있습니다.

축적된 영농기술 및 선진화된 정보시스템으로
정보화 농촌·지식 농업을 실현해 갑니다.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KARICO
Korea Agricultural & Rural Infrastructure Corporation

□ 광역일보 (2000. 1. 8)

농업기반공사가 새천년 선진농업의 새지평을 열겠습니다.



-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업기반공사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 수세(농지개량조합비)폐지, 생산기반정비·관리체제일원화로 선진농업·농촌전선의 새 지평을 열겠습니다.
- 식량안보의 주역으로서 국민여러분을 위해 새천년 우리농업 발전의 기수가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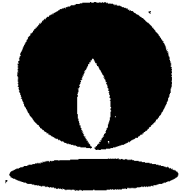
농업기반공사 경상북도지사장 정 호 언 관리담당실장 김혜정·사업담당실장 유혁우

구미지부장 이재훈·달성지부장 박수원·의성지부장 이인영·경주지부장 조용호·상주지부장 김기준·청송지부장 권구오·안동지부장 유석우·철곡지부장 최진동·예천지부장 손광수

영주지부장 조규권·영덕지부장 신종일·포항지부장 이철오·영천지부장 박경은·김산지부장 신길윤·고흥지부장 정천기·상주지부장 배영주·문경지부장 김구덕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2000년 1월 1일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업기반공사』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새천년엔 농업인이 실맛나는 세상!
농업기반공사가 만들어가겠습니다.

83년만에 농업인의 숙원이던 수세(조합비)가 완전폐지됩니다.

- 전국단위의 물 관리체계 구축으로 지역별 용수공급이 더욱 안정적이고 원활해집니다.
- 축적된 영농기술 및 선진화된 정보시스템으로 정보화 농촌, 지식농업을 실현해갑니다.
- 사업추진체계의 일원화로 업무의 능률화, 투자의 효율화를 거둘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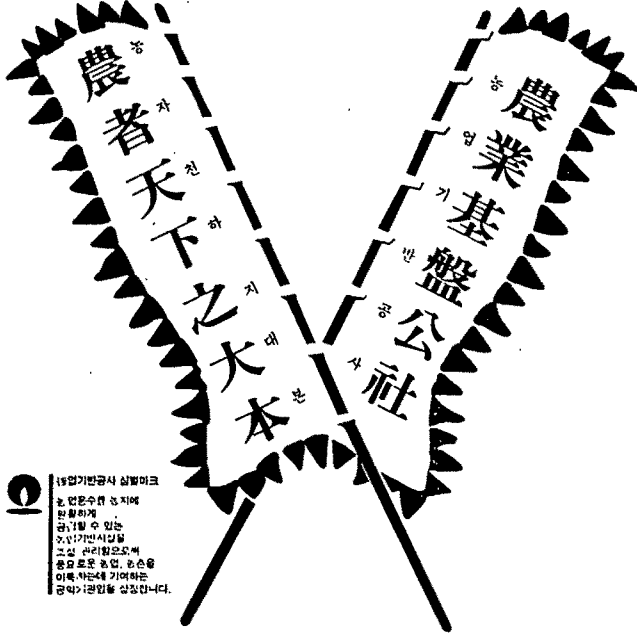
 **농업기반공사 경남지사** 지사장 이 정 태

- ◆ 김해·양산지부장 박행규
- ◆ 고성·거제지부장 김성용
- ◆ 울산지부장 전수식
- ◆ 진안지부장 우종표
- ◆ 의령지부장 오병호
- ◆ 함안지부장 임태숙
- ◆ 창녕지부장 배기홍
- ◆ 밀양지부장 조의환
- ◆ 장원지부장 신일우
- ◆ 사천지부장 최진재
- ◆ 거창지부장 신현보
- ◆ 함천지부장 조경래
- ◆ 하동·남해지부장 김태구

□ 위의 광고 게재 배제명

경남일보(2000. 1. 8), 경남도민일보(2000. 1. 8),
경남신문(2000. 1. 8), 울산매일(2000. 1.10)

“농업기반공사” 출범



농업기반공사 심볼마크
농업은 수천 년 전에
문화하게
발전할 수 있는
조인기반사건물
그리스 관리형으로,
공로로운 발달, 농촌을
이해, 사는데 기여하는
관악(관입)을 상징합니다.

<http://www.karico.co.kr>

“2000년 1월 1일”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업기반공사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새 천년엔 농업인이 살맛나는 세상! 농업기반공사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83년 만에 농지개량조합비(수세)가 폐지됩니다.
- 과학적인 물 관리 체계 구축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였습니다.
- 선진농업·복지농촌 건설! 농업기반공사가 앞장 서겠습니다.

“그동안 성원해주신 정부, 여야 3당, 농민단체, 시민단체와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여
21세기 선진복지 농업 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충북지사**
K A R I C O

대표전화: (0431)279-3300 FAX: (0431)295-0026

지	사	장	권	기	인	관	리	당	실	박	승	호	사	담	담	실	장	이	기	윤	
역	수	부	이	회	사	영	업	농	업	진	대	친	한	한	사	부	부	장	전	중	수
판	판	부	진	규	회	사	모	화	부	진	용	회	파	조	지	부	부	장	진	규	세
형	전	부	이	정	대	보	하	사	부	진	성	장	구	영	부	부	부	장	이	고	시
건	지	부	민	정	우	우	운	부	부	이	장	로	주	재	부	부	부	장	신	호	수
사	지	부	이	전	영	영	성	소	소	안	대	수	영	영	부	부	부	장	회	당	수

위의 광고 게재 배차명

한빛일보(2000. 1. 8), 충청리뷰(2000. 1.12).

농업기반 공사가 새천년 선진농업의 새지평을 열겠습니다.

-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업기반 공사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 수세 (농지개량조합비) 폐지, 생산기반정비 관리 체계화로 선진 농업·농촌건설의 새지평을 열겠습니다.
- 식량안보의 주역으로서 국민 여러분을 위해 새천년 우리농업 발전의 기수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K A R I C O
<http://www.karico.co.kr>

강원지사장	이상익
중앙지부장	장성윤
홍천·춘천지부장	이상철
원주지부장	임평대
강릉지부장	김남진
영북지부장	박승균

위의 광고 게재 매체명

강원일보(2000. 1.10), 강원도민일보(2000. 1.10),

2000년 1월1일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업기반공사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농업기반공사의 심볼마크

간헐을 이루는 부분들은 각자 드넓은 푸른 농지와 원만히 공급되는 농업용수들 가운데 타원은 수확·검식의 활약을 전복의 큰 원은 화합의 미래란 나타내어 전체적으로 풍요로운 농촌을 이룩하는데 기여하는 양이기관임을 상징합니다.

새천년엔 농업인이 살 맛 나는 세상! 농업기반공사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83년만에 농지개량조합비(수세)가 폐지됩니다.
- 과학적인 물 관리 체계구축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ی겠습니다.
- 선진농업 복지농촌 건설! 농업기반공사가 앞장 서겠습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정부, 여야3당, 농민단체, 시민단체와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여 21세기 선진복지 농업 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농 립 부



농업기반공사 전남지사

K A R I C O

지 사 장	김 인 현	영산강사업단장	김 광 식
순천광역시수	김 중 순	무안신안	민 오 동
영산강지부장	배 중 복	고 흥 지부장	김 영 수
해영남도지부장	박 병 선	영 암 지부장	최 영 희
영진도지부장	황 선 중	보 성 지부장	정 희 용
곡성지부장	박 종 준	강진안도지부장	서 원 재
화순지부장	박 석 훈	구례지부장	김 원 관
	이 화 인	장 흥 지부장	정 경 길

□ 위의 광고 게재 매체명

한국영농신문(2000. 1.10), 광주일보(2000. 1.10),
전남일보(2000. 1.11)

농업기반공사 설립백서 (부록 Ⅱ)

찍은날 : 2000. 3. 31

펴낸날 : 2000. 4. 8

발행인 : 김성훈·문동신

펴낸곳 : 농 립 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농업기반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번지

인쇄처 : 일지사(503-6971~5)
